

북한의 포스트 김정일체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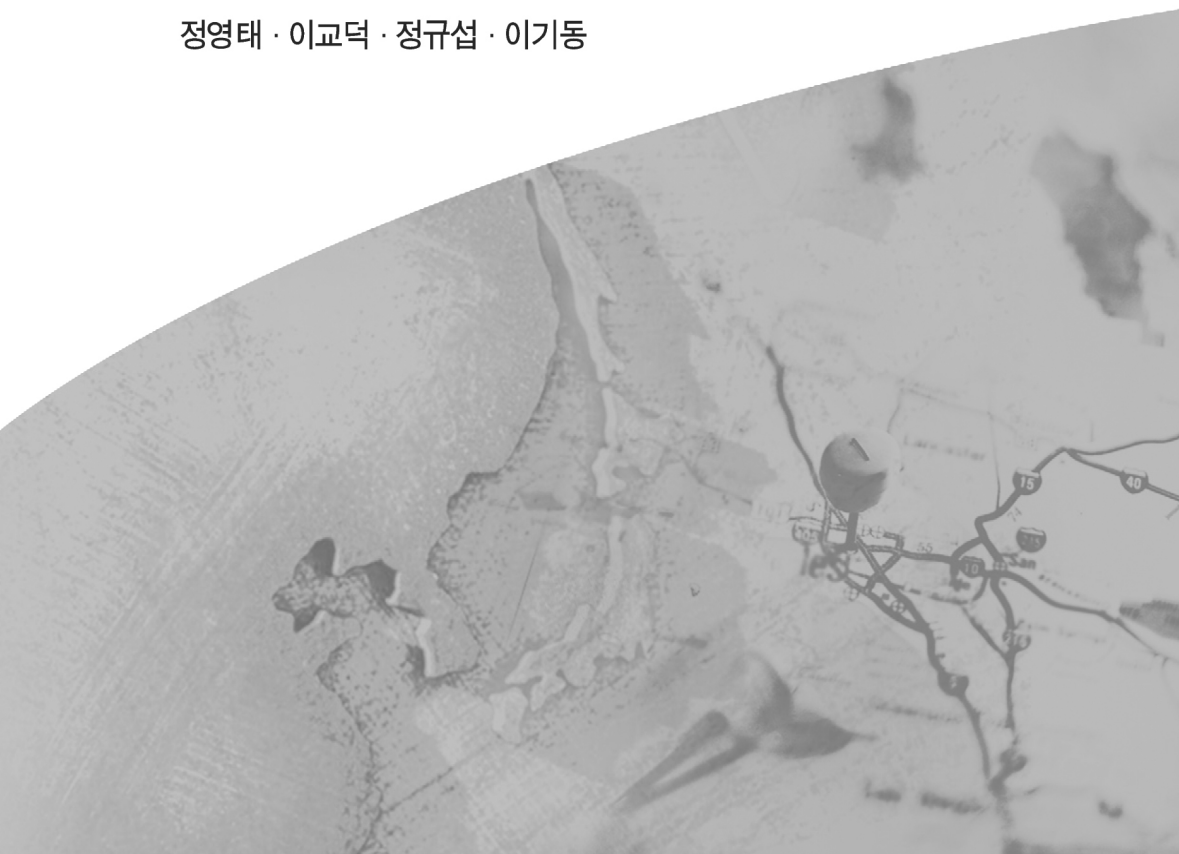
정영태 · 이교덕 · 정규섭 · 이기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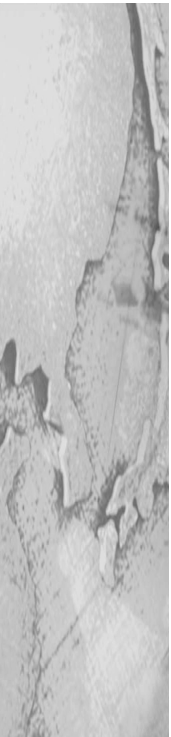


KINU 연구총서 10-11

북한의 포스트 김정일체제 전망

정영태 · 이교덕 · 정규섭 · 이기동





북한의 포스트 김정일체제 전망

인 쇄 2010년 12월

발 행 2010년 12월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통일연구원장

편 집 인 북한연구센터

등 록 제2-02361호 (97.4.23)

주 소 (142-728) 서울특별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전 화 (대표) 900-4300 (직통) 901-2525 (팩시밀리) 901-2544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기획·디자인 (주)예원기획 (02-745-8080)

인 쇄 처 양동문화사 (02-2272-1767)

ISBN 978-89-8479-579-2 933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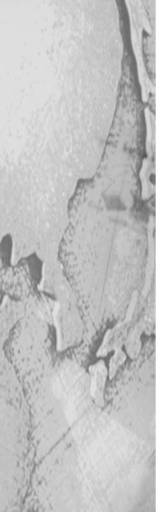
가 격 ₩11,000

© 통일연구원, 2010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정부간행물판매센터

·매장: 734-6818 ·사무실: 394-0337



북한의 **포스트 김정일체제** 전망

□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목 차

I. 서론	1
II. 세습후계체제 구축과정	13
1. 세습후계체제 구축의 논리적 근거	15
2. 김정일의 세습후계권력 구축과정	17
3. 김정은의 세습후계권력 구축과정	27
III. 후계체제의 권력구조	37
1. 지배체제	39
2. 당·정·군의 관계	52
3. 당 정치국 및 중앙군사위원회와 국방위원회	65
4. 권력엘리트	72
IV. 후계체제의 이데올로기	83
1. 이론적 배경: 체제 목표와 통치이데올로기	85
2. 김정일시대 체제목표 및 통치이데올로기 분석	92
3. 김정은시대 체제목표 및 통치이데올로기 전망	102
V. 후계체제의 정책방향	111
1. 후계체제의 정책추진 영향요인	119
2. 후계체제의 정책방향	134

VI. 결론: 포스트 김정일체제의 안정성과 변화전망	229
참고문헌	241
최근 발간자료 안내	251

표 목 차

<표 Ⅱ-1> 김정일의 세습권력 구축과정	26
<표 Ⅲ-1> 당 중앙군사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인원 구성	71
<표 Ⅲ-2> 2009년 현지도도 수행 횟수	74
<표 Ⅲ-3> 2010년 현지도도 수행 횟수	75
<표 Ⅲ-4> 현지도도 수행으로 파악한 북한 파워그룹 중심성 ...	77
<표 Ⅳ-1> 김일성·김정일·김정은시대별 이데올로기	91

그림 목 차

북한의 포스트 김정일체제 전망

<그림 Ⅲ-1> 북한 파워그룹 중심성(2009~2010년)	78
<그림 V-1> 김정은 후계체계의 군부 조직	186

I. 서론

북한의 포스트 김정은체제 전망

작년부터 북한에서는 김정일 후계자 띄우기가 본격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것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문제가 불거지면서 드러난 갑작스런 현상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해 초부터 후계자 내정사실이 매우 구체적인 모습을 띠면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먼저 후계자 관련 소문은 ‘셋별장군’, ‘청년대장 김 대장’이라는 말이 인구에 회자되면서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좀 더 간접적으로는 ‘김씨’ 혈통을 강조하는 기관언론매체들의 사설 또는 선전을 통해서 세습 후계자 등장을 알리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당 기관지 로동신문(2009.4.15)에서 “전당과 온 사회에 위대한 장군님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백두의 혈통을 이어나가며...”라는 권력세습의 당위성 강조를 시사하는 언급 등을 꼽을 수 있다. ‘발걸음’과 같은 세습 당위성 선전용 노래가 공식행사에서 연주되거나 불려지고 있다는 소식들이 다양한 매체를 타고 흘러들어 왔다. ‘발걸음’이라는 노래와 함께 관련 구호 등이 급속하게 확산되기도 하였다. ‘발걸음’ 노래 구절에 ‘김 대장’이란 표현이 나오는데 이는 후계자로 유력시되는 김정일의 셋째 아들 김정운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¹

이와 더불어 의미 있는 행사를 준비한다든가 국가의 주요사업을 진두지휘하는 주체가 바로 후계자 김정운이라는 소문도 이어졌다. ‘상부에서 배포한 홍보자료에 따르면, 김일성 주석 생일 축포야회 및 150일 전투 등을 후계 내정자가 직접 진두지휘했고, 김정일의 현지도 장소도 후계 내정자가 직접 미리 안전 점검을 하는 것’이라는 증언

¹ ‘발걸음’ 노래 가사 가운데 “우리 김 대장 발걸음 2월의 위업 받들어...” 등은 김정일의 3남 김정운으로의 권력세습 진행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되었으며, ‘2월의 위업’은 김정일 생일인 2월 16일을 지칭하며 김정일을 계승하는 후계자가 될 것임을 강조하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하였다. 이영중, 『후계자 김정운』 (서울: 늘봄플러스, 2010), p. 19.

I
II
III
IV
V
VI

이 나오기도 하였다. 작년의 경우 150일 전투, 희천속도,² 100일 전투 등을 벌일 것을 대대적으로 촉구하면서 이를 후계자 김정은 업적으로 포장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났다. 1974년 2월 김정일이 후계자로 권력의 전면에 등장하면서 모든 혁명과 건설 수행과정에서 속도전, 전격전, 섬멸전의 방법으로 투쟁하라는 호전적인 구호를 제시하였는가 하면 6개년 경제계획(1971~1976년)의 중반기에는 ‘70일 전투’(1974. 10.17~12.26)를 제시하였고 7개년 중반기에도 ‘100일 전투’(1980. 7. 1~10.8)를 제시하는 등 그의 지도적 업적을 부각시킨 것으로 보아 작년에 나온 일련의 ‘전투적 노동방침’을 김정은의 치적으로 부각시키려는 후계권력 구축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며 북한은 김정은을 후계자로 공식화하기에 이르렀다.

지난 9월 28일 개최된 당 대표자 대회에서 김정일을 당 총비서에 재추대하고 정치국 상무위원, 당 중앙군사위원장에 선거함과 더불어 김정은에게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 당직을 부여함으로써 김정은 후계자가 공식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앞서 김정일은 김정은에게 이례적으로 대장칭호를 부여하여 군사 지휘관 지위를 부여하였다. 이와 같이 군사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우선 과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김정은의 후계자 등극과정은 아버지 김정일의 그것과는 달리 비교적 신속하고 단순하다. 김정은은 대장으로서 군대를 직접 지휘할 뿐만 아니라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군을 당적으로 지휘·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음으로써 후계자 지위

² 2009년 9월 25일 북한은 새로운 천리마 속도인 이른바 ‘희천속도’를 제시하며, 속도전을 통한 후계자 업적 쌓기 지속을 촉구한 바 있다. ‘희천속도’는 9월 17일 김정일의 희천발전소 건설장 현지지도에서 명명된 것이며 올해 2월 4일자 로동신문을 통해 ‘희천속도’가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대박약 속도임을 거듭 강조한 바 있다.

를 단숨에 차지하게 되었다. 선군정치 논리에 따라 군사 지도권이 곧 국가 최고지도권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반면 김정일은 당권장악으로 그의 후계권력을 구축하기 시작하여 이를 바탕으로 단계적인 군대장악에 들어감으로써 상대적으로 지난 후계권력 구축과정을 걸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정일은 1973년 조선노동당의 조직 및 선전선동 비서, 1974년 당 정치위원으로 취임 하면서부터 당의 통제 및 장악 활동을 강화해 나감과 동시에 군사부문에 대하여 영향력을 본격적으로 행사하기 시작하였다. 군대에 대한 영향력의 주요한 지주로는 군 내의 당 지도기구 및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을 들 수 있다. 먼저 조직적 차원에서 보면 김정일은 인민군대 내 당 지도기구인 정치부계통을 중심으로 그의 군사 지도권을 확보해 나갔다. 북한에서 인민군대의 통제는 당의 정치조직을 통해서 주로 이루어져 왔다. 김정일이 조직지도 비서에 취임함으로써 당 조직 지도부 등 당 조직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군에 대해 지도력을 발휘하게 된 것이다. 인민군대 내 각급 당 조직은 전군의 주체사상 교양,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 간부대열 강화와 간부후비대 육성 및 당 생활 지도, 공산주의 교양과 사회주의 애국교양 및 당원·군인들의 혁명화, 노동 계급화, 군 내의 사회주의 노동청년동맹 조직강화 지도, 군사사업에 대한 당위원회회의 집단적 지도 강화 및 군대 내의 3대혁명붉은기쟁취 운동과 붉은기증대운동의 적극 전개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³

특히 김정일은 1975년부터 군대 내에 새로운 보고체계를 만들어 직접적인 군대통제를 단행하였다. 김정일은 김일성에 올리는 모든 문

³ 노동당 규약 7장 48조 참조.

I
II
III
IV
V
VI

건은 반드시 자신을 통하도록 하는 체계를 확립하였다. 1979년에는 김일성에게 올라가던 모든 보고 문건을 선별하여 “중요한 것은 자신이 직접 김일성에게 보고하고 나머지는 자신의 선에서 처리”⁴함으로써 군대의 보고체계를 독점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김정일은 군대 내의 정치·군사간부들을 대상으로 회의와 강습을 실시해 유일지도체계 확립에 박차를 가하기도 하였다.⁵

1980년 10월 조선노동당 제6차 대회에서 김정일이 김일성의 권력 후계자로 공식 지명됨으로써 이러한 대중운동이 군 내에서 본격적으로 강화되었다. 1980년 10월 10~14일까지 개최된 조선노동당 제6차 대회에서 김정일의 당적 지위가 공식화되었다. 우선 김정일은 동 대회기간 중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정치위원회 위원, 당 중앙위원회 비서국 비서로 선출되어 권력의 전면에 부상하였다. 특히, 동 대회 전원회의의 당 중앙위원회 군사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김일성, 오진우, 김정일을 포함한 총 19명의 위원이 선출되었다. 1990년 5월 24일에서 26일에 걸쳐 진행되었던 최고 인민회의 제9기 제1차 회의에서 ‘국가지도기관’ 선거를 통하여 중앙 인민위원회 산하에 있던 국방위원회를 그것과 동격의 기관으로 확대 개편함과 동시에 김정일을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위원장: 김일성)으로 임명하기에 이르렀다. 그 이듬해 12월 김정일은 군 최고사령관 직을 이양 받게 되고 1992년 4월 20일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칭호를 받았다. 1993년 4월 제9기 제5차 회의에서 김정일은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등극하였다. 이같이 김정일은 김일성 생전 시 우선적으로 군사 최고지도권을 이양받게 된 것이다.

4. 전 북한군 상좌 최주환 증언.

5. 정창현, 『결에서 본 김정일』 (서울: 토지, 1999), p. 166.

북한의 권력승계과정에서 ‘군사 최고지도권’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 군사 부문의 최고지도권은 타부문의 그것보다 승계를 위해서 보다 많은 명분과 실질적인 경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일성 생존 시 김정일에게 군사 지도권을 완전히 이양하여 경험과 이와 관련한 명분을 충분히 축적하도록 하기 위함일 것이다. 즉, 김일성은 그의 생존 시 김정일에게 군 최고지도자로서의 명실상부한 권력을 이양하여 군사 분야의 지휘와 관련한 경력과 능력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할 수 있도록 하여 군사경력을 결핍한 김정일이 ‘당의 수위(당 총비서)’ 및 ‘수령’직을 이양 받았을 때 북한 군부가 저항 없이 ‘당의 군대, 수령의 군대’로서 김정일의 ‘두리’에서 결집되어 충성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김일성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김정일은 단순히 명목적인 군사 지도권 확보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볼 때 김정일은 군대를 실질적으로 장악해 나가기 위해서 군대를 직접 지휘하고 통제하는 군사지휘관, 즉 ‘령장’이 되기 위한 노력을 우선적으로 기울여 나갈 필요성에 직면하였을 것으로 이해된다.

김정일은 김일성이 사망한 1994년부터 1998년 간을 ‘고난의 행군기’로 칭하고 군대를 동원하여 당, 국가, 사회의 전 부문에 대한 대대적인 재점검 및 사찰활동을 단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북한사회는 극심한 불안정과 혼란에 휩싸여 있었다. 사회주의체제가 붕괴되면서 북한도 예외가 아니라는 상황이 도래하였다. 특히, 경제난은 당의 활동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 공장이나 기업의 가동이 중단되고 배급은 극히 제한된 상황에서 당의 지도와 통제가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이 당의 지도와 통제를 대신한 군대가 동원되기 시작하였다. 우선 군대에 민간사회 부문에 대한 경제·사법·보안권이 위임

I
II
III
IV
V
VI

되었으며, 모든 결정은 군사명령으로 하달되었고, 보위사령부는 막강한 권력을 이양 받아 당 중앙일군들에 대한 사법권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보위 사령부는 주민단속권을 가지고 군법으로 즉결 처형하였다. 군대는 주요 공장 기업소들을 장악하였으며 당과 행정부문을 직접 관리하기도 하였다. 군대는 지배인사무소를 장악하고 행정권을 행사하였으며, 노동자들에 대한 강제동원 및 출퇴근 장악 및 통제를 직접 담당하기도 하였다. 동시에 군대는 경제부문에 투입되어 경제건설 사업에도 모범을 보이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같이 김정일은 군대를 활용하여 체제안정을 도모하였으며 군대 활용을 선군정치로 정식화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발전을 기해왔다. 김정일은 선군정치를 일시적인 체제안정화 수단으로 군대를 활용하는 차원을 넘어 ‘새로운 정치방식’, ‘새롭고 독창적인 사상’으로 발전시켜나가는 적극성을 보였다. 이를 위해서 제도적으로도 선군통치를 정당화하는 형태로 바꾸어 나갔다. 먼저 국가의 수반이었던 주석직과 국가주권의 최고지도기관이었던 중앙인민위원회를 폐지하고 여러 차례 헌법 개정을 통해서 국방위원회 위원장, 국방위원회가 이러한 직책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김정일은 국방위원장으로 군사적 지도권으로 국가를 통치하는 정치체계를 구축하였던 것이다.

김정일의 군사적 국가 최고통치권은 2009년 4월 9일 제12기 최고인민회의 첫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북한헌법 개정에서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정된 헌법에서는 국방위원장 절(節) 별도 신설 및 헌법상 지위 격상 등 국방위원장 및 국방위원회의 권한이 크게 강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헌법상 국장위원장의 지위를 ‘최고영도자’ 및 ‘최고사령관’으로, 그리고 ‘선군사상’을 명문화함으로써 법제도적 권한을 김일성 주석 수준으로 강화한 것이다. 이와 같이 김정일은 ‘강한 군사

력'과 '강한 군사 지도권'을 두루 갖춘, '수령국가' 또는 현대적 의미의 '군주국가' 건설에 초점을 맞추어 온 것으로 보인다. 현재 김정일체제는 일종의 '군주국'과 같은 정치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김정일은 단순한 세속적인 최고지도력을 넘어서 모든 부문에서 '전지전능'한 능력을 지닌 '신성군주'로서의 면모를 강화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신성 군주국'을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는 군사를 가장 중요시해야 하며 최고 통치자 스스로가 강력하고 능력 있는 군 지휘관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과 맥을 같이 한다.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다음과 같이 피력하고 있다.

“군주는 전쟁, 전술 및 훈련을 제외하고는 그 밖의 다른 어떤 일이든 목표로 삼거나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되며, 몰두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러한 기예야 말로 통치하는 자에게 적합한 것이다. 이러한 기예는 세속적인 군주로 하여금 그 지위를 보존하게 하고 종종 일개 시민을 군주로 만들만큼 효과적인 것이다. 만약 군주가 군사보다 사치스러운 일에 더 몰두하면 권력을 잃게 되리라는 것은 명백하다. (...) 프란체스코 스포르차는 무력을 가졌기 때문에 일개 시민에서 밀라노 군주가 되었다. 그의 자손들은 군사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군주의 지위에서 일개 시민의 지위로 전락했다.”⁶

마키아벨리는 강력한 군주가 되기 위해서는 군사력 강화에 몰두해야 하고 스스로가 군사에 밝은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군사를 잘 하면 일개 시민도 군주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김정일도 현대판 군주 못지않다는 사실은 “현대 정치가의 권위와 역할, 그의 실력은 비상한 군사적 지략과 담력, 뛰어난 령군술에 있다.”⁷고 한 김정일의 발언에서 잘 드러난

⁶ 니콜로 마키아벨리 저, 강정인 옮김, 『군주론』 (서울: 까치, 1994), p. 101.

다. 이러한 김정일의 말에 기초하여 북한에서는 군대를 틀어쥔 정치 지도자는 군대를 장악하는 데 머무를 것이 아니라 실제 군대를 지휘·통솔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여야 하며 그 스스로가 군사에 능통한 군사지휘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도 마키아벨리의 강력한 군주가 되기 위한 중요한 조건과 일맥상통한다.⁸

김정일은 군사를 우선하는 선군정치를 표방하면서 스스로가 ‘군사령장’으로서의 지위와 능력을 과시하고자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즉, 그는 군사에 밝은 강력한 군주가 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열망을 그의 새로운 후계자인 김정은에게도 그대로 적용하고자 한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김정일은 김정은에게 ‘대장’칭호를 먼저 부여하고 군 내부의 충성을 우선적으로 유도해 내고자 한 것은 단순한 형식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강력한 ‘세습 군주’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마키아벨리에 의하면 세습 군주국은 “새로운 국가보다 훨씬 더 용이하게 보존될 수 있고”, “기존의 질서를 바꾸지 않으면서 불의의 사태에 적절히 대처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세습 군주가 평범한 정도의 부지런함과 유능함만을 갖추고 있다면, 어떤 이외의 강력한 세력이 출현하여 그를 쫓아내지 않는 한, 그의 통치는 항상 안정을 확보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주장한다.⁹ 김정일이 선

7. 김봉호, 『위대한 선군시대』 (평양: 평양출판사, 2004), pp. 154~155.

8. 김정일이 당적 지도를 통한 군대지휘 범위를 넘어서 군사적으로도 직접 지도해야 할 필요성을 김일성 생존 시 다음과 같이 밝힌 바도 있다. “지금 당 중앙위원회 김정일 동지가 인민군대를 당적으로만 지도하고 있는 데 군사적으로도 직접 지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군대를 직접 지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김일성의 1982년경 전군 지휘관이 참가한 당 중앙군사위원회에서 한 말: 조선 로동당 출판사, 『김정일 동지 전기 2』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2003), p. 304.

9. 니콜로 마키아벨리 저, 강정인 옮김, 『군주론』, p. 12.

군정치를 ‘군사강성대국 건설’을 지향하면서 그 스스로가 군사에 밝은 수령, 즉 군주가 되고자 한 것도 안정된 후계체제 구축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때, 포스트 김정일체제는 현 김정일 체제 보다 더욱 더 선군정치에 기반한 세습 군주적 유일지배체제를 강화해 나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포스트 김정일체제가 어떠한 새로운 ‘유일지배체제’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를 분석하고 전망하는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크게 네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될 것이다. 첫째, 김정일·김정은 세습후계권력 구축 과정은 어떻게 다른가를 분석하게 될 것이다. 둘째, 포스트 김정일체제의 권력구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분석하게 될 것이다. 셋째, 포스트 김정일체제는 어떠한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창출하여 후계권력의 기반을 구축할 것인가를 살펴 볼 것이다. 넷째, 포스트 김정일체제가 체제보위 또는 확장을 위해서 어떠한 정책을 추진하게 될 것인가를 전망하게 될 것이다. 정책전망은 대내(정치, 사회, 경제, 군사)와 대외·대남으로 나누어 연구될 것이다.

I

II

III

IV

V

VI

II. 세습후계체제 구축과정

1. 세습후계체제 구축의 논리적 근거

세습후계체제 구축 필요성 제기는 김일성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일성은 그의 집권 40년 동안 공산주의 국가 독재자의 권력승계과정에서 발생한 암투, 혼란, 갈등 사례를 직접 목격한 바 있으며 이것은 곧 사상유례가 없는 장기 독재자로 군림하여 온 자신의 사후문제에 대한 불안과 우려로 작용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1953년에는 스탈린 사후 후르시초프에 의한 격하운동, 1970년 초 중공 유소기, 임포 암살 사건, 1976년 모택동 사망과 4인방 숙청 등의 사건들은 김일성으로 하여금 세습권력 의지를 굳히게 하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김일성은 정권이양 과정에서 초래될 이 같은 혼란을 피하고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세습후계체제를 생각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김일성은 세습 후계체제를 뒷받침하는 이론화 작업을 선행하였다. 김일성 자신이 1955년에 ‘주체’를 제창¹⁰하고, 1967년에는 이를 ‘주체사상’으로 종합 체계화하였으며, 1974년에는 이를 ‘김일성주의’로 연결시켰다. 이어 ‘김일성주의’로 승화된 주체사상을 ‘대’를 이어서 실현해나가야 된다는 권력세습 당위성을 부각하면서 동시에 김일성을 신격화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신격화되고 우상화된 자신의 권력이 대를 이어 지속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는 세습후계논리를 정당화하는 여러 가지 논리적 근거들이 강조되었다. 권력세습의 논리적 근거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¹⁰ 1955년 12월 28일 김일성은 노동당 선전선동 담당 간부들 앞에서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 데 대하여”란 주제의 연설을 행하였는데 이것이 북한주체사상의 기원이 되는 문헌 또는 주장으로 간주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현준·정영태 외, 『북한이해의 길잡이』 (서울: 박영사, 2005), p. 32.

첫째, 혁명계승론이다. 먼저 북한은 계속혁명론을 내놓았다. 계속 혁명이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할 때까지 혁명투쟁을 조금도 지체하거나 중도반단하지 않고 그것을 연속적으로 끊임없이 계속해 나가는 것”¹¹을 의미한다고 한다. 이러한 계속혁명론은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는 데 그 중 하나가 바로 혁명전통의 계승발전 원칙이다. 혁명전통 계승의 의미는 다음의 글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에서는 혁명의 세대들 사이에 계승의 관계가 맺어진다.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이 장기성을 띠고 진행되는 것만큼 세대교체는 불가피하며 이로부터 세대와 세대사이에 계승의 관계가 맺어지고 새 세대들은 혁명의 계승자로 등장한다. (...) 사람은 혈통에 의하여 대가 이어지듯 혁명투쟁도 그 과거와 현재 미래를 순결하고 일관성 있게 이어주는 명맥이 있어야 중도반단되거나 변질됨이 없이 끝까지 완성되어 나갈 수 있다. 바로 이러한 명맥이 혁명의 대를 이어주는 피줄기인 혁명전통이다.”¹²

이 같은 계속 혁명론은 수령의 후계자가 대를 이어 계속하여 혁명을 수행해야 한다는 기본 논리적 근거가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북한 당국은 김일성이 개척한 혁명과업을 대를 이어 계승해 나가야 하며, ‘김일성 없는 김일성주의’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세대교체론이다. 북한 당국은 후계자는 새로운 세대에서 나와야 하며 영도자로서 품모를 갖춘 인물이면서 동시에 새 세대를 대표하는 인물이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셋째, 혈통 계승론이다. 수령의 혈통을 이어받은 자가 후계자가 되어야 하며, 수령의 혈통을 계승하는 자라야 인민대중의 기대와 신뢰

¹¹ 함치영, 『계속혁명에 관한 주체적 리해』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p. 31.

¹² 위의 책, p. 31.

를 받으며 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룰 수 있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넷째, 역사적 준비 단계론이다. 수령의 후계자는 수령이 지니고 있는 사상과 이론, 영도예술을 배우고 이어받을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한다.

다섯째, 김일성 화신론이다. 즉, 김정일은 수령의 화신이라는 것이다.

2. 김정일의 세습후계권력 구축과정

가. 1970년대: 당권장악 시작

김정일의 후계권력 구축은 ‘선 당권장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1973년 9월 김일성이 김정일을 후계자로 결정하기 이전부터 김정일은 중앙당의 주요직책을 맡고 있었다. 김정일은 1963년 김일성 종합대학 정경학부를 졸업하고 그 해 당중앙위 교관을 시작으로 당직생활에 진입하였다. 이어 그는 1970년을 전후해서 당 문화예술과장파 조직부 부부장을 역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73년 9월에는 당조직 및 선전선동 담당비서를 맡게 됨으로써 중앙당조직의 핵심적 지위를 선점하기에 이르렀다. 김정일은 조직 및 선전선동 담당비서가 되면서 대중운동과 같은 당의 선전선동사업을 본격화 하여 전사회의 통제권을 확장해 나갔다. 당권 장악을 통한 전사회의 통제권을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김정일은 1974년 2월 19일 전국 선전활동가 강습회에서 『전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목표로한 당 사상교육 활동의 당면한 여러 과제에 관하여』라는 제하의 연설에서 “전사회를 김일성 주의화하자”는 것을 슬로건으로 ① 유일사상 교양, 혁명교양, 계급 교양의

I

II

III

IV

V

VI

철저, ② 사상전의 추진, ③ 경제선동 전개, ④ 당사업의 체계 등을 주장했다. 이어 김정일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기 시작했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김정일이 3대혁명소조에 대한 지도권을 장악하면서 이를 하나의 핵으로 하는 대중운동이었다. 김정일은 3대혁명소조에 대한 지도를 1975년 초부터 본격화했다. 그는 3대혁명소조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소조 지도체제의 정비를 서둘러 나가면서 소조원에 대한 학습·강습체계의 정비에 더하여 소조원을 “때로는 당과 국가의 중요한 회의에 참가” 시키기도 했다.¹³ 3대혁명소조와 선전선동부문을 활성화해 온 김정일은 이를 지렛대로 하여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전개를 장악해 오면서 이 운동을 “당사업의 중요한 구성 부분으로 하여 … 당조직 사상생활에 대한 지도와 밀접하게 결집”¹⁴시켜 나갔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북한은 1974년 2월 8일의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기념일’을 전후하여 인민군부로 하여금 김정일에 대한 ‘당중앙’이라는 호칭 표명과 ‘당중앙’에 대한 공개적인 충성 표시를 공공연히 유도하였다.¹⁵ 1975년에는 군의 김정일에 대한 충성표명이 보다 분명하게 전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75년 2월 리용무 총정치국장은 『당중앙』이 제시한 『전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방침을 실현하기 위해 싸워나가야만 한다고 밝혔다.¹⁶ 같은 해 10월 당시 인민군 총참모장이었던 오진우는 ‘당창건 30주년’ 기념논문에서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뜻을 가장 정확히 구현하여 당중앙이

13. 『로동신문』, 1988년 2년 9일.

14.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편, 『조선전사 32』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2), p. 273.

15. 『로동신문』, 1974년 4월 25일.

16. 『근로자』, 1975년 2월.

제기하는 모든 방침을 무조건 접수하며 최후까지 관찰하고, 당의 혁명적인 지도에 반대되는 어떠한 사소한 현상과 요소에 대해서도 타협 없는 날카로운 투쟁을 전개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당중앙으로 호칭되는 김정일의 지도에 철저하게 따를 것을 강조하였다.¹⁷

그런데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오중흡, 김혁동지에게 따라 배우는 운동’ 등의 대중운동은 1979년에 들어와서 더욱 심화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80년 10월 조선노동당 제6차대회에서 김정일이 김일성의 권력후계자로 공식 지명됨으로써 이러한 대중운동은 전 사회 내에서 본격적으로 강화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나. 1980년대: 당권 강화

조선노동당 제6차대회(1980년 10월 10~14일)에서 김정일의 당적 지위가 강화되면서 권력의 전면에 부상하기 시작하였다. 김정일은 동대회기간 중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4위),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정치위원회 위원(4위), 당 중앙위원회 비서국 비서, 당 중앙군사위원회 군사위원(3위)으로 선출되었다.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제6차 당대회에서 신설된 기구로서 당규약에 따르면 “전원회의와 전원회의 사이에서 당 중앙위원회 명의로 당의 모든 사업을 조직·지도”하는 기능과 임무를 지녔다. 그러나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정치국 상무위원회와 정치위원회로 구성되는 비상설기관으로서 정책비준 및 결정기관이다. 국가권력 고위층에 해당되는 인물들이 여기에 소속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당 정책과 정책입안에는 자문형

17. 『근로자』, 1975년 10월.

I
II
III
IV
V
VI

식의 협의체적 의미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치국은 비상설 결정 심의기구로서 상징적 기구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 졌다.¹⁸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일을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으로 선출하게 된 것은 권력승계를 위한 김정일의 당적 지위를 확고하고 당의 실질적인 책임자로서의 역할 제고로 후계자로서의 면모를 갖추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신설 당시 5명(김일성, 김일, 오진우, 김정일, 이종옥)으로 구성된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김정일이 서열 5위를 점했으나 이듬해 김정일은 김일성 다음의 서열 2위로 격상됨으로써 명목상 북한에 있어서 제2인자로서의 지위를 과시하게 된 것이다.

이에 반해 비서국은 “필요 시 당 인사 및 당면문제 등 당내문제를 토의, 결정하며 그 결정의 집행을 조직·지도”(당규약 제3장 26조)함으로써 당사업의 실무기구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있다. 비서국은 당 중앙위원회의 당행정실무집행기관으로서 모든 정책노선과 당의 견해는 이 기구로부터 출발하도록 되어 있는 실질적 최고정책입법기관이다. 비서국에는 총비서가 있고 바로 아래 조직화를 담당하는 조직비서와 사상개조를 담당하는 선전선동비서가 있다. 당 제6기 제1차 전원회의 이후부터 김정일이 비서국 비서(2위)로 선출되어 이를 직접 관장해 왔다. 조직 및 선전선동비서 휘하에 여타 부문 담당비서들이 존재하고 있으나, 북한은 민주주의적 의미를 부각시키기 위해 이들의 권위를 조직 및 선전선동비서의 그것과 형식상으로 동등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 결국 당 제6기 제1차 전원회의 이후부터 김정일이 조직 및 선전선동담당 부 총비서격인 조직 및 선전선동비서직을 장악함

¹⁸ 북한 대양무역회사의 前 사장이었던 귀순자 김정민 씨의 증언.

로써 당의 실질적이고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¹⁹

또한 1980년 10월 14일, 당 제6기 제1차 전원회의에서 당 중앙위원회 군사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김일성, 오진우, 김정일을 포함한 총 19명의 위원이 선출되었다. 북한의 당규약 제3장 27조는 당 중앙위원회 군사위원회가 “당 군사정책 수행방법을 토의 결정하며 인민군을 포함한 전체 무력강화와 군수발전에 관한 사업을 조직·지도하며 우리나라의 군대를 지휘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르면 당 중앙위원회 군사위원회는 북한의 군사정책을 결정하며 일체의 무력을 지휘하는 최고기관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김정일이 김일성, 오진우에 이어 서열 3위(1989년 9월에는 서열 2위로 부상)로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됨으로써 북한 일체의 무력에 대한 통수권자적 지위 확보를 위한 공식적인 군사기반을 구축하게 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김정일은 당조직 비서로서, 이제까지 군의 당 정치기관을 통해서 주로 군사지도권을 행사해오다가 당중앙위 군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됨으로써 군사행정 지휘계통 관련 지도권을 추가하게 되었고 그의 군사부문 지도권을 직접적으로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던 것이다.

이에 더하여 김정일은 이러한 당적권한에 기초하여 1982년부터 군부 내(무력부, 군단, 사단)에 그의 친위대·후비대인 3대혁명소조원을 파견,²⁰ 군대의 사상동향 감시 및 군내부의 지지기반 구축을 조직적으로 도모해왔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²¹ 1982년 7월 20일자 로동신

¹⁹ 귀순자 김정민 씨의 증언.

²⁰ 귀순자 김남준(1989년 9월 10일 귀순, 전 북한군 보병 소대장) 씨에 의하면 연대급에서는 연대선전부 지도원이 소조원(대위 또는 소좌)을 겸임하면서 3대혁명운동의 지침만을 받아 점검하는 식으로 운동이 전개되었다고 한다.

²¹ 안찬일, 『북한인민군의 조직관리방식과 실전능력 평가연구』 (통일원 신진학자

I
II
III
IV
V
VI

문 사설에서 ‘3대혁명소조’²²는 균을 포함한 사회 각 부문에 김일성의 ‘정치적 신임’ 아래 파견된 김정일의 ‘친위대·근위대’라고 강조하고 이 조직의 역할 제고 및 활동 강화를 역설하였다. 이와 같이 북한이 ‘3대혁명소조’의 권한을 강화하고 그 활동 영역을 넓힐 것임을 강조한 것은 이를 통하여 김정일의 제반 시정활동을 강력히 추진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3대혁명소조의 권한 강화 그리고 활동영역을 균으로까지 확장한 것은 김정일의 전반적인 지도권 공고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사회통제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1980년대를 거치면서 김정일은 당 중앙위원회 비서국 비서, 당중앙위 군사위원회 위원(1989년 서열 2위)으로 부상함으로써 사실상 당 차원에서 조직 및 선전선동부문뿐만 아니라 군사부문에 있어서도 제 2인자의 위치를 굳혔다.

다. 1990년대: 당·국가·군대 전 부문으로의 권력기반 확대

1990년대 들어와서 김정일은 군사고유의 최고지도권을 단계적으

학술용역 보고서, 1991), p. 53.

²² 3대혁명소조는 경제적 성격을 내포한 정치조직으로서 기본목적이 경제파탄을 막기 위한 노동력의 인위적 동원과 김정일의 승계체제 구축 등이라 할 수 있으며, 소조원의 성격은 젊은 층의 열성 당원과 대학생 등으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3대혁명소조의 책임자는 김일성 권력의 후계자인 김정일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서 김일성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우리당이 인민경제의 각 부문에 3대혁명소조를 파견한 것은 3대혁명을 강력히 추진하는데 중요한 조치였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모든 부문에 빠짐없이 당조직이 있기 때문에 당조직을 통하여서 3대혁명을 추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러한 사업을 단순히 하부의 당조직에만 맡겨둘 수 없으며, 당중앙이 3대혁명소조를 파견하여 당조직과 3대혁명소조가 협력하여 3대혁명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통일일보』, 1975년 10월 22일.

로 이양받게 됨으로써 명실상부하게 북한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 할 수 있는 공식적 지위를 확보하기에 이르렀다. 1990년 5월 24일에서 26일에 걸쳐 진행되었던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1차 회의에서는 ‘국가지도기관’ 선거를 통하여 중앙인민위원회 산하에 있던 국방위원회를 중앙인민위원회와 동격의 기관으로 확대 개편하였다. 국방위원회는 원래 대내정책위원회, 대외정책위원회, 사법안전위원회, 법제위원회, 경제정책위원회 등과 함께 북한의 최고 권력기관인 중앙인민위원회의 하부기구로서 존재해 왔다(1972.12.27. 수정헌법, 제7장 제105조 참조). 이와 같이 중앙인민위원회에서 독립, 확대 개편된 국방위원회에서 김정일이 제2인자에 해당하는 제1부위원장(위원장: 김일성)으로 임명됨으로써 군사고유의 지도권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단계에 진입하게 되었다.

나아가 1991년 12월 24일 김정일은 군 최고사령관직을 이양 받았으며 이어서 1992년 4월 20일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 칭호를 수여받기까지 하였다. 최고인민회의는 1993년 4월 7~9일까지 3일간에 걸쳐 개최된 제9기 제5차회의에서 김정일을 마침내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인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하게 되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김정일은 지난 1980년 제6차 당대회를 계기로 김일성의 후계자로 공식 부각된 이래 13년 만에 핵심통치 기구의 수장 자리 중 하나 즉, 군통수권을 완전 이양 받게 된 것이다.

그런데 김일성 사후, 김정일은 단순히 군 최고 통수권자로서의 군사지휘권 획득만으로는 북한군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그의 유일정권을 유지해나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김정일은 “총대를 틀어쥐지 못한 정치가는 허수아비와 같다”고 함으로써 군대에 대한 실질적인 장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I
II
III
IV
V
VI

예를 들면 이라크 전쟁경험은 대통령이 명색으로는 국가와 군대의 최고권한을 쥐고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군대에 대한 지휘권, 통솔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그러한 군대는 자기의 지도자를 배신하고 투항의 길에로 나간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하면서 현대 정치가는 군대를 틀어쥐어야 한다는 것이다.²³

이를 위해서 김정일은 군사최고지휘자 겸 국가 최고지도자(장군, 국방위원장)로 나서면서 직접적인 정권보위 수단으로 군대를 장악하기 위해서 선군정치사상과 함께 선군정치체계를 확립해 나가고 있다. 소위 선군시대에 들어서면서 북한에서는 정치체제를 그에 맞게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즉, 국가의 정치체제를 국방위원회를 중추로 하는 정치체제로 발전시켰다는 것이다. 이전에는 국방위원회가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 중의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중앙인민위원회 다음 순위에 있었다면 개정된 헌법(1998년 9월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 회의)에서는 국방위원회가 최고인민회의의 다음 순위에 놓임으로써 국방위원회가 법적지위와 구성, 임무와 권한에 있어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 지방주권들, 사법검찰기관보다 우위에 놓이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국방위원장의 중임은 나라의 정치, 군사, 경제영역의 총체를 통솔지휘하며 나라의 방위력과 전반적 국력을 강화시키는 사업을 조직 영도하는 국가의 최고 직책으로 되었으며, 김정일이 국방위원장직을 친히 맡게 된 것이다.²⁴ 이에 따라 김정일은 국가의 최고 지도자로서의 중임뿐만 아니라 군사 최고지휘자로서 강력한 ‘국가최고령도자’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는 일국의 대통령이 단순히 국가 최고 통치자로서 군 최고 통수권을 갖

²³ 김봉호, 『위대한 선군시대』 (평양: 평양출판사, 2004), pp. 152~153.

²⁴ 위의 책, pp. 77~79.

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훨씬 고양된 군사 및 국가 통치권을 행사하게 된 것을 의미한다.²⁵

²⁵ 북한은 김정일의 군사최고 지도권을 자본주의사회의 대통령이 갖는 군 최고 통수권과는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그의 실질적인 군사지휘자로서 특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자본주의사회처럼 대통령이 군 최고사령관 직을 담당한다고 하여 대통령이 곧 군사지휘능력을 갖춘 군사가 되는 것이 아니다. 참다운 수령은 령활한 군사지휘능력을 겸비한 군사가 되어야 한다. … 김정일 장군께서는 어리실 때부터 군인이시였으며 오늘은 주체혁명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서 세상에 그 누구도 따를 수 없는 탁월한 전략가로, 선군시대 혁명무력의 총사령관으로 되었다. … 김정일 장군께서는 정치가이기 전에 군인이라고 하시며 백두산혁명적군인가정의 전통을 이어 영광스러운 선군시대를 펼치시고 선군혁명을 승리에로 이끌어가고 계신다.” 위의 책, p. 155.

I
II
III
IV
V
VI

● 표 II-1 김정일의 세습권력 구축과정

구분	시기	세습 주요 지도권	주요 활동
당 권 장 약 시 작	'64	당 조직지도부 지도원으로 시작	○ 당 조직 생활 진입
	'67	당 조직지도부 중앙지도과 중앙기관담당 책임지도원	○ 당 중앙위 제4기 15차 전원회의 대규모 숙청 주도 ○ 권력 핵심 진입
	'67~'69	당 선전선동부 문화예술 지도과장('67) 및 부부장('69)	○ '김일성주의화'사상사업
	'72	당 중앙위 위원 임명	○ 당종교환사업('72.10) ○ 3대혁명소조운동('73.2) 주도 → 세대교체 가속화
	'73	선전선동부장('73.7), 조직 및 사상담당 비서 겸 조직지도 부장('73.9)	○ 당 조직 사업 관여 시작, ○ 당 조직과 사상부문 장악 ○ '73.10 이후 3대혁명소조운동 등 대중운동 진두지휘
당 및 군 사 지 도 권 강 화 및 확 대	'74	당 정치국 위원 및 후계자 확정('74.2)	○ 정치위원 선출: 중앙위 제5기 8차 전원회의('74.2) → 후계자 내정 → '당중앙' 호칭 사용
	'80	당 정치국 상무위원 및 당 중앙군사위 위원('80.10)	○ 제6차 당대회('80.10)를 통해 후계자로 공식 등장→ '81.6 이후 '당중앙' 대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 호칭 사용으로 후계자 지위 정당화
	'90~'93	국방위 제1부위원장('90.5) 및 최고사령관('91.12), 인민군 원수('92.4), 국방위원장 추대('93.4)	○ 군사최고지도권 이양 완료
	'97~'98	당 총비서 추대('97.10) 및 국방위원장 재추대('98.9)	○ 승계권력 완성

3. 김정은의 세습후계권력 구축과정

가. 개요

김정은이 공식적으로 후계자로 부상하게 된 것은 2010년 9월 28일 새벽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셋째 아들 김정은에게 ‘인민군 대장’ 칭호를 부여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이어 3차 당대표자 대회에서 김정은이 당 중앙 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면서 시작되었다. 물론 그 이전부터 3남 김정은의 후계자 등극 움직임은 작년부터 구체적으로 감지되기 시작하였다. 2009년 북한은 빠져나온 한 탈북자는 2009년 3월경 부교장이 교사들에게 “청년대장 김 대장 동지가 곧 지도자가 될 것 같다”는 얘기를 하면서 “아직 학생들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당부했다는 증언을 내놓았다.

이와 더불어 북한 당국은 각종언론매체들을 통해서 백두산 혈통 강조로 세습 당위성 선전해 왔다. 지난 9월 로동신문²⁶은 김정일 출생 97돌 기념 사설을 발표하였는데, 여기에서 “전당과 온 사회에 위대한 장군님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백두의 혈통을 이어나가며...”라는 세습관련 언급이 나온 바 있다. 그 이전에도 김정은의 세습을 상징하는 다양한 어휘나 노래 등이 전해지기도 하였다. 세습 후계자 김정은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는 ‘셋별장군’, ‘김 대장’ 등의 어휘들이 북한 사회에서 폭넓게 확산되어 왔으며, ‘발걸음’이라는 노래와 함께 관련 구호 등이 급속하게 퍼지게 하여 세습 후계자를 찬양하고 세습의 당위성을 선전하는 분위기를 창출해 나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하였다.

26. 『로동신문』, 2009년 4월 15일.

I
II
III
IV
V
VI

특히, 북한 노동당이 지난 6월 “당대표자회를 9월 상순에 소집할 것을 결정한다”고 발표한 이후 김정은이 후계자로 공식부상하게 될 것이라는 추측들이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예측들은 빗나가 지 않고 3차 당대표자대회에서 사실로 밝혀지기에 이르렀다. 44년 만에 개최된 노동당대표자회에 맞춰 김정일 자신의 뒤를 이을 후계자가 3남 김정은임을 대내외적으로 공식 천명한 셈이 되었다. 이로써 2009년 1월 김정은이 후계자로 내정된 지 1년 9개월 만에 북한의 권력세습은 김일성 → 김정일 → 김정은으로 3대에 걸쳐 이루어지게 되었다.²⁷

나. 김정은 권력세습과정의 특성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후계자 김정은의 권력세습 과정은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 같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김정일은 당권장악부터 시작하였으나 이와는 달리 김정은은 군대장악을 앞세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지금도 변함없이 당-국가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당-국가체제하에서는 권력세습을 위해서 당을 먼저 장악하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문제는 당을 어떻게 장악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다. 김정일은 군인이 아닌 일반 민간(civilian) 신분으로 당을 장악해 들어갔다. 반면 김정은은 민간 신분이 아닌 군인(대장)으로서 당의 장악과정을 견도록 한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김정은은 단순히 민간 정치지도자이기 이전에 군 최고 지휘관의 신분으로서 당직(당 중앙위원회 위원 및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게 된 것은 군사적으로 당을 장악해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27. 이영중, 『후계자 김정은』, p. 20.

선군정치 통치체제하에서는 이러한 권력세습 구축과정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으로 이해된다. 먼저 이는 대를 이은 총대사상 강조와 그 이행에 기인한다.

◎ **대를 이은 총대사상 이행:** 북한은 인류의 역사를 ‘총대’의 역사로 정의하고 총대의 강약에 따라 국가와 민족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정치지도자들이 총대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다루어 왔느냐에 따라 그 나라 국력의 강약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김정일은 “총은 계급의 무기, 혁명의 무기, 정의의 무기”라고 하면서 계급투쟁, 혁명투쟁을 위해서는 ‘총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총의 사용이 정당하다는 논리를 전개한다. 계급투쟁, 혁명투쟁은 적대세력과 ‘힘의 대결전’이며 힘의 대결전의 최고의 형태가 폭력투쟁이며, 폭력투쟁은 곧 총과 총이 맞서는 ‘총대전’이라고 함으로써 무력의 중요성과 무력 사용의 정당성을 강조한다. 이에 따라 무력을 내세우지 않은 계급투쟁, 혁명투쟁, 정의의 투쟁은 승리할 수 없다고 하면서 계급투쟁, 혁명투쟁, 정의의 투쟁을 앞에서 지휘하는 김정일 또는 후계자 김정은은 우선적으로 총대를 강화하고 이를 장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력을 강화하고 장악하지 못하면 정권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실제로 김정일이 “정권은 총대에서 나오며 총대에 의하여 유지”²⁸된다고 강조함으로써 군사력 강화와 군대장악을 통한 권력창출과 권력유지 의지를 확인하고 있다.

김정일의 이러한 ‘총대’ 중시 인식은 기본적으로 공산주의 군사이론 및 사상에 기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모택동의 다음과 같은

²⁸ 김인옥, 『김정일 장군의 선군정치 리론』 (평양: 평양출판사, 2003), p. 25.

I
II
III
IV
V
VI

혁명전쟁관은 이러한 판단을 분명하게 밝혀준다. 모택동은 “혁명의 중심임무와 최고 형태는 무력으로 정권을 쟁취하는 것이며, 전쟁을 갖고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고 하면서 “공산당원 하나하나가 모두 ‘총포로부터 정권이 탄생한다’는 진리를 이해해야 한다”²⁹고 강조한 바 있다. 모택동의 이러한 군사관은 제국주의전쟁의 당위성을 말하는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전쟁불가피론’에 기반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북한은 이러한 ‘총대’ 증시 논리를 사회주의·공산주의에서 찾기보다 그들의 자체의 역사에서 찾고자 하는 노력을 보인다. 그들은 ‘총대사상’을 주체사상에서 찾고자 하는 것이 그것이다. 북한학자 김인옥은 “혁명은 총대에 의하여 개척되고 총대에 의하여 전진하며 완성된다는 총대혁명원리는 주체혁명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김일성의 주체혁명이 “반일민족해방운동의 지도자이셨던 김형직 선생님께서 물려주신 두 자루의 권총유산에 그 근원을 두고 있었다”고 함으로써 ‘총대사상’은 김일성의 아버지 김형직에서부터 출발하여 김일성 → 김정일로 이어져 오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 점으로 볼 때³⁰ 이것은 후계자(김정은)에게도 적용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으로 판단된다. 총대사상은 김일성가문의 유산이라는 것이다. 김일성이 김정일에게 한 다음과 같은 이야기로 대를 이은 ‘총대유산’을 정당화 한다.

“할아버지(김형직)는 세상을 떠나실 때 나에게 ‘지원’의 뜻이 담겨져 있는 권총 두 자리를 유산으로 넘겨주시었다. 나는 그

29. 모택동, 『전쟁과 전략의 문제』 (북경: 외교출판사, 1969), pp. 376~383.

30. 김인옥, 『김정일 장군의 선군정치 리론』 (평양: 평양출판사, 2003), p. 64.

31. 위의 책, p. 65.

권총 두자루를 밀천으로 삼아 첫 무장대오를 조직하고 반일대전을 선포했으며 조국의 해방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우리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 이 권총을 오늘 너에게 준다. 혁명의 계주봉으로 알고 받는 것이 좋겠다. 우리 만경대가문에서 3대로 내려오는 총이니 한평생 잘 간수하여라 앞으로 네가 맞서 싸워야 할 적들은 다 만만치 않은 놈들이다. 미국놈들과 일본놈들은 어제날도 오늘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나라를 먹자고 계속 발악할 것이다. 그러니 절대 총을 놓아서는 안 된다. 오직 총대로서만이 적들을 짓밟게 버릴 수 있다”³¹

이러한 총대유산에 기초하여 김정일은 일찍부터 고대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각종 전쟁사와 세계적인 군사전략가들과 명장들의 군사사상과 이론, 전략전술을 연구 분석하였다고 선전한다. 특히 김정일이 대학시절에 《전쟁승리의 요인에 대하여》, 《전쟁의 성격에 대하여》, 《전법창조와 적용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독창적인 군사사상에 대하여》 등 군사논문들 집필 및 수많은 군사관련 저서들을 발표했다고 자랑한다.³² 김정일의 군사관련 이러한 논문에서 “미일제국주의 강적을 타승하신 희세의 군사전략가이신 김일성 주석의 군사사상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하고 그 독창성과 역사적 지위를 전면적으로 밝히는 데 돌려졌다”³³고 한 것은 총대사상이 김일성에서 김정일에게 이어져 오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자 하는 의도를 엿볼 수 있게 한다.

현재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후계자 김정은을 김정일 자신과 마찬가지로 군사최고전략가로서, 또는 명장(대장) 또는 군 최고지휘관으로서 북한을 통치한다는 명분을 쌓도록 하는 후계과정을 견제 하고 있

³²- 위의 책, p. 67.

³³- 위의 책, p. 67.

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김정은 세습체제 구축은 ‘장군혈통’을 강조 하면서 김일성에 이어 김정일 그리고 ‘혁명 수뇌부의 미래’인 직계 자식 김정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북한 당국이 “백두장군(김일성) 민족 후손 만대의 혈통을 이어 놓고 혁명 수뇌부 미래를 열어 놓았다”고 선전하고 있는 것처럼 대를 이은 ‘장군혈통’ 권력세습을 당연시하는 분위기 창출을 지속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세습구축 관련 정치 캠페인 및 운동에 있어서 군대를 가장 선봉에 서도록 하고 있다. 북한의 권력세습의 정통성은 ‘군사 지도권’의 전통성에서 찾으려 하고 있는 만큼 군대가 모범적으로 이를 뒷받침하도록 하는 사상교육 및 운동이 점차적으로 확산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현재 북한에서 전개되고 있는 선군정치는 잠정적이거나 임시적인 것이 아니라 향후 북한의 차기세습체제 구축을 위한 전 과정을 통해서 계승 발전되어 나가도록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군대가 대를 이어가는 세습구축에 있어서 반기를 들기 보다는 이를 지지하는 중심세력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게 될 것이다.

◎ ‘선군후로’ 사상에 기초한 후계권력 구축: 김정일시대의 선군정치는 김일성시대의 군사중시정책의 범위를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김일성시대의 군사중시 정책은 군대를 단순히 혁명의 수단으로 인식하고 혁명의 완성을 위해서 군대와 군사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왔다. 반면 김정일은 단순히 군대 및 군사력을 우선적으로 강화한다는 군사중시주의를 넘어서 군사를 ‘국사 중의 국사’로 치부하고 군대를 모든 부문에서 앞세우는 군사선행이론을 전개해나가고 있다. 이와 관련 김정일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I
II
III
IV
V
VI

“선군정치란 본질에 있어서 군사선행의 원칙에서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며 인민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내세우고 그에 의거하여 사회주의위업전반을 밀고나가는 정치방식입니다.”³⁴

북한 당국은 군사를 국사 중의 제일 국사로 내세우고 인민군대를 강력한 혁명무력으로 강화하여 국가의 안전과 혁명의 전취물을 사수하며, 인민군대를 주력으로 혁명의 주체를 튼튼히 꾸려나가도록 하는 정치방식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군대를 혁명의 주력군, 기둥으로 내세우며 혁명군대의 혁명적 기질과 전투력에 의거하여 전반적 사회주의 건설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당 및 국가임무수행에 있어서 여러 수단들과 역량, 분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바로 군대를 기본으로 혁명의 운명을 좌우하는 핵심역량으로 보고 혁명군대를 틀어쥐고 군 건설을 앞세워 혁명과 건설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다시 말해서 단순히 군사를 중시하는 선을 넘어 “군사를 첫 자리에 놓고 로선과 정책을 립안하고 혁명군대를 사회의 그 어느 집단보다 먼저 최정예부대로 만들” 것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특히 혁명에 있어서 기존에는 노동자가 주력군이 되는 ‘선로후군’ 사상이 지배적이었으나 이제는 ‘선군후로’사상과 정책을 필요로 한다고 한다. 실제로 북한당국은 이전에는 “혁명력량을 주력군과 보조력량으로 편성하고 주력군 문제를 주로 노동계급만으로 보는 것이 하나의 공식처럼 인정되어 있었다”고 하면서 이제는 “이 같은 기성관념과는 완전히 달리하여 혁명의 주력군, 기둥에 관한 문제를 새롭게 제기하고, 혁명군대를 주력군, 기둥의 지위에 놓는 령도 방식, 정치방식”

³⁴ 김정일의 말 인용, 『우리당의 선군정치』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6), p. 96.

으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³⁵ 북한당국은 김정일이 “건국과 망국의 악순환으로 엮어진 수천 년 인류국가 흥망사를 꿰뚫어 보시고 건국정치의 법칙처럼 되어오던 선경후군(先經後軍) 정치의 역사적 교훈과 군력의 의의를 부차시하여 사회주의를 잃은 지난 세기 90년대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피의 교훈을 총결산하신데 기초하시어” 선군정치 방식을 내놓았다고 주장하고 있다.³⁶ 여기에는 군을 무시하고 경제를 우선시 할 경우 당장의 경제적 결핍을 채울 수 있을지 몰라도 체제보위를 담보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는 신념이 자리 잡고 있다.³⁷ 혁명의 기둥으로서의 군대역할을 의미하는 선군정치의 필요성이 체제보위 차원에서 한층 더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북한군대를 김일성의 군대에서 김정일 자신의 군대로 만들어 이를 그의 정권 공고화에 적극 이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있다. 북한 당기관지 로동신문(조선인민군 창건 70주년 기념 사설)에서 “우리 인민군대를 영원히 김정일 동지의 군대로 강화, 발전시켜나가야 한다.”³⁸고 강조한 것은 이와

35. 김인옥, 『김정일 장군의 선군정치 이론』, pp. 182~184.

36. 정성장, “김정일시대 북한의 ‘선군정치’와 당·군관계,” 『국가전략』, 제7권 제3호(2001), pp. 51~77.

37. 북한 당국은 경제발전 우선문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비판하고 있다. 북한은 “선행한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에서는 주로 물질경제적 측면을 기본으로 하여 사회주의건설에 관한 사상과 이론을 제시하고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데서 군사보다는 경제를, 군대 보다는 노동자를, 농민을 중심에 놓고 사회주의 건설에 나서는 리론실천적 문제를 풀어나갔다. 이것은 맑스-레닌주의 창시자들이 사회주의를 직접 건설해 보지 못한데로부터 군사중시문제를 간파할 수가 없었다는 것과 또 자신들이 정립한 원리와 방법으로써 이 문제가 제기될 수 없었다는 시대적 및 리론적제한성과 관련된다.”고 하면서 “물론 사회주의건설에서 경제건설이 가지는 중요성은 크다. 그러나 사회주의 운명, 사회주의 집권당과 사회주의 정권, 사회주의 제도 등은 총대에 의하여서만 수호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리철·심승진, 『위대한령도자김정일동지께서밝히신선군혁명명령도에관한 독창적 사상』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02), p. 118.

38. 『로동신문』, 2002년 4월 25일.

무관하지 않다. 이를 관철하기 위해서 북한은 점차적으로 선군혁명 사상의 성격을 혁명이론으로 구체화하면서 혁명의 주력군으로 노동 계급 대신 군대를 내세움으로써 군대의 역할을 제고해 왔다. 이는 북한사회의 전 분야에 걸쳐서 혁명이라는 이름 하에 군대의 주도적 역할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그동안 북한은 혁명의 주체를 노동자 농민은 물론 인텔리 계층까지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지칭해 오기는 하였으나 군대를 포함시키지는 않았다고 하면서 더 이상 노동계급관에 기초한 혁명관을 고수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김일성 종합대학 학보(철학 경제학) 2003년 2호에서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어느 때, 어디에서나 노동계급의 혁명의 주력군이 된다고 보는 것은 선행 이론에 대한 교조주의적 관점이며 원리적으로 맞지 않다”면서 “우리 당은 어떤 기성이론이나 기존공식에 구애되지 않고 선행이론에 대한 온갖 교조주의적 태도와 수정주의적 왜곡을 철저히 배격해 나갈 것”이라 강조한다. 또한 “인민군대는 사회주의 발전을 주도하는 핵심이며 온 사회가 따라 배워야 할 본보기”라고 함으로써 ‘선군후로(先軍後勞)’ 정치를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다. ‘선군후로’의 정치는 군대가 혁명주체세력으로 등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은 “선행한 노동계급의 혁명이론에서는 주로 물질경제적 측면을 기본으로 하여 사회주의건설에 관한 사상과 이론을 제시하다나니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데서 군사보다는 경제를, 군대보다는 노동자를, 농민을 중심에 놓고 사회주의 건설에 나서는 리론실천적 문제를 풀어나갔다. 이것은 맑스-레닌주의 창시자들이 사회주의를 직접 건설해 보지 못한 데로부터 군사중시 문제를 간파할 수가 없었다는 것과 또 자신들이 정립한 원리와 방법으로써 이 문제가 제기될 수 없었다는 시대적 및 리론적 제한성과

I
II
III
IV
V
VI

관련된다,”고 하면서 “물론 사회주의건설에서 경제건설이 가지는 중요성은 크다. 그러나 사회주의 운명, 사회주의 집권당과 사회주의 정권, 사회주의 제도 등은 총대에 의하여서만 수호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³⁹

후계자 김정은도 이 같은 ‘선군후로’ 사상에 근거하여 후계권력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김정은을 우선적으로 대장칭호를 하사함으로써 ‘선군시대 정치지도자’⁴⁰로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북한에서 “현대정치기는 군대를 틀어쥐어야 할 뿐만 아니라 군사에 능통한 탁월한 군사지휘관이 되어야 한다”⁴¹는 요구가 인위적으로 교육되어 왔다. 현재 당-국가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에서 당의 장악이 곧 정권장악이라 할 수는 있다. 그러나 당의 주력군은 더 이상 노동자가 아닌 군대가 된다는 이론에 기초할 경우, 당을 장악한다는 것은 곧 군대를 장악하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김정은이 먼저 ‘대장’으로서 군사에 능통한 탁월한 군사지휘관이 되고 군대 지휘관으로서 당을 통제·장악하고 이러한 당을 통해서 군대를 정치적으로 완전 장악하는 과정을 밟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9. 리철·심승건, 『위대한령도자김정일동지께서밝히신선군혁명령도에관한 독창적 사상』, p. 118.

40. 김정은뿐만 아니라 김정은의 고모인 김경희, 그리고 최룡해에게 ‘대장’칭호가 하사되었는데 이들 역시 ‘선군시대 정치지도자’의 한 사람이라는 의미와 함께 김정은 후계권력을 뒷받침하는 핵심 세력으로 과시된 것으로 보인다. 김경희 대장은 정치국 위원으로, 최룡해 대장은 비서국 비서로 각각 배치하여 김정은의 당적 통제를 담보해주는 주요 세력으로 기능하도록 하였다.

41. 김봉호, 『위대한 선군시대』, p. 154.

Ⅲ. 후계체제의 권력구조

김정일의 3남인 김정은의 권력세습이 가시화된 최근, 김정은체제의 권력구조를 지배체제 형태, 당·정·군 관계, 정치국 및 당 중앙군사위원회와 국방위원회의 위상과 역할, 권력엘리트 변화의 네 가지 측면에서 전망하고자 한다.

지배체제 형태는 최고지도자와 지배엘리트 사이에 권력이 어떤 방식으로 배분될 것인지에 대해 즉, 현재의 수령유일지배가 지속될 것인지, 집단지도체제가 형성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지배체제가 등장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이와 연관된 것이지만 당·정·군 관계에서는 현재의 관계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는지 또는 당·군 관계에서 변화가 나타날지를 전망하게 되며 이 속에서 근래 그 역할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국방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이 후계체제 구축과정과 김정은체제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지 예측한다. 마지막으로 권력구조 내 주요 행위자이자 체제운용의 중요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권력엘리트들이 김정은체제에서 어떻게 달라질지 전망한다.

1. 지배체제

김정은 후계체제의 지배체제에 대해 선행연구들은 크게 보면 일인지배체제, 집단지도체제, 세습과 집단지도체제의 혼합체제 등 3가지 형태를 제시한다. 일인지배체제의 성립을 주장하는 연구들은 북한의 수령중심 당-국가체제의 안정성, 엘리트들의 협력, 강한 체제내구성 등을 근거로 제시하고 집단지도체제나 혼합체제를 주장하는 연구들은 후계체제의 준비 부족, 후계자의 어린 나이와 경험 부족, 후계자의

I

II

III

IV

V

VI

취약한 지지기반과 지배엘리트의 반발, 후계과정에서 파벌 형성 및 대립 발생 가능성 등을 논거로 제시한다.⁴²

집단지도체제 또는 혼합체제가 등장할 것이라는 주장은 김정은이 현실정치 경험과 당내 권력기반이 부족하여 자신의 통치기반을 제대로 구축하지 못할 것이라고 가정한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그런 조건에서 김정은의 축출을 예상하는지 아니면 지배엘리트들이 세습후계자인 김정은의 권력안정화를 꾀할 것으로 보는지에 따라 차이가 있다.

가. 수령 유일지배체제

북한에서 최고지도자는 수령으로 호칭되지만 북한에서 수령은 단순히 최고의 직책을 가진 세속적인 존재가 아니라 초인적인 능력과 인격을 가진 절대적인 존재이다. 수령이라는 독특한 존재가 북한체제를 수령체제로 규정하게 하는 이유이자 그 속의 모든 행위자를 지배하는 구속력이다.

북한은 수령이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요구와 리해관계를 분석종합하여 하나로 통일시키는 중심인 동시에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창조적 활동을 통일적으로 지휘하는 현명한 령도자”라고 한다. 따라서 수령은 노동계급과 당을 영도하여 혁명과 건설을 승리로 이끌어 나가는 등 혁명위업을 수행하는 데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존재로 규정되어 있다.

수령론에 따르면 인민대중이 자주성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는 자주성에 대한 자기의 지향과 요구를 조직적 의사로 전환시켜야 하는

⁴² 오경섭, “북한 권력승계의 특징과 3대세습체제의 지속가능성,” 『세종정책연구』, 제6권 1호(2010), pp. 282~283.

데,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수령뿐이다. 따라서 수령은 인민 대중의 조직적 의사의 유일한 체현자이자 대표자이며 인민대중 속에서 최고의 영도적 지위를 차지하는 최고뇌수이다.

인간활동에서 뇌수의 지위가 그러하듯이 역사발전과 노동계급의 혁명 투쟁에서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는 수령의 지위는 ‘절대적’이기 마련이다. 거꾸로 인민에게는 수령의 지위와 역할을 확고히 인식하여 수령을 진심으로 받드는 자세와 입장이 요구된다. 곧 수령을 절대화하고 무조건 받드는 관점이 강요되는 것이다. 이것이 이른바 ‘혁명적 수령관’이다.⁴³

‘혁명적 수령관’에서는 수령만이 역사발전의 주체이고 수령은 무오류의 인간으로서 거의 신적인 존재로 규정된다. 수령만이 역사발전의 원동력이기 때문에 모든 인민들은 의심 없이 무조건적으로 수령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사회역사적 운동에서 주체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올바르게 지도하는 존재가 수령이지만 그는 자신의 지도를 어떤 장치를 통해 구현하는가? 이에 대한 대답이 수령의 ‘영도체계’이다. 북한에 따르면 수령의 영도체계란 지도와 대중을 결합시키는 것으로 수령의 영도를 실현하기 위한 조직과 기구들의 총체이며 당, 국가, 단체들로 구성된다.⁴⁴ 이는 혁명과 건설에 대한 수령의 유일적 영도를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현실에서는 수령의 유일지배체제를 확립하는 것이다.⁴⁵

⁴³ 혁명적 수령관에 대해 김정일은 “수령이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중심이라는 확고한 관점과 입장을 가지고 수령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치며 티없이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수령을 높이 우러러 모시고 받들어 나간다는 것”이라고 교시했다. 김정일, “일군들속에서 혁명적 수령관을 튼튼히 세울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부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88년 8월 23일, 『김정일선집 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p. 277.

⁴⁴ 사회과학출판사 편, 『철학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p. 184.

I
II
III
IV
V
VI

그런데 김정은체제가 수령 유일지배체제로 될 수 있느냐는 수령 유일 지배체제를 지속시킬 수 있는 주요 조건들이 앞으로도 충족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충족되지 못한다면 새로운 체제로 변화될 수밖에 없다.

일단 김정은은 후계체제 구축과정에서 기존 체제가 요동치고 권력 구조 내에 균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면 그것을 최소화하고 주어진 환경과 미래의 예상되는 상황에 맞춰 변형을 시도할 것이지만⁴⁶ 기본적으로는 현재의 구조를 유지하려 할 것이다. 수령 유일지배체제의 구축이 불가능하거나 그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다면 김정은이 유일지배체제의 구축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세습을 결정한 핵심적 이유도 후대 수령에 의한 기존체제의 고수에 있을 것이다.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권력을 세습한 방식과 유사하게 후계체제를 구축하고 후계자에게 수령 유일지배체제를 물려주고 싶은 것이다.

김정은의 입장에서 김정은 체제를 당과 군의 실력자들에게 권력을 분산시켜 그들 사이에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하는 집단지도체제 형태가 되도록 할 이유가 있을까? 김정은이 후계자에게 기대하는 바, 즉 전임자에 대한 충실성과 우리식 사회주의의 고수라는 기대에 더 잘 부응할 수 있다면 집단지도체제 구축을 시도할 수도 있겠지만 후술하듯이 집단지도체제는 그 기대에 부응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은 당과 군 등의 지배엘리트들을 김정은과 권력을 분점하는 집단지도체제의 일원으로 후계체제에 참여시키는 것이 아니라 김정은의 총복으로서 권력에 참여시키는 구조를 만들

45. 영도체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김민·한봉서, 『위대한 주체사상 총서 9: 령도 체제』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pp. 77~226 참조.

46. 이기동, “북한의 후계구도 전망과 권력구조 변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주최, 제42차 통일전략포럼 발표문, 2009.3.24), p. 3.

것이다. 2009년 김정일은 국방위원회가 김정은의 후계체제를 가장 충실하게 보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존의 군 최고 엘리트들로 구성된 국방위원회에 당 작전부장 오극렬, 당 행정부장 장성택, 인민보안부장 주상성, 국가안전보위부 제1부부장 우동측 등 보안기구들을 총괄하는 핵심 엘리트들을 포진시키는 조치를 취했다.⁴⁷ 2010년 9월에는 당대표자회를 통해 김정은을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당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여 군을 장악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고 최근 차수로 승진하여 군의 실세로 급부상하고 있는 리영호 총참모장을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으로 임명하여 군 경험이 없는 김정은을 가까이에서 보좌하도록 했다. 또한 여동생 김경희 부부와 최룡해 등으로 하여금 김정은이 후계자로서의 입지와 기반을 갖추어 줄 수 있도록 그들을 정치국과 비서국, 당 중앙군사위원회에 배치했다.

절대자인 김정일의 의사가 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수령 유일지배체제의 지속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는 일부 연구자들이 제시하는 근거는 김정은의 권력기반과 장악력이 약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누가 후계자가 되든 수령의 리더십을 온전하게 승계받기 어려울 것이다. 세습을 할 경우 세습후계자들의 일천한 정치적 경력을 고려할 때 주민들과 권력엘리트들로부터 도덕적 지지에 기초한 인격적 리더십(personal leadership)을 획득하기 어렵다. 그리고 이러한 인격적 리더십의 취약성은 결국 제도적 리더십(positional leadership)의 약화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주장한다.⁴⁸

47. 오경섭, “북한 권력승계의 특징과 3대세습체제의 지속가능성,” p. 297.

48. 이기동, “북한의 후계구도 전망과 권력구조 변화,” p. 5; “북한의 후계구도 전망: 구조적 제약 하의 전략적 선택,” (북한민주화네트워크/시대정신 공동포럼 발표문, 2009.3.12), pp. 35~36.

I
II
III
IV
V
VI

이 주장은 타당한 것인가? 물론 김정은이 권력기반을 미처 구축하기 전에 아버지가 가까운 시일에 갑자기 사망해 버리거나 유고가 되는 경우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 바꾸어 말하면 김정일이 앞으로 수년을 생존하면서 후계체제 구축을 주도하는 경우 김정은의 장악력이 약할 것이라고 추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김정일의 경우 후계자로 추대된 이후 권력을 완전히 장악할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결가지’를 정리하고 70년대 중반의 권력 투쟁을 거쳐 후계자로 공식 선포되기까지 6년여 밖에 걸리지 않았고 후계자로서 흔들림이 없는 입지를 다지는 데 필요했던 시간은 불과 3~4년이었다. 또한 북한의 전반적 상황이 그 때와 크게 다르지만 후계자로서 권력을 승계한 경험을 가진 아버지가 아들의 후계체제 구축을 주도하고 후계수업을 효과적으로 시킬 경우 그 과정은 비약적으로 압축될 가능성이 크다.

김정일은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김정은이 빠른 속도로 당과 감시기구, 군대를 장악함으로써 권력기반을 마련하도록 지원하고, 김정은에게 점진적으로 업무를 이양하여 과중한 업무부담을 덜려고 할 것이다. 이 점에서 후계체제 구축을 위한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주장은 허점이 있다. 김정일의 경우는 후계자로 내정된 이후 비공개적으로 권력기반을 구축하는 작업을 했지만 지금은 자신이 공개적으로 아들의 권력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김정은이 후계자로서의 입지를 얼마만큼 빠른 시간에 탄탄하게 구축하느냐는 어느 정도는 자신의 정치적 능력에 달려 있겠지만 김정일의 지원이 가장 큰 변수일 것이기 때문에 김정일이 얼마나 더 생존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북한체제의 성격상 후계체제 구축에서 절대 권력자 김정일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지배엘리트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후계체제에 관한 발언조차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60년 이상 부자세습으로 이어진 장기집권은 집권자가 선호하지 않는 엘리트들의 등용을 원천적으로 봉쇄해 왔다. 특히 선군정치는 지배집단에 속할 수 있는 후보집단의 규모를 줄였고 지배집단에 소속될 가능성을 군부에 더 많이 부여했다. 동시에 군부를 중심으로 엘리트들 동심원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지배집단의 크기를 줄였다.⁴⁹ 이들 지배엘리트들은 권력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권력공백으로 인한 위험을 막기 위해 통치자의 후계자 선택을 따르게 된다. 이들은 정권의 해체나 숙청당할 위험을 피하고 리더십 공백으로 인한 손실과 불확실성을 막기 위해 세습후계자를 지지함으로써 자신들의 영향력을 유지하고 기득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암묵적으로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받는 길을 선택한다. 지배엘리트들은 유력한 다른 후계자를 맞아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권력투쟁을 하기보다는 독재자의 아들을 받아들여 각종 혜택을 공유하는 것이 더 이익이다.⁵⁰

따라서 지배엘리트들은 김정일이 생존해 있는 기간에 김정은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후계체제 구축에 앞장 설 것이다. 그러나 김정은이 권력기반을 완전히 구축하기 전에 김정일이 사망하거나 유고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김정은이 지배엘리트들의 자발적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기 때문에 후계체제도 불안해질 가능성이 높다. 김정은은 김정일이 살아있을 때 아버지의 유고 상황에서도 지배엘리트들을 장악할 수 있을 만큼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확대하고 강화하여야 한다. 물론 이는 아버지의 권력이양 속도에

⁴⁹ 한병진, “북한정권의 내구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 『국가전략』, 제15권 1호 (2009), p. 133.

⁵⁰ 오경섭, “북한 권력승계의 특징과 3대세습체제의 지속가능성,” p. 299.

I
II
III
IV
V
VI

맞추고 비위를 거스르지 않게 조심스럽게 실행해야 하는 일이다. 김정은에게는 다행한 일이지만 9월 말의 당대표자회의 결정으로 볼 때 외부 관찰자의 예상보다는 훨씬 빠르게 아버지의 권력이양이 진행되고 있다.

나. 집단지도체제

통상 집단지도체제는 그 누구도 1인자로 부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등장한다. 후계자로 지명된 김정은이 미처 권력기반을 구축하기도 전에 김정일이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 북한의 수령 유일지배체제가 한시적으로 집단지도체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김일성이 사망한 뒤 3년여 동안 당 총비서직과 국가주석직을 공석으로 남겨둔 바 있다. 김정일이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 김정은이 곧바로 최고권력직을 승계하지 않고 일정한 기간을 추모기간으로 정한 뒤 이 기간 동안 김정은을 포함한 당·정·군 유력인사의 연합체인 집단지도체제가 수립될 수도 있을 것이다.

2008년의 주장이긴 하나 고유환은 김정일의 갑작스런 유고 경우 새로운 지도부를 옹립할 때까지 군부집단지도체제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선군체제의 특성상 당보다는 국방위원회 중심의 집단지도체제가 될 것인데 그 이유는 지금의 국방위원회가 주석제하의 중앙인민위원회와 당 정치국, 비서국을 결합한 당·정·군 복합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⁵¹ 국방위원회가 당·정·군 복합체이고 국방위원회가 집단지도체제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도 군부집단지도

⁵¹ 고유환, “김정일 건강변수와 후계구축 시나리오,” 『(KDI)북한경제리뷰』, 2008년 9월호, p. 27.

체제가 등장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정확한 이유를 모르겠으나 아마도 국방위원회가 외견상 당·정·군 복합체이지만 군부인사 중심으로 구성된 데 주목한 때문인 듯하다.

고재홍도 김정일 사망 시 집단지도체제가 등장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국방위원회가 아니라 당 중앙군사위원회나 당 조직지도부 중심으로 당·정·군의 주요 기관들이 연합한 비상연합관리체제가 될 것이라고 보는 점이 다르다. 전자는 김정일이 후계자를 지명했다 하더라도 후계자가 후계자라는 신분 이외에 통치에 필요한 제도적 지위나 능력이 없는 경우 일정기간 당 중앙군사위원회가 김정일 사망에 따른 비상기구를 통제해 나갈 주체로 등장하는 경우라는 것이다. 그는 비상설기구인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당 조직지도부의 실무지원을 받아 주요 군사결정과 명령을 내리고 국방위원회를 대외적 공표기구로서 활용하여 통치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그가 당 중앙군사위원회 중심의 통치체제가 될 것이라고 가정하는 근거는 다양한데 그 중 하나가 김정일 생존 시 김정일이 당 중앙군사위원장, 최고사령관, 국방위원장, 당 총비서라는 제도적 지위에 근거해 내린 주요 명령 및 결정을 세습후계자의 신분으로 명령 혹은 결정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즉 세습후계자가 김정일의 제도적 지위들을 장악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김정일이 내렸던 주요 명령이나 군사결정들을 김정일을 대신하는 권위적인 집단지도기관만이 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⁵² 이러한 고재홍의 우려는 김정은이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됨으로써 어느 정도 해소된 셈이다.

한편 고재홍이 김정일 사망 시 당 조직지도부가 중심이 된 비상연

⁵² 고재홍, “Post-김정일체제와 북한 정세 전망,” 『군사논단』, 2009년 겨울호 기고문, p. 8.

합지도체제의 등장을 예상하는 근거는 현재 북한이 김정일 1인에 의해 통치되고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에 의해 통치되고 있다는 점을 든다. 김정일 사망이라는 비상사태를 맞이하여 북한의 주요 지도기관들이 외부로부터의 적대행동을 경계하고 내부적으로 현상유지가 필요하다는 위기의식을 공유할 경우, 당 조직지도부와 비서국 등이 당·정·군의 주요 기관들로 비상연합회의를 구성하여 북한을 통치할 것이라는 추측이다. 예컨대 과도기적으로 당 총비서의 역할은 당 조직지도부와 당 비서국이, 최고사령관과 국방위원장의 군사적 역할은 당 중앙군사위원회가, 내각의 일상적 업무는 내각이 담당하는 집단지도체제라는 것이다.⁵³

김정은이 스스로의 힘으로 북한을 통치할 수 있는 기반을 미처 구축하기 전에 김정일이 사망하는 경우 이러한 집단지도체제가 등장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논의의 초점으로 부각시키고 싶은 것은 집단지도체제의 지속기간이다.

집단지도체제는 본질적으로 북한의 수령론과 배치된다. 오랫동안 지속해 온 수령체제가 북한 사회주의의 확고한 원리로 작동하고 있는 현실에서 수령의 역할을 다수가 대신하는 집단지도체제는 북한에게 받아들이기 힘들고 익숙하지도 않다. 지금까지 북한이 수령제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사회주의권 붕괴를 역사적 교훈으로 설명할 때도 가장 많이 비판했던 것 중의 하나가 수령 사망 이후 집단지도체제의 폐해였다.⁵⁴

북한체제는 수령이 당-국가체제를 지배하는 수령제 국가로서 수령의 영도를 대를 이어 계속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체제이

⁵³ 위의 글, p. 9.

⁵⁴ 김근식, 토론요저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주최 제42차 통일전략포럼 2009.3.24), p. 6.

고⁵⁵ 북한주민에게도 익숙하다. 북한체제가 주민의 의사를 존중하거나 그것을 의식하는 체제는 아니지만 혈통계승에 대해 대다수 북한주민들은 당연시한다. ‘백두’의 혈통과 혁명전통을 절대화하고 있는 현재 북한의 담론 및 이데올로기체계하에서 김정은이 아닌 제3자, 설사 그것이 개인이 아니라 집단이라 하더라도, 제3자의 등장은 기존의 정당화 논리와 모순·충돌함으로써 주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⁵⁶

더욱이 권력의 속성상 집단지도체제는 과도적일 수밖에 없다. 일정기간이 지나면 새로운 지도자를 옹립하거나 야심가가 나타나 1인 중심의 권력체제를 구축하기 마련이다. 김일성이 유일지배체제를 구축한 과정도 그러했다. 공산주의국가들에서는 지도자의 사망으로 권력 공백과 권력승계 위기가 발생하려 할 경우 통상 정치국에 의한 과두제(oligarchic leadership)를 구축해서 해결했다. 권력승계 초기 과두제 속 일인자의 권력이 여타 지배엘리트들에 비해 충분하지 않을 경우, 그와 지배연합은 권력균형을 형성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일인자는 핵심적인 직책이 자신의 수중에 있고 권력을 강화시키기에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 권력을 집중시키는 경향이 나타난다. 그래서 일인자가 충분한 권력을 갖게 되면 일인자와 지배연합 사이에 힘의 균형이 깨어진다. 결국 초기에 정치국을 중심으로 한 집단지도체제는 당의 최고지도자에 권력이 집중된 일인독재체제로 변형된다.⁵⁷

55. 스즈키 마사유키 지음, 유영구 옮김, 『김정일과 수령제 사회주의』 (서울: 중앙일보사, 1994), p. 20.

56. 이기동, “선군시대로의 이행과 후계구도,” 『북한학연구』 창간호(2005), pp. 95~96.

57. Milan W. Svobik, “Power Sharing and Leadership Dynamics in Authoritarian Regim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53, No. 2 (April 2009),

I
II
III
IV
V
VI

결론적으로 김정은이 후계자로서 자신의 권력기반을 미처 확고히 다지기 전에 아버지가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 김정은의 후견을 위한 일시적인 집단지도체제가 등장할 가능성은 있으나 그 지속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이다.

다. 혼합체제

김정은 체제의 권력구조에 대해 일부 연구자들은 김정은이 어리고 현실정치 경험이 부족하며 당내 권력기반이 취약하다는 이유로 세습과 집단지도체제의 혼합형 체제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를 제시한다. 예를 들면 북한정권이 3대세습 과정에서 제도적 리더십을 확립하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인격적 리더십을 확립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세습후계자의 취약한 인격적 리더십과 일천한 정치경력을 보완하려고 할 것이고, 그 방안으로 정보력을 장악한 당의 엘리트들과 무력을 담당하는 군부의 엘리트들을 고루 포진시킨 집단지도체제를 구성할 것이라고 주장한다.⁵⁸

이 주장 하에 혼합형 권력구조가 당 정치국의 기능을 복원하여 후계자가 정치국 상무위원직을 맡고 주요 결정을 정치국 회의를 통해 결정하는 형태이거나 국방위원회에 하부기구들을 확충하여 당·정·군의 측근들을 고루 국방위원회에 임명함으로써 명실 공히 국방위원회를 중추로 하는 국가영도체제를 확립하는 형태가 될 것이고 이 경우 후계자는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을 맡을 것이라고 예측한다.⁵⁹

pp. 478~480, Myron Rush, "The Problem of Succession in Communist Regimes," p. 175. 오경섭, "북한 권력승계의 특징과 3대세습체제의 지속가능성," p. 295에서 재인용.

⁵⁸ 이기동, "북한의 후계구도 전망: 구조적 제약 하의 전략적 선택," pp. 35~36.

김근식과 김갑식도 일인이 수령을 계승하되 집단지도체제와 일정하게 공존하는 혼합형을 상정해 볼 수 있다고 동의한다. 북한의 체제 속성상 그리고 후계자론에 따르더라도 김정일 후계는 ‘수령’의 지위와 역할을 승계받는 것이기 때문에 불완전 승계가 아닌 ‘완전 승계’여야 하는데, 포스트 김정일이 체제관리형일 경우나 김정일만큼의 인격적 카리스마가 결여될 경우는 ‘형식적인 완전승계’에도 불구하고 내용적으로는 제한적 일인지배체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논리이다. 즉 후계자가 수령의 지위와 역할을 승계 받지만 과거 수령과 같은 완벽한 내용적 승계를 하지 못할 수 있고 이 경우는 일인의 공식적 수령이 존재하되 실질적으로는 군, 테크노크라트, 당비서 등의 집단지도체제가 사실상 권력을 분점하는 ‘제한적 수령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제한적 수령제로 될 경우 언젠가는 수령의 권력약화와 정당성 약화를 초래해 결국 수령제 해체로 귀결될 것이라고 주장한다.⁶⁰

이처럼 혼합체제는 실질적인 내용상 김정은이 수령이지만 명목상 일 뿐이고⁶¹ 실제로는 유력한 정치인들이 뒤를 돌보아주는 형태를 말한다. 따라서 ‘후견체제’, ‘상징적 수령제’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이고 겉모습은 수령체제이지만 실체는 집단지도체제인 경우이다.

그러나 혼합체제는 머릿속으로는 상정할 수 있지만 실제 세계에서 는 수령일인지배체제이든가 집단지도체제이든가, 두 가지 중 어느 하나일 것이다. 위의 연구자들은 세습과 집단지도체제의 혼합체제가 집

⁵⁹ 이기동, “북한의 후계구도 전망과 권력구조 변화,” p. 7.

⁶⁰ 김근식, 토론요지문, p. 7; 김갑식, “북한의 후계구도 및 권력구조 전망: ‘안정적 승계’를 중심으로,” 『정책연구』 (2008, 겨울), p. 110.

⁶¹ 수령의 절대성을 감안하면 이 경우 수령으로 부르기도 힘들 것이다.

I
II
III
IV
V
VI

단지도체제와 다른 새로운 지배체제 유형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으나 사실은 세습후계자인 김정은과 당·군의 실력자들에게 권력이 배분된 집단지도체제이다. 따라서 세습과 집단지도체제의 혼합체제는 집단지도체제 중 하나라는 오경섭의 주장이 옳다.

결국 김정은 체제의 권력구조는 개인지배체제가 될 것인지, 집단지도체제가 될 것인지를 문제라고 할 수 있다.⁶² 겉모습이 혼합체제인 형태는 김정은과 유력한 정치인 집단 사이의 힘의 균형추가 후자 쪽에 쏠려있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유력한 정치인 집단이 김정은을 상징적 존재로 세워놓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때 성립할 것이지만, 이는 본질상 집단지도체제이고 나중에 겉모습을 벗어버리고 사실상의 집단지도체제로 전환될 가능성도 크다.

혼합체제는 현 김정일체제 형태 유지에 이익을 공유하고 있는 유력 권력엘리트들이 쉽게 동의할 수 있는 형태라는 점에서 성립 가능성이 있지만 어디까지나 잠정적일 뿐이다. 권력엘리트들이 바로 집단지도체제를 구성하지 않고 이 형태를 선호할 이유가 있다면 김정일과 같은 일인자가 없다는 현실과 수령체제를 지켜온 오랜 관성에 있을 것이다.

2. 당·정·군의 관계

김일성 시기 북한 권력구조의 특징, 특히 당·정·군의 관계를 당의 지배, 권력집중의 주석제, 군에 대한 통제라고 한다면 김정일 정권의

⁶² 백승주도 이분법에 동의하고 있다. 백승주, 『포스트 김정일체제 프로세스와 한반도 비전』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09), p. 55.

그것은 당 기능의 약화, 권한분산의 국방위원장제, 군의 역할 증대라고 할 수 있다.

가. 김정일 정권에서의 당·정·군 관계: 당 기능 약화, 권한분산, 군의 부상

북한의 지배구조는 당 중심의 ‘다층 집권체제’라고 할 수 있다. 다층 집권체제는 수령-당 중앙위원회-도 당위원회-시·군 당위원회-공장 당위원회 또는 리·동 초급당 위원회가 수직적 위계로 조직되어 있고 이러한 위계는 엄격한 명령-복종 관계에 있다. 각급 당 위원회에는 수평적으로 권력이 집중되어 있고 당위원회 내부에도 당 비서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⁶³ 이와 같은 각급 당위원회 및 당 책임비서에 의 수평적 권력집중 때문에, 당·정 일체화, 당·군 일체화, 당·사회 일체화 현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체제의 기능은 1990년대의 경제난을 거치면서 일부 마비되었는데, 특히 기층의 초급당 조직에서 그러했다. 원래 당세포, 초급당 조직 등 기층당 조직은 모체 조직인 기관, 기업소, 지역행정체계가 정상적으로 기능해야, 그에 기생하여 자신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층당 조직의 붕괴 때문에, 도·시 당급의 지방당 조직 역시 과거와 같이 효과적인 정치사상적 통제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⁶³ 일반적으로 권력집중은 중앙 집중과 동일시되지만 권력집중에는 다양한 형태가 존재할 수 있다. 수직적 권력집중은 중앙, 지방, 기층의 관계에서 기층, 지방으로부터 최상층인 중앙으로 수직적이고 위계적으로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수평적 권력집중은 중앙, 지방, 기층의 어느 한 층위에 여러 기관이 존재할 때, 그 중 하나의 기관에 권력이 집중되는 형태이다. 박형중 외, 『김정일시대 북한의 정치체제: 통치이데올로기, 권력엘리트, 권력구조의 지속성과 변화』 (서울: 통일연구원, 2004), p. 147.

I
II
III
IV
V
VI

되었다. 지방당 조직은 기관, 기업소 단위를 통제해야 하지만 통제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거나 공급할 능력을 상실했다.

기층당 및 지방당 조직의 부분적 붕괴는 전반적으로 당이 담당하던 기층 조직에 대한 조직 사상적 통제 및 경제관리를 이완시킴으로써 북한 정권에 중대한 위협상황을 초래했다. 이 때문에 군이 체제수호의 보루로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으며, 이데올로기적인 모범으로서도 당을 대체해 군이 선전되는 상황이 나타났다. 사회 내에서는 인민보안부 및 국가보위부가, 군대 내에서는 보위사령부가 과거 당조직이 하던 일을 맡아했다. 그리고 그 동안 당조직이 담당하던 경제관리도 당기구와 당규율의 이완으로 불가능해지자 지방행정경제 단위가 관여했다.⁶⁴

상대적으로 정도는 덜 하지만 중앙당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우선 당의 최고의결기구인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1993년 12월의 제6기 제21차 회의 이후로 열리지 않았다. 따라서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선출하게 되어 있는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 당 비서, 군사위원 등이 새로 충원되지 못했다. 당 중앙위원회와 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기 때문에 1997년 김정일을 김일성 사후 공식으로 있던 당 총비서직에 추대할 때도 당규약에 따르면 전원회의를 통해 공식적으로 선거해야 하지만 10월 8일 당 중앙위원회와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특별보도를 통해 하는 편법을 사용했다.

또한 무엇보다도 당 중앙위원회가 열리지 않는 사이에 당의 모든 사업을 조직 지도하게 되어 있는 기관이자 당정책 결정의 중추기관인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 역시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했다. 특

⁶⁴ 위의 책, pp. 225~226.

히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김정일만 위원으로 남아 사실상 유명무실한 기구가 되었다.

정치국 회의는 김일성 사망 직후 김일성의 장의문제와 경제회생 방안 논의를 위해 몇 차례 열렸다고 평양방송이 보도했고⁶⁵ 2001년 9월 8일자 청년전위도 김정일이 1998년 9월 4일에 열린 정치국 회의에서 주식제를 폐지했다고 보도했다. 그리고 1999년 2월 4일에도 정치국 회의가 개최되어 김정일이 “인민군대를 강화하지 않고서는 이미 쟁취한 혁명의 전취물도 지켜낼 수 없을 뿐 아니라 사회주의 건설도 다그쳐 나갈 수 없고 나라의 통일도 이룩할 수 없다”고 발언했다는 내용이 국내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⁶⁶

이와 같이 정치국 회의가 개최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 사례가 있지만 정치국의 위상 및 역할과 관련하여 특기할 것은 김일성 사망 이후 정치국의 명의를 전반적으로 사라져 버린 점이다. 예를 들어 건국 기념일의 축하주체가 1994년 이전에는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임에 따라 당 중앙위원회와 공화국정부”였으나, 1995년에서 1997년까지는 “국방위원장, 최고사령관 김정일 동지의 위임에 따라 당 중앙위원회와 공화국정부”, 1998년부터 2003년까지는 “총비서, 국방위원회 위원장, 최고사령관 김정일 동지의 위임에 따라 당 중앙위원회와 공화국정부”였다. 창군 축하주체도 1994년부터 1996년까지는 “최고사령관 김정일 동지의 위임에 따라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과 당 중앙군사위원회”였으나, 1997년부터는 김정일의 위임에 따라 “당 중앙위원회와 당 중앙군사위원회”로 바뀌었다.

이처럼 정치국 명의를 사라지고 대신 당 중앙위원회가 당을 대표하

65. 『평양방송』, 2000년 2월 25일.

66. 『조선일보』, 2001년 6월 21일.

는 최고 정책결정기구로 부각되었는데, 이는 중앙당을 대표하는 기구가 일상적으로 당사업을 지도하는 정치국 대신 좀 더 명목적이고 상징성이 강한 중앙위원회라는 기구로 대체되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중앙위원회가 정식 회의를 개최해 당의 정책을 토의하고 결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의 최고 정책결정기구의 정상화는 아니었다.⁶⁷

전반적으로 당이 기능마비에 빠진 상황은 실제 1996년 12월 김정일이 식량난으로 인해 무정부 상태가 되고 있으며, 당 조직들이 맥을 추지 못하고 당사업이 잘 되지 않아 사회주의 건설에서 적지 않은 혼란이 조성되고 있다고 당 중앙위원회를 비롯해 당 조직과 당원들을 신랄하게 비판한 점에서도⁶⁸ 증명된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북한은 1998년 무렵부터 혁명과 건설의 주력군으로서 군을 내세운 선군정치를 시행한다고 선언했다. 그즈음 북한은 핵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대결국면에 있었고 대규모 자연재해로 식량난이 심화되어 주민들의 동요가 심각한 실정에 있었다. 북한 지도부는 이러한 위기상황을 극복하여 체제를 안정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군대의 활용으로 판단했다.

사회에서 군의 역할이 증대되는 징후는 여러 측면에서 뚜렷했다. 그동안 사회안전부⁶⁹에 위임했던 군범죄수사권을 인민무력부 보위사령부가 환수했고 민간범죄도 군사재판에 회부하도록 했으며 사회안전부가 발급해 오던 평양방문허가증도 1996년부터 호위사령부가 발급했다.⁷⁰ 1994년에는 국경경비대를 인민무력부로 편입시켰으며

67. 이대근, “조선인민군의 정치적 역할과 한계: 김정일시대의 당·군 관계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2000), pp. 68~71.

68. 김정일, “우리는 지금 식량 때문에 무정부 상태가 되고 있다,”(1996.12.7), 『월간조선』, 1997년 4월호, p. 308.

69. 사회안전부는 후에 인민보안성으로, 최근에는 인민보안부로 개칭되었다.

1996년에는 평안남도 회창군 등 3개 군을 정무원 관할에서 인민무력 부로 편입시켰다.⁷¹ 뿐만 아니라 1995년부터 신년사를 대신하여 발표 되는 3개 신문 공동사설에 ‘조선인민군’이라는 군보를 포함시켰고, 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전례 없이 당총비서 추대 및 당구호 발표의 주체로 등장했다.⁷²

군을 내세워 체제위기를 타개하려는 선군정치는 1998년 9월 5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 회의를 통해 법적·제도적으로 정비되었다. 북한은 이 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하고 국가기관체계를 개편했다. 이 개편에서 김일성 정권 때의 주식제가 폐지되고 국방위원회가 강화되었다. 과거 ‘국가주권의 최고 군사지도기관’으로 규정된 국방위원회는 1998년 헌법에서는 ‘국가주권의 최고 군사지도기관’이자 ‘전반적 국방관리기관’으로 격상되었다. 그리고 국방위원회는 1998년 이전의 경우 김정일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이었으나 개편에서 모두 10명으로 확대되었는데 김정일, 연형묵, 전병호를 제외한 7명 모두 현역군인이었다. 지위와 권한이 강화된 국방위원회에 이와 같이 현역군인들이 대거 참여한 것은 군의 정치적 위상을 높이고 국가운영에서 군의 역할을 확대하는 ‘선군정치’가 구체적으로 제도화된 것이었다.

이와 함께 군부인사의 권력서열이 급상승했다. 북한의 권력서열은 김일성 사망 전까지는 주로 당내에서의 직책을 기준으로 하여 당 정치국 위원(1~13위), 후보위원(14~23위), 당비서(24~29위), 부총리 등의 순서였다. 그러나 김일성 사망 후 군부 인사들의 서열이 상승하

70. 『조선일보』, 1996년 5월 14일.

71. 『내외통신 주간판』 1006호, 1996년 5월 23일.

72. 1997년 10월 당 총비서 추대기구에 당 중앙위원회와 함께 당 중앙군사위원회가 포함되었으며 1998년 4월 정권 창건 50주년을 기념해 발표한 당구호도 당 중앙위원회와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공동명의로 발표되었다.

I
II
III
IV
V
VI

기 시작하여 김정일 당 총비서가 국방위원장으로 재취임한 1998년 이후에는 권력서열 기준이 정치국 위원, 국방위원회 위원, 정치국 후보위원, 당비서 순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군부 인사들의 서열 상승은 당이 여전히 군을 지배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정치적 위상이 증대되었음을 의미한다.

한편, 1998년의 국가기구개편 특징의 하나는 국가기구들의 권한과 역할 조정을 통해 실질적 권력 행사와 형식적 국가수반의 역할분담이 이루어진 것이다. 외형상 권력을 국방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내각 총리 등에게 분산시킨 구조를 만들었다. 형식적으로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을 높여 최고주권기관으로서 입법권을 행사하고 상임위원장이 대외적인 국가수반의 역할을 수행하게 했다. 그리고 내각이 전반적인 국가관리기관으로서 행정, 경제사업을 책임지게 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과거 정무원이 내각으로 개편되었는데, 정무원은 ‘국가주석과 중앙인민위원회의 지도하에’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두 상부기관이 없어짐으로써 내각은 ‘독자적 행정기관’이 되었다. 내각총리는 “내각사업을 조직, 지도하고 정부를 대표한다”고 규정해 총리가 최고 권력자인 김정일을 대신해 일정한 부문에서 표면적인 대표 역할을 하게 되었다.

결국 김정일 자신은 국가운영과 관련해 외교, 입법, 경제문제에서 오는 부담을 덜고 당 운영과 군사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된 것이다. 물론 이는 외형상 권한분산이었을 뿐 김정일 일인에게 집중된 권한이 실제로 나눠진 것은 아니었다.

나. 후계체제에서의 당·정·군 관계: 당 기능 복원, 권한집중, 군의 약화

북한은 아직까지 ‘당적 영도 원칙’이 지배하는 당 우위의 정치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사회주의체제에서 당의 영도 원칙을 부정하는 것은 사회주의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의 영도적 지위를 부정할 수 없다. 그리고 북한 사회주의체제에서 최고 권력집단인 중앙당 조직은 다른 어떤 조직들보다 김정일과 각별한 운명공동체를 구성하고 있고 대다수 군부의 고위층들은 당원의 직분을 보유하고 있는 중첩적 엘리트 층원구조하에 있으므로⁷³ 당이자 곧 군대이고 군대이자 곧 당이라는 논리가 성립될 수 있는 것이다.⁷⁴

북한에서 당은 여전히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등 전반적인 사업을 장악하고 그 집행을 조직 지도하는 최고기관으로서 비서국과 각급 당위원회 조직을 통해 국가기관과 군대 등에 대한 정치적 지도를 진행하고 있다. 군사를 앞세우는 선군정치이지만 군에 대한 당의 통제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선군정치’가 본질상 “군대를 당의 위업에 끌 없이 충실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한 문제”로 한다는 주장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⁷⁵

선군정치의 목적은 아마도 군으로 하여금 당의 철저한 통제아래 가장 열성적으로 당 지배원칙에 충실하도록 하고 여타 사회집단은 군을 귀감으로 삼아 김정일에 대해 충성을 다하도록 하는 구조의 건

73. 박영자, “북한의 집권엘리트와 포스트 김정일시대,” 『통일정책연구』, 제18권 2호(2009), pp. 33~66.

74. 이기동, “선군시대로의 이행과 후계구도,” 『북한학연구』 창간호 (2005), pp. 88~89.

75. 고상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선군정치의 근본특징,” 『철학연구』, 1999년 제1호, p. 18.

I
II
III
IV
V
VI

설일 것이다. 이는 결국 당과 군의 결합으로 귀결되기 마련이다. 그래서 “당과 군대는 서로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으며 군대를 강화하는 사업과 당을 강화하는 사업은 하나로 통일되어 있다”고 강조되며 현실에서는 군대의 핵심세력을 당 간부로 발탁하는 ‘적극적인 조치’가 시행된다.⁷⁶ 사회 전반의 혁명성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혁명성을 고수하고 있는 군의 부상을 통해 전당·전군·전민의 혁명성을 재강화하려는 것이 선군정치의 의도일 것이다.⁷⁷

앞서 당 기능의 약화를 언급했지만 당 기능의 약화가 이른바 당의 우위를 포기하거나 훼손할 정도로 심각하다는 증거는 없다. 당의 우위를 포기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다는 증거도 없다. 당의 우위를 계속 강조한다는 것은 현실에서 당의 우위가 흔들리고 있다는 반증일 수도 있다. 고유환은 군에 대한 우선적인 자원배분과 군에 의한 대민통제 강화를 의미하는 선군정치가 불가피하게 군부의 과대성장을 가져와 김정일의 정책적 자율성을 제한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후계체제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임을 암시한다.⁷⁸ 이승열도 당의 영도체제 약화와 선군정치의 전면화는 기존의 방식에 의해 후계체제가 지속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내포하고 있어 국방위원회가 권력의 중추기관으로 등장하고 후계자도 군의 영도자로 육성될 것이라고 주장한다.⁷⁹

76. 김정일이 당을 강화하기 위해 “당 간부대렬을 인민군대에서 단련된 핵심들로 튼튼히 꾸리도록 했다”는 것은 박정남, “선군시대 당 건설력사에 빛나는 불멸의 업적,” 『로동신문』, 2004년 8월 5일자 참조.

77. 이태섭, “1990년대 북한의 경제 위기와 군사체제로의 전환에 관한 연구,” 통일부, 『신진 연구자 논문집: 북한실태(정치)』 (서울: 통일부, 2001), p. 263.

78. 고유환, “김정일 건강변수와 후계구축 시나리오,” 『(KDI)북한경제리뷰』, 2008년 9월호, p. 21.

79. 이승열, 『김정일의 선택』 (서울: 시대정신, 2009), pp. 120~121.

그러나 황장엽은 김정일 이후의 후계체제에서 군부가 아닌 당이 권력을 장악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⁸⁰ 정성장도 북한에서 당은 ‘혁명의 참모부’인 반면, 국가정권은 당의 노선과 정책을 집행하는 ‘강력한 무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논리에서 아직 당 지도부가 당·군·정의 핵심요직을 겸직하고 있고 당 위원회의 집체적 지도를 통해 북한의 모든 권력기관들을 확고하게 장악하고 있는 현실로 미루어 김정일의 신상에 문제가 발생해도 북한체제가 크게 위협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⁸¹ 당 비서국이 북한체제를 틀어쥐고 있는 반면 국방위원회는 여러 분야의 전문부서나 인력이 결여되어 있는 등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군 총정치국이 존속하는 한 북한에서 군부중심의 집단지도체제가 출범할 가능성은 희박하며 결국 포스트 김정일체제의 성격은 지금 같은 수령 중심의 당-국가체제가 존속될 것인지 현재의 중국과 같은 당 중심의 집단지도체제가 출범할 것인지 하는 문제로 귀착될 뿐이라고 단언한다.⁸²

2010년에 들어와 그동안 약화된 당의 기능을 복원하여 정상화하려는 움직임이 대두했다. 6월 7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3차 회의에서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제의에 따라 총리를 소환·선거”하였다고 하고 6월 23일에는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이 “당과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를 반영하여 조선로동당 최고지도기관 선거를 위한 조선로동당 대표자회를 2010년 9월 상순에 소집할 것을 결정”했다고 발표함으로써 정치국이 재등장했다. 또한 한동안 사라졌던 “당 중앙위원회를 사

⁸⁰ 『연합뉴스』, 2008년 9월 16일.

⁸¹ 정성장, “포스트 김정일시대 북한 권력체계의 변화전망,” (2008년 북한연구학회, 통일연구원, 고려대 북한학연구소 공동학술회의 <한반도, 전환기의 사색>, 2008.12.4), p. 271.

⁸² 위의 글, pp. 278~280.

I
II
III
IV
V
VI

수하자”라는 구호가 중앙보고대회에서 다시 등장하고 당의 역할을 강
조하는 사설들이 로동신문에 연이어 게재되었다.

9월 28일 개최된 당대표자회는 당 기능의 회복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선 당대표자회 자체가 당을 강화하고 그 기능을 높여나가
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해서는 말단 하부
조직에 대한 점검과 당원의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당의 기능을
정상화해 당-인민의 관계를 확고히 하려는 의도가 있는데 로동신문
도 이번 당대표자회가 “우리 당에 대한 인민의 신뢰를 더욱 두터이
하고 당과 인민의 혼연일체의 위력을 강화하는 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라고 밝혔다.⁸³

또한 당대표자회는 당 핵심기구의 비어있던 자리를 채우는 대대적
인사를 통해 당의 정상화에 나섰다. 중앙위원회 산하의 정치국과
비서국의 인원을 1980년 6차 당대회 수준으로 회복시켰다. 정치국은
위원과 후보위원을 합쳐 32명으로 늘어났고 정치국의 핵심인 상무위
원에 김정일을 비롯해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영림 내각
총리, 조명록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리영호 군 총참모장 5명을 선
임했다. 중요한 정책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비서국도 11명으로 채워
졌는데 특히 지방근무와 실무경험이 풍부한 최룡해, 박도춘, 김평해,
태중수, 홍석형 등이 임명되어 당의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분석
된다. 중앙당 조직의 틀이 갖추어졌으므로 앞으로는 중앙당의 손발인
지방당과 각 단위 세포조직을 복원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기 때문이
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당이 인민들에게 해 줄 수 있는 것이 없어짐으
로써 당에 대한 인민들의 기대와 의존도가 크게 줄었지만 당-국가체

⁸³. 『로동신문』, 2010년 6월 30일.

제에서 당은 여전히 가장 권위 있는 조직이다. 따라서 당 기능의 복원
은 그 자체로 상징성이 큰 사업인 동시에 김정일이 후계자로서 안착
하는 데 필요한 여러 사업, 예컨대 선전선동의 강화를 위해서도 필수
적인 과정이다.

한편 북한은 2009년 4월 9일 헌법의 일부 조문을 수정했다. 선군사
상을 주체사상과 함께 통치이념에 추가했고 군 임무에 ‘혁명 수뇌부
보위’를 명시함으로써 군의 체제수호기능을 강조했다. 특히 ‘국방위원
장’을 별도의 절(節)로 신설하여 헌법상 지위를 격상시켰고 권한을
강화했다. 국방위원장의 지위를 ‘최고영도자’ 및 ‘최고사령관’으로 명
문화하여 법·제도적 권한을 과거의 주석에 버금가게끔 했다. 이는 김
정일이 이미 실질적으로 행사해온 권한을 조문에 반영한 것이다. 또
한 국방위원장이 국가 전반 사업을 지도하고 중요 조약의 비준·폐기
및 특사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1998년 수정헌법에서 외형상 권한과
실질적 권한이 일치하지 않던 점들을 제거한 것이다. 실질적으로 절
대 권력을 가진 김정일에게는 그 불일치가 문제되지 않지만 그것을
그대로 둘 경우 후계자가 국방위원장에 취임하여 겪을 수도 있는 불
편과 제약을 고려하여 없앤 것으로 추측된다.

90년대 중반 이른바 ‘고난의 행군시기’를 거치면서 강화되고 높아
진 군의 역할과 위상은 어떻게 될까? 9월 28일의 당대표자회는 당규
약을 개정했는데 여기에는 “인민군대 안의 당조직들의 역할을 높일
데 대한 내용”이 들어있다. 간단히 말해 당의 군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이날 주요 직책에 대한 인사에서도 군부 인사의 약진은 두드
러지지 않았다. 리영호 총참모장의 발탁을 제외하고는 나이든 최상층
군 인사들이 예우차원에서 현직을 유지하는 선에 그쳤을 뿐 김정일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던 현철하나 리명수도 정치국원이 되지 못했다. 오

I
II
III
IV
V
VI

히려 김경희, 최룡해, 김경욱이 대장으로 임명되고 당 중앙군사위원회에도 일부 민간인이 진입했다. 이런 점은 향후 김정은체제에서 당 기능 복원의 가속화와 함께 군부의 정치적 역할이 축소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김정일은 자신이 후계자로 내정되어 가는 길목에서 김창봉, 허봉학 등 군 수뇌부가 김일성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을 방해하고 혁명 전통 계승을 반대하여 숙청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 경험은 비대해진 군의 기득권과 상대적으로 높아진 군의 위상, 그 활동영역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김정은 체제의 착근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

물론 북한은 선군정치를 폐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체제위기 속에서 선택한 선군정치가 변화할 수밖에 없는 북한을 변화할 수 없도록 발목을 잡는 족쇄로도 작용한다. 뚜렷한 업적없이 권력을 승계하고 있는 김정은으로서 몇 년 동안 외쳐온 ‘강성대국 진입’이 헛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무엇보다 인민생활 개선에서 성과를 거두어야 하고 이는 국가자원의 많은 부분을 인민경제 향상에 투입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선군정치는 김정은체제에서 동력을 잃어버릴 수 있고 군부의 기득권이 다른 조직으로 재분배될 가능성이 있다. 갈등의 내연을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이 과정을 아버지는 원만히 조정할 수 있지만 김정은은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부폭발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

3. 당 정치국 및 중앙군사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조선로동당 규약 제25조는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당 중앙위원회의 명의로 당의 모든 사업을 조직지도한다고 규정했다. 따라서 정치국은 당의 최고기구이고 협의체이다. 그러나 절대적인 유일지배자가 존재하는 북한에서 정치국은 명목상의 기구에 가까웠다. 상징적인 기구였지만 김일성은 비록 형식적이라 하더라도 주요 정책은 당 정치국이나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등의 협의체 기구에서 토론을 거친 뒤 결정했다.

그러나 김정일은 이런 협의체 기구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을 결정하는 통치스타일을 가지고 있지 않다. 김정일은 획일적이고 엄격한 위계질서를 중시하면서 공개된 토론이나 의견교환을 피하고 당·정·군의 각 보고채널을 통해 정보를 수집한다. 그는 해당 기관에 직접 지시하며 직접 점검하는 것을 선호한다. 물론 정책결정과정상상의 일정한 수준에서 부서간의 조정과 협의가 이루어지지만 그것은 김정일의 지침에 따른 일상적 업무에 한정된 것이다. 보통은 그들 사이의 정보 흐름이나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때문에 국정의 전반을 모두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김정일뿐이다. 이 때문에 그는 90년대 중반 모든 분야를 직접 장악하는 수평적 직할통치 구조를 만들었다. 당 국제부와 외무성의 수직적 종속관계가 수평적 병렬관계로 전환되었고 군부에서도 인민무력부와 총정치국, 총참모부가 대등한 관계로 바뀌어 김정일의 직할통치를 받게 되었다. 당의 정책적 지도 기능이 약화되면서 주로 군사, 외교, 보안 분야 등의 조직들은 당 비서국의 해당 담당부서와의 합의를 거치지 않고 직접 김정일에게 보고서를 제출했다.⁸⁴

⁸⁴ 현성일, 『북한의 국가전략과 파워엘리트』 (서울: 선인, 2007), pp. 413~414.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일 정권에서 두드러진 점은 역시 협의체인 국방위원회의 위상 강화와 더불어 국방위원회가 국정 전반에 걸쳐 관여하는 폭이 넓어졌다는 것이다. 김정일은 2000년 6월 15일 남북정상회담의 고별 오찬에서 ‘상호 비방중지’ 문제를 거론하면서 “국방위원회를 소집해 군 간부들에게 대남 비방방송을 중지할 것을 지시했으나 일부 장성들이 우리가 안해도 남측에서 계속할 것 아니냐며 반대하기에 내가 화를 내면서 우리가 먼저 모범을 보이자고 설득했다”고 말했다.⁸⁵ 또한 2000년 8월 방북한 남한 언론사 사장단에게 자신의 서울 답방시기 문제를 “국방위원회와 외무성이 토론 중”이라고 말해 국방위원회가 정책을 협의하고 결정하는 폭이 광범위함을 시사했다.⁸⁶ 장성욱에 따르면 1998~2009년 동안 국방위원회는 민간경제와 주민통제, 주요 대외정책, 남북관계 등에 폭넓게 관여했다.⁸⁷

이에 따라 당 비서국과 정치국의 기능이 상당 부분 국방위원회로 이관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⁸⁸ 김일기도 사회주의권이 붕괴되어 당 대 당의 국제관계가 대폭 축소되고 자본주의국가와의 교류가 확대되면서 국가 기능이 점차 확대·강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북한이 국방위원장과 국방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했고 이는 향후 국방위원회를 후계체제 구축을 위한 기반조직이자 후견그룹으로 활용하려는 포석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후계체제 구축이 국방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그 근거는 북한의 당면과제가 과거와는 달라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1970년대 김정일이 당

85. 『동아일보』, 2000년 6월 17일.

86. 『중앙일보』, 2000년 8월 14일.

87. 장성욱, “북한의 ‘공격우위’ 신화와 선군정치: 탈냉전기 군비태세와 군사전략에 관한 이론적 연구,”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2009.8), pp. 283~285; 박형중·조한범·장용석, 『북한 ‘변화’의 재평가와 대북정책 방향』 (서울: 통일연구원, 2009), pp. 89~90에서 재인용.

88. 박형중·조한범·장용석, 『북한 ‘변화’의 재평가와 대북정책 방향』, pp. 93~94.

에서 후계자수업을 받은 것은 당시의 상황이 북한의 사회주의건설의 성과를 종합하고 이의 완성이 과제로 제기되었기 때문이었으나 현재 북한의 당면과제는 2012년 ‘강성대국 대문 진입’을 위한 체제유지와 경제발전이기 때문에 이에 맞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며 이는 국가기관인 국방위원회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었다.⁸⁹

이처럼 국방위원회는 정치국이 유명무실한 가운데 ‘선군정치’ 하에서 북한 스스로가 그 지위와 권능을 강화했다고 천명했고 또한 그 기능과 역할이 확대되는 징후가 있기 때문에 많은 연구들에 의해서 국가 전반을 통치하는 새로운 국가기구로 이해되고 있다. 실제 국방위원회는 2009년에 수정된 헌법 조문에 의해 최고의 국방지도기관으로서 국가의 중요정책을 세우는 곳이다. 헌법상 군 지휘권도 국방위원장에게 있고 인민무력부와 국가보위부도 그 산하에 있다. 더욱이 2009년 4월 9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1차 회의에서는 국방위원회를 개편하여 위원을 4명에서 8명으로 늘렸는데 새로 임명된 위원은 5명으로 주로 당·정·군 통제기구의 책임자들이었다. 장성택 당 행정·수도건설부장을 포함하여 주상성 인민보안상, 우동측 국가안전보위부 부부장, 주규창 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김정각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이 임명되었다. 기존의 국방관리와 군수공업 영역을 넘어 국내치안과 군 통제를 담당하는 인사까지 보충된 것이었다. 따라서 헌법으로 보나 인원 구성으로 보나 국방위원회가 북한의 최고 권력기구로 평가되었고 군사 분야에서도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당 중앙군사위원회와 비교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에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결원이 되었던 자리에 인원이 보충됨으로써 국방위원회의 역할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당연직 성격의 인물과 예우차

⁸⁹ 김일기, “북한헌법의 개정 내용과 의미,” 『평화학연구』, 제10권 4호(2009), p. 11.

I
II
III
IV
V
VI

원의 인물이 다소 들어가긴 했으나 향후 후계체제 구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되는 리영호, 김경희, 장성택, 최룡해와 당 비서국 비서들이 정치국 위원이나 후보위원으로 임명되었다. 정치국이나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예외적으로 특별한 역할과 권한을 행사하지는 못할 것이지만 적어도 김정일과 김정은의 결정을 정치국의 집체적인 결정이라고 포장해 줌으로써 그 결정에 권위를 더욱 붙여넣어 주는 역할은 할 것으로 예상된다.⁹⁰

그렇다고 해서 정치국이나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예외적으로 특별한 역할과 권한을 행사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김정일과 김정은의 결정을 정치국의 집체적인 결정이라고 포장해 줌으로써 그 결정에 권위를 더욱 붙여넣어 주는 역할은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앞으로 할 국방위원회의 역할에 회의적인 시각은 김정일이 국방위원회의 위원장직을 맡음으로써 국방위원회가 국가기구 중에 수위에 놓이게 되었지만 당처럼 “혁명과 건설 전반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할 수 있는 정연한 지도체제와 조직기구, 능력있는 일꾼들”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데 주목한다.

군사 분야에서도 국방위원회보다는 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여전히

⁹⁰ 김정일이 후계자로 공식 선언된 제6차 당대회에의 큰 특징 중 하나는 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가 정치국으로 대체되고 1970년 제5차 당대회에서 폐지되었던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부활된 것이었다. 1966년 설치되었지만 김일성의 유일지배체제 하에서 상징적 존재에 불과했던 상무위원회를 부활시킨 것은 김정일을 상무위원에 선출함으로써 김정일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하는데 이유가 있었다. 상무위원에 김일성, 김일, 오진우, 이종옥, 김정일 등 5명이 선출되었는데 김일이나 이종옥은 유명무실한 존재였고 오진우는 후계체제 구축의 선봉장이었다. 이번에도 상무위원에 김정일, 김영남, 최영림, 조명록, 리영호 등 5명이 임명되었으나 김영남이나 최영림은 당연직 성격이고, 조명록은 노환으로 활동을 못하므로 리영호가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의 선봉장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권위있는 기구이다. 고재홍도 국방위원회의 조직확대 및 상설·상근 기능의 확충을 근거로 전문가들이 국방위원회가 후계체제 구축과 관련되어 핵심 권력기구화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으나 국방위원회의 명령 및 결정사례의 특징으로 볼 때 국방위원회의 실제적 지위는 당 중앙군사위원회나 최고사령관보다 낮고 북한에 대한 정치사회적 영향력이 떨어진다고 평가한다.⁹¹

김정일 정권에 와서 북한은 국가적인 주요 결정이나 발표가 있을 때 당 중앙위원회와 당 중앙군사위원회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2009년 4월 김정일을 국방위원장으로 재추대하자는 김영남의 연설도 당 중앙위원회와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제의를 받아 최고인민회의에 보고하는 형식이었다.⁹² 2010년 2월 당 창건 65주년을 기념해 발표한 당구호도 당 중앙위원회와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공동명의로였다.⁹³

그리고 우리 학계에서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위상에 대해 부정적 평가가 많았던 무렵, 김정일은 2004년 4월 19일 중국을 방문하여 후진타오 주석이 마련한 환영연회에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의 이름으로 호급도동지를 비롯한 중국당의 새로운 령도집단을 다시금 열렬히 축하”한다고 연설했다. 당을 대표하는 기구로 중앙위원회를, 국가를 대표하는 기구로 국방위원회만을 거명해도 좋을 듯하나, 당 중앙군사위원회를 함께 거명했다.⁹⁴

91. 고재홍, “북한 국방위원회의 지위와 역할 분석,” 『북한연구학회보』, 제12권 2호(2008), pp. 41~45.

92. 『로동신문』, 2009년 4월 10일.

93. 『로동신문』, 2010년 2월 6일.

94. 『로동신문』, 2004년 4월 23일.

I
II
III
IV
V
VI

군과 관련한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위상은 김정일이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의 직위를 장쩌민으로부터 물려받은 후진타오에게 보낸 축전에 보다 잘 나타나 있다. 축전에서 김정일은 “당신이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으로 사업하게 된 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와 나 자신의 이름으로 가장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 나는 전통적인 조·중 친선이 조·중 두 당, 두 나라 군대의 공동의 노력에 의하여 더욱 좋게 발전하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⁹⁵ 이 축전에서 북한의 군을 대표하는 권위를 가진 기구가 당 중앙군사위원회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또한 2010년 7월 김일성 사망 기일을 맞아 고위 인사들이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은 보도에서도 “김일성 동지의 립상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의 공동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었다고 밝혔다.⁹⁶ 기관의 명의 순서에 유의해 보면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위상이나 권위가 격하되지 않았음을 엿볼 수 있다. 매년 창군 축하의 주체도 국방위원회가 아니라 당 중앙군사위원회이다. 그리고 군의 각종 대회 축하문을 보낸 기구도 1995년을 기점으로 그 이전은 당 중앙위원회, 그 이후는 당 중앙군사위원회이다.

당-국가체제에서 당내 군사기구가 존재하고 기능하는 한, 국가부문의 군사기구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는 어렵다. 문제는 현재 북한에서 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할 것인가이다. 그동안 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제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조짐도 없었지만 김정일 정권에서도 군의 지휘나 군에 대한 통제는 아직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몫

⁹⁵. 『로동신문』, 2004년 9월 21일.

⁹⁶. 『조선중앙통신』, 2010년 7월 9일.

으로 보인다.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권한이나 역할이 국방위원회로 이
관된 흔적은 발견되지 않는다.

2010년 9월 28일에 단행한 당 중앙군사위원회 인사는 앞으로 이
기구가 명실공히 선군정치의 핵심이 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무엇
보다 후계자 김정은이 부위원장에 임명되었고 2009년 4월 국방위원
회 위원으로 새로 임명되었던 북한의 각 분야 최고 실세들이 총망라
된 점에서 그러하다. 현재 북한이 선군사상, 선군정치를 표방하고 있
는 만큼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높이고, 후계자가 이를
통해 당의 군사노선 확립과 군 장악을 하게 될 것이다. 북한은 김정일
이 김일성처럼 당사업보다 군사업을 먼저 시작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선군정치 개시일을 원래 주장하던 1995년을 수정하여 1960년으
로 소급한 바 있다. 이를 감안하면 적어도 공개적으로는 김정은이 중
양군사위원회와 군사업을 첫 무대로 활동하는 것이 당연하다.

● 표 III-1 당 중앙군사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인원 구성

당	국가
중앙군사위원회	국방위원회
위원장: 김정일	위원장: 김정일
부위원장: 김정은, 리영호	제1부위원장: 조명록 부위원장: 리용무, 김영춘, 오극렬, 장성택
위원: 김영춘, 김정각, 김명국, 김경욱, 김원홍, 정명도, 리병철, 최부일, 김영철, 윤정린, 주규창, 최상려, 최경성, 우동측, 최룡해, 장성택	위원: 전병호, 김일철, 백세봉, 주상성, 우동측, 주규창, 김정각

I

II

III

IV

V

VI

그러나 ‘선군정치’의 시행으로 군의 역할이 군사적인 것에 머물러 있지 않고 사회 전반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한, 군의 활동을 지도하고 다른 기관과의 조율을 하는 주체가 당 중앙군사위원회가 될 수는 없다. 이 점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본래의 기능에 덧붙여 국방위원회의 역할이 늘어나고 정책관여 폭이 넓어졌지만 국방위원회는 어디까지나 당-국가체제에서 국가기관이라는 한계를 가질 것이다. 특히 김정은이 1월에 후계자로 내정되고 공안기구를 중심으로 권력 장악과 정책관여 폭을 넓혀가던 2009년에는 국방위원회의 유용성이 컸으나 후계자로 공식화된 지금은 손발이 없는 국방위원회보다는 전국단위로 미세한 부분까지 조직을 갖춰 인민과 접촉할 수 있는 당의 유용성이 훨씬 클 것이다.

4. 권력엘리트

북한뿐 아니라 어느 국가든 그 국가의 정치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어떻게 권력이 행사되느냐인데 이는 권력구조, 권력엘리트와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권력구조는 권력행사의 장이며 권력엘리트는 권력행사의 주체이기 때문이다.

북한에서 누구를 고위층의 권력엘리트라고 할 수 있을까? 아마도 김정일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사람일 것이다. 김정일은 자신의 측근들로 하여금 비서국을 비롯한 당의 핵심부서를 장악하게 하고 자신이 주최하는 비공식 연회에 참석하게 하여 그 곳에서 주요 정책을 논의했다. 따라서 측근으로 구성된 밀실정치가 실질적인 주요 정책결정과정으로 부상했다. 측근연회는 실질적인 정책결정기구의 역할

을 했고⁹⁷ 이로 인해 공식서열과 공식 정책결정과정은 점차 무력화 되었다.⁹⁸

열려있는 민주주의사회에서도 최고통치자 주변의 회합에 관한 정보는 얻기 어려운데 세계 최고의 폐쇄성을 자랑하는 북한의 경우는 두말할 것도 없다. 누가 김정일의 주변에서 그의 신임을 받고 측근 연회에 참석하는지 확인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래서 김정일의 측근이자 최상층의 권력엘리트로 분류하는 데 흔히 사용되는 기준이 김정일의 현지도도를 수행하는 빈도이다. 이 때문에 여기서도 김정일의 현지도도 때 수행하거나 김정일이 참석한 공식행사에 함께 참석한 빈도를 사용하여 김정일의 측근으로 분류했는데 2009년과 2010년 김정일의 현지도도를 수행한 인물과 그 수행횟수를 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97. 황장엽, 『어둠의 편이 된 햇별은 어둠을 밝힐 수 없다』 (서울: 월간조선사, 2001), p. 97.

98. 현성일, 『북한의 국가전략과 파워엘리트』 (서울: 선인, 2007), pp. 219~220.

I
II
III
IV
V
VI

표 III-2 2009년 현지도 수행 횟수

이름	김기남	김명국	김양건	김영춘	김원홍	김정각	김정일	리명수	리영호	리재일	장성택	주규창	최태복	현철해
강석주	13	5	6	8	2	5	18	6	5	3	4		9	6
김경희	16		2	1	1	2	17	2	2		12	2	3	3
김기남		11	10	18	12	18	107	35	13	12	69	6	22	37
김명국			5	10	6	9	16	12	5	5	6	1	4	16
김양건				2	3	4	14	9	2	3	10		1	10
김영춘					8	25	30	11	20	2	5	1	13	14
김원홍						10	14	11	7	1	7	1	5	14
김정각							30	9	21	2	8	1	11	16
김정일								47	22	18	82	13	23	54
리명수									7	9	28	2	8	46
리영호											4		11	10
리재일											14	6		10
장성택												9	5	31
최태복														10

* 사망한 박남기, 이제강 제외

표 III-3 2010년 현지도 수행 횟수

이름	김경희	김기남	김양건	김영일	김영춘	김정각	김정일	리명수	리영호	리재일	장성택	주규창	최태복	현철해
강석주	7	9	8	9	7	4	10	2	2		10	2	8	2
김경희		35	14	13	13	13	54	13	8	15	42	20	17	15
김기남			16	14	18	17	42	13	12	1	35	12	22	15
김양건				14	11	9	16	2	5		14	2	13	3
김영일					11	8	17	2	5		16	2	12	2
김영춘						17	20	2	12		14	2	15	2
김정각							18		13		11		14	
김정일								19	13	16	46	23	23	22
리명수										1	13	11	2	19
리영호											7		10	
리재일											10	12	1	1
장성택												19	16	14
주규창													3	11

* 위의 횟수는 2010년 8월 17일까지 조사한 것

I
II
III
IV
V
VI

위의 표에서 칸 안의 숫자는 각 개인이 김정일의 현지지도를 수행하면서 상호 만난 횟수를 말한다. 예를 들면 장성택은 2010년의 경우 김정일의 현지지도를 46회 수행하면서 강석주를 10회, 김경희를 42회, 김영춘을 14회 만났다. 이는 하나의 관계망(network)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위 인물들의 관계망이 어떤 형태와 특징을 가지고 있고 관계망 속에서 누가 중심적인 위치에 있는지를 보기 위해 사회 관계망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을 시도했다.⁹⁹

우선 사회관계망 분석에서 핵심적 개념의 하나로 사용되는 것은 중심성(centrality)인데 이는 관계망에서 중심에 위치한 정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중심성이 높다는 것은 관계망의 중심에 위치하여 관계망을 구성하는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는 정도가 높다는 것으로 다른 구성원에 대한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다. 관계망 속에서 김정일의 중심성 수치를 1.000으로 가정했을 때 다른 인물들의 상대적인 중심성(relative centrality)을 보면 다음과 같다.

⁹⁹ 사회연결망 분석에 대해서는 김용학, 『사회 연결망 분석』 (서울: 박영사, 2007) 참조.

표 III-4 현지지도 수행으로 파악한 북한 파워그룹 중심성

(2009년, 2010년, 2009~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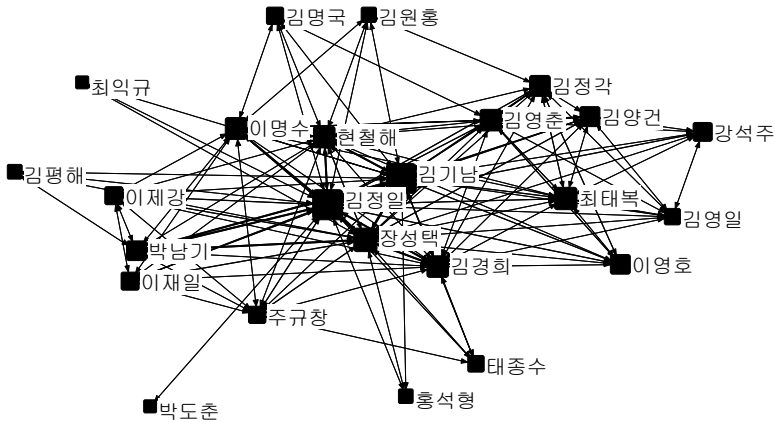
순위	이름	2009년	순위	이름	2010년	순위	이름	2009~2010년
1	김정일	1.000	1	김정일	1.000	1	김정일	1.000
2	김기남	0.951	2	김경희	0.900	2	김기남	0.955
3	장성택	0.683	3	장성택	0.800	3	장성택	0.659
4	김영춘	0.659	4	김기남	0.775	4	최태복	0.636
4	현철해	0.659	5	최태복	0.650	5	김경희	0.591
6	김정각	0.634	6	태종수	0.575	5	김영춘	0.591
6	최태복	0.634	7	주규창	0.550	7	현철해	0.568
8	리명수	0.610	8	김영춘	0.525	7	리명수	0.568
8	박남기	0.610	8	현철해	0.525	9	김정각	0.545
10	리영호	0.585	10	리재일	0.500	10	리영호	0.500
11	강석주	0.537	11	리제강	0.475	10	박남기	0.500
12	양형섭	0.512	12	김양건	0.450	12	김양건	0.477
13	김양건	0.463	12	리명수	0.450	13	강석주	0.455
13	김명국	0.463	14	김영일	0.425	14	리재일	0.432
15	리재일	0.415	14	김정각	0.425	15	리제강	0.409
15	김원홍	0.415	16	리영호	0.400	16	김명국	0.364
15	리제강	0.415	17	강석주	0.375	16	주규창	0.364
18	김경희	0.390	18	우동측	0.350	18	김영일	0.341
19	김영일	0.341	18	김평해	0.350	18	태종수	0.341
20	김일철	0.293	20	주상성	0.325	20	김원홍	0.295
20	김종린	0.293	21	홍석형	0.300	21	김기룡	0.250
20	리용무	0.293	22	김일철	0.275	21	김평해	0.250
20	전병호	0.293	22	전병호	0.275	21	차승수	0.250
20	오극렬	0.293	24	오극렬	0.225	21	김일철	0.250
20	김영남	0.293	24	리용무	0.225	25	양형섭	0.227

위의 표에서 보듯이 중심성이 높은 인물은 김기남, 장성택, 최태복, 김경희, 김영춘이다. 이들은 김정일의 공식활동을 수행하면서 같이 수행한 다양한 사람과 접촉했다는 의미로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망 속에서 중심적인 위치에 있음을 뜻한다. 2009년부터 장성택의 중심성

I
II
III
IV
V
VI

이 급격히 높아졌고 2010년에는 김경희의 중심성이 수직 상승한 점이 눈에 띈다. 주요 인물의 중심성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그림 III-1 북한 파워그룹 중심성(2009~2010년)



위의 그림에 나타나는 사람 대부분이 9월 28일의 노동당 인사에서 주요 직책에 임명되었다. 당 비서로 임명된 10명 가운데 위의 표에 없는 사람은 최룡해와 문경덕 뿐이다. 김정일이 생존해 있는 동안에는 위의 그림에 나타나는 사람들이 권력을 유지할 것이다.

그런데 권력승계가 성공하려면 ‘승계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승계의 제도화는 후계자에게 충성심을 가진 새로운 세대의 간부들을 북한의 권력구조에 배치시켜 이들로 하여금 후계자의 권력기반을 제도적으로 구축할 것을 필요로 한다.¹⁰⁰ 거꾸로 말하면 후계자는 자신의 사람들로 하여금 주요 권력기관을 장악하도록 하여야 한다.

¹⁰⁰ 김갑식, “북한의 후계구도 및 권력구조 전망: ‘안정적 승계’를 중심으로,” p. 114.

포스트 김일성 후계체제 구축과정에서 혁명 1세대인 빨치산 그룹이 후견그룹을 형성하였다면 포스트 김정일 후계체제 구축과정에서는 어떤 그룹들이 부상할 것이고 김정일시대 이후를 이끌어갈 권력엘리트들은 누가될 것인가?

김정일 정권에서 이미 점진적이고 폭넓게 권력엘리트의 세대교체가 이루어졌다. 북한은 2006년 10월 15일자 로동신문 정론 “조국이 우리를 지켜본다”에서 김일성이 혁명 개척세대인 1, 2세대의 대표자라면 김정일은 혁명의 계승 세대인 3, 4세의 대표자라고 했다. 3, 4세대는 “해방된 조국땅에서, 전화의 불길속에서 그리고 전후의 잿더미속에서 태어났거나 그때 책보를 끼고 다니던 세대들”로서 40~50년 대생이며 이들이 “혁명의 주력”이라고 선전했다.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주체의 조국’ 건설에 매진한 1, 2세대에 이어 ‘선군정치의 조국’ 건설을 담당하게 된 이 세대에게 주어진 임무는 “선군혁명의 최후승리와 강성대국건설”이라고 한다.¹⁰¹ 따라서 김정일 이후 후계체제 구축과정은 혁명 5세대와 6세대인 ‘새세대’의 등장과 더불어 진행될 것이고 앞서의 표나 그림에 나타나는 김정일 세대이자 혁명 3, 4세대인 인물들이 후견인의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런데 현재 북한의 엘리트층을 구성하고 있는 3, 4세대와 다음 세대의 엘리트로 성장할 5, 6세대 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우선 3, 4세대들은 70년대 초반 3대혁명의 주축세력으로서 유일사상체제의 기초축성에 기여했고 북한체제의 최고 전성기를 구가했으므로 체제에 남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즉 이 세대들은 북한이 경

¹⁰¹ 정론, “혁명의 3세, 4세,” 『로동신문』, 2006년 2월 28일; 정론 “혁명은 대를 이어,” 『로동신문』, 2007년 3월 19일. 통상 김정일을 혁명 2세대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북한이 그를 3, 4세의 대표자로 새로 자리매김한 것은 중국 지도부의 세대 구분과의 일치를 노린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I
II
III
IV
V
VI

제적으로 가장 안정된 시기에 교육을 받아 국가로부터의 시혜, 정교한 사회주의 교육제도 등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세대이기 때문에 투철한 혁명성을 보일 수 있다.¹⁰² 대남부서에 근무했던 한 탈북자는 북한 내 50대 권력엘리트들 중 일부는 “앞으로 10년은 우리의 정권이다. 선배들은 자리를 내놓으십시오. 우리가 사회주의를 더 강하게 만들겠습니다”라면서 선배들의 일선후퇴를 요구하고 있다고 증언했다.¹⁰³ 정창현도 북한을 방문했을 때 만난 이들 세대는 ‘국가의 혜택’을 받은 만큼 충성도가 높고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려는 보수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으며 내부 사회주의 경제운영의 개선, 대외무역의 활성화 등에서는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전면적인 개혁·개방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 시각을 나타냈다고 한다.¹⁰⁴ 하지만 5, 6세대는 북한이 합영법을 제정하고 세계청년학생축전을 개최하는 등 개방적 경향을 띠는 반면 경제·외교적으로 점차 쇠락해가던 시기에 성장했으므로 체제에 대한 충성심이 3, 4세대에 비해 다소 약할 가능성이 있다. 사상교양을 통해 ‘우리식 사회주의의 고수’와 체제에 대한 충성심을 배양하도록 끊임없이 요구받지만 3, 4세대보다 더 실리적이고 대외개방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최근 북한이 이례적으로 로동신문에 국방위원이나 정치국원 등 주요 인사의 이력을 소개하고 창당 기념식에 서방 언론들을 대거 초청하여 취재를 허용한 것 등은 폐쇄성의 고수가 실익이 없다고 느끼는 이들 세대의 작품일 개연성이 있다.

이번 당대표자회에서 124명의 당 중앙위원이 선출되었는데 당 중

¹⁰² 이교덕 외, 『새터민의 증언으로 본 북한의 변화』, pp. 29~31.

¹⁰³ 탈북주민과의 인터뷰, 2007년 10월 10일.

¹⁰⁴ 정창현과의 인터뷰, 2010년 8월 30일.

양위원이 되는 것은 당 부부장 이상, 내각의 상·부상, 최고인민회의 주요 간부, 군대 상장 이상 등 당연직이 많기 때문에 김정은 체제가 되고 세대교체가 된다고 해서 20대, 30대가 새롭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9월 28일 인사에서도 김정일이 1997년 총비서에 취임한 이후 지금까지 중용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중앙위원이 되었다. 군부도 1992년도에 김정일이 최고사령관으로서 군인사를 했을 때 소장, 중장으로 임명된 사람들이 중심을 형성하고 있고 그 핵심인물이 리영호이다.

현재 북한에서 세대교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북한의 간부등용은 노·장·청 배합을 특징으로 하고 있고 특히 노·장에 대한 예우는 유지될 것이다. 김정은이 후계자로서 적극적인 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당분간은 지금 눈에 띄는 당·정·군의 주요 인사들이 권력행사의 중심이 될 것이다. 김정은 체제의 구축에 당 비서국에서는 문경덕을 비롯한 5, 60대의 비교적 젊은 비서들이, 공안부문은 장성택이, 군부는 리영호-김경옥이, 근로단체와 젊은 세대의 동원은 최룡해 등이 선봉에 나설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가 임명한 이들이 후계체제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지만 이들 못지않게 중요한 집단은 3, 40대의 혁명 5, 6세대이다. 그런데 지금도 북한의 일부 분야에는 담당자들의 나이가 30대이다. 조직지도부를 제외하고는 당내에서 30대 중반이나 40대로 넘어가는 세대가 실무의 팀장급으로서 업무를 이끌어 가고 있다. 당내에서 김정은과 호흡하는 30, 40대 과장급 등이 어떻게 구성될 것인가 김정은 개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가장 보수집단이라고 평가되는 군부 쪽에도 40대의 나이에 군단장에 오른 경우도 있다. 주승남 제12군단장을 비롯해 군단장은 40~50대, 사단·여단장들

I
II
III
IV
V
VI

은 일부 30~40대로 교체되었다. 김정은이 후계자로서 입지를 굳히면서 이들의 직책이 한 단계씩 승진하여 부부장급으로 올라가면 김정은 후계체제를 뒷받침하는 당내 파워집단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내각 쪽은 김정일 정권이 들어선 직후부터 실적에 입각해 성과를 낸 사람이 장관, 차관에 오르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세대교체가 활발한 곳이다. 정보화시대에 맞는 '실력', 실제적인 성과를 내는 '실적'과 '실리' 등 '3실주의'가 인사발탁에 주요하게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신사고'와 '실리주의'를 위해서는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사고를 가진 젊은 세대의 대대적인 등용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3, 4세대보다 더 실리적인 5, 6세대들이 김정은 체제의 경제를 짊어질 가능성이 크다.

IV. 후계체제의 이데올로기

1. 이론적 배경: 체제 목표와 통치이데올로기

앤서니 월라스는 혁명적 이데올로기의 두 가지 구성요소로서 ‘궁극적 유토피아의 이미지’인 목표문화(goal culture)와 목표문화에 도달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형성을 안내하는 규범으로서의 전이문화(transfer culture)를 제시한다.¹⁰⁵ 일반적으로 공산주의가 목표문화라면, 공산주의를 달성하기 확립된 다양한 제도와 행위들은 전이문화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에 따르면, 사회주의국가는 탄생 순간부터 이상과 현실, 목표와 수단 사이의 갈등과 긴장에 직면하여 그 결과 국가는 인민들의 물질, 인적자원을 거둬서 착취하고 동원할 수밖에 없다. 그런 가운데 인민들의 동의에 의해서든 아니면 정치적 억압에 의해서든 일정범위 내에서 전이문화의 재생산이 유지된다면 사회주의적 동원체제는 얼마간 작동할 수 있다. 그러나 이상적 목표와 현실적인 수단 사이의 간극이 지나치게 커지면 사회주의체제는 변화를 강요받는다든 것이다.¹⁰⁶ 다시 말해서, 공산주의라는 이상적인 체제 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현실적 수단이 수반되지 않으면 사회주의 체제는 변화의 압력 하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다.

찰머스 존슨은 변화의 압력 하에 놓인 사회주의체제가 체제붕괴를 막고 목표문화와 전이문화에 대한 인민들의 저항을 중앙권력이 흡수할 수 있는 두 가지 길을 제시 한다.¹⁰⁷ 하나는 ‘사회를 이념적으로

¹⁰⁵. Anthony Wallace, *Culture and Personality* (New York: Random House, 1961), pp. 18~24.

¹⁰⁶. 박선원, “김정일시대 북한의 변화,” 『한국정치학회보』, 제36집 3호(2001), p. 157.

¹⁰⁷. Charlmers Johnson, “Comparing Communist Nations,” in Charlmers Johnson ed., *Change in Communist Systems*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70).

규정된 목표(체제목표)를 향해 강력한 운동을 전개하도록 밀고 나가
는' 좌파적 대응이며, 다른 하나는 '이념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준최
적(sub-optimal) 상태에서의 균형을 묵인'하면서 '위로부터의 개혁
에 의한 중상주의적 변화의 길로 접어는 개량주의적 개혁노선'이다.
박선원에 따르면,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반 동유럽 사회주
의체제의 붕괴는 전자의 결과이며, 중국의 체제유지 성공은 후자의
결과라고 지적한다.¹⁰⁸

그런데 위의 논의들은 제3의 길을 배제하고 있다. 그것은 체제목표
를 수정한 가운데 순수이데올로기를 유지하면서 실천이데올로기의
변화를 통해 체제유지를 도모하는 길이다. 뚜렷한 목표정향성
(goal-oriented)과 행동지향성(action-oriented)을 갖고 있는 이데
올로기는 추구해야 할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을
직접적으로 동기부여(motivation)하도록 기능한다.¹⁰⁹ 그러므로 사
회주의를 지향하는 혁명이데올로기는 현실을 사회정치적으로 규정된
개념에 맞춰 재구성함으로써 대중들에게 체제 정당성을 부여하는 역
할을 하고 이를 통해 대중을 혁명과 건설에로 동원하게 된다.¹¹⁰ 다시
말해서, 체제목표에 대한 인민들의 정체성이 약화되거나 이상과 현실
간의 괴리가 증가할 때, 이데올로기는 대중들을 체제목표를 정당화
(legitimation)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동원(mobilization)한다.

프란츠 서먼은 사회주의체제의 이데올로기를 관념과 행동의 연결
체계가 간접적인가 혹은 직접적인가의 여부에 따라 순수이데올로기

¹⁰⁸ 박선원, “김정일시대 북한의 변화,” p. 157.

¹⁰⁹ Roy Macridis and Mark Hulliung, *Contemporary Political Ideologies*
(New York: Harper Collins, sixth ed., 1996), p. 3.

¹¹⁰ Charlmers Johnson, “Comparing Communist Nations,”

와 실천이데올로기로 구분한다. 그는 순수이데올로기란 개인에게 일관되고 의식적인 세계관을 제공하는 사고체계이며, 실천이데올로기란 개인에게 행동의 합리적 도구를 제공하는 사고체계로 정의한다.¹¹¹ 이런 점에서 실천이데올로기는 순수이데올로기의 구현을 위한 실천과정에서 구체적인 현실 여건과의 작용의 산물이자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한 원칙들이다. 그리고 순수이데올로기와 실천이데올로기를 통해 사회주의체제는 대중들에게 ‘체제 정당화’와 혁명과 건설에로의 ‘동원’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¹¹²

지금까지의 논의를 보면, 알라스가 제시한 목표문화와 전이문화, 그리고 서먼이 주창한 순수이데올로기와 실천이데올로기 사이에는 각각의 논리적 상합성과 친화력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목표문화는 순수이데올로기를 통해 논리적으로 구현되고 전이문화는 실천이데올로기를 통해 구현된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사회주의체제가 내세우는 ‘궁극적 유토피아의 이미지’인 공산주의는 맑스·레닌주의라는 순수이데올로기를 통해 구현되었으며, 공산주의를 달성하기 위한 사회주의 국가 마다 주어진 특성에 맞게 만들어진 전이문화는 북한에서 주체사상, 중국에서 모택동주의, 그리고 유고에서는 티토주의로 구현되었다.¹¹³ 즉, 대부분의 사회주의체제들은 동일하게 목표문화로서 ‘공산주의’라는 이상적 목표를 내세우고 맑스·레닌주의를 통해 이를

¹¹¹ Frantz Shurmann, *Ideology and Organization in Communist China* (Berkeley, L.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8), pp. 18~24.

¹¹² 김근식, “1990년대 북한의 체제정당화 담론: ‘우리식 사회주의’와 ‘붉은기철학’을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p. 39.

¹¹³ 프란츠 서먼은 중국에서 맑스·레닌주의가 공산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순수이데올로기라면 모택동주의는 혁명과 건설의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는 실천이데올로기라고 규정한다. Frantz Shurmann, *Ideology and Organization in Communist China*, pp. 21~22.

I
II
III
IV
V
VI

구현하고자 하였으나, 이를 실현하기 위한 현실적 수단으로서 일당독재, 명령경제시스템과 같은 다양한 전이문화들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각 나라의 특성에 맞게 이를 구현하기 위해 실천이데올로기의 변용이 수반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의 주체사상과 같이 맑스·레닌주의와 다른 세계관과 철학적 원리를 갖춘 이데올로기를,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맑스·레닌주의를 북한의 특성에 맞게 변용한 실천이데올로기로 볼 것인지 아니면, 북한식 순수이데올로기로 볼 것인지의 여부다. 북한은 1955년 처음으로 ‘주체’의 문제를 제기한 이후 1960년대 초반을 거쳐 중국·러시아를 ‘대국주의’로 비판하면서 이들 국가로부터 ‘자주’ 노선을 줄곧 견지해 왔다. 그리고 1960년대 중반에 이르러 주체의 철학적 원리를 확립하고 자주·자립·자위에 기초한 주체사상을 중심으로 ‘유일사상체계’ 확립에 박차를 가하면서 1970년대 초반 맑스·레닌주의를 창조적으로 계승·발전시킨 주체사상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제도화시켰다. 이후부터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혁명적 수령관,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우리민족제일주의, 그리고 우리식 사회주의와 같은 다양한 실천이데올로기와 담론들이 생산되었다.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북한은 목표문화로서 공산주의를 폐기하지 않았다. 다만, 이상사회로서의 공산주의의 이미지가 맑스·레닌주의의 본질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 받는 사회적 이미지보다 ‘자주성이 실현되는’ 사회적 이미지가 더 강조되었다. 이와 같이 주체사상이 나름대로의 철학적 원리를 갖추고, 맑스·레닌주의를 당의 지도사상에서 삭제하고 주체사상을 중심으로 한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하였으며, 공산주의의 본질적 이미지를 변경한 것으로 볼 때, 주체사상을 북한식 순수이데올로기로 위치시켜도 무방하다.

김일성시대 주체사상이 순수이데올로기라면, 북한에서 실천이데올로기는 무엇인가?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주체사상을 협의의 주체사상과 광의의 주체사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¹¹⁴ 협의의 주체사상이란 주체의 철학적 원리, 사회역사 원리, 그리고 지도적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광의의 주체사상이란 주체사상, 혁명이론, 영도방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광의의 주체사상은 협의의 주체사상을 정수로 하여 현실적으로 혁명과 건설에서 견지해야 할 이론과 영도방법을 담고 있으며, 김정일주의로 불리운다. 따라서 주로 철학과 사회역사의 원리를 담고 있는 협의의 주체사상은 순수이데올로기로, 그것을 혁명의 현실적 요구와 특성에 맞게 체계화한 광의의 주체사상은 실천이데올로기로 규정할 수 있다.¹¹⁵

결론적으로, 김일성시대 북한의 목표문화는 공산주의이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이데올로기는 협의의 주체사상이었으며, 전이문화는 수령유일지배체제 확립이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이데올로기는 광의의 주체사상이었다. 그리고 김일성시대의 목표문화는 체제목표에 대한 인민들의 정체성이 약화되거나 이상과 현실 간의 괴리가 증가함에 따라, 1990년 후반 김정일시대에 들어서면서 목표문화는 사회주의 강성대국으로 변화되었지만, 이를 구현하기 위한 순수이데올로기는 ‘수령의 사상과 영도를 계승해야 한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협의의 주체사상이 지속되었다. 김정일시대 목표문화(체제목표로서의 강성대국)를 실현하기 위한 전이문화는 선군혁명영도체제를 강화하는 것이었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실천이데올로기는 선군사상이다. 따라서 김

¹¹⁴ 이종석, 『새로 쓴 현대북한의 이해』(서울: 역사비평사, 2000), pp. 127~139.

¹¹⁵ 광승지, “김정일시대의 북한이데올로기: 현상과 인식,” 『통일정책연구』, pp. 139~140.

I
II
III
IV
V
VI

정일시대의 선군사상은 김일성시대 순수이데올로기로서의 협의의 주체사상을 고수하는 가운데, 실천이데올로기로서의 광의의 주체사상이 선군사상으로 변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¹¹⁶ 여기서 선군사상이 광의의 주체사상을 ‘대체’한 것이 아니라 ‘변용’했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북한의 각종 公刊문헌들이 ‘선군사상은 주체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고, ‘주체의 선군’ 사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실제로 광의의 주체사상이 여전히 북한체제의 작동원리이자 실천이데올로기으로써 효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북한에게 주어진 혁명과 건설의 정세와 여건을 반영하여 혁명이론에서 혁명의 주력군을 노동자에서 인민군대로 변경하고, 영도방법에서 군사를 선행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등 과거에 비해 선군을 강조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김정은시대에서도 체제목표에 대한 인민들의 정체성이 약화되거나 이상과 현실 간의 괴리가 증가함에 따라, 목표문화와 전이문화, 그리고 실천이데올로기의 변화가 예상된다. 아마도 김정은시대의 체제목표는 강성대국 건설을 유지·고수할 것이나 세계경제강국 비전이 보다 현저하게 강조되는 세계강국이 체제목표 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스스로 강성대국의 ‘대문 진입’ 또는 ‘문패 달기’의 시한으로 설정한 2012년에 가면, 후계체제를 공고화하기 위한 논리로 ‘강성대국의 령마루 점령’이라는 담론으로 세계강국론을 포장할 것이다. 이러한 목표문화(체제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순수이데올로기로는 협의의 주체사상을 고수할 것이다. 목표문화를 실현하기 위한 전이문화로는 ‘선군실리영도체계’가 자리 잡을 것이며, 이를

¹¹⁶ 이기동, “통치이데올로기,” 『김정일시대 북한의 정치체제』 (서울: 통일연구원, 2004).

구현하기 위한 실천이데올로기로는 광의의 주체사상, 선군사상과 더불어 이들을 변용한 과학기술중시사상(노선)이 정립될 것으로 보인다. 협의의 주체사상이 3대에 걸쳐 순수이데올로기로 유지되고 광의의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이 김정은시대에도 실천이데올로기로 지속되는 이유는 후계자는 수령의 사상과 영도를 계승·발전시켜야 한다는 혁명전통 계승, 즉 후계자의 유전적 구속에서 기인한다. 이와 같이, 북한은 3대에 걸친 권력세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체제목표에 대한 인민들의 정체성 약화와 이상과 현실 간의 괴리 증가에 따른 체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통치이데올로기의 적극적 조정을 통해 대중들에게 체제목표를 정당화(legitimation)하고 그들을 동원(mobilization)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 표 IV-1 김일성·김정일·김정은시대별 이데올로기

시대	체제목표		이데올로기		비 고
	목표문화	전이문화	순수 이데올로기	실천 이데올로기	
김일성	공산주의	유일지배체제 확립	협의의 주체사상	광의의 주체사상	
김정일	강성 대국의 '대문 진입'	선군영도체제 확립	협의의 주체사상	광의의 주체사상 선군사상	실천 이데올로기 변용
김정은	강국 대국의 '령마루 점령' (세계강국)	첨단 과학 기술에 입각한 선군영도체제 확립	협의의 주체사상	광의의 주체사상 선군사상 과학기술 중시사상	실천 이데올로기 변용

I
II
III
IV
V
VI

2. 김정일시대 체제목표 및 통치이데올로기 분석

가. 김정일시대 체제목표

김정일시대 ‘궁극적 유토피아 이미지’로서의 목표문화는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이다. 북한은 1998년 1월 29일부터 30일까지 열린 「전국 자력갱생모범일군대회」에서 ‘고난의 행군’을 공식 마감하고 ‘주체의 강성대국’이 혁명과 건설에서 당면한 목표임을 천명하였다.¹¹⁷ 당시 북한은 그들의 표현에 따르면, 고난의 행군을 ‘성공적으로’ 완수했지만 심각한 경제난은 여전히 지속되던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사회주의 강성대국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공산주의에 식상함과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인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어 위기관리의 수단으로 삼고자 하였다. 당시 북한의 전 사회를 지배하던 담론은 ‘혁명적 군인정신’과 그것을 사회적으로 구현한 ‘강계정신’이었다. 이 두 정신은 인민들의 현재적 동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무언가 미래의 희망을 담은 메시지가 필요했던 것이다. 그리고 1998년은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을 마치고 ‘사회주의 강행군’을 시작하던 해로 주민들의 자발적 동원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강행군의 목적지를 분명히 해야 할 필요성도 있었다. 동시에 1998년 헌법개정을 통해 명실상부한 김정일 정권의 출범에 대비하여 정권의 정당성을 강화할 수 있는 이데올로기적 요구도 있었다.

강성대국론은 1998년 8월 22일자 장문의 정론 「강성대국」을 통해서 공식화되었다. 동 정론은 강성대국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117. 『로동신문』 사설,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강행군 앞으로,” 1998년 2월 3일.

사상강국이란 주체사상으로 일색화되고 수령결사옹위정신의 결정체이며 반동적 사상과 부르조아생활양식을 철저히 배격하는 나라이다. 정치강국이란 자주적인 정치를 실시하고 전체 인민의 일심단결이 가장 높은 수준에서 실현되며 국제정치무대에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모든 문제를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따라 해결할 수 있는 정치력을 가진 나라이다. 군사강국이란 주체적인 군중시의 정치가 빛나게 구현되고 정치사상적으로나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된 참다운 혁명군대를 가지며 전국이 요새화되고 전민이 무장하고 군대와 인민이 하나로 일심단결된 나라이다. 경제강국이란 자립성과 주체성이 철저히 보장된 민족경제를 가지며 경제의 모든부문이 현대화되고 모든 생산과 경영활동이 과학화되어 있고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풍부한 물질문화생활조건을 충분히 보장하여 주는 경제를 가진 나라이다.

또한 동 정론은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영원한 리상국’으로 묘사하고 있어, 북한 스스로도 강성대국을 목표문화로 설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¹⁸ 그리고 북한은 강성대국을 “국력이 강하고 모든 것이 흥하며 인민들이 세상에 부럼없이 사는 나라이다”로 정의하여 목표문화로서의 의미를 더 한층 뒷받침하고 있다.¹¹⁹ 그러한 북한이 2008년 신년공동사설에서 2012년 강성대국 대문 진입을 제창한 것은 이상국인 강성대국의 실현이 체제 정당성 강화와 주민 동원을 위한 이데올

I
II
III
IV
V
VI

118. “우리가 말하는 강성대국은 주체의 사회주의나라이다. 근로인민대중이 력사의 당당한 자주적주체가 되고 자주, 자립, 자위가 실현되어 그 어떤 지배와 예속도 허용하지 않는 강대한 국가, 정치와 군사, 경제와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세계적인 봉우리에 우뚝 솟은 나라,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 삶이 활짝 꽃피는 행복의 락원...실로 주체의 사회주의강성대국은 착취와 억압, 가난과 무지, 침략과 약탈, 지배와 예속으로 얼룩진 지난 시대의 반동적, 반인륜적 국가건설사에 종지부를 찍고 인민의 자주적요구, 인류의 념원을 전면적으로 꽃피워주는 영원한 리상국이다.” 『로동신문』 정론 ‘강성대국론’, 1998년 8월 22일.

119. 사회과학출판사,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사상』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00).

로기적 기능의 일환임을 뒷받침하는 것이자, 기존의 목표문화인 공산주의 실현이 목표문화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북한은 강성대국 건설 목표를 단계적으로 달성하도록 설정하고 있다. 무엇보다 정치·사상의 강국을 먼저 달성하여 체제결속(일심단결)을 도모하고, 군사강국을 달성하여 체제안전을 보장한 다음, 이에 기초하여 경제강국을 실현한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은 2006년 핵실험 이후 정치·사상의 강국과 군사강국을 달성하였으니 이제 경제강국 달성에 매진할 것을 독려했다. 이러한 단계론적 접근방법은 북한 스스로 경제강국 건설을 매우 어려운 과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정치·사상의 강국과 군사강국의 실현만으로도 강성대국 건설 완수에 가까워졌다는 희망을 주기 위한 논리구조임을 알 수 있다.

김정일시대 목표문화를 달성하기 위한 전이문화는 대표적으로 선군혁명영도체계의 확립이다. 북한은 강성대국 건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998년 헌법 개정을 시작으로 2009년 헌법 개정 시점까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군혁명영도체계를 확립하고 강화하는 조치를 단행하였다. 북한은 이를 ‘국방위원회를 중추로 하는 새로운 국가령도 체계’ 확립 과정으로 부른다.¹²⁰ 물론 1992년 헌법 개정을 통해서 최고인민회의와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중앙인민위원회 다음 순서이던 국방위원회가 개정 헌법에서는 최고인민회의 다음 순서로 격상되었고,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이며 전반적 국방관리기관’으로 권능이 강화되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국방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은

¹²⁰ 류용식·최승필·고현주, “천하를 다스리는 무적의 장군,” 『로동신문』, 2004년 6월 28일.

군사 및 국방부문에 주로 국한되었다. 한편, 북한은 1998년 헌법 개정을 통해서 주석직과 ‘국가주권의 최고지도기관’이던 중앙인민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임무와 권한을 국방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등으로 이관하였다. 그리고 국방위원장을 ‘나라의 최고직책’으로 선언하고,¹²¹ 개정 헌법 제102조 국방위원장의 권한에서 ‘일체의 무력을 지휘 통솔’과 ‘국방사업 전반지도’를 추가하였다. 국방사업이 정치·경제·사회를 포괄하는 북한식 개념임을 감안하면, 국방위원장은 ‘전반 지도’라는 규정에 따라 국정의 모든 부문에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¹²²

2009년 헌법 개정은 ‘국방위원회를 중추로 하는 국가영도체계’의 완결판이다. 동 헌법은 국방위원장을 ‘최고령도자’로 명시하고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국방위원장의 임무와 권한에 ‘국가의 전반사업을 지도한다’라는 항목을 추가하여 국방위원장이 국방사업을 넘어 전반 사업을 지도하도록 권능을 강화하였다. 이것은 1998년 이후 강화해 온 국방위원장의 권능을 사후적으로 제도화한 조치로 볼 수 있다. 한편, 국방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국방지도기관’으로 격상되었고, 임무와 권한에 ‘선군혁명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국가의 중요정책을 세운다’라는 항목을 추가하여 국방위원회가 명실 공히 국가를 대표하는 기구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였다.

이와 같이, 국방위원장과 국방위원회에 대한 헌법상의 제도적 강화 조치와 더불어 ‘국방위원회를 중추로 하는 국가령도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조직 및 인사를 강화하는 조치들이 수반되었다. 우선 조직 강화

¹²¹ 김영남, 김정일 국방위원장 추대사, 1998년 9월 5일.

¹²² 박형중 외, 『김정일시대 북한의 정치체제』 (서울: 통일연구원, 2004), p. 122.

I
II
III
IV
V
VI

측면에서 보면, 인민무력부와 국가안전보위부가 직속기관으로 편입되고, 제2경제위원회, 인민보안성, 그리고 유사 시 군사동원총국이 하위기관으로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국방위원회의 하위 실무부서 역시 꾸준히 확충되어 왔다. 국방위원회 자체 조직은 국방위원장을 비롯하여 국방위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들, 국방위원들을 포함하여 행정국, 의전국, 정책국, 참사, 기능직 인력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인다.¹²³ 무엇보다 눈에 띄는 점은 대남업무를 담당하는 노동당의 작전국 및 35호실과 인민군 정찰국이 통합되어 정찰총국이 신설되어 국방위원회 산하기구로 편입되었다. 다음으로 인적 강화 측면에 보면, 2009년 2월 오극렬 당시 당 작전부장이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되고, 2009년 4월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1차회의에서 국방위원이 12명(김정일 위원장 제외)으로 증원되어, 최고 핵심실세인 장성택 당 행정부장, 우동측 국가안전보위부 제1부부장, 김정각 총정치국 제1부부장, 주규창 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등이 새로 국방위원으로 새로 진출하였다. 이로써 국방위원회는 조명록, 김영춘과 같은 군의 원로 실세들과 당의 핵심 실세, 그리고 우동측, 주상성 인민보안부장과 같은 현안 해결을 위한 실무진들로 망라되었다.

나. 김정일시대 통치이데올로기

김정일시대 목표문화로서의 강성대국을 구현하기 위한 순수이데올로기는 여전히 주체사상이다. 이는 “사회주의사상강국은 무엇보다도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일색화된 나라이다. 전체 인민이 위대한 주체사

¹²³ 고재홍, “북한 국방위원회의 지위와 역할 분석,” 『북한연구학회보』, 제12권 2호(2008), pp. 36~38.

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살며 투쟁하는 나라가 사회주의사상강국이다”라는 대목에서 잘 나타나 있다. 강성대국 건설 목표는 여전히 주체사상의 구속력 하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사회적 인간의 참다운 본성에 맞는 완성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으로 온 사회가 일색화된 나라가 바로 사회주의사상강국이다”라는 대목에서 알 수 있듯이, 주체사상으로 일색화된 나라가 곧 강성대국이라는 주장은 주체사상이 추구하고자 하는 국가상이 강성대국이라는 것을 가리킨다. 이는 과거 공산주의라는 주체사상이 추구하고자 하는 체제목표가 ‘자주성이 실현된 국가’로서 강성대국이라는 보다 명확한 체제목표로 바뀐 데서 비롯된 것이다.¹²⁴ 그리고 이러한 체제목표의 변화는 기존 체제목표에 대한 인민들의 정체성이 약화되고 공산주의라는 이상과 비공산주의적 현실 간의 괴리가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였다. 예를 들어, 국가배급제의 붕괴와 대량 아사자의 발생과 국제적 고립 등을 꼽을 수 있다.

김정일시대 전이문화로서의 선군혁명영도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실천이데올로기는 선군사상이다. 선군사상의 등장은 ‘고난의 행군’과 ‘사회주의 강행군’ 과정에서 확실한 효과가 입증된 선군정치를 이념·사상적으로 제도화하는 과정의 산물이다. ‘김정일의 독특한 정치방식’인 선군정치를 하나의 신념체계로 발전시켜서 김정일시대의 실천이데올로기로 기능하도록 만들려는 것이다. 2002년 말에 첫 등장한 선군사상이라는 용어는 2003년 신년공동사설을 기점으로 본격 등장하였다. 선군사상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시기는 2004년이다. 전 사회의 주체사상화 강령 선포 30주년이 되는 2004년에 북한은 ‘전 사회에

I
II
III
IV
V
VI

¹²⁴ 이기동, “통치 이데올로기,” 『김정일시대 북한의 정치체제』, p. 33.

서의 선군사상 일색화’를 주창하였다.¹²⁵ 북한은 선군사상의 일색화 운동을 전개하여 그 핵심 담론인 혁명적 군인정신을 전체 사회에 확산시킴으로써 그 하위 정신인 수령결사옹위정신을 통해 전체 인민들을 체제보위를 위한 전사로 만들고 결사관철의 정신을 통해 모든 사업을 군대식 사업방식으로 추진하여 경제회생의 추동력으로 삼고자 하였다.¹²⁶

2004년 중반부터 선군사상은 이론적 체계화 과정을 시작하여 2004년 12월 개최된 선군사상 토론회에서 체계화를 완료한 것으로 보인다. 선군사상에 나타난 시대관의 핵심 개념은 자주성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군사를 중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날은 세계 인민들의 자주성에 대한 지향이 증대하고 있는 데 반해, 지배주의와 제국주의 세력은 힘의 논리와 이념적 책동을 통해 내부와해전략을 추구하고 인민들의 자주적 지향을 억압하려 하고 있으므로 이들 세력에 반대하는 투쟁을 벌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혁명의 총대, 즉 군사를 중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선군은 사상과 신념의 총대를 혁명의 주력으로 하는 혁명전략이며 사회의 가장 혁명적이고 전투적이며 위력한 집단인 혁명군대를 축으로 하여 주체적 역량을 강화하는 혁명전략이라는 것이다. 선군사상에 나타난 역사관은 ‘선군령장’이 지도하는 승리의 역사이고, 동시에 ‘혁명의 승리는 총대동지들을 주력으로 하는 선군통일체의 승리’이며, ‘선군통일체는 선군령장을 결사옹위하는 길

¹²⁵ 선군사상 일색화란 용어가 제일 먼저 등장한 것은 2004년 1월 19일자 로동신문 사설이고, 1월 24일자 로동신문 사설에서 선군사상 일색화의 당위성이 제기되었다. 『로동신문』 사설, “선군의 기치높이 정치사상전선을 철벽으로 다져나가자,” 2004년 1월 19일.

¹²⁶ 혁명적 군인정신은 수령결사옹위정신, 결사관철의 정신, 영웅적 희생정신이라는 하위 정신으로 구성되어 있다.

에서 총대동지들을 주력으로 굳게 뭉친 강철의 결정체’ 라는 것이다. 즉, 선군사상은 선군령장을 결사옹위하는 총대동지들의 승리의 역사가 집대성된 사상이라는 것이다. 선군사상의 핵심 정신은 혁명적 군인정신 또는 백두산총대정신이고, 이 정신은 수령결사옹위정신, 결사관철의 정신, 영웅적 희생정신을 기본으로 하며, 이 정신은 혁명승리의 강력한 추동력이라는 것이다. 선군사상은 군사선행에 입각한 강성대국건설의 합법칙적 과정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으며, 사회주의 위업수행을 위한 과학적 방도를 확실히 밝히고 있는 혁명과 건설의 새로운 지도적 지침이라는 것이다.¹²⁷ 이와 같이, 선군사상을 혁명과 건설의 새로운 지도적 지침으로 삼고 이론적으로 체계화하여 그것을 전체 사회에 일색화하려는 시도는 선군사상이 새로운 실천이데올로기로 확립되었음을 입증해주는 결정적 근거이다.¹²⁸

김정일시대 광의의 주체사상은 선군사상과 더불어 실천이데올로기로 여전히 기능하고 있다. 북한은 선군사상이 ‘주체사상에 뿌리를 둔 주체의 선군사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아울러 선군사상의 창시자는 김일성이고 김정일은 그 구현자라는 역할 구분도 확실히 하고 있다. 그렇다면, 광의의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의 차이를 밝힐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선군사상이 광의의 주체사상을 대체한 것인지 변용한 것인지를 밝혀야 광의의 주체사상이 김정일시대에서도 여전히 실천이데올로기로 기능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규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대체한 것이라면, 광의의 주체사상은 실천이데올로기로

¹²⁷ 『로동신문』 편집국논설, “선군사상을 우리 시대 혁명의 지도적 지침으로 튼튼히 틀어쥐고 나아가자,” 2004년 6월 16일.

¹²⁸ 실천이데올로기화의 3가지 기준과 관련해서는 이기동, “통치 이데올로기” 『김정일시대 북한의 정치체제』를 참조할 것.

I
II
III
IV
V
VI

기능할 수 없고, 변용한 것이라면 기능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선군사상은 광의의 주체사상을 변용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으므로 광의의 주체사상은 김정일시대에도 실천이데올로기로 기능할 수 있다. 우선 광의의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의 첫 번째 차이점은 혁명과 건설의 주력군에 관한 문제다. 광의의 주체사상 중 주체의 혁명이론은 혁명의 주력군이 인민대중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반면, 선군사상은 “력사상 처음으로 강력한 총대에 의거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완성하며 혁명군대를 혁명의 기둥, 주력군으로 내세우고 전반적 사회주의건설을 밀고나가는 독창적인 길”이라고 주장하며 혁명의 주력군이 인민대중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두 번째 차이점은 혁명의 주체와 관련한 문제다. 광의의 주체사상에서는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에 입각하여 혁명의 주체가 수령-당-인민대중의 일심단결체로 규정한 반면, 선군사상에서는 혁명의 수뇌부-당-군대-인민대중의 선군단결체를 혁명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다. 군대를 혁명의 주력군으로 삼은 상황에서 혁명의 주체인 선군단결체의 연결고리 속에 인민군대를 새로 포함시키고 인민대중 앞에 위치시킨 것은 논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혁명의 주력군과 혁명의 주체와 관련한 광의의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의 차이는 선군사상이 광의의 주체사상을 실천이데올로기로서 대체했다는 결론에 이르기 쉽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광의의 주체사상을 구성하고 있는 주체사상, 혁명이론, 그리고 영도방법의 다양한 내용 중에서 중요하기는 하지만 부분적인 차이라는 점에서 선군사상이 광의의 주체사상을 대체한 것으로 보기보다, 변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특히, 혁명과 건설에서 인민들의 자주적 권리를

옹호할 수 있는 집단은 인민군대이고 그러므로 인민군대를 강화하는 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것이므로 결국 선군의 원리는 인민대중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주력군의 변화는 주체사상의 기본 원리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북한의 주장은 변용을 뒷받침하는 결정적 근거로 볼 수 있다.¹²⁹ 더욱이, 북한은 인민군대가 사회주의 건설 초기부터 혁명의 주력군이었다는 주장을 새롭게 제기함으로써 혁명의 주력군 문제에서 광의의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이 차이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하였다.¹³⁰

이 밖에 김정일시대에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하위 실천담론들이 재생산되거나 새로 등장하였으며, 그 대표적 실천담론이 강계정신이다. 강계정신은 자력갱생과 간고분투의 대표적 정신이다. 북한은 자강도를 그 모범지역으로 삼고 있으며, “혁명적 군인정신이 사회에 구현되어 창조된 정신”이라고 주장한다. 강계정신은 1998년 1월 김정일의 강계지역에 대한 현지지도를 계기로 등장하였으며, 2000년 4월 “강계정신으로 억세게 싸워나가자”라는 로동신문·근로자 공동논설에서 강계정신을 “주체조선을 대표하는 시대정신”으로 규정하면서 핵심 담론으로 정착되었다. 강계정신은 이른바 혁명적 낙관주의와 밀접히 관련된 것으로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 “오늘을 위한 오늘을 살지 말고 내일을 위한 오늘을 살자”라는 구호가 대표적이다.

¹²⁹ 최성학, “선군의 원리는 주체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원리,” 『철학연구』, 2002년 1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2), p. 12.

¹³⁰ 『로동신문』 론설, “일심단결의 기치높이 백승을 떨친 영광스러운 40년,” 2004년 6월 14일. “선행리론에서는 사회적생산의 기본담당자인 로동계급을 혁명의 주력군으로 보고 전세계로동계급이 단결할 데 대한 구호를 제기하였다. 우리 혁명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영도밑에 그 개척기부터 혁명군대가 주력군이 되어 왔다. 우리 혁명의 고귀한 재부인 위대한 단결의 전통도 무장대오에 의하여 마련되었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이 혁명군대의 핵심적인 역할에 의하여 해결되어 왔다.”

I
II
III
IV
V
VI

강계정신은 고난의 행군 당시 자강도 주민들이 혁명적 낙관주의에 기초하여 자력갱생하면서 당의 정책을 철저히 관철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다른 지역이 이를 본받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등장하였다.

3. 김정은시대 체제목표 및 통치이데올로기 전망

가. 전망을 위한 몇 가지 전제

우선 이 글에서 사용하는 ‘김정은시대’란 김정은이 공식화된 후계자로서 김정일-김정은 공동정권 시대와 김정일이 사망한 후 김정은이 최고지도자로서 독자적으로 통치하는 시대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김정은시대에 공동정권 시대를 포함시킨 이유는 첫째, 북한의 후계자론에 따르면 수령에 의해 후계자가 지명되는 순간부터 “후계자가 수령의 사상과 영도를 받들어 모든 사업을 후계자에게 집중시키는” 후계자유일관리제가 확립되기 시작한다는 점, 둘째, 김정은은 자신의 사후에 발생할지 모르는 각종 위기요인에 대비하여 자신의 생존 기간에 후계시대의 안착을 위한 필요한 제도와 조치들을 구축하는 데 진력할 것이라는 점이 고려되었다.

두 번째로 이 글은 지난 2010년 9월 28일 개최된 제3차 노동당대표 사회에서 개정된 노동당 규약에서 체제 목표로서 ‘공산주의’를 삭제하고 ‘강성대국’ 건설을 삽입한 것은 체제목표로서의 공산주의에 대한 인민들의 정체성이 약화되고 공산주의 이상과 현실간의 괴리가 증대된 결과로 보며, 이러한 현상은 이미 1990년대부터 심화되어 왔고 당 규약 개정을 통해 사후적으로 제도화한 것으로 해석한다. 특히, 2012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당규약에 강성대국 건설을 체제 목

표로 규정한 것은 2012년 이후 강성대국과 관련된 새로운 체제 목표가 제시될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파악한다.

세 번째로 이 글은 김정은시대의 목표문화는 강성대국 령마루 점령(세계강국)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이문화는 첨단 과학기술에 입각한 선군영도체제의 확립이며, 순수이데올로기는 협의의 주체사상을 고수하되 실천이데올로기는 광의의 주체사상과 선군사상, 그리고 과학기술중시사상이 확립될 것으로 가정한다.

나. 김정은시대 체제목표 전망

김정은시대 ‘궁극적 유토피아 이미지’로서의 목표문화는 강성대국의 확대 개념으로서 세계강국과 관련한 담론이 지배할 것으로 예상된다. 목표문화는 그 자체로 달성하기 어려운 이상을 담고 있지만, 북한은 이미 2012년 강성대국 진입을 체제목표로 삼았고 2012년에 도달하면 강성대국 진입에 성공했다고 공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려 있다. 북한은 2012년 이후의 이상을 담은 새로운 체제목표를 제시해야 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체제목표는 기존 목표의 달성을 전제해야 하는 것이므로 이전의 것보다 담론과 내용 면에서 더 확대되어야 한다. 따라서 북한은 김정은시대의 체제목표로 ‘강성대국의 진입을 달성했으니 이제 령마루를 점령하자’는 논리로 포장된 세계강국 담론을 제시할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이 2008년 신년공동사설에서 ‘2012년 강성대국 대문 진입’을 선포한 이후 기존의 ‘강성대국 령마루 점령’을 언급하지 않는 것은 아마도 2012년 이후를 대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세계강국의 유토피아적 이미지는 ‘정치·사상적 단결이 세계 최고로 빛나며, 세계에서 군사

I
II
III
IV
V
VI

적으로 제일 강하며 경제적으로 가장 흥하는 나라'로 구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은시대 목표문화를 실현하기 위한 전이문화는 첨단 과학기술에 입각한 선군혁명영도체계의 확립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서, 첨단 과학기술에 입각한 선군혁명영도체계가 확립되면 강성대국의 령마루인 세계강국을 실현할 수 있다는 논리가 작동할 것이다. 여기서 첨단 과학기술은 세계강국의 이미지에 부합하고 선군혁명영도는 혁명전통의 계승 차원에서 적합하다는 점이 고려될 것이다. 실제로 현재 북한에서는 이러한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다. 우선 북한은 후계체제 구축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2009년부터 과학기술발전의 대명사인 'CNC'의 성과를 대대적으로 선전해오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북한은 'CNC'를 통해 주체 철, 주체 비료, 주체 섬유를 개발하는 데 성공하였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그리고, 2010년에 들어서는 '첨단 돌파'를 크게 강조하면서 첨단 과학기술에 입각한 사업방식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으며, 이른바 '희천 속도'의 창조가 그 대표적 모델이다.

다음으로, 북한은 제3차 당대표자회 개최 직전 김정은에게 인민군 대장이라는 군사칭호를 부여하였다. 김정은에 대한 군사칭호의 부여는 후계자가 선군혁명영도의 계승자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혁명위업 계승자로서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직에 선출하기 위한 포석이었다. 그리고 북한은 제3차 당대표자회와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각각 김정은을 당 중앙위원회 위원(중앙위원)으로 선거하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신설하여 그 자리에 후계자 김정은을 선출하였다. 이것은 앞으로 김정은이 중앙군사위원회를 후계자유일영도체계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중앙군사위원회가 후계자유일영도

체제 구축의 주축이 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사실, 중앙군사위원회는 1990년대 후반부터 ‘국방위원회를 중추로 한 국가영도체계’가 확립되는 과정에서 그 위상과 기능이 약화되어 왔다. 중앙군사위원회는 간헐적으로 국방위원회와 공동으로 군 인사를 단행하거나 당 중앙위원회와 공동으로 구호를 발표하는 수준에서 존재를 시현해 왔다. 그러나 김정은이 신설된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직에 앉고 중앙군사위원회에 후계체제 후견그룹을 주도하는 장성택, 군부의 새로운 핵심 실세로 부상한 리영호, 그리고 당의 핵심 실세로 부상한 최룡해 등과 군부의 핵심 실세들이 망라됨에 됴에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중앙군사위원회를 주축으로 후계체제가 확립될 것이 확실시 된다.

김정은이 정치국이냐 비서국이 아닌 중앙군사위원회를 중심으로 유일관리제를 확립하는 이유는 첫째, 선군혁명위업 계승자로서 군 사업을 먼저 수행하고 둘째, 군에 대한 당적 지도 원칙을 고수하며 셋째, 시간제약에 걸린 김정은이 당과 군을 동시에 아우를 수 있는 ‘교량’적 역할을 담당하는 유일한 기구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김정은은 중앙군사위원회를 시작으로 점차 정치국과 비서국, 국방위원회로 후계자유일영도체계를 점차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후계자의 영도체계가 확대되더라도 김정은은 선군혁명영도 계승의 원칙을 고수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다. 김정은시대 통치이데올로기 전망

(1) 순수이데올로기로서의 협의의 주체사상 지속

북한은 김정은시대에도 세계강국의 실현이라는 체제목표를 구현하는 순수이데올로기로서 협의의 주체사상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왜

I

II

III

IV

V

VI

나하면, 협의의 주체사상은 주체사상의 시조이자 영원한 수령인 김일성이 확립해 놓은 불변의 사상이자 후계체제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유전적 요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정은시대에 등장하는 어떠한 통치이데올로기도 ‘주체의 0000’라는 이념적 구속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2) 실천이데올로기로서의 선군사상 고수

선군사상은 김정은시대 전이문화로서의 첨단 과학기술에 입각한 선군영도체계 확립을 구현하기 위한 실천이데올로기로 기능할 것이다. 왜냐하면, 주체사상이 김일성시대와 김정일시대를 이어주는 이데올로기적 연결고리였다면, 선군사상은 김정일시대와 김정은시대를 연결하고 혁명전통의 계승을 정당화시키는 실천이데올로기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김정은은 선군사상의 유전적 제약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일시대에는 광의의 주체사상이 권력승계의 정당성을 부여하는데 기여했지만 동원이데올로기로서의 역할과 기능은 선군사상이 수행했듯이, 선군사상 역시 후계정권의 정당성을 획득하는 실천이데올로기로서 기능할지는 모르지만, 인민들의 자발적 동원과 순응을 유인할 수 있는 실천이데올로기로서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 이유는 첫째, 탈북자들에 따르면 지난 15년간 선군사상에 대한 주민들의 피로감과 불만이 증대하고 둘째, 젊은 지도자의 등장에 따른 분위기 쇄신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확산되는 추세를 들 수 있다.

따라서 김정은은 선군사상을 정당성 확보 및 강화의 기제로 주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차원에서 김정은은 김정일의 혁명전통

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포스트 김일성 후계체제 구축과정에서도 그랬듯이, 수령의 혁명전통화는 혁명위업 계승차원에서 후계자에 의해 주도되어야 한다. 수령을 혁명전통으로 만드는 작업이 추진되어야 후계자는 수령이 생존한 현실에서 자신의 혁명위업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령의 혁명전통화 작업은 우선 후계자가 통치이데올로기에 대한 해석권을 장악함으로써 시작된다. 통치이데올로기 해석권을 장악한 후계자는 선대수령의 통치이데올로기, 즉 선군사상을 김정일주의로 정식화함으로써 이를 계승함과 동시에 자신의 시대에 맞는 실천이데올로기를 확립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할 수 있다. 특히, ‘주체의 선군사상’과 관련하여 김일성은 창시자, 김정일은 구현자, 김정은 계승자라는 맥락 속에서 혁명전통화를 시도할 것이다. 북한은 김일성이 창시한 선군사상을 김정일이 체계화를 완수했다고 주장한다.¹³¹ 이제 남은 것은 후계자에 의해 선군사상이 김정일주의로 정식화되어 혁명전통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다.¹³²

(3) 실천이데올로기로서의 과학기술중시사상 확립

김정은시대를 대표하는 실천이데올로기는 과학기술중시사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과학기술중시사상은 김정일시대에 확립된 것으로 후계자에게 수령의 사상을 계승한다는 명분을 줌으로써 후계정권의 정당성을

¹³¹. “김정일 동지의 선군령도업적에서 가장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아버지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선군사상을 전면적으로 심화발전 시키시여 선군혁명의 가장 올바른 지도적 지침을 마련하신 것,” 선군혁명령도 50돐경축 중앙보고대회에서 행한 김영남의 보고, 2010년 8년 24일.

¹³². 이기동, “포스트 김일성 후계체제 구축과 변수,” 『(KDI) 북한경제리뷰』 2010년 9월호, p. 14.

I
II
III
IV
V
VI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과학기술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야 강성대국건설에서 나서는 수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기본 인식으로부터 과학기술을 중시하여 왔다. 이런 차원에서 북한은 2000년 신년공동사설에서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3대 기둥의 하나로 과학기술중시사상을 제시하였고, 2000년 7월 4일 “과학중시사상을 틀어쥐고 강성대국을 건설하자”라는 제하의 노동신문·근로자의 공동논설에서 그 내용이 보다 구체화 되었다. 공동논설은 첫째, 과학기술에 대한 태도와 혁명에 대한 태도를 동일시하면서 과학중시사상은 과학선행 사상이라고 주장함과 동시에 과학기술의 비약적 발전이 당의 의도임을 강조하였다. 둘째, 강성대국은 과학기술의 강국이라는 전제 하에 과학기술을 강성대국 건설의 기본열쇠라고 주장하였다. 셋째, 과학기술의 발전은 자력갱생과 민족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중대한 사업이라고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에서 주체를 세울 것을 주장하면서 주체를 세우는 것이 폐쇄적인 것과는 다르다고 주장하였다.

둘째, 과학기술중시사상은 후계자 김정은의 업적 만들기에 용이하다. 수령의 후계자는 ‘수령의 혁명위업의 계승·발전’ 논리 중에서 ‘발전’을 원용하여 혁명정세의 변화된 환경과 주어진 여건에 맞게 자신의 혁명위업을 새롭게 축적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과학기술중시사상 또는 노선은 현실적으로 업적 만들기의 소재를 찾는 블루오션이다. 과학기술중시는 실제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면서 체제유지의 소재로서의 효력을 확인하였고, 인민들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적절한 소재로써 주민들의 자발적 동원을 유도할 수 있으며, 단순한 이벤트를 통해 2012년 강성대국 대문 진입 성과를 과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소재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북한은 벌써부터

인민들에게 CNC의 위력을 선전하면서 주체 철, 주체 비료, 주체 섬유 생산을 그 성과로 꼽고 있다. 특히 주목할 대목은 “주체 철의 탄생은 핵실험 성공보다 더 위대하다”라고 하여 김정은의 업적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사실이다.¹³³ 따라서 앞으로도 북한은 과학기술중시사상을 후계자의 업적 만들기에 적극 이용하고 주민들의 자발적 동원 기제로 적절히 활용하는 실천이데올로기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국방공업 발전을 통해 이룩한 과학기술의 성과를 인민생활 향상으로 돌린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김정은시대는 눈부신 과학기술 발전의 시대이고 그 시대는 인민들이 남부럽지 않게 사는 강성대국의 시대이며, 강성대국 건설이 공허한 구호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인민들의 자발적 동원을 유도하겠다는 의도가 담겨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셋째, 과학기술중시사상은 후계시대의 정책노선으로 고려할만한 개혁개방노선 추진 시 이데올로기적 합리화에 적합한 담론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북한은 2000년 신년공동사설에서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3대 기동론(사상·총대·과학기술)을 밝히고 그 해 7월 4일 노동신문과 근로자 공동논설 “과학중시사상을 틀어쥐고 강성대국을 건설하자”에서 과학기술중시사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과학기술중시사상은 2002년 ‘실리사회주의’의 사상적 기반으로 자리 잡고 ‘우리식 사회주의’의 내용적 특성의 하나가 되었다. 북한은 당면한 경제난을 해결하고 강성대국 건설의 최종 관문인 경제강국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발전을 통한 ‘단번도약’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과학기술중시사상을 내세웠다. 그리고 북한은

I
II
III
IV
V
VI

¹³³ 김정일, 성진제강 현지지도 시 발언, 2009년 11월 18일.

이러한 과학기술중시사상을 현실에서 구현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실리·실력·실적(3실주의)에 기초한 사업방식을 제시하였다. 특히, ‘실리’는 기존의 이념이나 담론들과 달리 개방을 통한 실리추구를 암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2000년대 들어 “지난 시기의 자력갱생과 오늘의 자력갱생은 그 내용이 질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면서 오늘의 자력갱생은 ‘현대적인 과학기술에 근거한 자력갱생’이자, ‘실리를 보장하는 자력갱생’으로 정의하였다.¹³⁴ 이와 같이 현대적인 과학기술에 근거하여 실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변화된 자력갱생의 개념은 “남이 이미 발명하였고 발전시킨 기술은 우리가 새로이 연구하는 것보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하여 서구 선진과학기술의 적극적 도입까지도 포함하였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자체로 해결한다고 하면서 시간을 끌고, 성과를 내지 못하거나, 낙후된 기술을 사용하는 것들을 다 낫은 관념과 낫은 방식”이라고 비판하였다. 따라서 현대적인 자력갱생은 더 많은 실리를 추구하기 위한 과학기술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필요에 따라 서구의 선진과학기술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개방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와 같이, 현대적인 자력갱생의 개념 안에는 ‘실리사회주의,’ ‘과학기술중시,’ 그리고 ‘개방’이라는 세 가지 핵심개념이 자리 잡고 있어 과학기술중시사상이 실천이데올로기로 강조된다면, 그것은 실리사회주의의 제도화와 개방정책의 추진을 위한 청신호로 볼 수 있다.

¹³⁴ 『철학연구』, 2002년 3월호.

V. 후계체제의 정책방향

김정일 사후 후계정권이 어떠한 정책을 구상하고 펼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결국 체제위협 요인을 제거하고 당면한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포스트 김정일체제의 생존전략에 관한 것이다. 포스트 김정일 정권의 정책에 대한 예측은 결국 후계정권이 가지는 문제점 식별이 선행되어야 한다. 코로나에 따르면 사회주의체제의 변화는 축적된 긴장과 모순에 의해 촉발된다고 보면서 변화의 요인으로 축적된 경제적 어려움, 대중의 불만 증대, 권력층의 자신감 상실, 외부적인 환경을 들고 있다.¹³⁵

북한 역시 오랜 기간 위기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현재 나타나는 외형과는 달리 지구력이나 자생력을 거의 상실한 상태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북한이 직면한 위기가 단순히 경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정치, 사회, 대외 등 전 분야에 걸친 구조적인 것이며,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선군정치라는 논리 하에 군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을 수 없는 딜레마 상황에 빠져있는 것으로 판단된다.¹³⁶ 군사를 우선하는 북한의 선군정치는 군을 장악하여 권력의 안정화를 도모한다는 측면이 있는 반면, 군대의 기능과 역할을 지나치게 확대해 나갈 경우 이는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 권력의 안정성을 결정적으로 해칠 수 있는 위험성을 지니고 있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최근 확산되어 온 김정일 정권의 정치적 불안정성 판단은 무엇보다 김정일의 건강 이상에 따른 북한 최고 통치자 리더십 위기 가능성에 대한 평가와 직결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오랜 기간 지속하

¹³⁵ Janos Kornai, *The Socialist System: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sm*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2), pp. 383~386.

¹³⁶ 선군정치를 평시 위기관리체계로 볼 수 있다. 정영태, “선군정치: 북한의 권력구조와 군,” (한국전략문제연구소 비공개정책토론회 발표논문, 2006년 7월 20일).

I
II
III
IV
V
VI

여은 경제난은 전반적인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사회적 안보위기(아래로부터의 혁명)에 대한 위협성이 지적되기도 한다. 사회적으로는 인민경제가 붕괴되어 민생파탄을 가져왔고, 대주민 통제력 이완에 따른 사회 일탈 행위의 증가와 민심 이반의 조짐이 나타나면서 아래로부터의 체제 반발적 현상이 가중되어 오고 있다는 평가 또는 판단이 많이 확산되어 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남한과 중국을 통한 정보의 유입과 더불어 위 아래할 것 없이 북한주민들의 의식변화의 위기가 초래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외적 안보 측면에서 보면, 핵 및 미사일 문제에 더하여 내부 인권문제와 위폐 등과 같은 기타 복합적 문제로 인한 미국, 중국 및 일본의 압박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북한은 대중국 경제적 의존성 심화 위기와 함께 중국의 개혁·개방 요구 역시 심각한 체제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은 김정일 정권을 강화하는 협력적 유대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김정일 또는 포스트 김정일 정권의 변화를 압박하는 체제 간 섭적 관계속성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북한이 전반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은 현재의 김정일 정권은 물론 포스트 김정일 정권 모두를 막다른 위기상황으로 몰아가기에 충분해 보인다. 김정일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죽기 이전에 당면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체제 위협요인을 상당부분 제거한 상태에서 그의 개인정권을 후계자에게 물려주기를 바라겠지만 그것은 희망사항에 불과할 뿐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이 지배적이다. 포스트 김정일 후계체제가 어떠한 유형으로 어느 시기에 시작되고 본격화되든 간에 현재 북한의 대내·외 상황을 감안해 보면 향후 후계 정권이 직면하게 될 체제불안정 요인과 문제점은 실제 현재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당면 문제를

해결하려는 후계정권의 정책방안 또는 방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점을 전제하면, 포스트 김정일체제의 유형에 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김정일 이후 북한이 어떠한 유형의 후계권력구조를 가지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2010년 9월 제3차 대표자회를 통해 김정은이 공개된 현 시점에도 여전히 의견이 갈리고 있는 형국이다. 김정은 공개 이전 보다는 집단지도체제나 제3자 승계, 섭정과 같은 위임·대리통치 체제에 대한 주장은 다소 줄어들고 있는 데 비해 과거 김일성 김정일 시기와 마찬가지로 김정은 ‘3대 세습 유일통치체제’가 지속될 것이라는 견해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전문가가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김정일이 사망하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조기 퇴진할 경우에도 북한의 정치체제는 여전히 여러 가지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의 유일적 영도체제로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것이 사실이다.¹³⁷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 작업은 기본적으로 정리된 것으로 판단된다. 여전히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작업이 진행단계에 불과하다는 평가도 다수 있으나 이번 3차 당대표자회의를 통해 김정은에게 당 중앙 군사위원회 부위원장 직책을 공식적으로 부여한 것은 김정일의 건강 문제에 따른 임시방편적인 조치가 아니라 후계권력의 내용과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결정으로 받아들여진다. 김정은은 이미 포스트 김정일 체제의 유일권력자로서 주요권력 특히 당·군 권력의 상당부분을 장악할 수 있도록 준비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¹³⁷ 2010년 10월 8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양현섭 부위원장이 APTN과 인터뷰에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동지를 모신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 이제 청년대장 김정은 동지를 모실 영예를 얻게 됐다”며 김정은이 김정은의 뒤를 이어 북한의 지도자가 될 것임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연합뉴스』, 2010년 10월 9일.

I
II
III
IV
V
VI

이렇게 볼 때, 김정일의 건강문제로 김정일의 유고라는 갑작스런 국가 최고통치자의 부재에 따른 포스트 김정일 정권의 불안정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다소 비현실적인 것으로 이해된다. 김정은 후계자가 공식적으로 대내외적으로 천명되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건강문제로 따른 김정일의 갑작스런 유고라는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급변사태’와 같은 북한 체제 불안정 도래 가능성은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담론이었다. 예를 들면 김정일이 갑작스럽게 사망할 경우 정권의 안정성은 초기에는 지도부가 권력승계 위기를 얼마나 신속하게 해결하느냐에 달려있지만 만약 권력이양이 더디면 갈등이 발생하게 될 것이며 이것이 체제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설들이 그것이다. 이제 후계자 김정은으로 공식화된 이상 김정일이 최소한 5년 이상 건재할 경우 후계자 김정은은 체제에 대해서 불안정성을 논하기 보다는 어떤 방향으로 체제 공고화 작업이 이루어질 것인가를 분석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이는 김정은이 후계자로 결정된 이상 북한의 권력 구조가 김정은 중심으로 빠르게 정권 공고화 과정을 견게 될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판단에 근거한다.

2008년 8월 김정일 건강이상 이후 진행되어 온 후계구축작업을 살펴보면 권력이양이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다. 먼저 김정은으로 하여금 군사지휘권을 갖도록 하여 군대장악을 우선하도록 하였다. 김정일은 김정은에 대한 군대내의 충성유도를 위한 각종 충성행사 또는 충성 활동을 전개하였고 급기야 후계자 김정은에게 ‘대장칭호’를 부여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김정일은 김정은으로 하여금 북한의 최고 군사지휘권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차적인 군대 통제와 장악을 용이하게 하였다. 동시에 3차 당대표자회를 개최하여 김정은을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직책을 부여하여 군대를 당적

으로 지도·통제할 수 있는 권력기반을 마련해 주었다. 이로써 김정은 이 만일의 갑작스런 김정일 유고시에도 이러한 군사지휘권을 근거로 군대통제와 동시에 군대를 통한 정치·사회적 통제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셈이다. 이러한 군사우선 권력이양 방식은 김정일의 선군정치 개념과 논리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정일은 ‘군대를 장악하면 모든 것을 장악할 수 있다’는 그의 ‘통치철학’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것 역시 절대 권력자인 김정일이 존재해 있는 상황에서 보면 예상 밖의 빠른 진행으로 받아들여진다. 김정일은 아버지 김일성으로부터 많은 권력을 일찍부터 쟁취함으로써 김일성 수령의 권력을 오랫동안 유명무실화한 전력을 가지고 있다. 아버지 김일성권력의 상대적 약화와 김정일 권력의 확대과정을 거치면서 체제불안정을 야기할 수도 있는 ‘파벌적’ 권력투쟁 위험성을 경험했음지도 모른다. 이러한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김정일은 그의 아버지 김일성과는 달리 후계자 조기선정을 꺼려 왔을 가능성이 크다. 쿠바의 카스트로나, 리비아의 가다피와 같이 그의 권력을 건강이 허락하는 순간까지 유지해온 것과 마찬가지로 김정일도 후계자를 조기에 공식화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김정일이 이러한 판단과 예상을 깨고 후계자 공식화와 함께 후계체제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자신의 건강문제가 갑작스럽게 대두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2010년 5월과 8월 두 차례의 중국 방문과 당대표자회 개최, 당 창건행사 등 공개행사를 통해 나타난 김정일의 모습을 보면 당장 문제가 발생할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언제라도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서 김정일의 갑작스러운 건강악화에 대비하여 지금과 같이 후계자 권력구축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일은 그의 생존 시

I
II
III
IV
V
VI

후계자 김정은에게 당·정·군 권력을 전면적으로 이양하지는 않을 것이다. 상당한 기간 동안 김정일은 김정은에게 군사적 지휘권을 이양하는 수준에 머물 수 있을 가능성도 크다. 김정일은 김정은에게 급변 사태를 대비하여 일종의 ‘비상 군사대권’을 발휘하여 정권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발판을 마련하는 정도로 후계권력구축 작업을 제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생존 시 김정일은 그의 권력이양을 김정일과 김정은의 부자(父子) 권력분점이나 부자(父子)권력을 위요한 권력투쟁 가능성이 대두되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다. 과거 김정일이 김일성의 후계자로 공식화된 이후 상당부분 권력을 장악하고 정책결정을 좌지우지한 것은 사실이고 상당기간 동안 ‘부자(父子)공동정권’을 유지해 온 측면을 간과할 수 없다. 그러나 김정은은 김정일과는 달리 김정일이 살아있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권력 확장을 도모하여 김정일과의 권력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오히려 김정은은 현 김정일 정권의 안정에 기여하면서 자신의 후계자로서 지위를 단계적으로 공고화해나가는 과정을 밟게 될 것이다.

김정일 사후 김정은 후계정권은 일정한 정치적 제약 속에서 정책적 지속·변화 가능성을 모두 지니고 있다. 무엇보다도 후계자 김정은은 포스트 김정일 정권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 정책적 지속과 변화 문제를 놓고 크게 고민하게 될 것이다. 내부적으로는 김정일 사후 권력구조 변화에 따른 정치적 불안정과 경제난 지속에 따른 사회적 불만 확대문제에, 대외적으로는 북핵문제에 따른 국제고립 심화 등 후계체제 정착 과정에서 대두될 수 있는 우선적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내외 정책들이 동시에 병렬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이러한 판단에 근거하여 본장에서는 포스트 김정일체제가 추구하고 이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정책적 판단을 다음과 같은 순서로 분석될 것이다.

- 후계체제의 정책추진 영향요인 (대내적 요인/대외적 요인/대남요인)
- 대내정책(정치·사회/경제/군사정책)
- 대외·대남정책

1. 후계체제의 정책추진 영향요인

가. 대내적 요인

포스트 김정일체제의 정책추진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요인은 첫째, 후계권력의 정치적 특성과 통치이데올로기이다. 먼저 김정일의 후계자와 관련하여 2008년부터 북한의 공식 매체에 후계문제를 암시하는 ‘3, 4세대로의 혁명계승,’ ‘새세대’ 등의 용어가 등장하였다.¹³⁸ 2009년 1월부터 김정일의 3남 김정은의 후계자 지명설이 확산되었으며, 김정은 우상화 노래(발걸음) 및 공연극의 보급이 있었다.¹³⁹ 2010년 1월 8일 김정은 생일에 북한은 2일을 쉬는 날로 지정하고, 보도 매체를 통해 ‘만경대 혈통,’ ‘백두혈통’ 등 김정은 세습을 암시하는 용어를 사용하였다.¹⁴⁰ 3월 5일자 로동신문에는 후계자 김정일을 지칭하던 ‘당중앙’이라는 용어가 다시 등장했다.¹⁴¹ 이와 함께 2010년 4월 14일 김일성 생일 경축 야회를 마감하면서 김기남 당 선전선동담

138. 예를 들어 『로동신문』, 2008년 10월 10일자의 사설 “일심단결의 기치높이 전진하는 우리 당의 위업은 필승불패이다”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은 후계문제를 언급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생애와 업적이 뜨겁게 어려있는 일심단결의 전통을 끝없이 귀중히 여기고 세대와 세대를 이어 순결하게 계승해나가야 한다.”

139. 통일연구원, 『통일환경 및 남북한관계 전망: 2009~2010』, pp. 51, 56.

140. 『동아일보』, 2010년 1월 9일; 4월 8일.

141. 『조선일보』, 2010년 4월 24일.

당 비서가 “절세의 위인들을 대를 이어 모시고 사는 더없는 행운을 지닌 것으로 하여 오늘과 같은 승리의 축포, 희망의 축포를 내 나라의 맑은 하늘가에 터져 올릴 수 있으며, 주체혁명위업의 창창한 미래에 대한 확신을 안고 강성대국의 래일을 향해 더욱 힘차게 전진해 나갈 수 있다”¹⁴²라는 언급은 3대 세습을 정당화하는 논리이다. 북한은 2010년 9월 28일 제3차 당대표자회를 개최하여 김정은이 대장 칭호와 함께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당 중앙위원회 위원에 임명됨으로써 김정은 후계체제의 출범을 공식화하였다.

이와 함께 북한은 김정은이 김정일 정권의 통치이데올로기인 선군 사상에 부합하는 군사 분야와 주민들의 지지 확보를 위한 경제 분야의 업적을 내세우는 정치적 상징조작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김정은의 정통성의 근거를 혈통승계에 두고 있다는 점은 포스트 김정일체제의 정치적 특성이 김일성시대에 정립된 ‘수령체제’를 근간으로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의미한다. 김정일에 의해 정의된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에서 인민대중은 당의 영도 밑에 수령을 중심으로 조직사상적으로 결속함으로써 영생하는 생명력을 지닌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이루며,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중심은 이 집단의 최고뇌수인 수령”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¹⁴³ 여기에서 수령체제는 곧 유일체제를 의미한다. 따라서 포스트 김정일체제의 정치적 특성은 명백히 김정은 유일체제를 표방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논리구조와 함께 포스트 김정일체제가 혈통승계와 유일체제의 성격을 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북한 체제의 모든 분야가 수령의

¹⁴² 『로동신문』, 2010년 4월 15일.

¹⁴³ 김정일,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조선중앙통신사 편, 『조선중앙년감 1987』(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87), p. 166.

유일적 영도를 위해 재조직되었기 때문이다. 김일성이라는 수령은 북한의 모든 권력과 권위와 이데올로기를 독점하고 혁명을 실현하기 위해 이를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유일최고의 지도자로서 군림하였고, 권력구조, 역사기술, 문학예술 등 북한 체제의 모든 분야는 수령의 영도실현을 목적으로 형성된 것이다. 김정일 정권 역시 동일한 맥락에서 북한 체제를 운용하였다. 포스트 김정일체제가 이러한 성격이 아니라면 북한 정권의 정통성의 근거인 김일성 항일무장투쟁에서부터 나머지 모든 분야에 이르기까지 북한 체제의 존립근거가 와해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북한 체제는 수령과 그 친족을 중심으로 하고 혁명투사와 혁명열사가족, 애국열사가족을 중심으로 한 소수지배집단이 통치하는 나라이다.¹⁴⁴ 따라서 포스트 김정일체제는 김정은을 유일자로 내세우고, 기존의 소수지배집단이 권력을 계속 장악하는 형태를 띠는 것이다. 다만 김정은의 나이, 경험 부족과 검증되지 않은 능력, 후계자로서 권력기반을 다질 시간의 부족 등에 따라 유일체제의 강도는 김일성·김정일시대에 비해 약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 김정은 유일체제는 정책추진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 것인가? 수령의 위대성과 관련한 정치적 상징조작이 효율적인 결과를 산출하려면 기본적으로 폐쇄체제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인민대중이 외부정보에 노출되어 비교개념을 체득하고, 개인의 자유에 대한 의식이 증대된다면 수령에 대한 상징조작은 무의미해질 수 있다. 따라서 포스트 김정일체제는 과거와 같은 폐쇄체제와 집단주의의 유지에 주안점을 둘 것이다. 이와 함께 북한은 외부로부터의 위협을 강

¹⁴⁴ 최완규, “북한의 후계자론: 3대 권력세습을 정당화할 수 있을 것인가?” 『한반도 포커스』, 제9호(2010년 9·10월호), p. 5.

I
II
III
IV
V
VI

조하여 내적 통제와 결속을 도모하는 전시동원체제의 성격을 보여 왔으며, 포스트 김정일체제도 이의 연장선상에 있을 수밖에 없다.

다음으로 통치이데올로기와 관련하여 북한은 2003년 9월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1차회의를 개최하여 김정일을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다시 추대하고 국가지도기관을 선거하였다. 이와 같은 김정일 정권의 집권 2기를 앞두고 북한은 새로운 통치이데올로기로서 ‘선군사상’을 정립하였다. 북한은 2003년 3월 21일자 로동신문에 “선군사상은 우리 시대 자주위업의 필승불패의 기치이다”라는 장문의 글을 통해 선군사상을 김정일의 혁명사상으로 규정하였다. 2003년 9월 김정일을 국방위원장으로 추대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의 연설은 “김정일 동지의 심오하고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과 로숙하고 세련된 명도에 의하여 영생불멸의 주체사상과 그것을 구현한 독창적인 선군사상이 정립되어 우리 시대의 위대한 지도사상으로 빛을 뿌리게 되었으며”라고 언급하였다. 북한은 2004년 신년공동사설에서 “우리 혁명은 위대한 선군사상을 지침으로” 한다고 밝힌 이후 “온 사회를 선군사상으로 일색화” 하는 사상교양을 강화하면서 모든 노선과 정책의 근간이 선군사상이라고 천명하였다. 2009년 4월 개정된 헌법 제3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이 김정일 정권의 통치이데올로기이다.

포스트 김정일체제의 통치이데올로기는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의 핵심 내용과 그것이 정책추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규명해야 한다.

먼저 김일성이 창시했다는 주체사상은 북한의 모든 분야, 모든 단

계에 적용되는 보편사상임과 동시에 유일사상이었다. 북한은 주체사상의 3가지 구성요소를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 원리, “인민대중이 사회력사의 주체”라는 사회역사원리, 그리고 자주적 입장의 견지, 창조적 방법의 구현,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줘야 한다”는 주체사상의 지도적 원칙 등으로 정형화하였다.¹⁴⁵ 주체사상의 내용 가운데 북한의 정책추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주적 입장의 견지라는 주체사상의 지도적 원칙이다. 북한은 자주적 입장의 견지라는 지도원칙이 사상에서 주체,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으로 구현된다고 주장해왔다. 이러한 주체사상의 지도적 원칙에서 드러나는 가장 특징적인 측면은 극단적인 반외세적 논리이다. 이는 효율적인 대외정책의 추진을 제약하는 요인인 것이다.

그러나 주체사상의 역기능적 측면은 주체사상의 또 하나의 지도적 원칙인 창조적 방법의 구현으로 보완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창조적 방법을 구현하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인 ‘인민대중에 의거하는 방법과 실정에 맞게 하는 방법’ 중 후자는 북한의 정책추진에 신축성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이다. 북한은 실정에 맞게 하는 방법을 “혁명과 건설에서 새롭게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끊임없이 변화하는 역사적 조건과 자기 나라의 구체적 실정에 맞게 성과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확고한 담보”¹⁴⁶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실정에 맞게 하는 방법은 상황변화에 따른 정책전환의 논리적 근거가 되는 것이다. 이로써 북한

¹⁴⁵. 『철학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4), pp. 107~117;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 『조선중앙년감 1983』, pp. 125~159.

¹⁴⁶. 위의 책, p. 110. 김정일은 ‘실정에 맞게 하는 방법’에 대해 “언제나 현실로부터 출발하여 모든 문제를 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풀어나가야 합니다”라고 지적하였다.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 p. 148.

I
II
III
IV
V
VI

은 언제든지 획기적인 정책전환을 대내외적으로 합리화시킬 수 있는 명분을 갖고 있다는 점이 드러난다. 그렇지만 북한이 지속적으로 추구해 온 정책지침의 우선순위는 명백히 자주적 입장에 있었다는 점에서 파생한 관성으로 인해 북한의 급격한 정책전환은 저해 받을 수밖에 없다.

한편 선군사상의 핵심 내용은 앞에서 언급한 2003년 3월 21일자 로동신문에 게재된 장문의 글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이 글에서 선군사상은 ① 군사선행의 사상이고, ② 사회역사발전 및 혁명발전에서 군대가 가장 강력한 정치적 역량이라는 이해에서 출발하며, ③ 강성대국 건설의 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북한은 2004년 6월 16일자 로동신문에 게재된 “선군사상을 우리 시대 혁명의 지도적 지침으로 튼튼히 틀어쥐고 나아가자”라는 장문의 글을 통해 선군사상이 북한의 모든 노선과 정책의 초석을 이룬다고 규정하고, 선군사상은 ① 우리 시대의 불패의 혁명적 기치, ② 조선혁명의 승리의 총화, ③ 주체혁명위업 완성의 생명선이라고 설명하였다. 우리 시대의 불패의 혁명적 기치라는 측면은 체제수호 및 발전을 의미하고, 조선혁명의 승리의 총화라는 논리적 귀결은 ‘수령결사옹위’에 귀착된다. 주체혁명위업 완성의 생명선이라는 점은 강성대국 건설 및 조국통일 실현으로 설명된다.

포스트 김정일체제가 통치이데올로기로서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을 견지한다고 볼 때, 주체사상은 정책전환을 합리화할 수 있지만, 선군사상은 체제 자체를 물리적 강제력에 더욱 의존하고 경직되게 하는 측면이 강하다. 선군사상은 유연한 정책전환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북한의 경제상황은 포스트 김정일체제의 안정성과 함께 대외·

대남정책 추진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이다. 경제난과 관련하여 북한은 2008년 신년공동사설을 통해 2012년을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 해’라고 규정하고, 2010년 신년공동사설에서는 이례적으로 경공업·농업과 인민생활 향상을 강조하였다. 이는 역설적으로 경제난과 주민불만 증대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다. 북한은 2010년 1월 9일자 로동신문 기명 기사에 따르면 김정일이 지난 시기 현지도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사상적면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군사면에서도 강국 지위에 올라섰다. 그러나 인민생활에서는 걸린 것이 적지 않다”라고 기술하였다.¹⁴⁷ 이어서 이 기사는 김정일이 “지난날 수령님께서는 늘 우리 인민들이 흰쌀 밥에 고기국을 먹으며 비단옷을 입고 기와집에서 살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었는데 우리는 아직 이 유훈을 관철하지 못하고 있다. 나는 최단기간에 인민생활문제를 풀어 우리 인민들을 남부럽지 않게 잘 살도록 할데 대한 수령님의 유훈을 반드시 관철하고자 한다”고 기술하였다.¹⁴⁸ 김정일이 경제난을 자인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주민불만이 고조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북한은 2002년 7월 ‘경제관리개선조치’¹⁴⁹, 9월 신의주특별행정구 지정, 11월 개성공업지구 및 금강산관광지구 설치, 2003년 3월 종합시장 개설 등 일련의 위로부터의 부분적인 개혁과 통제된 경제개방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2004년부터 박봉주 내각은 대폭적인 분권화와 시장요소 도입 등을 추진하였으나, 2005년부터 당이 반격에 나서 결국 2008년 6월 김정일은 경제개혁 후퇴를 선언하게 되었다.¹⁵⁰ 2009년

147. 백룡, “새로운 승리로 부르는 전투적 기치,” 『로동신문』, 2010년 1월 9일.

148. 『로동신문』, 2010년 1월 9일.

149. 7.1 경제관리개선조치의 주요 내용은 ① 기업의 자율권 확대, ② 개인경작지 확대, ③ 식량·생필품 배급제 단계적 폐지, ④ 가격·임금 대폭 인상, ⑤ 환율·관세 인상 등이다.

I
II
III
IV
V
VI

11월 30일 실시된 화폐개혁은 시장의 통제와 계획의 복원을 목적으로 단행한 것이다. 이는 신흥 상인계층 보유 재산(시중 자금)의 강제 환수를 통해 국가통제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단행된 것이다. 이와 함께 빈부격차 확대에 따른 주민불만 해소라는 정치적 목적도 작용하였다. 그러나 공급부족에 따른 물가폭등으로 주민들의 생활고는 가중되고 있다. 김정일이 2010년 3월 6일 10만 명 규모의 2.8비날론연합기업소 준공 합흥시 경축대회에 참석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러한 김정일의 행보는 주민의 불만고조에 대한 일정한 대응양태라고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국제적 대북 경제제재, 국제사회와 한국 정부의 대북지원 감소 및 한국으로부터의 현금 유입 중단은 북한의 경제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실제로 2009년 북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대비 0.9% 감소하여 2008년(3.1%)의 플러스 성장에서 마이너스 성장으로 전환된 것으로 추정된다. 2009년의 북한 경제는 작물생산 감소로 식량사정이 좋지 않은 가운데 국제사회의 제재 강화와 지원 중단, 시장경제활동 통제 등으로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분석된다.¹⁵¹

북한의 고질화된 물자부족 및 병목현상, 기술 및 설비의 낙후, 투자재원 조달능력 결여 등 구조적 문제점과 함께 체제개혁을 수반하지 않은 경제정책의 한계성 등으로 인하여 만성적인 경제난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이는 정권에 대한 인민대중의 지지문제와 직결되는

¹⁵⁰ 북한의 경제개혁 10년의 실험에 내용은 한기범, 『북한 정책결정과정의 조직 형태와 관료정치: 경제개혁 확대 및 후퇴를 중심으로(2000~2009)』(경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참조.

¹⁵¹ 한국은행, “2009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 (2010.6.25).

사안이므로 포스트 김정일체제의 정책은 경제난 해소라는 문제해결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다.

셋째, 사회분야에서 김정일 정권은 시장활동 등에 대한 주민통제, 사상교양 강화 및 주민생활 개선 노력 등에 주력하고 있으나, 북한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외부정보가 확대되고 있는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다. 북한 사회내부에는 사회적 응집력 및 통제력 약화 가속화, 조직생활과 사상학습의 실효성 감소, 귀환 탈북 주민의 증가 및 외부와의 접촉 증대에 따른 체제 비판의식 확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함께 전후 세대의 증가 및 청소년기에 ‘고난의 행군’ 경험 세대의 성장은 사상통제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다. 북한 사회도 이미 상당부분 통제가 작동하지 않는 ‘틈새’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과 접경지대에서는 중국 휴대전화를 통해, 평양에서는 위성전화를 통해 외부와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이러한 사회통제 이완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김정일 정권은 2010년 2월 8일 인민보안성과 국가안전보위부의 연합성명을 발표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성명은 북한 사회 내부와 탈북자들의 반북동향을 겨냥하여 ‘불순세력을 쓸어버리기 위한 보복성전’을 경고한 것이다.¹⁵² 이 연합성명에 “온갖 정탐역량과 수단이 투입된 어리석은 체제전복 책동은 우리나라 주변으로부터 내륙지대 깊이까지 뻗치고 있다”라는 언급은 북한 사회 이완현상을 나타내는 증거이다. 김정일 정권은 사회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2010년 4월 인민보안성을 인민보안부로 격상하였다.

이 같은 북한의 사회통제 이완현상은 포스트 김정일체제에서도 보

¹⁵². 『연합뉴스』, 2010년 2월 8일.

I
II
III
IV
V
VI

다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포스트 김정일체제의 정책은 효율적으로 사회통제를 이루어 나가는 방향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나. 대외적 요인

(1) 동북아 안보환경의 경색

앞으로의 동북아 안보환경은 미·중·일 간 갈등의 심화와 미·일 대 중국의 대결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중국의 강압외교에 대한 미·일의 협력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중국의 패권적 일방주의에 대한 우려가 역내에서 점차 가중되고 있다.

중국의 강압외교 사례를 보면 천안함 폭침사건 이후 2010년 7월 한·미 양국의 서해연합훈련에 대해 중국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벌이는 등 맞대응 실력행사를 하였다. 또한 2010년 9월 동중국해 다오위다오(釣漁島) 부근 중국어선 나포사건을 둘러싼 중·일 간의 갈등과 관련하여 중국은 일본여행 축소, 희토류 금수, 일본인 4명 체포 등 ‘힘의 외교’를 구사하였다. 이에 대해 일본은 사건발생 17일 만에 중국어선 선장 침기웅(詹其雄)을 석방하였다. 이와 함께 남사군도와 서사군도 등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군사력확대와 이에 대한 동남아국가들의 반발은 미국과 반(反)중국 연합을 형성할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한편 국제경제 차원에서 중국의 위안화 절상문제에 대한 미·일의 협력 가능성도 크다고 전망된다. 일본의 엔화 절상에 대한 미국의 압력도 있으나, 미·일 간의 환율갈등은 늘 있어왔던 문제이다. 그러나 중국이 세계최대의 외환보유액을 무기로 일본 국채를 대거 구매하면서 엔고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우려가 일본 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바,

일본의 분노가 중국으로 향할 가능성이 더 크다. 결과적으로 위안화와 엔화의 절상으로 이어지더라도 일본 입장에서는 엔화가 위안화보다 낮게 절상된다면, 상대적으로 엔화에 유리할 수 있다는 판단할 것이고, 이는 결과적으로 위안화 절상을 향한 미·일의 협조라는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미·일과 중국과의 갈등이 발전한다면, 이는 동북아 안보정세를 긴장시키고, 중·북 관계를 더욱 밀착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말할 때, 미·일과 대결하는 국면에서 중국은 북한을 껴안으려 할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북한 내에서 어떤 형태의 정치변동이 일어나더라도 중국이 이를 적극적으로 자국의 국익을 위해 변형시키기 보다는 후계체제를 추인하고, 포스트 김정일체제가 중국의 국익에 반하지 않도록 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이 북한의 정치변동 과정에 적극 개입하는 상황 자체가 한국과 미·일 등의 개입을 불러올 것이며, 결과적으로 포스트 김정일 문제가 국제화되고, 오히려 중국의 역할이 봉쇄되는 상황으로 될 가능성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는 반대되는 측면에서 북한의 정치변동에 중국이 적극 개입함으로써 한·미·일과의 갈등을 더욱 유발하고, 이를 통해 중국이 동아시아 안보질서를 전반적인 재편을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이는 중국의 입장에서 득보다는 실이 많은 결과가 될 것이다. 첫째, 중국으로서는 제일의 국익을 경제성장의 지속에 두고 있으므로 현재의 상황에서 미·일과의 갈등을 현재화·첨예화시킬 이유가 없다. 둘째, 북한에서 얻을 수 있는 중국의 이익이 친중정권 수립에 있다고 본다면, 이는 포스트 김정일체제를 추인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결과일 것이다.

I
II
III
IV
V
VI

(2) 전 세계적인 핵 위기: 이란 핵문제 확산

이란 핵문제는 현재 점차 심각한 상황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 문제가 첨예화되면 될수록 북한 핵문제 해결이 국제사회의 직접적이고 일차적인 과제로 등장할 것이다. 그 동안 북한 핵문제는 북한의 NCND가 아니라, 핵보유국과 NPT체제의 북한 핵에 대한 NCND였다고 볼 수도 있을 만큼 애매하고 불분명하였다. 북한 핵문제는 전 세계적 쟁점이기는 하지만, 일차적으로는 동북아시아의 문제이다. 동북아시아는 강대국 간의 정치적·군사적·경제적 역학관계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더욱이 한반도는 경제적·정치적·외교적으로 강력한 한국의 존재로 인해 역설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에 있다. 따라서 북한 핵문제가 강대국의 이해관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이란 핵문제는 북한과 달리 애매하게 내버려 둘 수 있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중동지역은 전 세계의 전략적 요충지로서 석유자원을 둘러싼 갈등과 대립뿐만 아니라, 종교 갈등, 테러리즘 등 세계적 쟁점의 한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이란 핵문제는 폭발 일보직 전에 있는 상황에 있다. 이란 핵문제가 첨예화되면, 북한 핵문제에 대한 그동안의 애매한 태도는 중지부를 찍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란에 대한 경고 또는 NPT체제를 지키는 의지의 표현으로 미국과 IAEA는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를 더욱 강화할 것이고, 이는 북한의 내부정세를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북한은 스스로 NPT체제 위반을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일차적 표적이 될 수밖에 없다.

결국 이란 핵문제가 첨예화되면 될수록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의 강도는 더욱 강화되고, 이에 대해 러시아와 중국 등도 동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과 러시아도 NPT체제 유지에 책임을 갖고 있는 핵보유국이기 때문이다. 국제사회의 대북 핵압박이 강화되면 될수록 북한 내부에서는 이를 감내하는 내구력이 점차 저하되고, 이는 정치변동을 촉발하는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미국은 대중 압박차원에서 북한 핵문제에 관한 압박과 제재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 중국은 6자회담 개최지로서 북한 핵문제 해결에 가장 중요한 의무를 지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외교적 부담으로 안고 있다. 따라서 6자회담의 실패에 따른 북핵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압박과 제재 발동이라는 명분과 조치는 중국 외교의 실패로 귀결되기 때문에, 대북 압박과 제재를 강화하려는 미·일 등의 압력은 중국을 압박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3) 주변국 내부정세와 대한반도 정책

첫째, 미국의 정권교체 가능성과 관련하여 2012년 선거에서 민주당이 재집권하든 또는 공화당이 집권하든 미국의 대북 정책이 근본적으로 변화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특히 이 문제는 미국의 국가이익이 동북아 전반의 정세변화와 NPT체제와 관련된 세계전략과의 연장성상에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즉 미국에서 정권의 변화가 있다고 하여 변화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며, 근본적으로 기존의 정책이 유지된다는 의미이다.

둘째, 일본의 정세와 관련하여 중국의 패권화가 진행되고 이에 대비하기 위한 일본정치의 보수화 경향이 강화된다면, 동북아정세에서 중국이 안고 있는 가장 약한 고리라고 할 수 있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 강경조치 발동이라는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I
II
III
IV
V
VI

셋째, 러시아는 그 동안 중국과의 협조를 강화하면서 미국을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러시아의 정책이 중국의 힘을 강화하는 결과로 나타나면서 정책조정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러시아의 입장에서 중국의 강대화는 역사적·문화적으로 볼 때에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중국의 패권적 일방주의가 강화된다면, 미·일과 중국 간의 조정자로서 러시아가 직접 개입을 자처하고 나설 가능성이 크다. 이 과정에서 강대국 간 역학관계의 변화에 따라 동북아 및 한반도의 정세는 크게 요동칠 수도 있다.

넷째, 중국의 대북한 정책변화 가능성도 예상할 수 있다. 중국경제가 당분간 호경기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한편으로 위안화 절상 압력 또는 세계경제의 예측하기 어려운 급격한 변화 등으로 중국의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상황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러한 상황 변화는 중국의 대외전략 전반을 재조정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중국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거나 악화되는 사태가 발생하면, 중국은 미·일을 비롯한 세계경제와의 관계개선을 위해 보다 유화적인 정책을 추진하고자 할 것이다. 이 경우 기존의 북·중 특수관계도 변질되어 국제관행에 따르는 방향으로 변화될 수 있다.

이와 함께 현재의 국면은 세계경제질서의 급격한 조정기라고 할 수 있다. 중국경제의 성장세 둔화 또는 악화가 아니더라도 중국이 향후 세계경제질서에서 중요한 역할을 자임한다면, 기존의 왜곡된 북·중관계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편 주변 4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기본 방향은 한반도의 안정과 남북한 평화공존의 제도화에 있다. 주변 4국은 한반도가 다른 세력의 영향력 하에 들어가는 것을 견제하면서 한반도와의 관계에서 경제적·전략적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각국의 이해관계는 상충

된다. 다만 한반도의 군사적 대결상태의 완화와 긴장완화는 주변국 모두의 이익에 부합되는 것이다. 주변 4국은 한반도 현상유지 차원에서 남북한 간의 긴장완화와 평화공존을 희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주변 4국은 통일된 한국의 국제적 위상에 대해 경계하고 있으며, 한반도의 현상변화가 역내 불안정요인으로 작용하여 각국의 국가이익을 해칠 수 있다는 인식에 따라 한반도의 궁극적인 통일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 한국의 국내정세

한국의 국내정세와 대북정책은 북한의 대외·대남정책 추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다. 1998년 2월 출범한 김대중 정부 이후 노무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전개된 대북 유화정책은 북한에게 활용가치가 높은 정책 환경이었다.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가 상당부분 경색되어 있으나, 북한으로서는 집권 정당과 관계없이 한국의 국내정치적 필요에 북한이라는 변수가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한국의 야당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와 동일한 대북인식과 정책을 표방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북한은 지난 정권의 유산으로 한국사회 내부에서 북한 문제를 둘러싼 남남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점 역시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북한은 2012년 남한의 대선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이며, 대선 결과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포스트 김정일체제는 역시 한국의 국내정세와 대북정책을 자신에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하고자 할 것이다.

I

II

III

IV

V

VI

2. 후계체제의 정책방향

위의 연구에서 지적한 대로 다양한 정책적 영향요인에 의해서 후계 권력의 정책방향이 결정될 것이다. 그 중에서도 후계권력의 정치체제의 특성과 통치이데올로기는 향후 북한의 정책방향을 결정짓는 근본적인 요인에 해당한다. 정치체제와 이데올로기는 체제의 안정성에 직결되는 요소로 이해된다. 김일성에서 출발하여 김정일로 정권이 이어지면서 체제안정 확보 차원에서 수령 유일지배체제가 굳어져 왔다. 특히, 김정일은 헌법에 김일성을 ‘영원한 수령’으로 자리매김함으로써 수령혈통 승계라는 명분으로 대를 이은 정권세습을 정당화함과 동시에 수령유일지배체제 유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다. 또한 수령유일지배체제는 ‘수령결사옹위’를 주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전위대로 노동자가 아닌 군대를 내세우는 선군정치의 영속화를 전제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환경에 근거하여 포스트 김정일체제의 대내외 정책을 분석·전망해 보기로 한다.

가. 대내부문

내부적으로는 김정은 후계체제는 3대 세습의 제도화와 정당화 노력에 우선적으로 치중하게 될 것이다. 김정일 사후 후계자인 김정은이 실제 권력자로서 당면하게 될 북한 내부의 문제와 정책과제는 정권의 완전한 장악을 통해 정치적 불안정성을 조기에 차단하고 경제난 타개를 통해 민심을 안정화시키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일이다. 여기에는 결국 군부에 대한 장악력을 어떻게 확고하게 유지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와 사회불만을 어떻게 억제하고 인민들을 통제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포함된다. 3대 세습의 제도화가 정치·군

사분야와 관련된 문제라면 3대세습의 정당화는 경제·사회분야에 주로 나타나는 문제라고 말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포스트 김정일체제의 후계자인 김정은이 정권의 영속화를 추구하기 위해 3대 세습의 제도화와 정당화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정치·사회, 군사, 경제분야에서 어떠한 정책을 추진할 것인지를 분석해 보기로 한다.

(1) 정치·사회부문

(가) 후계자 유일통치를 위한 권력구조 구축

◎ 3대 세습 권력이양 정당성 확보: 2010년 9월 28일 개최된 노동당대표자회에서 김정은이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된 것은 김정은이 후계자로 공식화된 것을 의미한다. 이로써 북한의 3대 세습 권력이양은 본격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외부적으로 북한의 3대 세습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김정일은 체제생존을 위해서는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권력이양 방식으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다. 김일성 정권에서 김정일 정권으로 이어져온 북한의 국가체제는 유일 지배적 특성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이는 분명 ‘김 왕조’와 같은 군주국으로 치부될 수 있다. 북한이 3대 세습으로 방향을 잡은 것은 ‘김 왕조’라 칭할 수 있는 군주국이 안정적인 생존을 위해서 세습적 방법을 선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북한의 경우 세습적 권력이양이 체제안정을 위해서 과연 가장 안전한 선택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해 볼 수 있다. 세습군주국이 가장 안전한 것이라는 마키아벨리의 주장에 따르면 북한의 3대 세습 결정은 체제안정을 위한 최선의 선택으로 인정된다. 마키아벨리는 그의 저서 『군주론』¹⁵³

¹⁵³ 니콜로 마키아벨리 저, 강정인 옮김, 『군주론』, p. 12.

에서 “세습적인 지배자는 도발적인 변화를 피할 수 있다”고 하면서 “현재 다스리는 군주가문의 통치에 익숙한 세습군주국은 새로운 국가보다 훨씬 용이하게 보존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마키아벨리는 “세습군주국의 경우에는 기존의 질서를 바꾸지 않으면서 불의의 사태에 적절히 대처하는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세습군주가 평범한 정도의 부지런함과 유능함만을 갖추고 있다면, 어떤 이외의 강력한 세력이 출현하여 그를 쫓아내지 않는 한 그의 통치는 안정을 확보할 것이다” 세습 군주국의 안정성을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마키아벨리가 말하는 세습군주국과 북한이 추구하고 있는 세습군주국의 차이점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마키아벨리가 말하는 군주국이 당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 국가체제인데 반해 북한의 세습군주국이 과연 북한주민에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가 존재한다. 최근 한국에 온 탈북자들에 따르면, 북한주민 대부분이 권력세습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가운데에서도 권력세습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¹⁵⁴ 이렇게 볼 때, 외부에서 생각하는 부정적 인식과는 달리 일단 북한의 3대 세습은 내부적으로 큰 저항에 부딪침이 없이 안착될 것이라는 판단이 가능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3대 세습 권력이양은 안정적으로 착근되기까지 대내적으로 많은 변화와 도전에 직면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특히, 후계자 김정은은 세습권력을 이어받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경험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김정일이 갑작스럽게 유고가 될 경우 그의 후계권력이 안정적으로 이양될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또한 과정적으로 권력구조 변화에 따른 정치·사회분야에 많은 변화도

¹⁵⁴ 탈북자 면담 결과, 2010년 11월 7~8일 (2일).

초래될 가능성이 크다. 변화는 안정보다 분명 불안정적인 요인을 더 많이 배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향후 새로운 세습군주가 될 김정은의 미래가 순탄치만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김정일이 3대 세습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김정일 정권을 연장하고 체제생존을 위해 내려진 고육책임에 분명하다.¹⁵⁵

김정일은 북한이라는 국가 유지 차원이 아니라 김일성·김정일 정권의 영속화라는 3대 세습을 통한 확실한 유일지배체제를 변화 없이 유지하게 된다면 체제생존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 60여 년간 김일성·김정일 왕조를 유지시켜온 독특한 정치체제로 인해 정통성이나 정당성을 쉽게 획득할 수 없는 집단지도체제나 3자 승계, 섭정¹⁵⁶등과 같은 통치체제는 오히려 권력투쟁과 같은 정치적 혼란과 사회적 불안을 증가시켜 정권붕괴와 체제전환을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했을 수도 있다. 만약 김정일이 자신의 사후에도 정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포스트 김정일 체제의 유형이 집단지도체제나 3자 승계, 섭정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했다면 굳이 정남·정철이 아닌 3남인 정은을 선택할 이유가 없다. 김정일이 정남·정철을 제쳐두고 정은을 선택한 것도 김일성·김정일 혈통으로 아들 3명 가운데 김일성과 외모가 흡사하고 자질이 우수하며 김일성·김정일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완성하려는 자각과 반대로 ‘제국주의’ 및 ‘자본주의’에 대한 철저한 배척정신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

155. 김정남이 일본 아사히 TV와 인터뷰에서 3대 세습에 반대하면서도 “세습에는 나름대로 그럴만한 내부요인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내부적 요인이 있다면 그것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하였다. 『연합뉴스』, 2010년 10월 12일.

156. 일부에서 장성택에 의한 섭정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하지만 장성택은 이미 한차례 권력중심에서는 축출된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후견인 역할 이상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 당대표자회 결과에서도 장성택은 예상과 달리 높은 직책을 부여받지 못하였다.

I
II
III
IV
V
VI

도 고려되었을 것이다. 무엇보다 김정일이 정남·정철이 아닌 정은을 선택한 데에는 김정일에 절대복종하면서 정치체제 안정화를 지속 유지할 수 있는 능력과 카리스마 있는 지도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임무를 수행할 능력을 가진 정은을 선택한다는 것은 어쩌면 김정일 입장에서 너무도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이어진 2대 세습은 김정일 스스로가 오랜 시간 쟁취한 측면이 강하다. 그러나 김정은의 경우에는 짧은 시간에 김정일에 의해 후계자로 결정되었다. 이러한 3대 세습이 가지는 태생적 한계 속에서 김정은은 일정기간 동안은 기존의 질서를 바꾸지 않으면서 자신이 ‘후계자’가 될 수 있었던 여건과 환경에 순응해 나가는 데 초점을 맞추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후계체제는 기존의 유일지배체제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선군정치 통치방식을 지속적으로 계승해 나갈 가능성이 클 것이다. 후계자 김정은은 김일성의 ‘사회주의 위업’ 유훈 완성을 최종목표로 하여 김정일체제 답습 등 ‘가문의 영속화’를 추구할 것이다.

◎ **당 국가체제 재정비를 통한 세습권력 영속화 정책추진:** 이를 위해 김정은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정치적인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김정은은 일단 그 답을 당에서 찾으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정치체제는 분명 당이 국가 위에 있는 당-국가체제이다. 그러나 1994년 김일성 사망 이후 당의 최고지도기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으면서 당비서국을 중심으로 당사업이 기형적으로 운영되어왔다. 그나마 1998년 김정일이 국방위원장에 취임한 이후에는 당기관이 아닌 국가기관인 국방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되었고 이러한 현상은 최근 얼마까지 지속되어 왔다. 그러다가 2010년

9월 당대표자회에서 당 규약을 개정하고 당조직을 재정비함으로써 당-국가 전반에 걸쳐 조직정비를 완료하였다. 금번 당 규약 개정은 1980년 10월 제6차 당 대회 이후 30년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개정된 당 규약을 통해 ‘노동당은 영원히 김일성의 당, 주체사상은 당의 유일한 지도사상, 선군정치를 사회주의 기본정치방식으로 확립’을 주장하고 있다. 주체사상을 노동당의 유일사상으로, 선군정치를 기본정치방식으로 하는 당 중심의 선군정치방식 고수로 전사회적인 군사독재체제 강화 등 김 부자(父子) 개인화 및 체제 영속화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이는 당의 ‘객관성’을 말살하고 김 부자(父子) 개인화로 ‘김정은’ 후계 작업 성공 등 체제 영속화를 추구하기 위함이다. 당의 성격을 기존 ‘마르크스-레닌주의 당’에서 ‘김일성 당’으로 명문화하여 김 부자(父子) 개인의 것으로 영속화시켜나가면서 당 건설원칙과 관련하여 ‘계승성 보장’을 추가함으로써 ‘김정은’으로의 3대 후계작업 당위성을 마련하고 김정은이 ‘선군’의 탈피가 아닌 지속을 분명히 해나가고 있다.

당조직을 통해서도 김정은이 당을 통해 권력을 집중시키고 이를 완전히 장악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알 수 있다. 당조직을 정비하여 당-국가체제를 재정비한 것은 포스트 김정일체제가 후계자 김정은을 중심으로 당조직을 통한 유일지도체제를 구축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당조직이 형해화된 상황에서 김정은이 유일지도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후계자의 초기 정치분야의 정책이 당을 중심으로 지도역량을 발휘하여 정치적 안정 확보방향으로 모색해 나갈 것이다. 제3차 당대표자회를 통해 정치국원을 9명에서 37명으로 확대하고 구성을 당 18명 (48.6%), 군 10명 (27%), 정 9명 (24.4%)의 비율로 구성하여 정책 결정과정에서 당의

I
II
III
IV
V
VI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였다. 명목적으로 당 정치국 등, 사회주의 국가의 ‘집체적 합의결정’ 정치시스템의 재정비 및 활성화를 통해서 후계체제의 정통성 및 당위성에 대한 지지 및 과시로 후계체제의 안정적 착근을 위한 당조직 활성화를 적극 모색하는 태도를 보이게 될 것이다.¹⁵⁷ 당 비서직을 5명에서 11명으로 대폭 충원하고 지방당 및 전문분야 출신 위주 임명으로 ‘김정은’ 후계구도 조기 정착 및 군·정에 대한 감시·장악·인사·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당내 해당 전문부서(조직지도부·선전선동부 등)의 역할과 통제 기능을 확대하면서 당 중앙군사위를 중심으로 국방위를 포함 사회전반에 대한 지도력 강화로 ‘김정은’ 후계체제의 조기완성 및 전사회 군사화에 주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국가기관(국방위원회, 내각 등) 활성화를 통한 실용정책 강화:

당을 통해서 정치적 안정이라는 목적을 완전히 달성하는데 분명 한계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개최된 당대표자회 결과만을 두고 향후 후계정권이 전적으로 당을 통해 북한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과도하게 당에 편중된 시각은 오히려 포스트 김정일 정권을 예측하는 데 잘못된 시각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당 정상화 이전 이미 내각과 군부에 대한 조치가 선행된 바 있다. 김정은 정권 초기 3대 세습에 따른 권력의 안정적 유지차원에서는 당이 분명 우선이다. 그러나 김정은 정권이 단순히 권력 장악을 통한 공포의 정치적 안정이 아닌 경제나 사회, 대외안보적 문제와 관련해서 효율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당을 넘어서는 조치가 필요

¹⁵⁷ 중앙보고대회 시 “당 중앙위원회를 사수하자”라는 구호가 재등장하고, 로동신문 사설에도 당의 역할을 강조하는 사설이 지속 게재되고 있다.

하다. 특히, 실제 정책의 시행에 있어서는 당 조직뿐만 아니라 당적 지도 하에 국가기관의 역할을 필요로 할 것이다. 김정은이 오로지 당에만 전적으로 의존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일정 시간이 흐르고 나면 권력기반은 당을 중심으로 하되 실제 국정은 국가최고기관인 국방위원회를 중심으로 내각 및 각종 국가조직을 운영해 나갈 것이다.

김정은 정권 수립 시 당-국가체제만으로는 일시적으로 가능하겠지만 궁극적으로 정권유지와 체제영속화가 불가능할 것이다. 과거 양극화된 냉전시기에 많은 사회주의국가가 존재하였을 때와 현재의 상황은 판이하게 다르다. 과거 사회주의 국가들과는 국가 대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닌 당 대 당 또는 국가 대 당의 관계가 가능했다. 그러나 지금은 중국과 베트남, 쿠바 등과 같이 여전히 사회주의국가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가 있다고는 하지만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체제전환을 통해 과거와는 다른 국가중심의 정치체제로 탈바꿈한 상황에서 북한은 이제 국제사회에서 당을 전면에 내세워 관계를 유지하고 활동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¹⁵⁸ 결국, 내부적인 정치적 안정과는 별도로 외부적으로는 당조직이 아닌 국가조직을 통한 국가 대 국가의 관계형성이 체제생존에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이는 향후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정상적인 국가 행위자로 행동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와 직결된다.

북핵문제를 비롯해 국제사회가 희망하는 문제가 우선 해결되어야

¹⁵⁸ 북한은 남한, 일본, 러시아와 같이 당보다 국가가 위에 있는 체제와 정상회담에서는 정상회담 합의문에서 ‘국방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서명한다. 이와는 달리 같은 당-국가체제인 중국과의 정상회담에서는 ‘국방위원회 위원장’ 직보다 ‘당 총일장’ 직을 내세운다. “조로공동선언 전문,” 『조선중앙통신』, 2000년 7월 20일; “북 TV, 북·일 평양선언 보도(종합),” 『연합뉴스』, 2002년 9월 17일; “김정일총비서께서 중화인민공화국을 비공식방문,” 『조선중앙통신』, 2000년 6월 1일자 참조.

I
II
III
IV
V
VI

한다는 전제조건 하에서 과연 국제사회가 북한의 노동당을 보고 투자를 하고 노동당과 거래를 하려고 할지에 의문을 가져보아야 할 것이다. 아마도 중국을 제외하고는 그러한 관계형성이 어려울 것이다. 중국의 경우에도 중국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의 관계이지 실제 중국 민간기업의 투자나 거래에 있어서는 북한의 당조직과 관계가 형성되기가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다. 결국 북한은 정상적인 국제관계 특히 강성대국 건설을 위해서라도 일면 국가기구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북한은 2010년 1월 국방위원회 결정으로 「국가개발은행」과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조정위원회」를 설립하였다고 발표한 바 있다.¹⁵⁹ 이러한 측면에서 결국은 국방위원회가 다양한 분야에 있어 국정운영의 중심으로 부각할 가능성이 있다.

당 정상화에 앞서 이미 국방위원회의 강화는 벌써 여러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북한은 지난 2009년 4월 제12기 1차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하여 헌법 개정을 통해 국가기관을 재정비하였다. 2010년에는 4월과 6월 최고인민회의 제12기 2, 3차회의를 연이어 열어 헌법 일부 조문을 수정하고 총리 등 내각을 개편하였다. 특히,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방위원장과 국방위원회에 대해서 내부적인 측면보다는 대외적으로 부각되는 역할과 임무가 크게 강화되고 있다. 헌법 개정 이전까지만 해도 북한 국방위원회의 기능은 주로 국방 분야에 국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2009년 헌법 개정을 통해 국방위원회에 새로이 “선군혁명노선을 관철하기 위한 국가의 중요정책 수립”, “국방위원회 위원

¹⁵⁹ 국가 최고권력기관인 국방위원회 결정으로 ‘국가개발은행’은 국제금융기구, 국제상업은행들과 거래하며 국가정책에 따르는 중요 대상들에 대한 투자업무를 수행하고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은 대외경제협력기관으로 국가개발은행에 대한 투자유치 및 자금원천을 보장하는 경제연합체로 평양에 본부를 설치, 『조선중앙통신』, 2010년 1월 20일.

장 명령, 국방위원회 결정, 지시 집행정형을 감독 및 대책 수립”, “국방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방위원회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 폐지”, “지시” 등의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국방위원회의 역할이 외형상 과거보다 강화하였다.¹⁶⁰ 특히 국방위원회에 “선군혁명노선을 관철하기 위한 국가의 중요정책 수립” 권한을 부여한 것은 향후 포스트 김정일 정권의 성격을 예측할 수 있게 해 주고 있다.

북한은 1998년 헌법 개정을 통해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형식상의 국가수반으로 내세웠지만, 실질적인 국가수반은 김정일이다.¹⁶¹ 북한은 인터넷 사이트 ‘우리민족끼리’에 올려진 “새롭고 독특한 국가정치체제”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김정일 총비서를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하면서 국방위원장은 정치, 군사, 경제의 총체를 통솔, 지휘하여 사회주의조국의 국가체제와 인민의 운명을 수호하며 나라의 방위력과 전반적 국력을 강화 발전시키는 사업을 조직 영도하는 국가의 최고직책, 국가의 수반임을 분명히 하였다”고 밝히고 있다.¹⁶²

2009년 4월 헌법 개정을 통해서도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영도자”로 규정함으로써 김정일이 국가의 수반임을 헌법에도 명문화하였다. 북한 언론은 현재 김정일의 직책과 관련하여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

160. “개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전문,” 『2009년 북한헌법 개정과 북한 체제 변화』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주최 학술회의 자료집, 2009.10.20), pp. 157~159.

161. 북한은 일반적으로 고위급 해외 인사의 방문 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접견하지만, 외국 정상이나 특별히 중요한 해외 인사가 방북했을 때에는 김정일이 직접 만난다. 이 같은 김정일의 국가수반으로서의 외교를 국방위원회가 의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162. <http://www.uriminzokkiri.com/newspaper/uri_gisa/2007/2007-04-10-D2.htm> 참조 현성일, 『북한의 국가전략과 파워엘리트』 (서울: 선인, 2007), p. 279에서 재인용.

I
II
III
IV
V
VI

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한다.¹⁶³ ‘총비서’는 당의 최고직책이며,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국가기구의 최고 직책이고, ‘최고사령관’은 군대의 최고직책이다. 이 세 가지 직책 모두 김정일의 통치에 필수적이지만, 향후 김정은이 어떻게 넘겨받게 될 것인지가 중요하다.

당-국가체제인 북한에서는 당의 최고직책인 ‘총비서’직이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¹⁶⁴ 따라서 총비서직은 김정일 사후에 넘겨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나 국방위원장과 최고사령관 자리는 김정일이 죽지 않더라도 단계적으로 넘겨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예측을 바탕으로 보면 향후 김정은 정권 하에서 당과 국방위원회는 경쟁관계가 아닌 균형적 관계로 발전될 수 있으며, 선군정치 하 당적 지도를 바탕으로 국방위원회는 당정협의체의 성격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¹⁶⁵ 그러나 국방위원회를 국정을 이끄는 당·정·군 복합체의 기능을 하는 북한의 중심적인 권력기구로 평가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또한 김정은 정권 하에서 국방위원회의 권한과 임무가 확대된다고 하더라도 당을 넘어서는 절대적인 권력기구로까지 부상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과거부터 북한권력의 핵심인 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가 포함되지 않았고 군령권을 행사하는 총참모장이 빠진 상황에서

163. 물론 북한은 상황에 따라 세 직책 중 하나만 언급하거나, “조선로동당 총비서 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정일 동지”라는 표현과 같이 두 직책만을 언급하기도 한다.

164. “노동계급의 수령은 당의 수령으로 되며 당의 영도는 수령의 영도,” 김민·한봉서, 『령도체계』, p. 119.

165. 1980년대 김정일 생존 시 국가주석의 지도를 받았던 ‘국가주권의 최고지도기관’인 중앙인민위원회 위원 대다수가 당 중앙위원과 정치국원이었으며, 당중앙위 정치국과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두 기구간 정책을 사전 조율하는 등 당정협의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김갑식, “북한 조선로동당대표자회 개최 결과와 향후 전망,” 『이슈와 논점』, 제126호 (서울: 국회입법조사처, 2010).

군부에 대한 통제에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실은 북한 국방위원회가 향후 김정은이 회의를 개최하여 실제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가 아니라 당 중앙위원회와 당 중앙 군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정책과 방침을 실무적으로 집행하는 국가기구로 유지될 것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김정은이 정치적 안정과 관련하여 당면할 또 한 가지의 문제는 당과 국방위원회 간의 관계 정립문제이다. 비록 대부분의 구성인물들이 중복된다고는 하지만 당과 국방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에 따라 정치·군사·경제·사회분야 정책뿐만 아니라 대외·대남정책의 성공적 이행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일부에서 국방위원회를 김정일 선군시기에 나타난 일시적인 위기 관리기구 정도로 평가함으로써 김정은 유일지배체제가 공고화되면 국방위원장 직책과 국방위원회가 폐지될 것으로 예측하는 견해도 있다. 과거 김일성 사후 주석직과 중앙인민위원회를 폐지한 것과 같이 김정일 사후에도 국방위원장직과 국방위원회를 폐지할 수 있다는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는 국방위원회의 위상 변화와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 **선군정치 답습을 통한 유일지배체제 공고화:** 김정일은 오랜 기간 후계자 수업을 통해 권력을 쟁취하면서 자신만의 정치 담론인 선군정치를 정립하였다면 김정은의 경우에는 새로운 정치담론을 내세우기보다 선군정치를 답습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2009년 4월 헌법 개정을 통해 국방위원장직을 강화하고 2010년 당 규약에 통해 선군정치를 명문화하였다. 김정은 정권 초기 대내외 불안정과 긴장 및 이로 인한 북한의 위협인식이 지속되는 한 선군정치 노선이 전환될 가능성

I
II
III
IV
V
VI

은 낮다. 북한의 정책 변화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선군유지로 야기되는 군부와 보수적 성향의 인적구성은 정책 변화를 추구하는 엘리트의 부상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어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다. 물론 선군정치가 무조건 경제문제와 같은 변화와 상충하는 것은 아니지만, 군부가 경제변화과정에서 수혜자가 될 수 있는 ‘구조’의 창출은 당분간 어려울 것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새로운 엘리트층의 등장과 당적 통제 약화 등 당·군·정 관계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 김정은에게 포스트 김정일체제 구축 및 정착 과정을 지나 안정화 단계에 이른다면 우선적으로 주변의 긴장구조 해소가 필요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군부와 보수적 성향의 인물들이 정책변화에 순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면서 점진적으로 선군정치의 완화 가능성은 상존한다. 선군정치와 함께 포스트 김정일체제에 있어 또 하나의 제약은 김정은 정권 초기 정치적 안정 추구를 위해 과도한 당 중심 운영이 오히려 장기적이며 복합적인 측면 특히 강제적 관점에서 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당과 한 사람의 수령에게 집중화된 북한의 특이한 정책결정 구조는 김정은 정권하에서도 직면하게 될 다양한 문제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어려운 구조적 제약을 조성하여 당과 수령 중심의 정책결정 구조가 변화될 필요성이 대두될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도 있다. 북한의 당-국가체제는 결국 정치적 안정을 우선하는 봉건적 정치문화와 정책결정 과정의 경직성으로 인해 경제에 대한 정치의 우위가 지속되면서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를 가로막을 수밖에 없게 된다.

결국 김정은 정권의 정치적 생존전략은 선군정치와 당-국가체제의 정치적 구조를 어떻게 유지하고 또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냐하는 전환점의 선택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미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평화

체제 가시화 시점까지는 북한의 선군정치 기조는 유지될 것이다. 그 이후 전환의 시기와 범위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김정은 정권의 정치적 안정과 유일통치체제를 지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나) 후계자 유일지배체제 공고화를 위한 통치기제

후계권력은 권력을 공고화하기 위해서 주로 3가지 통치방법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첫째, 후계 권력은 잠재적인 내부 적대세력의 생성을 억제하거나 차단하기 위한 통제적·억압적 정치·사회정책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다. 둘째, 정권의 당위성 및 정통성 확보를 위해 사상과 정보의 조작활동을 강화하게 될 것이다. 셋째, 군과 보안 및 치안기관 등 물리적 통제기제 강화로 적대세력의 출현 및 저항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 할 것이다.

◎ **사회 안정화를 위한 대주민 통제정책 영속화:** 언론인 안드레아스 로렌즈는 독일의 스피겔지에 기고한 “기쁨의 춤”이라는 글에서 북한인들은 겉으로는 행복하다고 외치고 있지만 실상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압제와 경제난으로 지칠 대로 지친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북한사회가 유지되는 이유를 선전선동과 강제적인 주민통제체제에서 찾는 경향이 강하다.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 전환이 사상과 정치적 통제력의 약화로 인해 야기되었음을 인식하고 사상통제와 군을 통한 수령 절대주의 체제를 사수하는데 전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¹⁶⁶ 이는 사회주의체제의 일반성보다 체

¹⁶⁶ 유호열, “북한체제의 변화와 전망,” 오일환 외 공저, 『현대북한체제론』 (서울: 을유문화사, 2000), pp. 264~265.

I
II
III
IV
V
VI

제전환을 경험한 동구권과 비교하여 북한체제가 가진 특수성 측면에서 나타나는 체제존속의 이유로 해석하는 경향이 뚜렷하다.¹⁶⁷

붕괴 당시 동구권 국가와 현재 북한의 여건을 비교해 보면 정치이념 측면에서 동구권은 수정된 공산주의 하에서 개인숭배를 배격한데 반해 북한은 여전히 김일성 집권의 에너지가 잔존하는 유헌 통치 하에서 주체사상과 개인숭배가 강하게 지배하고 있다. 외부세계와의 관계에서 보면 동구권은 장기간 서구와 교류가 지속되어왔고 소련을 비롯한 인근 공산국가들 간의 변화와 붕괴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으나, 북한은 외부정보를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

권력층과 주민을 비교해 보면 먼저 동구의 권력층 내부에서는 반대나 개혁파가 존재하고 지도자에 대한 비판과 심지어 격하운동이 벌어졌지만 북한의 권력층은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신격화 속에 공동운명체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철저한 계층 구분을 통한 사회통제이기도 하다. 최근 이들에 의한 북한내부에 부패가 증가하고 이를 김정일이 도리어 묵인 조장함으로써 권력층을 관리할 통치 자금의 부족을 해결하고 ‘우민화’ 정책 속에 북한 김정일체제 존속의 공동운명체적 사슬을 만들어 놓고 있다. 주민들 역시 동구권에서는 반사회주의 반독재투쟁의 경험과 서방에 대한 선망의식이 팽배하였으나 북한의 주민의식은 가부장제 중심의 유교사상을 바탕으로 철저한 사상 교육을 통해 조직적인 반체제활동이 부재하고 미국과 일본 등 서방에

¹⁶⁷ 비슷한 시기에 체제전환을 경험한 동구권임에도 불구하고 분명 국가별로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체제전환의 형태가 각기 다르게 나타나게 되었다. 동구권 국가의 다양한 체제전환 형태에 대한 분석은 Steven Saxonberg, *The Fall* (Abingdon: Routledge, 2003)과 조성렬, 『북한의 위기관리체제와 우리의 대응방안』 (국회정보위원회 정책연구 용역보고서, 2006), p. 33의 <표-4>를 참조 할 것.

대하여 일정수준의 적개심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이제까지 북한에서는 강력한 사회통제와 정보 차단, 주민 감시 등의 강압에 따른 공포와 시민의식의 부재는 물론 체념, 무기력, 국가관의 상실이 도리어 체제를 존속시키는 주요한 이유가 되고 있다.

여기에는 학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제식민지의 수탈과 한국전쟁의 참화 등 오랜 기간을 딛고 50년 이상을 버티어온 북한사회 나름으로 체제유지의 자발적 응집력이 작동하고 있다고 본다.¹⁶⁸ 이러한 집단 멘탈리티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우선 북한체제 초기에는 형성된 자발적 순응기제는 북한 체제를 유지시키는 요인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현재 북한 인민들의 응집력과 순응은 자발적이라기 보다는 강제적 학습효과에 의한 것이거나 도리어 공포에 의한 강제적 응집력과 공포의 순종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여 년의 긴 시간 학습 효과를 통해 역사적으로 체득된 부분을 전면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김정일 정권이 인민들에게 고난의 행군을 강요한 지난 90년대의 위기를 거치면서도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이러한 자발적 순응기제를 전면 부정한다면 설명이 불가능하다.¹⁶⁹

그러나 장기적인 경제난에 따라 사회기강과 질서가 무너지는 현상이 늘어나고 있다. 아직은 경제위기로 인한 사회 혼란과 국가의 통제

168. 이에 대한 연구는 김하영, “북한체제의 초기 집단정체성 형성에 관한 연구,” 『북한연구학회보』, 제9권 1호 (서울: 북한연구학회, 2005); 최봉대, “북한 사회 주민들의 멘탈리티와 사회적 통합 기제,” 『현대북한연구』, 제2권 1호 (서울: 북한대학원대학교, 1999)를 참조할 것.

169.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참가한 북측 응원단이 현수막으로 내걸린 김정일 사진에 대해 보여준 행동과 몇 해 전 중국 어선에서 발견한 김일성 초상화를 물에 젖히지 않게 비닐로 봉인하고 몸에 두른 북한인의 시체와 같은 일련의 사건들은 북한의 선전선동을 통한 사회통제와 함께 자발적 동의에 대하여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

I
II
III
IV
V
VI

력 상실이 현재 북한에 적용할 상황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향후 포스트 김정일체제에 체제의 심각한 위기를 유발할 잠재적 요인임은 분명하다. 일반적으로 현재 북한사회는 장기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나타나 는 ① 한계상황, ② 대안부재, ③ 외부정보 유입 확산, ④ 주민 불만 증가 및 의식 변화라는 4가지 문제가 모두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있다. 즉, 경제난 자체가 북한체제를 위협하는 요인이기도 하지만 사회주의 체제의 기초가 경제난에 의해 와해되므로 인해서 주민의 동의와 정부의 통제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¹⁷⁰

또 다른 동구권 국가의 5단계 변화인 ① 체제모순 증대, ② 변화요 구 확산, ③ 개혁세력 확대, ④ 시민 봉기, 정권해체, ⑤ 새 정권 수립 중 1단계와 2단계의 중간 상태로 볼 수 있고, 일부는 혁명 이데올로기의 쇠퇴, 관료주의 병폐, 경제난, 암거래 확산, 제한적이고 때늦은 개방·개혁 등으로 동구권 국가(루마니아, 알바니아 등)의 붕괴직전 상황으로까지 보기도 한다. 국내에서는 신지호 자유주의연대 대표가 북한의 해체단계를 ① 경제파탄의 장기화와 당국의 통제력 상실, ② 사회질서의 이완 및 주민의식의 변화, ③ 정권에 대한 불만 고조와 정치 통합력의 약화, ④ 포스트 김정일을 둘러싼 권력투쟁 격화와 대외관계 악화, ⑤ 체제 붕괴라는 5단계로 보고 북한이 이미 4번째 단계까지 와 있다고 분석하기도 하였다.¹⁷¹ 미국의 외교 전문지 **Foreign Policy**

170. 루마니아 사태를 모델로 한 일본 방위청 방위연구소 분석 결과 ① 배급체제 마비, ② 통제 불능, ③ 내란·쿠데타·체제변화의 단계 중 북한은 현재 2단계 상태로 현지 이탈 및 탈북자 증가, 정보통제 이완, 사상모순 증대 등의 현상이 이를 알려주는 징후라고 볼 수 있다. 윤미량, “북한체제의 내구성 평가에 있어서의 쟁점,” 정성장 외 공저, 『현대북한연구의 쟁점 1』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5), p. 88.

171. 신지호, “북한 정세를 읽는 새로운 눈, 북한해체론,” 『계간 시대정신』, 2006년 겨울호, <<http://www.sdjs.co.kr>> (검색일: 2010년 12월 18일).

가 발표한 실패국가 지표(The Failed States Index)에 따르면 북한은 국가범죄, 경제력 쇠퇴, 공공서비스 부재, 인권 등이 불안정한 반면 주민 이탈과 집단 저항, 외부압력은 상대적으로 안정된 것으로 평가되어 14번째 실패국가로 올라와 있다.¹⁷²

또한 과거의 순응과는 달리 김정은 3대 세습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의 다양한 입장이 노출되고 있는 점은 흥미롭다. 상대적으로 젊은 층에서는 기대를 하는 분위기도 있고, 노년층에서는 거부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현재로서 누가 되든지 간에 여전히 주민들에게는 먹고 사는 게 최대 관심사이고, 생활이 좋아진다고 생각하면 지지할 것이고 생활이 어려워진다고 하면 싫어하는 지극히 단순한 논리로 후계자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즉, 포스트 김정일체제에 대해 좋은 싫든 아직은 주민들이 뒤집을 수 있는 기반이나 동력이 부재하다.

2009년에는 김정은의 치적으로 선전한 주민 노력동원운동인 150일 전투와 100일 전투를 강행함으로써 과거로의 회귀가 더욱 강조되었다.¹⁷³ 김정은 정권에서도 경제정책과 관련하여 기업소나 주민들을 대상으로 자력갱생을 강조하면서 ‘100일 전투’와 같은 주민동원을 전개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강제동원은 일면 주민들의 불만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부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체제 저항에 대한 결집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노동력 이용 측면과 함께 여전히 주민체제를 단속할 수 있는 통제 수단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권위주의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내부의 적대 또는 반대 세력들을 억압함으로써 이들 세력의 조직화를 적극 억제하는 사회적

¹⁷²- Foreign Policy & The Found For Peace, “The Failed States Index,” Foreign Policy, April 2006, p. 53.

¹⁷³- 2010년 북한신년공동사설, 2010년 1월 1일.

I
II
III
IV
V
VI

책을 표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권위주의 사회의 경우 혁명적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룹으로는 학생들이 주로 지적되기도 하며¹⁷⁴ 사회의 중간계급의 역할이 민주적 변화의 촉진에서 주요하게 거론되어 왔다. 북한의 경우 이들 4개 사회그룹들이 변혁을 위한 지도적 그룹으로 성장하기 보다는 오히려 체제 순응적 또는 주요 체제유지 세력으로 고착화되어 왔다. 향후에도 북한의 후계권력은 학생이나 중간계급 층이 혁명적 변화 또는 민주적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있는 세력으로 발전해나가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해 나가기 위한 정치 사회적 정책을 펴나갈 것이다.

그동안 북한은 김일성시대부터 노동자·농민계급의 지위를 높여주어 이들 계급의 불평이나 불만을 잠재우게 함으로써 이들에 의한 혁명적 봉기활동 가능성을 최소화하였으며 그 결과 혁명적 역할을 할 중요한 사회적 그룹적 발전은 거의 형체를 찾을 수 없게 되었다. 중간계층의 발전 역시 원천적으로 제거된 상황이 지속되었다. 생산요소의 국가적 소유로 말미암아 부르조아 등과 같은 중간계층의 성장은 원천적으로 억제되었다. 북한의 유일지배정권은 교묘하고 치밀한 선전선동 기제를 통해서 학생을 비롯한 엘리트들이 김일성 세습정권에 대한 충성세력으로 성장하도록 쇠뇌되어 왔고, 유일지배체제 유지를 위한 관료제로 잘 훈련된 사람들로 변모되어 왔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간부들의 이익독점과 정치·사회적 불평등이 점차적으로 심화되어 감에 따라 새로운 사회적 갈등양상이 나타나고

¹⁷⁴ 한 서구학자는 혁명적 변화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룹으로 4개의 사회적 그룹 즉 종교인·노동자·학생·기업가를 지적하고 있다. Misagh Parsa, *States, Ideologies, and Social Revolutions: A Comparative Analysis of Iran, Nicaragua, and the Philippines*(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참조.

있다. 예를 들면 만성화된 경제난 속에서 체제유지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기득권층에 우선적으로 식량배급이 이루어지는 등 식량배급이 계층에 따라 차별적으로 주어지고 있는데, 이는 북한의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군대, 인민 보안부, 국가 보위부, 당 기관 종사자 등이 우선적인 식량 배급 수혜자인 반면 일반주민은 식량배급의 혜택을 누려 본지 오래 되었다는 증언이 나온 것도 이미 오래되었다.¹⁷⁵ ‘신흥 외화밭이꾼’이라든가 장마당 상인 등 ‘신흥 부유계급’ 등장으로 후계정권의 안정을 해치는 새로운 중간계층이 확대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¹⁷⁶ 이에 대해서 북한 당국은 끊임 없는 단속과 통제를 펼쳐오고 있으나 시장의 확산을 막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후계권력은 김일성·김정일시대와 마찬가지로 독립적인 시민사회의 발전을 저지하기 위해서 지식인들과 학생들, 그리고 다른 사회적 그룹의 활동들을 강력하게 통제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노동당을 통해서 북한의 모든 조직의 생성과 작동에 대한 감시활동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다. 지난 9월 28일 노동당 대표자 대회를 개최하여 당의 주요부문과 조직의 인사를 단행함으로써 노동당을 재정비한 것도 후계체제 준비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후계체제 공고화 차원에서도 의미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의 혁명적 변화에 중추를 담당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학생들에게 정치적인 교육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과 같은 각종

175. 서재진, 『북한사회의 계급갈등 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6), pp. 109 ~ 110; 최근 탈북자들에 대한 면담에서 많은 탈북자들이 식량배급과는 관계 없는 생활을 해 온지 오래되었다는 증언이 많았다.

176. 위의 책, pp. 111 ~ 120. 북한에서는 ‘돈주’라는 ‘신흥부유계급’이 등장하고 있다는 증언도 있어 왔다.; 한영진, “북한경제의 보이지 않는 손 ‘돈주,’” 『NK Vision』, 2008년 8월호, pp. 32 ~ 40.

사회조직을 새롭게 창출하여 이에 대한 가입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이와 같이 후계자 김정은은 사회통제기능의 강화로 주민들에 통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 나갈 것이다. 거주이전 및 직업 선택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박탈정책을 지속하는 가운데 주민에 대한 사상교육 및 각종 동원을 통한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국가안전보위부와 인민보안부를 주축으로 동태 감시 및 ‘범법자’ 처벌 등을 통해 주민의 세력화 또는 반정부 의식 고양을 원천부터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무엇보다 김정은은 탈북자를 사회 근간을 흔드는 가장 심각한 요소 가운데 하나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수립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김정은이 후계자로 내정되고 공안기관을 장악한 '09년 이후부터 북·중 공안기관 간에 대표단이 상호 교환방문을 지속하고 있고, 중국으로부터 전파탐지기 등 감시 장비 대거 수입하여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향후에도 대내 3선 감시체계 및 연좌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중국과 공조로 국경지역에서부터 탈북자를 원천차단하기 위한 노력 지속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엄격한 감시 및 통제와 함께 다른 한편으로는 김정은의 활동과 개인숭배 선전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주요 기념일마다 대대적인 정치행사로 체제과시 및 결속 계기로 활용하면서 김정은 우상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선전선동과 사회통제는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상대적으로 상당 부분 이완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김정은 정권 하 통치자금의 부족에 따른 선전선동과 사회 통제를 실행하는 관리 계층에 대한 당근 부족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북한체제를 유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온 체제의 폐쇄성의 지속가능 여부가 포스트 김정일체제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¹⁷⁷

◎ **사상과 정보의 조작 강화:** 북한의 후계정권은 그들을 정당화시키기 위하여 사상과 정보의 통제기제를 보다 더 정교하게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막스 베버가 말한 것과 같이 권력은 그 자신 스스로를 정당화시킬 필요가 있다.¹⁷⁸ 정권은 권력유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이데올로기-종교적 정통성·사회주의·아랍주의 같은-를 제공한다. 이데올로기는 세상을 이해하는 방법과 미래의 행동을 위한 모델을 제공하기도 한다.¹⁷⁹ 이데올로기와 정통성은 반대행위를 금지시킨다. 정권이 견고한 이데올로기를 구축하는데 성공했을 때는 정권의 반대자들이 그들의 대중적 지지를 확보하기 어렵도록 하기 때문에, 정권의 반대세력이 형성되기 어렵다.

이를 위해서 북한 당국은 북한주민들로 하여금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지켜나가기 위해 항상 굳은 결의를 가지도록 촉구해 왔다. 사회주의는 북한체제를 정당화하는 체제이념으로 제시되어 왔다. 사회주의는 가장 우월한 제도로서 북한의 영원한 주석으로 된 김일성이 투쟁을 통하여 쟁취하였다는 점을 강조한다. 동시에 북한 당국은 주민들에게 김일성을 위대한 지도자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김일성이 주체사상을 창시하였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김정일시대 들어와서는 선군정치 사상을 내놓고 이를 김정일의 독창적인 사상으로 부각시키면서 주민들을 쇄뇌 시켜오고 있다. 향후 후계정권 하의 북한은, 사회주의, 주체사상, 선군정치가 우월하고 독창적인 제도라는 것을 부

¹⁷⁷. 체제의 폐쇄성은 근본적으로 북한 내구성의 아킬레스건이다. 김영수, “국가 이데올로기의 변화: 국가장치의 역할을 중심으로,” 최완규 엮음, 『북한의 국가성격 변용에 관한 연구』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1), p. 104.

¹⁷⁸. Max Weber, *Economy and Societ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8), p. 953.

¹⁷⁹. Clifford Geertz,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s* (New York: Basic Books, 1974), pp. 193~233 참조.

각시킴으로써 김일성 → 김정일 →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북한의 세습 정권을 정당화해 나가게 될 것이다. 후계정권은 그 정통성을 확보하고 확장시켜 나가기 위해 기존의 사상과 새로운 사상의 중요성을 되풀이함으로써 정권에 맹목적으로 추종할 수 있는 충성인물 또는 계급을 만들어 나간다. 추종할 수 있는 인물이 확보되면 그의 라이벌의 지위 약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정권의 공고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후계정권은 과장된 민족주의적인 신념을 정권의 정통성 형성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도록 이용해 나갈 것이다. 정치 지도자들은 주로 ‘국민’을 강조하는데, 이는 주권과 정치적 충성심, 그리고 정체성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권위주의 지도자들은 정책이 ‘국민’을 위한 행동과 동떨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정당화시켜 주는데 ‘국민’이라는 이름을 기꺼이 또는 과장되게 사용한다. 권위주의 정권이 외국의 적들을 맹렬히 비난하여 그들을 정당화하는 것처럼, 민족주의 강조는 종종 외국인 혐오로부터 시작된다. 지도자는 외국인을 교묘하게 매도함으로써, 국가 문제의 책임을 다른 곳으로 돌려버린다. 북한의 김 부자 세습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북한은 공식적으로는 민족주의적 단결을 거부해 왔으나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라는 언술을 통해 노동자·농민계급 중심의 민족주의를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와 공존시킴으로써 민족국가를 사회주의 발전의 기본단위로 책정했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북한은 자주성을 기본 원칙으로 한 국가적 단결을 위해서 보다 노골적으로 민족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북한학자 리규린은 김정일의 민족에 관한 개념을 해설하면서 민족 국가적 단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은 민족국가단위로 투쟁되며 인민대

중의 운명도 민족 및 국가적 범위에서 개척 되어 나간다. 국경이 있고 민족의 구별이 있으며 사람들이 민족국기를 단위로 하여 살아가는 한 인민대중의 운명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¹⁸⁰

북한의 이 같은 ‘민족 국가적 단결’ 강조는 곧 체제의 문제를 외부세력으로 돌림으로써 체제의 정당성을 제고해 나가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북한은 그들의 대내외 문제를 외부 특히 미국 및 일본 제국주의, 남한에 돌리는 행태를 되풀이 해오고 있다. 그들은 제국주의는 원래 침략적이며 제국주의가 소멸되지 않는 한 그 침략적 본질이 변할 수 없으며, 제국주의가 있는 한 침략과 전쟁의 근원은 변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제국주의에 대한 환상을 반대하는 투쟁을 강하게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해 오고 있다. 전쟁의 근원이 근본적으로 없다고 생각하고 제국주의에 대한 경각심을 늦추면서 춤이나 추며 안일하게 지내게 될 경우 제국주의자들은 반드시 그들을 공격해 나설 것인 바, 언제나 자기의 역량을 강화하고 적들의 침공에 대처할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함을 북한 당국은 그들의 주민들에게 인식시키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북한 당국은 체제의 적을 계급적 개념에서 찾는다. 북한당국은 미국과 일본을 외부의 계급적 ‘원수(원수)’로 상정하고 이들(원수)이 북한당국 자신들에 대한 강경압살정책에 집요하게 매달리면서도 한편으로는 ‘회담’이니,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니 하면서 그들을 완전무장 해제시켜 ‘우리(북)식 사회주의 제도’를 무너뜨리려고 갖은 발악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이때 바로 북한 주민들의 계급적 각성이 무디어지면 적과 평화에 대한 환상이 생겨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그들의 사회주의

¹⁸⁰ 리규린,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독창적으로 밝히신 민족의 개념에 대한 이해,” 『사회과학』 (1986.2), p. 6.

I
II
III
IV
V
VI

제도를 지켜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 혁명의 중국적 승리도 이룩할 수 없다고 한다. 따라서 이러한 ‘계급적 원수’들을 짓부수기 위해 인민들은 이러한 “자기의 투쟁대상을 잘 알고 그와 무자비하게 싸우는 계급투쟁의 맹수”가 될 것을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 당국은 현재 그들의 주되는 계급투쟁 대상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계급투쟁의 주 대상이 “그들 인민의 철천지 원수인 미일침략자들과 남조선 괴뢰”들이다.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오래전부터 그들을 침략하였고 그들 인민에게 헤아릴 수 없는 온갖 불행과 고통을 쉬워온 그들 인민의 ‘극악한 원수, 백년숙적’이다. 그리고 미국은 그들의 ‘핵억제력’에 대해 간섭하면서 그들 주변에 많은 군사장비들을 끌어들이며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해외팽창야망과 <재침>의 옛꿈을 실천해 보려고 ‘미제’와 야합하여 그들을 침략할 준비를 하고 있다. ‘남조선 괴뢰’들은 ‘미일 침략자’들의 침략책동에 편승하여 그들의 ‘우리식 사회주의 제도’를 붕괴시키고자 하는 ‘계급적 원수’들이다. 북한 당국은 주민들이 이와 같은 ‘미일 침략자 및 남조선괴뢰’들이야말로 그들 인민의 “철천지 원수, 오직 총대로 무자비하게 소멸하여야 할 첫째가는 계급적 원수”라는 확고한 인식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북한 당국은 주민들에 대해서 첫째, “언제나 계급적 원수들에 대한 적개심으로 가슴을 불 태워야 한다.” 둘째, “미일침략자들과 남조선괴뢰들을 무자비하게 쓸어버릴 복수의 총창을 더욱 날카롭게 베풀어야 한다.” 셋째, “높은 혁명적경각성을 가지고 사회주의제도에 반기를 드는자들은 총대로 단호한 징벌을 가해야 한다”고 의식화해 오고 있는 상황이다.¹⁸¹

¹⁸¹ 『학습제강 1 (병사, 사관용)』 (평양: 조선인민군출판사, 2004), pp. 29~40.

위와 같은 시각으로 보면서 북한은 온전히 한국 민족주의를 대표하는 국가로 치부되며 이에 따라 외국인 혐오로 북한 정권의 정당성을 제고해오고 있다. 외국인 혐오와 적대성은 이들 위협을 방어하는데 필요한 높은 군사 비용을 정당화시켜주며, 군대가 첫 번째라는 선군 이데올로기 강화로 군사국가를 합법화하고 있다. 향후 후계 정권은 모든 가능한 국가 매체(교육, 문화, 엔터테인먼트, 기념비, 마스게임)를 이용하여 북한주민들에게 이런 고유의 사상과 민족주의를 지속적으로 내면화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게 될 것이다.

북한 이데올로기에서 중요하게 작동하는 것 중에 또 다른 하나는 김일성 시기에 의해 만들어진 수령체제이다. 수령정권의 신화는 김일성을 항일투쟁의 자식으로 표현하며, 김정일도 아버지를 따라서 혁명의 자녀로 전해지고 있다. 후계자 김정은 역시 혁명의 자녀로 강조될 것이다. 향후에도 수령체제 연속으로 김일성이 북한 가계의 최고지도자로 남겨지게 되도록 할 것이다. 김일성의 생일(4월 15일)은 가장 중요한 기념일로 남겨 놓을 것이다. 북한에는 35,000개의 김일성 동상과 65피트의 동상이 평양에 놓여 있으며 포스트 김정일시대에는 김정일 동상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의 포스트 김정일 정권 역시 주체, 선군 사상과 같은 이데올로기와 인물 추종 사상을 심어 나가기 위해 극도로 정보를 제한해 나갈 것이다. 북한 학교는 주민들에게 주체와 ‘김씨 가문’ 숭배를 하나의 종교처럼 지속적으로 교육해 나갈 것이다. 이제까지 북한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35%가 정치교육으로 채워져 왔다. 전문교육을 담당해야 할 대학교에서는 오히려 40%이상으로 높아진다. 모든 과목들은 민족주의 내용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 또한 북한의 후계정권은 외부 세계와 접촉하거나, 정치범, 그리고 고위공직자들을 북한 정권의 위협으

I
II
III
IV
V
VI

소라 판단하여, 이들에게 강도 높은 훈련과 감시를 계속하게 될 것이다. 북한당국은 한참동안 그들의 주민과 외국인 사이의 직접적인 접촉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일반주민들에게 외국여행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 방문자들이 동행자 없이, 혹은 자발적으로 북한주민들과의 접촉도 허락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과 음식이 간절히 필요한 국경경비원이나 열차승무원 같은 공무원들에게 뇌물이 일반적으로 되면서 북한 후계정권의 전반적인 사회적 통제 노력은 그 힘을 발휘하기 어렵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북한주민들은 어쩔 수 없이 음식과 생계를 위해 국경을 넘는 숫자가 가속화될 수 있으며, 이는 북한주민들의 중국 및 남한에 대한 개방으로 연결될 수도 있을 것이다. 밀수로 전해진 질 수 있는 상품들(특히 버려진 남한의 VCR, 남한의 영화와 텔레비전 쇼의 비디오 테이프 등)은 북한주민에 대한 당국의 정보통제능력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물리적 통제 강화:** 권위주의 체제는 주민들을 모니터하고 개개인과 반대자들을 억누르기 위해 물리적 힘을 사용한다. 그들은 전통적으로 침입과 반정부활동을 캐는 정보원에 의존한다. 북한의 경우 탈북자들의 다음과 같은 증언¹⁸²에서 물리적 수단의 사용이 잘 드러난다.

“북한에서는 모든 사람이 서로서로를 지켜보고 있다.”

“반대는 다수의 내부 보안 에이전시들을 위한 내부자들의 정교한 네트워크에 의해 감지되고 파악된다.”

“북한의 기본 원칙은 서로 믿는 두 명의 사람들이 민감한 이슈를 토론할 경우, 제3자가 개입하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¹⁸². 탈북자 면담 내용.

“모든 북한사람들은 인민반에 가입되어 있고, 이웃한 30~50 가정이 집단조직화되어 있으며 이들은 해당 집단 내에서는 부적절한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힘쓰는 중년의 여성 관료가 감시한다. 그녀를 지원하기 위해(그리고 감시하기 위해) 경찰은 갑작스런 가택수색을 수행한다. 작업장 감시를 위해 당 관료들을 기업, 공장 및 각종 국가 및 사회조직에 배치한다. 의심스런 불순중에 대한 처벌은 가혹하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위법행위에 의해 고발된 사람들은 짧은 기간의 ‘재교육’에 처해진다. 더 심각한 위반 행위로 고발된 사람들은 정치감옥에 수감된다. 이러한 캠프의 환경은 끔찍할 정도로 열악한 환경을 갖고 있다. 수감자들은 차례로 영양실조, 질병, 과로, 학대, 매질, 사형에 의해 죽어간다. 가장 심각한 위법행위로 고발된 사람들은 즉각 처형되거나 출옥이 불가능(수감자들이 굶어 죽거나 죽음에 이르도록 일하는) 캠프로 배정된다. 북한 정권은 개개인의 책임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속한 전체 가족에 대해 처벌한다. 부모, 배우자, 아이들, 숙모, 삼촌, 그리고 사촌들까지 다양한 정도의 괴로움으로 처벌된다.”

이러한 인위적 물리적 통제기제는 후계권력의 공고화를 위해서 더욱 강화되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향후 후계정권은 북한사회를 아무리 폐쇄하고 단속을 한다고 해도 개방의 물결은 막을 수 없게 될 것이다. 경제난의 지속으로 국가의 배급체제가 크게 위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북한 주민들의 상행위가 확산됨으로써 일반 주민의 이동이 사실상 통제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주민들의 이동은 자연히 정보의 조작을 어렵게 하여 주민들에 대한 통제가 약화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이 심화될 경우 북한의 후계정권은 보다 강한 물리적 통제수단을 고안하게 될 것이다.

I
II
III
IV
V
VI

(2) 경제부문

◎ **경제정책 기본 추진방향:** 포스트 김정일 정권이 당면하게 될 경제문제는 장기간 지속되어 온 경제난의 타개와 경제정상화일 것이다. 아직 김정일이 살아있다고는 하지만 김정일 생전에 경제문제를 해결하고 북한의 주장대로 강성대국을 건설하여 후계자 김정은에게 물려 주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물론 2012년 강성대국에 문패를 달겠다고 선전한 이상 2012년 김일성 100주기를 즈음하여 강성대국에 진입했다고 공식 선포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¹⁸³

그러나 1990년대 초반 심각한 경제난 이후 북한이 자력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 진단이다.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북한의 총체적 경제위기 상황을 살펴보면 우선 기술, 경쟁력, 노동 의욕의 저하인 ‘3低’와 여전히 식량, 에너지와 원자재, 그리고 외화의 부족인 ‘3難’에 허덕이고 있다. 특히 에너지와 원자재의 근본적인 부족에서 오는 악순환이 위기를 재생산하고 있다.¹⁸⁴ 이러한 ‘3低3難’현상으로 인하여 여전히 계획경제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마비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결국 북한의 경제난이 장기화되면서 회복불능 상태가 된 것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의 근본적인 모순들과 국방공업중심의 선군경제노선 같

¹⁸³ “우리는 2012년에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100돐을 맞이하게 된다. 조국땅위에 국력이 강하고 모든것이 흥하며 인민들이 세상에 부럼없이 잘 사는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는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한평생의 뜻이고 위업이었다. 선군혁명의 불길속에서 다져진 강력한 정치군사적위력에 의거하여 우리 경제와 인민생활을 높은 수준에 올려 세움으로써 2012년에는 기어이 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어놓으려는것이 우리 당의 결심이고 의지이다.” 2008년 북한 신년공동사설, 2008.1.1.

¹⁸⁴ 성채기·박주현·백재욱·권오봉, 『북한 경제위기 10년과 군비증강 능력』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03), pp. 12~18.

은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 바가 크다.¹⁸⁵ 바로 김정일이 ‘우리식 사회주의’와 ‘선군경제노선’을 강조하고 개혁과 개방의 길을 외면한 잘못된 경제정책기조가 북한경제난의 주범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반대로 북한이 경제난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비효율적인 경제체제와 정책기조를 효율적인 체제와 기조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정일과 현 북한 지도부 뿐만 아니라 김정은 역시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경제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경제기조의 변화와 개혁·개방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이 2010년 5월과 8월, 불과 4개월 만에 중국을 연이어 방문한 목적을 두고 북한이 개혁·개방 노선을 채택할 것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기도 했다.¹⁸⁶ 그러나 김정일이나 포스트 김정일 정권이 개혁·개방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북한은 과거 7.1조치를 비롯하여 조심스럽게나마 경제개혁과 개방 조치를 취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차례 개혁·개방의 시도에서 개혁·개방이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가장 큰 위협요인으로 인식하고 회피하고 있다. 시장경제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북한은 근본적인 개혁과 개방보다는 체제 내의 변화와 개선에 국한하는 정책만을 반복하고 있다.¹⁸⁷ 이러한 경제정책은 포스

¹⁸⁵ 조한범,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성격연구: 비교사회주의론적 접근,” 『통일정책 연구』, 제11권 2호 (서울: 통일연구원, 2002), pp. 128~145.

¹⁸⁶ 2010년 8월 방문 시 후진타오 주석은 경제건설 중심을 견정불이(堅定不移)하게 견지하면서 사회주의 현대화를 전면적으로 발전시키고 끊임없이 민생을 보장·개선하는 것이 30여 년간 진행해온 중국의 개혁·개방의 기본 경험이라고 했다. 아울러 경제를 발전시키자면 자력갱생은 물론 대남협력도 떠날 수 없으며, 이는 시세의 흐름에 순응하고 나라 발전을 다그치는 필요한 길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김정일은 ‘중국은 개혁·개방 후 신속한 발전을 가져왔으며 도처에서 생기가 넘치고 있다’며 높이 평가하였다.

I
II
III
IV
V
VI

트 김정일 정권에서도 당분간은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 결국 선군정치를 유지하는 한 북한경제는 회복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선군정치로 인해 북한경제가 더욱 악화된다거나 주민들의 불만으로 견잡을 수 없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¹⁸⁸ 오히려 선군경제 유지는 경제난 극복은 아니더라도 당분간 더 악화시키지는 않으면서 지금의 경제상황을 적당히 관리해 나가면서 체제유지를 해나간다는 정치적 관점에서 보면, 최선의 선택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북한의 경제난 지속에 따른 체제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선군정치와 핵을 포기하고 경제체제의 개혁과 대외적 개방만이 유일한 해결책으로 보인다. 북한이 가진 경제위기의 원인과 메카니즘을 볼 때, 악순환 고리 차단을 위한 외부의 지원을 겨냥한 대규모의 개방과 내부의 획기적 개혁 조치 없이는 경제난 극복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더욱이 북핵, 인권, 미사일 문제에

^{187.} 코르나이(kornai)는 개혁을 위로부터 추동되고 체제의 근본적인 속성은 유지되는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반면 변혁은 체제의 근본적인 변화로 보면서 사회주의체제전환을 정치영역에서 다원민주주의로, 경제영역에서 시장경제체제로 이동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북한이 추구하는 변화는 변혁이라기보다는 개혁으로 볼 수도 있다. Janos Kornai, *The Socialist System: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sm*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2), pp. 382~392;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대내외적 위기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개혁·개방은 근원적으로 붕괴의 위협을 안고 있어 결국 북한의 개혁은 현 단계에서 정치, 이데올로기 부문에 대한 정치개혁이 아니라 경제부문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체제전환이라기 보다는 체제 내 개혁이라고 볼 수 있다. 김일기, “사회주의체제변화론에 입각한 북한의 개혁·개방 연구,” (북한연구학회 2006년 춘계학술회의, 2006), p. 19.

^{188.} 실제로 일인당 국민소득이 500달러 이하이고 1990~2000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4.5% 이하인 26개 국가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비록 경제성장이 정체되고 독재정권에 의해 국민의 기본적 인권조차 보장되지 않지만 정치적으로는 안정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박형중, “북한의 변화와 경제적 통일과정,” 김연철 외, 『북한, 어디로 가는가』 (서울: 플래닛미디어, 2009), pp. 286~288.

등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서는 국제사회의 지원협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본다.

포스트 김정일 정권의 경제정책은 대외적으로는 핵문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협력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것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여기에 중국의 지원이라는 변수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중국의 대북 경제 지원 역시 북한의 경제난을 완전히 해소하고 정상화시킬 수 있는 동력으로 작용할 만큼 이루어지는 데는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북한은 기본적으로 자력갱생 경제노선을 추구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북한 경제가 스스로의 힘으로는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외부로부터의 대규모 자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에 크게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동구권 체제전환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북한의 내부적 개혁이 상당부분에서 선행되어야만 외부 자본 유입의 긍정적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내부적 개혁이 진행되지 않은 국가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자본 지원은 반드시 내부적 개혁 진행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이는 개혁·개방에 대한 포스트 김정일체제의 의지를 평가할 수 있는 잣대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북한의 개혁·개방은 체제의 부정과 포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북한은 당분간 ‘우리식 사회주의’와 ‘모기장식 개방’을 고수해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과정 중에 북한체제가 자체 내구력을 가지고 유지되면서 북한식 변화전략에 따라 북한식 변화의 틀을 만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 북핵문제와 북·미, 북·중 관계가 북한식 변화의 길을 가는데 하나의 독립변수로도 작용하고

I
II
III
IV
V
VI

있기 때문에, 북한식 변화는 북한의 의도대로 순조롭게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여기서도 주요 변수는 앞서 제시한 주변 국가들의 대북 정책으로 이는 북한의 변화의 폭과 속도를 결정하는 주요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북한의 현상 유지는 대외지원에 의존하면서 겨우 연명해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시간이 흐를수록 현상 유지의 여지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현 김정일체제 하에서는 현상유지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포스트 김정일체제에서는 급속히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절대적인 경제지표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의 느끼고 요구하는 상대적 수준은 시간이 흐를수록 제고될 것이며 이로 인한 상대적 실망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포스트 김정일체제의 입장에서 경제난 해소와 경제정상화를 통한 주민생활 향상은 외형적으로 중요한 정책목표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김정은이 주민들로부터 인정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가 바로 경제문제 해결이 될 것이다. 북한은 강성대국에 사상·정치, 군사, 경제강국을 얘기하면서 이제 남은 것은 경제강국 목표 달성뿐이라고 주장한다. 결국 사상·정치는 주체사상을 앞세운 김일성 뒤편이었고, 군사는 선군정치의 김정일 뒤편이라고 본다면 앞으로 후계자인 김정은에게 맡겨진 임무는 경제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김정은 나름 새로운 경제구상을 펼칠 가능성도 열려있다. 최근 김정일의 방북을 비롯해 중국과의 대화에 있어 바로 이 부분이 집중적으로 언급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향후 김정은은 정치적으로는 김정일 정권을 계승하면서도 경제적으로는 김정일시대와 차별화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 즉 수령절대독재체제를 유지하면서 ‘북한식 변화’를 적극적

으로 모색하는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체제유지와 경제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북한의 의도는 결국 교조주의의 유지와 변화라는 상반된 두 가지 생존전략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경제난 이후 북한의 최우선 과제는 정권의 유지와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경제 회복이지만, 이 두 가지 과제의 동시 해결 요구는 딜레마 상황을 가져오고 있다. 수령절대체제의 유지를 위해 폐쇄사회체제를 통한 통제기능이 절대적으로 요구되지만, 경제난 회복은 적극적인 경제개혁과 대외개방 없이는 해결이 어려운 문제가 된다.

이 때문에 북한은 이 두 목표의 달성을 위해 “선군정치방식에 토대를 둔 강성대국건설론”을 21세기 김정일시대의 전략으로 규정하고, 수령절대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선군정치 노선을 표방하는 가운데 실리사회주의 노선이라는 얼핏 보아 상호 모순된 두 가지 생존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물론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 두 목표 중 수령절대체제 유지가 우선순위 목표이므로 실용주의 노선과 대외개방은 이 우선순위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심스럽게 추진될 것이다. 이 경우 포스트 김정일체제는 두 가지 대안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는 선군경제노선을 유지하면서 급격한 개혁적인 조치는 실시하지 않는 것이다. 즉 외부자본의 유입을 위해 어느 정도의 개방은 실시하지만 시장경제 메커니즘의 도입이나 소유권의 개혁과 같은 개혁조치는 실시하지 않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정치적 안정에 대한 자신감으로 보다 많은 외부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에서 보다 과감한 개혁개방조치를 실시하는 것이다. 즉 인센티브제의 확대, 가격결정의 자율권 부여, 협동농장 제도의 철폐 및 개인농의 허용, 무역 자유화 등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포스트 김정일체제는 이러한 두 가지 대안 중에서 첫 번째를 선택할 가능성

I
II
III
IV
V
VI

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두 번째 대안은 시장경제체제의 요소를 더욱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그만큼 기존의 체제와 갈등을 야기하여 정권의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핵개발문제의 해결을 통해 경제문제 해결 활성화를 가시화한다는 전제 하에서 포스트 김정일체제에서는 첫 번째 대안을 정책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결국 김정은은 체제유지를 위한 선군정치노선과 과거 사회주의 경제건설 노선의 기초를 유지하면서도, 실리 사회주의 노선이라는 부분 개혁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단기적으로 북한의 개방은 북핵문제, 북미관계, 남북관계 등 대외 문제와 연계되어 극히 초보적인 수준에서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어 안보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김정은 권력의 안정화가 유지되면서 선군의 실리 노선이 좀 더 체계화되고 확대되는 차원에서 제한적 개방정책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남북경협 역시 제한된 형태로 현재의 금강산 및 개성과 같은 특구 중심의 사업 위주로 확대·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북한의 개방과 개혁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북한의 개혁의지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전면적 개방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기도 무리인 상황이 지속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장기적 차원에서 포스트 김정일체제 하에서 북·미 관계 개선 등 외부의 안보 위기가 어느 정도 해소되고 포스트 김정일체제가 안정적으로 형성되면서 대외 개방이 서서히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포스트 김정일체제가 경제재건을 위해 국제금융기구 및 서방 국가들의 투자 및 차관도입, 경제특구 확대에는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정은의 정책 관여 이후, 기존 강성대국 추진 목표를 '02년 사상·정치·군사·경제에서 '09년 4월 정치사상·군사·과

학기술·경제로 변화시켰다. 따라서 경제난 극복을 위해 선진과학기술 도입 등 선진국과의 교류에 정책의 주요 포인트를 두고, 국제사회와의 정상적인 경제교류를 위해 미국·일본·유럽과의 관계증진에 중요성을 부여할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수한 간부자원의 정치·군사 분야 우선 등용 원칙을 고수하는 가운데, 기술인재에 대한 처우개선 등 기술인재 발탁의 중요성이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09년 9월에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신설하고 성적우수자에 대한 외국유학 기회를 확대하고 간부들에게도 한 가지 이상의 기술 소유를 독려하고 있다.

향후 포스트 김정일체제에서 북한이 시장경제운영방식이 안고 있는 일부 긍정적인 요소들을 계획경제 내에 흡수시켜 경제정상화의 출로를 찾는다고 하여 그것을 기존의 계획경제체제에 대한 일탈로 보기는 어렵다. 그것은 기업들의 일부 자율적인 가격규제나 계획 작성이 국가 해당기관의 등록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대응하는 등 계획경제에서 벗어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양보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이 현재 도입하고 있는 시장 경제적 요소들은 현 경제시스템의 구조적 허점을 보완하여 줄 수 있는 실리적 수단인 것으로 하여 체제 이행기의 보편적 현상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결국 김정일은 체제위험이 따르는 본격적인 개혁·개방은 회피할 것이다.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대내외적 위기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개혁·개방은 근원적으로 붕괴의 위협을 안고 있는 것이다. 개혁·개방은 북한 내 이해집단 간의 균열과 반대세력을 양산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더 높은 차원의 변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증대될 것이다. 분단체제 하에서 과거 동독의 흡수통일사례를 통하여 북한은 접근을 통

I
II
III
IV
V
VI

한 변화에 대한 결과를 알고 있다. 북한은 동구권 국가의 몰락을 개방·개혁에 의한 외부사조 유입으로 기회주의가 침식한 결과 반혁명세력이 결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정은 정권에서도 개혁은 현 단계에서 정치, 이데올로기 부문에 대한 정치개혁이 아니라 경제부문에 대한 대내개혁을 부분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체제전환이라기 보다는 체제 내 개혁으로 이해된다.

종합적으로 결국 포스트 김정일체제 하의 북한은 이중 경제구조를 지속시키는 가운데 체제의 안정을 도모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포스트 김정일체제 하에서도 공급제약이 지속되는 한 계획경제의 축소 및 시장경제의 확대 경향으로 인해 이중 경제구조가 장기간 안정적으로 유지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경제 불안정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경제정책 세부 추진방향**¹⁸⁹: 김정일시대 경제정책은 ‘선군경제 정책’으로서 국방공업 우선 발전을 의미하는 정책이었다. 1990년 사회주의정권 붕괴 이후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로의 편입이 불가피하게 되자 북한은 이른바 ‘혁명적 경제전략’이라는 ‘3대 제일주의 경제 정책’(농업, 경공업, 무역제일주의)을 시행했다. 김일성 생전에 ‘신경 제전략’으로도 명기되었던 이 경제정책은 북한 스스로 자인하듯이¹⁹⁰ 북한을 둘러싼 대외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을 염두에 둔 정책이었고, 1990년대 중반 경 고난의 행군을 경험하기 이전의 대내 경제조건 속

¹⁸⁹ 권영경 교수 면담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

¹⁹⁰ 북한은 1997년 김정일이 노동당 총비서로 취임하면서 『김정일 플랜: 21세기를 이끄는 지도자의 전략』이라는 안을 세웠는데, 이 안에서 이와 같은 고백이 나온다. 이는 1998년 1월 『조선신보』를 통해 알려졌다.

에서 수립된 정책이었다. 그러나 김정일 정권이 공식 출범하면서 김일성의 이러한 경제정책은 채택될 수 없었다. 1960년대부터 북한이 지향해왔던 ‘자주국가노선’을 유지해나가고 2대 세습 유일지배체제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미 1960년대에 채택되었던 군사·경제병진노선을 더욱 강화하는 경제정책을 시행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김정일의 경제정책인 선군경제정책은 탈냉전시대 세계화된 국제경제 질서 하의 생존경제 전략으로서 김일성시대의 군사·경제 병진노선을 ‘버전-업(Version-up)’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렇지만 내용적으로 김정일시대의 대내외적 여건을 반영한 군사·경제 병진노선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 우선, 탈냉전시대라는 대외경제여건을 반영하여 김일성시대 고려되었던 ‘모기장 개방’보다 더 확대된 개방논리와 결합되어야 했다. 그리고 이미 그 기능이 마비된 계획경제시스템을 부분 보완하는 시장기능의 부분 허용도 불가피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김정일의 경제정책은 포스트 김정일 정권에 아주 어려운 구조적 경제문제를 만들어 놓았다. 우선 첫째, 시장이라는 존재를 북한경제에 불가역적인 것으로 만들어 놓았다. 시장화 현상이 국가의 개입 없이 자율적으로 확대되도록 함으로써 국가에 대립되는 경제적 권력의 존재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둘째, 군 경제와 같은 특권 경제부문이 국방경제를 넘어서 인민경제부문에서도 그 비중이 확대되어 국가가 무시할 수 없는 경제주체화 되도록 하였다. 셋째, 중국에 의존되는 대외협력구도를 만들어놓았다.

김정일 정권이 남겨놓은 이 같은 과제들은 포스트 김정일체제의 경제정책 방향을 예측함에 있어서 중요 전제조건이 된다. 이에 따라 포스트 김정일체제는 다음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될 것이다.

I
II
III
IV
V
VI

첫째, 포스트 김정일체제의 경제정책 방향이 어느 부문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북한 당국은 몇 년 전부터 인민생활 향상을 강조하는 경제정책을 표방해 오고 있는데 이 정책은 포스트 김정일체제에서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인민생활 중시 경제정책은 화폐개혁 이후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민심을 수습해 권력승계 절차를 보다 원활하게 하려는 의도의 하나로 이해된다. 시장활동 허용, 북·중 경제관계 심화 등도 궁극적으로 인민경제 개선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이다. 특히, 북한은 올해 경제정책 중점 추진방향으로 ‘인민생활 향상에서 결정적 전환을 가져오는 것’을 제시한 바 있다. 북한은 1월 1일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3개 신문에 올해 주요 정책 방향을 담은 신년공동사설을 발표하였는데 여기에서 북한은 ‘당 창건 65돐’을 맞는 올해를 ‘혁명적 대고조의 자랑찬 승리와 성과에 토대해 인민생활 향상에 전당적, 전국가적 힘을 집중해야 할 총공세의 해’로 규정하였다. 즉, “혁명적 대고조의 불길 드높이 인민생활 향상에서 결정적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공세를 벌리는 것, 이것이 올해의 투쟁 방향”이라 설명하였다. 올해 인민생활을 높이는 목표는 단순히 경제 사업 차원이 아니라 “어버이 수령님(김일성 주석)의 유훈을 관철하고 인민들의 이상을 꽃피우기 위한 당의 위업의 정당성을 과시하는 중요한 정치적 사업”으로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김정일은 연초부터 ‘쌀밥에 고깃국, 비단옷에 기와집’으로 요약되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을 관철하지 못했음을 시인하며 주민생활 개선에 ‘올인’하겠다는 뜻을 밝히기 시작하였다. 북한 로동신문은 1월 9일 ‘새로운 승리로 부르는 전투적 기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김 위원장이 2009년 현지 지도길에서 주민생활 개선에

대해 한 발언을 소개했다고 북한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가 전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사상적 면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군사 면에서도 강국 지위에 올라섰지만 인민생활에는 걸린 것(부족한 점)이 적지 않다”며 “수령님(김일성)은 인민들이 흰쌀밥에 고깃국을 먹으며 비단옷을 입고 기와집에서 살게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이 유훈을 관철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신문은 “당이 인민생활의 결정적 전환을 안아오기 위한 웅대한 구상과 작전을 펼치고 있다”면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김 위원장의 결심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 경제 분야 현지 지도를 강화하고 있고, 경제건설의 주요 과업 및 방침으로 경공업과 농업 분야 생산력 증대를 강조하고 있다. “당의 경공업혁명방침, 농업혁명방침을 계속 튼튼히 틀어쥐고 이미 다져진 생산 잠재력을 남김없이 발휘해나갈 때 인민생활에서는 일대 혁명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전당적, 전국가적인 힘을 집중하여 인민소비품생산을 대대적으로 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010년 1월 9일자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작년 정초부터 원산과 대안, 흥남 등 경제부문을 찾은 것도 주민생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둘째, 시장을 어떤 시각으로 인식하고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가 지적된다. 현재 북한경제는 인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특권경제부문마저 시장과 연계된 재생산활동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김정일시대 하에서 땅에 떨어진 인민 대중적 지지를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포스트 김정일 정권의 특성상, 신정권은 김정일시대처럼 시장을 통제, 억압의 대상으로 보며 허용과 통제의 반복 정책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이다. 김정일은 수령-당-인민의 일체적 논리만으로도 후

I
II
III
IV
V
VI

계자의 정통성을 확보하고 인민 대중적 지지를 얻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포스트 김정일 정권은 1990년대 이후 20년도 넘게 지속되어온 경제난으로 이러한 사회주의적 생명체론이 인민들에게 설득력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출범하기 때문에 시장을 일정부분 포용하는 인민 대중적 균중노선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김정일이 2009년 9월 “계획과 시장의 조화는 불가능하다”고 말하였지만, 7.1조치 수준에서 다시 계획과 시장의 조화 논리를 모색해 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미 일부 경제특구, 외자유치기관을 중심으로 부분적인 시장경제를 수용하고 있기도 하다. 사회주의 경제원칙과 시장경제원리가 결합하는 원칙에 의거하여, 국가의 지휘 아래 시장화 경제원칙을 부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는 계획경제를 유지하지만, 외자유치기관은 국가를 대신해서 시장경제 원칙에 기반하여 대외협력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시장경제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는 소유권(property rights), 신뢰할만한 계약의 존재, 진입탈퇴의 자유, 정보의 자유, 법의 지배 등이다. 현재 북한의 시장은 이런 요소들이 결여된 가운데, 국가 방임 상태에서 주민 혹은 상인들의 임의적 물물교환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매우 초보적인 수준으로 볼 수 있다.¹⁹¹ 포스트 김정일체제의 북한은 급작스럽게 계획경제체제를 변경하지는 않겠지만, 시장화가 확산되면서 점차 시장경제체제로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이 ‘3대혁명소조운동’ 조직·운영하여 후계체제 기반을 다졌듯이 포스트 김정일체제도 후계조직을 운영하여 3대 세습체제를 본격화할 것이며 이들이 서서히 부각될 것

¹⁹¹ 임을출 박사와의 면담내용.

이다. 세습 조직팀은 대부분 30~40대 유학 소장파로 구성하여 사고가 개방적인 것으로 짐작된다. 이들은 자력갱생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외자유치를 본격화하고, 이에 따라 법적·제도적 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부분적으로 시장경제 시스템에 맞도록 개편할 것이다. 그런데 이는 북한식 시장경제시스템이지 흔히 말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시스템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것이다.¹⁹² 북한 당국 스스로의 개혁 의지, 외부의 적절한 개입이 결합되지 않으면 시장경제 활성화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셋째, 김정일이 실패한 강성대국의 비전을 다시 제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기서 김정일의 선군경제노선을 과연 폐기할 것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김정일시대보다 당의 위상을 강화하겠지만, 국방위원회체제가 존속되어 나가고 북핵문제가 여전히 북한 자신의 안보문제로 존재하는 한, 선군노선의 기초는 지속되어 나갈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김일성시대부터 존속해온 군사·경제병진노선은 지속되어 나갈 것으로 판단된다. 강성대국의 비전을 위한 경제정책으로서 국방공업 우선 발전정책은 수정되지 않고 지속되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정책의 추진과 더불어 7.1조치 수준의 시장을 허용하고 대외개방을 더욱 확대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국방공업 우선 발전정책 속에서 성장한 군사경제부문을 대외개방 및 시장화의 주체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넷째, ‘북한식 개발’체제 구축을 위한 대외개방정책을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중국의 경제학자 리쉐웨이는 중국의 학술잡지 ‘세계지식’ 제17호에서 북한이 핵보유전략과 병행될 수 있는 대외개방정책

¹⁹² 조봉현 박사와의 면담내용.

I
II
III
IV
V
VI

을 준비 중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그는 북한이 국내적으로 시장통제를 유지하면서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려고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포스트 김정일 정권에서 김정일시대보다 적극적으로 대외개방을 할 것이라는 예측은 모든 전문가들이 일치하지만 국내시장 통제/대외개방 확대 및 7.1조치 수준의 시장 허용/대외개방 확대 등에 대한 의견은 다소 달리 나오고 있다. 김정일은 선군경제정책으로 기존 북한 산업구조의 정상화를 의도했지만, 결국 이는 실패했다. 현재 북한의 경제적 조건들은 대외협력을 전제로 한 장기적이며 계획적인 개발정책들이 요구된다. 포스트 김정일 정권은 선군경제정책의 기초를 계승하되, 보다 확대된 대외협력하의 개발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대외경제정책 방향:** 포스트 김정일 정권은 북핵문제를 안고 출발하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라는 부담을 안은 상태에서 대외개방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딜레마에 빠지게 될 것이다. 결국 중국과의 전면적인 경제협력을 필요로 하는 바 이를 위해서는 대외개방의 길을 모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김정일시대 북한은 북·중경협 방식으로 ‘점개방’을 하며 체제를 유지해왔다. 북한은 라선지역을 국제적인 가공, 중계무역기지로 건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지난 1월 특별시로 승격되면서 라선시는 인력 해외 파견이나 해외 인사 초청을 중앙 승인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할 수 있을 만큼 폭넓은 자율권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라선개발을 위한 보다 원활한 외자유치 환경 조성을 위해 법제도적 측면의 개혁개방조치도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지난 9월 2일 중국 지린(吉林)성 창춘(長春)에서 개막한 제6회 창춘국제무역박람회에 참석한 구본태 무역성 부상은 ‘동북아경제무역협작 고위층 토론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은)이미

라선시를 경제특구로 지정했으며 이 특구를 국제적인 가공·중계 무역 지구로 육성, 발전시키려는 원대한 계획을 세웠다”고 소개하였다. 2009년 10월 지린(吉林)성이 북한과의 경협 방안을 공개하면서 라선을 국제무역지구로 개발키로 북한과 합의했으며 이를 위한 외자도 유치했다고 밝힌 바 있으나 북한이 이를 공식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훈춘(琿春)-라진으로 연결되는 중국과의 경협 통로를 이용해 라선을 국제무역의 거점으로 삼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구 부상은 이어 “이를 위해 행정적, 법률적 조건을 준비 중”이라고 밝혀 라진항을 포함한 라선시 개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착수했음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라선 특구 개발을 위한 발걸음을 적극적이고도 신속하게 내 걸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하였다. 북한은 기본적으로 두만강 개발계획을 축으로 해외투자를 유치할 복안을 갖고 있다. 즉, 라선특별시와 청진항을 연결하는 지역을 북한-중국-러시아를 잇는 동북아 물류, 교역의 중심지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북한은 우선 두만강개발을 축으로 해 라선-청진으로 개발을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신의주·함흥·김책·원산·안주·남포 등의 지역 거점도시를 집중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강화, 중국의 북한 유일지배체제(후계체 습체제) 수용, 경제적 개입전략을 통한 중국의 북한 개방 유도라는 국제환경 속에서, 포스트 김정일체제의 북한은 전면 핵 포기를 전제하는 ‘비핵화’를 추구하기 보다는 ‘비확산’이라는 방향으로 정책변화를 보이면서 중국이 의도하는 북·중경협 방식으로 대외개방을 더욱 확대해 나갈 가능성이 크다. 최근 북·중 간에는 김정일의 방중 이후 중국의 장길도 개발계획에 연계된 북한의 북부지역 개발정책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라선(라진-선봉), 개

I
II
III
IV
V
VI

성공단에 이어 제3의 경제개발특구, 즉 제2의 개성공단 조성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북한이 국가개발은행을 만든 것은 작년 10월 원자바오 총리의 방북 시 권고된 사항으로 알려지고 있기도 하다. 물론 북한으로서는 중국식 개발모형을 전격 도입하고 과도하게 북·중 경협을 높이려 하지 않을 것이다. 경제개방의 경우 후계체제는 국가주도의 대외개방과 아울러 특권경제부문이 경제주체들을 대외개방 주도세력으로 내세울 가능성이 있다.

◎ **경제개발계획 전망:** 김정일은 선군경제정책을 시행하면서 선택과 집중의 전략에 따라 국방공업 정상화, 기간산업 정상화 등에 도움이 되는 산업정상화 계획을 마련한 바 있다. 이 계획에 따라 주체철, 주체비료 생산계획 등이 세워지고, 2.8비날론 공장, 김책제철소, 황해제철소, 남흥청년화학비료공장 등에 집중적으로 재원이 배치되었다. 1차 핵실험 이후 군수공업에 투입되던 자금 일부를 이들 부문에 돌리기로 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하였다. 포스트 김정일 정권은 이러한 계획을 보다 확대해 나갈 가능성도 있다. 핵보유국으로서의 위상을 어느 정도 확보하면서 군수공업에 투입되던 재원을 기존 핵심산업 정상화에 전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은 중국이 개혁개방정책을 시작할 당시 비교우위원리에 따라 육성해 나갔던 산업정책을 그대로 수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¹⁹³ 기존 중공업 정상화 시도와

¹⁹³ 북한경제학자인 임을출 박사는 다소 다른 시각으로 포스트 김정일체제의 경제개발계획방식을 설명하고 있다. 이와 관련 그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새로운 경제개발계획은 이미 올 초부터 나오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이 나선 특구 개발을 재개하고, 평양 등 8개 도시를 경제특구로 지정하는가 하면, 도로 철도 등 인프라 투자를 담당할 정책금융기관인 국가개발은행을 신설하는 일종의 ‘신경제정책’을 추진해 온 것이 그것이다. 중국과의 경제협력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개혁·개방정책의 제도화를 추진해

더불어 외화가득에 필요한 경공업을 육성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북한식 경제개발계획은 국가주도의 개발정책으로 추진될 것이며, 중국 처럼 민간자본을 육성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면에서 포스트 김정은체제는 군을 앞세우면서 개혁개방을 추구하는 ‘선군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조봉현 박사는 포스트 김정은체제의 경제개발 계획 전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기도 하다. 북한이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150일 전투, 100일 전투, 화폐개혁, 외자유치)은 김정은 후계팀이 장성택과 국방위원회 후견인 등을 바탕으로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비록 전문성이 부족하여 실패를 거듭하지만, 이는 어떤 형태로든 변화를 모색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다. 그래서 새로운 경제개발 계획이 나올 가능성 높다는 것이다. 경제개발의 방향은 크게 자원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 산업측면, SOC개발측면, 금융 및 투자측면 3분야로 구분된다고 하였다.

(3) 군사부문

(가) 대내 군사통제 정책: 군부통제 강화 정책 고수

당과 선군정치를 바탕으로 한 정치적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김정은 정권의 대내 군사정책은 정치적 영역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야 할 것이다. 중국 지도부가 경제개발방식으로 제시하고 있는 《국가가 주도하고, 민간이 참여하며, 시장이 운영한다》는 원칙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10년 5월 중국을 방문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원자바오 총리가 “중국은 북한의 경제발전과 민생 개선을 적극 지지하며 북한에 중국의 개혁개방과 경제건설의 경험을 소개해주고 싶다”는 의지를 밝힌 점이 주목된다. 이 발언은 조만간 ‘중국식 노하우’가 북한에 전수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해석되고 있다.” 임을출 박사와의 면담내용.

I
II
III
IV
V
VI

것이다. 김정은 정권은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군부를 최대한 활용하는 군사정책을 구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부터 북한군은 여러 측면에서 북한 체제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 특히, 고난의 행군시기를 지나 지속되는 경제난 속에서도 여전히 선군정치를 표방하며 군을 우선시하는 것은 북한군이 북한의 체제와 불가분의 관계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¹⁹⁴ 따라서 북한군의 위상과 역할은 단순히 전시뿐만 아니라 북한의 예기치 못한 불안정 상황에서 중요한 함축성을 지니고 있을 수밖에 없다.

북한군은 북한의 불안정사태 초기 단계에 위기극복과 안정화의 주체적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다양한 정치 군사적 위협의 근원이 될 수도 있다. 김정일 사후 포스트 김정일 정권이 북한군을 여하히 통제 관리하는지가 안정적 위기관리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군은 그 규모와 조직 면에서 북한 내 최대 무력집단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상위권에 들 정도의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인민의 군대, 조선노동당의 군대라고 하지만 결국 최고지도자의 군대라는 의미를 지닌다. 북한의 군부는 당과 함께 주요 정치 세력이자 권력 엘리트 집단으로 북한군에 대한 유일지도체제 확립은 김일성시대에 이미 두드러진 것이었지만, 김정일시대에 들어와 더욱 강화되었다.¹⁹⁵

194. “총대가 약해 망한 나라는 많아도 기근이 들어 망한 나라는 없다,” 『로동신문』, 2006년 11월 27일.

195. 김정일은 북한군에 대한 유일지도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군단장의 빈번한 교체와 정치위원들과의 인위적인 갈등체계를 만들어 놓아 개별 군사령관이나 군단장의 정권 장악능력이 취약하다. 조성렬, 『북한의 위기관리체제와 우리의 대응방안』 (국회정보위원회 정책연구 용역보고서, 2006), pp. 51~52; 김정일이 2003년 군부의 핵심지휘관들을 대폭 물갈이 했던 것은 자신에게 충성을 바치는 인물들을 앞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김일성 위원장 갑작스런 유고 시 군벌갈등 충돌가능성,” 자유아시아방송(Radio Free Asia), 2006년 12월 20일,

특히, 선군정치 표방 이후에는 체제 유지에 핵심적인 요소로서 단순한 군대의 차원을 넘어 북한 사회 내 집단에게 있어 일종의 역할 모델이자 대민통제의 주요한 수단으로 한마디로 말해 북한 체제를 수호하는 조직적 무력이다. 북한이 “김정일시대의 혁명전략”으로 선군정치노선을 채택한 이유는 ① 대외로부터의 체제수호와 보장을 얻어내는 역할, ② 경제건설 및 회복을 하는데 노동력 및 자본제공의 역할, ③ 경제난으로 이완되어 있는 사회통제 및 통합을 담보해주는 역할로 볼 수 있다. 최근 들어 북한은 오랜 유일지배의 전통과 선군정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한 헌법 개정이 결합하여 군을 포스트 김정일체제에서 김정은의 복종 하에 묶어두기 위한 강력한 다중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선군정치의 본질은 위기에 직면한 북한에서 체제를 위협하는 정치적 사건에 자동 개입할 수 있도록 인민군을 동원화, 정치화하려는 상시적 위기 관리체제이다.¹⁹⁶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통상적인 주민통제기구로 인민보안부, 국가안전보위부, 그리고 보위사령부 등 3개 기구가 작동하나 유사시 인민군이 직접 개입하게 되어 있다. 실제 헌법상 국방위원장인 김정일의 유고 시 권한은 일단 제1부위원장이 당 중앙 군사위원회의 지도와 결정을 받아 대행하며, 새로운 권력주체로는 당규약상 일체 무력의 지휘통솔권을 가진 당 중앙군사위원회가 비상사태의 선포와 주요 정책결정을 주도하는 집단지도체제 형태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김정일 유고 시 당 중앙군사위의 북한군

http://www.rfa.org/korean/simcheongbodo/2006/12/20/caalition_nk_military_ken_gause (검색일: 2006년 12월 21일).

¹⁹⁶ 정영태, “선군정치: 북한의 권력구조와 군,” (한국전략문제연구소 비공개정책토론회 발표논문 2006.7.20)을 조성렬, 『북한의 위기관리체제와 우리의 대응방안』, pp. 38~43에서 재인용.

I
II
III
IV
V
VI

통제구조는 군정체제로서 국방위원회와 인민무력부를 한축으로 하고, 군령체계로는 최고사령부와 총참모부를 또 한축으로 하며 당비서국과 총정치국이 지원하는 형태이다. 단, 김정일 유고 상황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전시상황에 맞게 최고사령부를 중심으로 통합된 단일지도 형태의 최고사령관 대행체제로 전환된다.¹⁹⁷

제3차 당대표자회를 통해 나타난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가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위상과 역할 강화라고 할 수 있다. 금번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강화는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 과정을 전망하고 향후 포스트 김정일 정권이 어떻게 군부를 장악하고 운용할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는 유용한 틀을 제공해주고 있다. 김정은은 당대표자회 하루 전에 대장의 군사칭호를 부여받았고, 지난 9월 28일 개최된 노동당대표자회에서 군사부문의 제2인자 자리인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직에 임명되었다. 당 중앙군사위원회 인원도 모두 19명으로 1980년 제6차 당대회 때와 같은 규모로 보강되었다. 또한 나이가 많은 조명록, 리을설, 리하일 등이 빠지고 60대의 인물 위주로 세대교체를 하면서 총참모장을 비롯하여 총참모부 작전국장, 해군사령관, 공군사령관 등 군부 핵심 지휘관들을 대거 포함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 과정뿐만 아니라 향후 포스트 김정일 정권 하에 있어서도 북한의 최고군

197. 최고사령관을 대행할 수 있는 자는 군서열 2위이자 총정치국장인 조명록이지만 나이와 건강 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김영춘 총 참모장이나 정권장악을 통해 오극렬 중앙당 작전부장이 가능하다. 조성렬, 위의 글, pp. 53~70; 이와 관련해 미국 CNA 연구소의 북한 전문가 켄 고스 국장은 군부세력들 간의 연대 없이 오극렬 작전부장 단독으로 정권을 장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았다. 자유아시아방송(Radio Free Asia), 2006년 12월 20일, <http://www.rfa.org/korean/simcheongbodo/2006/12/20/caalition_nk_military_ken_gause> (검색일: 2006년 12월 21일) 참조.

사지도기관으로 군부의 핵심적인 권력기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즉, 당 중앙군사위원회가 다시금 군부의 실질적인 핵심적인 권력기반으로 자리매김함으로써 김정은 정권 등장 이후에도 선군유지 하 군부에 대한 당의 지도와 통제가 더욱 강화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김정은에게 군 관련 직책을 우선적으로 부여한 것 역시 선군정치를 지속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당을 통한 군부 내 상호 견제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¹⁹⁸ 우선 44년만에 개최된 당대표자회에서 당 규약 서문 개정을 통해 선군정치를 기본정치 방식으로 명문화하였고, 당의 영도적 역할과 관련하여 기존 ‘黨→政→軍’에서 ‘黨→軍→政’으로 수순을 변경함으로써 노동당에도 선군정치를 공식적으로 도입하면서 통치전반에 선군정치 이념을 확립하였다.¹⁹⁹ 김정은에게 군 관련 직책을 우선 부여한 것에 또 다른 이유는 군에서 당으로 연결되는 김일성과 김정일이 지닌 ‘혁명영도’의 역사적 일관성을 후계자인 김정은에게도 적용하려는 치밀히 계획된 의도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과거 김일성이 항일무장투쟁의 경험을 통해 당건설의 기반을 마련하고 역량을 확대해 나간 것을 따르고 있다. 또한 선군정치의 기원을 1995년 1월 1일 김정일의 다박술 초소 방문에서 1960년 8월 25일 류경수 탱크사단 방문으로 소급하였다. 이는 김정일이 1964년 당사업을 시작하기 이전 이미 군을 통해 ‘선군혁명영도’를

198. 김정은에게 군 관련 직책을 먼저 부여한 것은 선군정치 강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비대해진 군부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199. 이에 앞서 2009년 4월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2기 1차회의에서 11년만에 헌법을 개정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지도적 지침’으로 기존 ‘주체사상’과 함께 ‘선군사상’을 새로이 명기하였다. 북한은 1980년 6차 당대회 이후 30년만에 당규를 개정하면서 “조선노동당은 선군정치를 사회주의 기본정치방식으로 확립하고 선군의 기치밑에 혁명과 건설을 영도한다”는 내용을 새로 추가하였다. 『개정 조선노동당 규약 서문』 참조.

I
II
III
IV
V
VI

시작하여 당으로 확대해 나간 것으로 우상화한 것과 동일한 경로를 선택하려는 의도로 평가할 수 있다.²⁰⁰ 김정은의 군부 장악은 미래형이 아니라 이미 현재완료형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미 ‘수령(김일성)의 군대’가 ‘수령(김일성)과 수령의 후계자(김정일)의 군대’로 바뀌었다.

과거에 김정일은 ‘수령의 후계자’로서 모든 군권을 미리 물려받아 군대를 장악할 수 있는 기반을 어느 정도 갖추었기 때문에 1994년 김일성 사망 이후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권력을 공고화하는 데 성공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²⁰¹

김정은은 2009년 1월 8일 내부적으로는 이미 후계자로 내정된 이

200. 당대표자회를 앞두고 선군혁명영도가 시작된 지 50주년이 된 8월 25일에 인민군 전체 장병의 이름으로 김정일과 김정은을 해당 기관과 지역을 대표하는 당대표로 추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선군혁명영도가 김일성과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9/27/2010092700039.html> (검색일: 2010년 9월 3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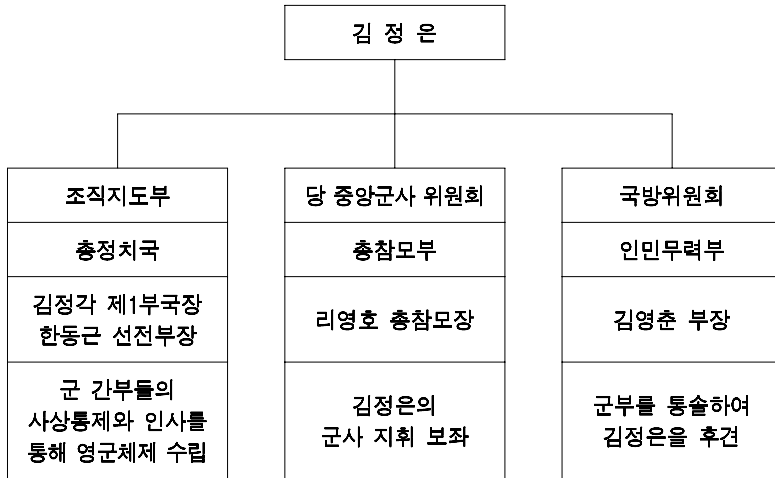
201. 김일성은 1970년대 후반부터 김정일 ‘조직비서’가 군대를 확고하게 장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1977년 8월 20일 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회의를 열어 조직지도부가 군 총정치국 간부들의 당조직 생활을 철저히 장악 통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 그리고 1979년 2월에는 당 중앙군사위원회를 소집해서 당사업과 군사사업을 비롯한 모든 중요한 문제들을 김정일의 결론에 따라 집행해나가는 ‘강한 조직규율’을 세우도록 했다. 1980년 10월 개최된 조선로동당 제6차 대회에서 김정일은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정치국 위원, 당 중앙위원회 비서와 함께 당 중앙군사위원회에 선출되었다. 김일성은 1982년 6월에는 당 중앙군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전 군에 김정일의 명령지휘체계를 철저히 세우는 조치를 취했다. 1990년대에 들어 김일성은 김정일에게 군통수권과 국방사업에 대한 전권까지 이양하게 된다. 김정일은 1991년 12월 24일 소집된 당 중앙위원회 제6기 제19차 전원회의에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됨으로써 군통수권을 물려받았다. 김정일은 1993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9기 5차 회의에서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되어 국방사업에 대한 지도 권한도 물려받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 20: 혁명위업계승문제의 빛나는 해결』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2000), pp. 215~264.

후 빠른 속도로 군사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노력해 온 것으로 보인다. 특히, 후계체제 기반을 구축해 오는 과정을 통해 군사 분야에 대한 이상화 작업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²⁰² 갑작스럽게 당대표자회를 개최하여 김정은을 공개한 것은 김정은이 정치·군사 등 모든 분야에 실질적인 2인자이며 이미 모든 권력을 장악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김정은에게 정치국상무위원이나 비서직책 등 다수의 직책을 부여하지 않고 군 관련 직책만을 부여한 것은 향후 권력장악의 순서상 문제가 아니라 김정은의 갑작스런 등장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당과 군을 모두 포함한 종합적인 하나의 직책을 선택하여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²⁰² 북한 군대에서 2009년 5~6월경 작성되어 배포된 것으로 추정되는 비밀 문건인 『존경하는 김정은 대장동지의 위대성』 교양자료에는 “의미 깊은 2006년 12월 24일, 존경하는 김정은 대장 동지는 김일성군사종합대학 졸업증서와 기장이 기여된 자리에서 주체의 선군혁명위업을 빛나게 이으실 것을 바라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인민군 지휘성원 모두가 김정은이 졸업 작품으로 북한에서 최초로 인공위성자료와 GPS수신기 좌표를 이용해 만든 작전지도를 보고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군사전략사상이 빛나게 구현된 기상천외하고 천별만화하는 만점 계획에 경탄을 금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문건은 또한 김정일도 이 작전지도를 보고 “작전계획이 아주 창조적이고 착상이 기발하여 1~2번 감복한 것이 아니라고 의미 있게 말씀하셨다”고 언급하고 있다. 정성장, “김정일 후계자 김정은,” 『신동아』, 2009년 7월호, pp. 246~259.

I
II
III
IV
V
VI

●그림 V-1 김정은 후계체계의 군부 조직



김정은 후계체계를 이끌어갈 핵심 군부조직은 <그림 V-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북한군 3대 상설조직인 군 총정치국, 총참모부와 인민무력부는 군 총정치국의 우위가 유지되는 가운데 수평적 관계가 유지됨으로써 상호 견제 구조를 가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은 당적 지도·통제차원에서 총정치국을 통해 군부의 사상통제 및 인사권에 대해서 직접 관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총정치국장을 대신하여 김정각 총정치국 제1부국장과 한동근 총정치국 선전부장이 김정은 영군체제를 수립하는데 중심 역할을 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²⁰³

203. 총정치국 선전부에서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위대성 교양자료』에서는 김정은을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천재적 영지와 지략을 지닌 군사의 영재’, ‘현대 군사과학과 기술에 정통한 천재’로 선전하고 있다. 그리고 김정은의 군 지도 체계를 의미하는 김정은의 ‘영군체계’ 수립을 강조하면서, ‘경애하는 장군님과 꼭 빼닮은 김정은 대장 동지에게 운명도 미래도 모두 위임’할 것을 군 장병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http://mainichi.jp/select/world/news/20091004_m00m030018000c.html> (검색일: 2010년 9월 18일).

당대표자회를 통해 김정은과 리영호 총참모장에게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부여한 것은 군부장악 시나리오의 2단계 조치로 실질적인 군사력 지휘권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실질적인 군사력 운용이 아닌 방어용 부대들과 군에 대한 보급품·군수물자의 지원과 전시대비 비축물자의 확보 및 조달임무를 담당하는 후방총국을 관장하는 인민무력부의 김영춘의 경우에는 군 원로로서 김정은의 군 장악을 후견하는 역할을 담당해 나갈 것으로 판단된다. 김정일은 장기간의 후계수업과 여러 차례의 숙청으로 군대를 철저히 장악하게 되었다. 김정은 역시 권력을 공고화하기 위해 군대의 지지가 필수적이므로 군부의 입장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군부를 장악하는 과정에서 과거 김정일이 군부를 장악하기 위해 군부의 쿠데타 모의사건을 조작한 것처럼 김정은 역시 정권 초기 군부를 틀어쥐기 위한 극단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²⁰⁴ 이 같은 상황에서 김정은은 대외적으로 강경한 군부의 입장을 지지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을 담대한 ‘군사의 영재’로 내세우기 위해 국제사회와의 군사적 긴장을 의도적으로 고조시킬 수도 있다.

이처럼 북한 군부는 선군정치 하에서 북한 체제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집단임에는 틀림없다. 반면 외형적 공고함 이면에는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 선군정치 표방 이후 김정일과 군부 간에는 강력한 결속과 연대가 형성되어있으나 최고의 지도자가 군부의 수장으로서 국가를 통치하는 당·군·정 관계의 왜곡으로 인하여 많은 잠재적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북한이 급격한 내부 불안정 사태에 직면할 경우 군부

²⁰⁴ 대표적인 쿠데타 모의로 1992년 ‘프론트 아카데미 사건’과 1996년 ‘6군단 사건’ 등은 김정일이 군부장악을 위해 조작된 사건으로 평가된다. 황일도, “전 북한 핵심관료 육필수기 3탄 ‘프론트 아카데미 사건’과 ‘6군단 사건,’” 『신동아』, 2006년 3월호, pp. 120~137.

I
II
III
IV
V
VI

가 갈등과 위기를 고조시킬 주요한 정치적 행위자로 등장할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도 높다. 특히, 김정일 사후 북한 내 권력투쟁과 파벌화 과정에서 군부가 전면에 나서 정치적 입지를 구축하거나 현재 상황으로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쿠데타, 내전발생 가능성도 상정할 수 있는 시나리오이다. 그러나 만일의 경우 군부의 전통적인 성향을 감안할 때 남북한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높고, 군부가 일방적으로 몰릴 경우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또한, 경제 개혁·개방 과정에서 군부의 소외와 탈정치화 과정은 군부 집단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올 수 있으며, 이는 북한 체제에 있어 잠재적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이 김정은 정권이 직면할 딜레마이다.

결국 김정은 역시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을 지도지침으로 하여 우선은 체제 안정화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당의 영도적 지위를 유지하면서 선군정치 고수로 군을 중심으로 사회 안정화를 추구하는 등 정치·군사중심의 정책패턴을 지속 추구해 나갈 것이다.²⁰⁵

(나) 군사안보 정책

◎ **기본방향**: 그동안 북한은 체제유지가 당면한 국가목표임에도 대내적으로 ‘혁명(사회주의혁명 완수)’과 ‘건설(사회주의 건설)’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제시하여 왔다. 이를 위해 사회주의 혁명단계를 세분화하기도 하고 ‘선군정치’라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작년 이후 국가목표 부분에 일부 변화를 보였다. 2009년 4월 최고인민회의

²⁰⁵- 1973년 김정일이 ‘주체사상에 대하여’ 논문발표로 주체사상을 정립한 것처럼 김정은 역시 ‘선군사상에 대하여’ 논문을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

제12기에서 개정된 헌법에서 ‘공산주의’ 용어가 모두 삭제되었다. 그리고 2010년 9월 당대표자회에서 개정된 조선로동당의 당규약 서문에서 당의 당면목적이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완전 승리’로부터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로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반도의 공산화 보다는 북한의 ‘혁명역량 강화’에 보다 주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북한이 국방자위정책이나 군사력 측면에서 대남 우위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향후 포스트 김정일체제에서 북한의 군사정책의 기본 방향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단기 독자전을 수행할 수 있는 대남 우위 확보 등 군사력 강화 부분에 초점이 맞추어질 것이다. 이의 실행을 위해 전후방을 망라한 총동원태세도 견지할 것이다. 포스트 김정일체제는 김정일 정권의 군사정책을 대부분 답습할 것으로 예상된다. 후계자 김정은시대의 핵심 인물로 리영호 총참모장이 크게 부상한 것으로 보아, 군부가 권력 승계의 중심에 자리하면서 기존의 군사정책을 변경하기보다 현재의 군사정책을 유지하고자 할 것이다. 대미 관계에 있어서는 핵보유국의 지위를 보장받고, 핵 군축회담으로 유도하면서 대미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대남관계에 있어서는 대량살상무기의 개발과 실전배치로 대남 우위의 군사력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군사위협을 통해 전쟁 위기의식을 고조시켜 한국으로부터 인위적인 경제지원을 도출해내도록 할 것이다. 특히, 후계자의 군사지휘 능력 과시를 위하여 대남 군사도발을 보다 빈번하게 감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012년까지 무리 없이 후계체제가 완성되어 김정은이 통치자로 등장한다면 김정일시대보다 더 호전적인 군사정책을 펼칠 가능성도 있다.

I
II
III
IV
V
VI

◎ **선군정치 논리에 따른 군사력 증강정책:** 선군정치가 하나의 정치체제로 법적 차원에서 확고한 기틀을 마련하게 된 것은 김정일시대의 공식출범을 알린 최고인민회의 제10기 1차 회의(1998년 9월)였다. 동 최고인민회의에서 새로 개정·채택된 사회주의 헌법에서 “군사중시 원칙에서 국가기관체계가 확립되고 국방위원장의 권능과 임무가 새로 규제돼 선군정치의 확고한 법적 담보가 마련”되었으며 “나라의 정치체제가 국방위를 중추로 하는 정치체제로 강화 발전되고 역사상 처음으로 선군정치가 확립된 것”²⁰⁶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이 김일성 사후 김정일이 권력의 전면에 등장하면서 군대를 앞세우는 이러한 선군정치를 펼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공식적으로 북한은 선군정치를 채택하게 된 것은 대외적인 요인에서 기인한다고 선전해 오고 있다. 이와 관련 한호석(미주평화통일 연구소 소장)의 설명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북한은 “제국주의의 공세에 포위되어 있다는 피 포위의식에 근거”한 정세관을 소유하고 있으며²⁰⁷ 북한의 피 포위 의식의 정세관은 한국 전쟁 이후 지금까지 바뀌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1990년대에 들어와 소련·동구사회주의의 붕괴, 독일의 흡수통합, 미국의 걸프전 압승, ‘핵 문제’로 인한 전면적인 미국의 압박, 그리고 경제난과 같은 상황이 전개됨에 따라 북한이 ‘피 포위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 한호석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정치 군사적 압력과 끈질긴 경제 봉쇄, 비렬한 사상문화책동”과 같은 세 가지 방향에서 ‘제국주의’의 공격과 압력이 가해지고 있으며

206. 김일성종합대학 편집위원회 편, 『김일성종합대학 학보』, 2004 겨울호 (평양: 김일성종합대학, 2004).

207. 한호석, “최근 북(조선)의 정세관과 정세 대응에 관한 담론 분석-1997년 상반기 『로동신문』 분석을 중심으로-,” <<http://www.onekorea.org/research/t18.html>>, pp. 2~4.

이것이 곧 정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고 이러한 우려는 주민들에게도 그대로 투영되어 정세를 인식하는 실질적인 의미체계로 수용되고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북한의 ‘피 포위 의식’은 그대로 좌절 또는 후퇴로 귀결되기보다는 ‘제국주의’의 포위공세에 반격을 가하고, 그 반격을 통해 포위공세를 뚫고 나가기 위한 전투적인 ‘역공’전략적 대응으로 연결되고 있다고 하는 한호석의 주장²⁰⁸은 일면 타당하다.

북한의 이러한 ‘역공’전략적 대응이 김정일의 군을 중시하는 ‘선군정치’방식 채택으로 구체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 당국은 공개적으로 선군정치 채택에 대한 외부요인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나섰다. “오늘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 위업은 제국주의자들이 반혁명적 책동으로 하여 엄중한 도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은 힘의 정책에 공공연히 매달리면서 다른 나라들에 대한 침략책동을 끊임없이 감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제와 그 추종분자들은 우리식 사회주의를 압살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²⁰⁹ 또한 김정일은 “20세기 90년대에 들어와 이전 소련과 동유럽 여러 나라들에서는 사회주의가 무너지고 세계정치구도와 역량관계에서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 제국주의 반동세력은 세계사회주의체계의 붕괴를 기화로 하여 반제 자주력량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였으며 특히 세계유일초대국으로 대두한 미 제국주의 국제무대에서 강권과 전횡을 부리고 다른 나라들의 자주권을 유린하면서 세계제패의 야망을 실현해 보려고 침략과 전쟁 정책을 더욱 악랄하게 추구하여 왔습니다”라고 함으로써 이에 맞서기

208. 위의 글, pp. 2~4.

209. 『조선중앙방송』, 1999년 8월 14일.

I
II
III
IV
V
VI

위해 선군정치를 내세워 군사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해오고 있다는 것이다.²¹⁰

이와 같이 북한당국은 선군혁명의 기본전선으로 ‘반제군사전선’, 특히 ‘반미제국주의군사전선’을 상정하고 그들의 선군정치 추진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북한당국의 주장에 따르면, 반제군사전선이 선군시대 혁명의 기본전선, 제일 생명선으로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 침략세력들이 사회주의를 지켜나가고 있는 북에 침략의 예봉을 돌리고 있는 것과 관련된다고 한다. 유럽에서의 사회주의 붕괴, 동서냉전구도의 파괴, 그와 관련하여 세계의 ‘유일 초대국’으로 등장한 미국은 일극세계의 확립을 중요한 전략적 과업으로 내세우고 자주성이 강하고 혁명적인 나라들을 없애기 위한 강도적인 침략전쟁의 길에 나서고 있으며 여기에서 미제는 이북을 그 첫째가는 침략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강력한 국방력을 마련하고 반제군사전선을 그 어느 때 보다도 튼튼히 다질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선군정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한결같이 펴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김정일이 북한군대를 중시하고 군대를 앞세우는 정치를 펴오고 있는 것은 군대자체가 정권을 위협하는 세력으로 변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군통제정책 강화의 일환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이에 더하여 김정일은 대내외적인 체제위협 요인이 발생할 경우 이를 차단 또는 억제하기 위한 물리적 수단으로 군대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선군정치를 채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선군시대에 이르러 군사가 첫째라고 강조한다. 선군시대에

²¹⁰ 김봉호, 『위대한 선군시대』, p. 48.

군사가 첫째라는 것은 군사가 국사 중의 국사로 된다는 것이다. 즉, 강력한 군사력을 마련하는데 우선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국방력 강화를 제일 중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선군정치를 “군대를 중시하고 그를 강화하는 데 선차적인 힘을 넣는 정치”라고 하면서 “인민군대를 강화하는 데 최대의 힘을 넣고 인민군대의 위력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의 전반사업을 힘있게 밀고 나가는 것은 김정일 동지의 특유의 정치방식”이라고 설명하고 있다.²¹¹ 북한은 정치방식이란 “정치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 체계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며 “정치방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따라서 정치위력과 정치제도의 공고성에서 근본적 차이를 가져오게 된다”고 하면서, “사회주의 정치사에서 미해결로 남아있던 이 중대한 문제가 우리 당의 선군정치방식에 의해서 빛나게 해결”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동시에 “선군정치방식은 바로 군사선행의 원칙에서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내세워 사회주의 위업 전반을 밀고 나가는 영도방식”이며, “그것은 본질에 있어서 혁명군대의 강화를 통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적 지위를 보장하고 인민대중의 창조적 역할을 최대한 높이는 정치방식”이기 때문에 “우리시대의 가장 위력하고 이상적인 정치방식으로 되고 있다.”²¹²고 밝혔다. 이러한 정의를 요약해 볼 때, 군의 중시와 강화, 그리고 혁명의 기둥으로서의 군대역할 등이 선군정치의 핵심이다.

특히, 북한 당국은 “한때 사회주의배신자들은 국방에 힘을 넣으면 주저앉고 사회발전이 떨어진다고 하면서 나라의 국방력을 체계적으

²¹¹ 고상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선군정치의 근본특징,” 『철학연구』, 1999년 1월호, pp. 17~18.

²¹² 『조선중앙방송』, 1999년 7월 22일.

I
II
III
IV
V
VI

로 약화시켰습니다. 이것은 군대를 단순히 물질적 부의 소비자로만 보는 그릇된 관점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군대가 강해야 경제건설의 평화적 조건이 보장됩니다.”²¹³고 주장함으로써 군사력 건설의 우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사실상 김정일의 ‘장군식 정치’가 정통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김정일 자신이 강력한 무장력을 강화·발전시켰다는 것이 북한주민들에게 인식되도록 해야 한다.

이에 따라 김정은 후계정권 하의 북한도 이제까지 권력과도기에 배태될 수 있는 군대 내의 불안정을 억제하기 위하여 군대통제 및 군대로부터의 정통성 확보를 위한 노력들을 더욱 강화함과 동시에 기존에 추구해 왔던 군사력 우위확보 중심의 군비증강정책을 지속시켜 나가고자 할 것이다. 특히, 북한은 한결같이 경제적 자립과 정치적 독립을 군사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국가안보를 위한 주체사상의 실천이라고 함으로써 군사적 방위능력은 다른 영역을 위한 필수 조건이며 모든 정책결정에 있어서 우선권을 부여할 것을 주장해 왔다. 북한은 그들의 주체성은 자주국방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볼 때 군비증강 중심의 군사정책 기본방향에는 커다란 변화는 없을 것이다. 군사력의 대남 우위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전투력 증강은 북한의 군사정책에 가장 핵심이며, 전략무기 확보, 전자전 및 사이버전 등에 주력할 것이다. 북한의 고민은 크게 두 가지이다. 우선, 대규모 병력, 재래식 병기, 전진배치 및 기습전략 만으로 대남 우위를 달성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또한 과학기술의 지체와 경제력 미흡으로 첨단화에 일정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이

213. 『조선중앙방송』, 1999년 7월 13일.

전략무기, 즉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의 확보이다. 핵탄두의 소량화를 통한 전술핵의 보유, 대륙 간 탄도미사일의 장거리화 등을 위해 매진할 것이다. 이와 함께 주목할 점이 정보전의 능력을 배가시켜 줄 전자전, 사이버전 능력의 강화이다.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 한국과 미국의 지휘체계의 무력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정보무기의 확보 등에도 주력할 것이다.

향후 북한은 군사우선주의를 추구하고, 군국주의적 병영국가화를 정당화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전투력 증강을 멈추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경제난으로 인해 재래식 전력의 증강에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비대칭 전력(핵과 미사일, 화생 무기 등) 증강에 일차적인 목표를 두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는 큰 투자가 필요 없는 실병(實兵) 위주의 전투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수부대를 대폭 증강할 것이다. 지난해에 7개 경 보병여단을 사단으로 증편하고, 5개 사단을 전방에 추진 배치한 것도 실병 위주의 전투력 강화를 위한 조치였다. 현재 18만으로 추정되고 있는 특수부대를 25만 명 이상으로 증편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상시 분쟁지역화가 가능한 북방한계선(이하 NLL)지역에서의 신형 잠수정 개발 및 배치, 공격 및 침투장비 개발, 백령도 등 서해 5도를 직접 위협할 수 있는 장거리 해안포 개발 및 교체 등 NLL에서의 긴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북한에 유리한 군사적 상황을 조성해 나가고자 할 것이다. 전방지역에도 사거리를 늘린 방사포와 자주포를 추가적으로 배치하여 대남 군사위협에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포스트 김정일시대의 군부 핵심인물인 리영호 총참모장이 포병사령관 출신이며 포병전술에 능한 인물이므로 포병화력의 증강과 방사포와 자주포 등 장사정포의 운영과 개발에 관심을 집중할 가능성도 있다.

I
II
III
IV
V
VI

◎ **핵전략 강화 정책 추구:** 최근 북한은 모든 나라가 그들 정권에 대한 적이라는 인식을 강하게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북한의 유일지배정권의 적은 그들이 공개적으로 상정하고 있는 ‘미제국주의와 이를 추종하고 있는 남한’은 말할 것도 없고 그들의 동맹국으로 아직까지 남아있는 중국과 냉전 붕괴 후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러시아를 포괄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특히, 북한은 핵문제를 빌미로 미국과 함께 중국이 그들의 정권을 붕괴시키는 데 적극 가담할 가능성에 대한 위협인식이 큰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북한체제의 제1의 적은 중국으로 교육받은 바 있다고 한 북한의 한 전직 ‘통전부’ 관료의 말은 이를 잘 설명해준다. 따라서 평양 정권은 이러한 주변 강대국에 대한 전방위 군사적 위협을 차단하기 위한 수단으로 핵전략을 적극적으로 강화하게 될 것이다.

먼저 북한 지도부는 그들의 핵무기가 한미동맹 군사력뿐만 아니라 중국 및 러시아 군사력과 균형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전략에 초점을 맞추어 나갈 것이다. 특히 북한은 ‘제한전쟁’이라는 사고에 입각하여 중국이 그들의 정권을 흔들 수 있는 움직임을 보일 경우 중국에게 과감한 군사적 응징활동을 감행하여 이를 차단하고자 할 것이다. ‘제한전쟁’이라는 개념은 약소국(북한)이 강대국(중국, 러시아, 미국 등)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감행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강대국은 ‘핵확전’을 우려하여 제한적인 군사적 응징활동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가정에 근거한다.

마찬가지로 북한의 핵실험 성공은 북한이 정전협정 하의 군사분계선에서 호전성을 심화시키는 군사 전략적 과감성을 띠도록 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의 이러한 과감한 군사적 조치는 한미가 제한적이거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북한을 군사적으로 공격하기는 어려울 것이

라는 신념에 기초한다. 이에 따라 북한은 미국과 남한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도발 위협을 가함으로써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데 적극성을 보일 수 있다. 예를 들면 북한군이 정전협정 의무이행을 포기한다든가, 서해 인근 NLL을 침범하여 도발행위를 자행하여 NLL의 무실화를 노린다든가, 북한군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군사분계선(MDL) 월선의 빈도를 높여 군사분계선을 무시함으로써 군사적 혼란을 가중시킨다든가, 주한미군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군사적 돌출행위를 감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향후 북한이 벌이게 될 군사적 모험행위들은 2가지 유형으로 대별된다. 한반도 정전협정 폐기를 위한 군사적 도발과 주한미군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이 그것이다.

한반도 정전협정 폐기를 위한 북한의 군사적 도발은 주로 NLL 침범 등, 오래 전부터 단계적으로 구체화되어 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1999년 6월 연평해전, 2002년 6월 NLL 침범 및 북 해군함정의 남한 고속정에 대한 군사적 공격 등이 대표적이다. 북한은 NLL을 정전협정 하 설립된 유엔사의 관심 및 개입 가능성이 비교적 취약한 점을 이용하여 NLL지역의 분쟁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NLL 분쟁의 심화를 통해서 당면한 미국의 군사적 위협을 견제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한반도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고, 동시에 정전협정 폐기를 위한 정치적 군사적 목적을 달성하는 전략을 구사할 수도 있다. NLL의 모호성을 활용하여 보다 과감한 서해상의 도발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조성을 강화한다든가 정전협정상 비교적 논란의 여지가 있는 지역을 선택하여 단계적으로 공세를 집중함으로써 정전협정 폐기 노력을 구체화해 나갈 수도 있다. 또한 북한의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적 공세에 보다 자신감을 보임으로써 이에 대한 미국의 국내

I
II
III
IV
V
VI

적 여론을 자극하여 주한미군 철수를 도모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북한은 주한미군의 살상을 동반하는 군사적 테러행위를 감행함으로써 주한미군의 희생에 대한 부정적 여론조성으로 미국 내 주한미군 철수 요구를 증폭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파키스탄이 핵실험 성공으로 핵폭탄 보유를 사실화하고 나서 적대적인 인도에 대한 군사적 공격에 있어서 보다 대담해졌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실제로 파키스탄은 1998년 5월 핵실험으로 **Kashmir** 계곡에서의 호전성을 심화시키는 과감성을 표출하였다. 파키스탄의 그러한 과감한 군사적 조치는 인도가 제한적이거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파키스탄을 군사적으로 공격할 수 없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1999년 여름 인도와 파키스탄의 **Kashmir** 지역 통제선을 넘어 파키스탄군이 카길로 침공을 감행하게 된 것 역시 파키스탄의 대 인도 군사력 균형감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직접적인 결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북한은 핵무장으로 한미동맹의 연합군사력에 대항할 수 있는 군사전략을 펼쳐나갈 가능성도 있다. 강대국의 군사적 위협에 직면한 약소국의 핵무기 필요성과 관련해서 카플란(Morton A. Kaplan)은 “체코슬로바키아가 소량의 핵무기만 가졌더라도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데 훨씬 더 신중하게 나왔을 것”²¹⁴이라 지적하였다. 북한의 경우에 있어서도, 그들이 핵카드를 활용하여 핵강국인 미국의 한반도 군사개입을 억제 또는 제한하고자 할 것이다. 소국인 북한이

²¹⁴ Morton A. Kaplan, “Unit Veto Reconsidered,” in Richard Rosecrane, ed., *The Future of the International Strategic System* (San Francisco: Chandler, 1972), p. 53; George H. Quester, “the Politics of Twenty Nuclear Powers,” in Richard Rosecrane, ed., *The Future of the International Strategic System* (San Francisco: Chandler, 1972), p. 67.

나 체코가 소량의 핵무기를 가졌다 해서 강대국인 미국에 대해서 선제공격을 감행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소국들에 의한 선제 핵공격을 완전히 부정하기도 어렵다. 특히, 북한과 같이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독특한 유일지배정권을 유지해오고 있는 국가가 강대국에 대해서 핵공격하는 무모함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강대국의 이러한 우려는 북한의 소규모 핵보유라 할지라도 강대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은 핵카드를 미군철수 요구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할 것이며, 동시에 유사시에는 ‘핵공갈’로 미국의 군사적 개입자체를 차단하여 독자적으로 대남한 군사적 우위를 점하게 됨으로써 한반도에 있어서 정치 군사적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할 것이다. 즉 전쟁 발발 시 북한은 미 본토뿐만 아니라 주일미군 및 주한미군에 대한 핵무기 사용 ‘공갈’로 미군의 한반도 군사전략 자체를 제한할 수 있는 군사전략을 추구할 가능성을 간과할 수 없다.

북한의 이러한 핵전략을 보다 실행 가능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미 본토까지 위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운반수단, 즉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필요로 한다. 북한이 대포동1호 장거리 미사일, 미 본토 전역을 사정거리에 두는 대포동2호 미사일 개발 등을 서둘러 오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핵전략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북한의 핵무장을 두고 그것은 남한, 즉 우리를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국만을 상대하기 위한 것이라는 판단은 지나치게 단견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이 그들의 핵문제와 관련하여 미국과의 직접적인 협상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정전협정 폐기를 통한 유엔사 해체, 주한미군 철수 등을 노리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그동안 핵카드를 활용하여 ‘북미안보대화’라는 북미 양자협상 틀을 우선적으로

I
II
III
IV
V
VI

로 구축하고자 할 것이다. 여기에서 북한은 한반도의 주요 군사문제, 즉 정전체제의 평화협정체제로의 전환, 주한미군문제 등을 협상하면서 한미군사동맹관계를 약화시키고자 하는 단계적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제 핵무장 사실을 공식화한 북한이 이러한 대미, 대남 군사전략을 보다 공세적으로 구사하게 된 현실에 직면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핵은 체제생존 그 자체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은 지극히 희박하다. 북한은 이라크 후세인정권이 핵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미국의 군사공격을 받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강행한 것은 핵을 보유함으로써 체제생존이 보장된다고 믿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심각한 경제난으로 재래식 무기의 증강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북한으로서는 핵무기만이 생존을 보장해 준다고 믿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6자회담에 복귀하여 비핵화를 논의하기보다 한반도 긴장조성을 번갈아 하면서 우선적으로 평화협정 체결 여건을 조성하고, 핵보유국의 지위를 미국으로부터 획득하고 핵군축 협상 요구로 그들의 핵카드를 적극 활용하고자 할 것이다. 북한은 체제생존이 완전하게 보장되는 상황이 조성되기까지는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군부의 입장에서 핵무기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미국의 군사적 위협과 대남 군사적 우위를 달성하는 유일한 수단으로 인식함으로써 핵포기를 용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핵과 미사일을 이용한 체제생존 전략과 대미협상, 경제지원 도출 전략은 후계자 김정은 체제하에서도 지속될 것이다.

◎ **대남 군사적 위협태세 지속:** 향후 북한은 평화협정을 주요 협상 주제로 들고 나올 것이다. 북한이 원하는 대미관계, 남북관계를 만들기 위해 군사문제를 이슈화할 것이며, 이는 **NLL**에서 국지적 도발 등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후계권력에게 가장 큰 화두는 경제이다. 후계권력은 경제회복 부문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주민들로부터 정당성과 지지를 얻기 힘들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미관계의 진전, 그리고 남북 경협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은 대미관계에서 핵문제와 함께 평화협정을 주요 문제로 제기할 것이다. 이 문제의 논의가 제대로 진전되지 않을 경우, 남북 간 군사적 분쟁이나 갈등을 야기하고 이로부터 평화협정의 필요성을 부각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 방법 중 하나로 서해 **NLL**에서 긴장관계 조성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권력 이양기나 남한에서 대규모 국제적 행사가 있을 경우 군사도발을 감행한 바 있다. 김정일이 공식 후계자로 등장한 후 버마 아웅산 폭파 테러사건이 일어났다. 남한에 중요한 국제행사인 **88올림픽** 때는 **KAL 858기** 폭파사건을 일으켰고, 월드컵 기간에는 제2차 연평해전을 일으켰다. 특히 북한은 군대생활을 했다고 하나, 군 경력이 일천한 후계자 김정은이 군부의 환심을 사거나, 군부를 장악하는 과정에서 군사적 지휘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군사적 국지도발 전략을 적극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김정은은 젊고 모험적이며 본인 스스로 선군정치의 후계자라 생각하기 때문에 군사적 위협으로만 만족하지 않고 보다 과감한 군사적 국지도발을 감행하는 군사적 태세를 보이게 될 것이다. 김정은은 이러한 과감한 군사적 국지도발을 통하여 군대를 직접 지휘하는 ‘군사 최고 지휘관’으로서의 정통성을 높여나가고자 할 것이다. 지난 11월 23일 북한이 그들의 해안포로 연평도를 공격

I
II
III
IV
V
VI

한 것이 대표적인 예로 지적된다. 북한 내부에서는 이를 김정은의 ‘군사지휘 작품’으로 추켜세우고 김정은의 군사 지휘관으로서의 새로운 후계자 면모를 부각시키고자 한다. 이렇게 볼 때, 북한은 ‘김정일 생전의 후계자 김정은시대’에는 물론이고 ‘김정일 없는 김정은 권력시대’에도 군사적 수단을 활용한 권력 공고화 노력에 집중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 **군사외교 또는 대외적 군사협력 방향:** 현재 북한이 군사적으로 의지할 곳은 중국뿐이다. 최근 동서해 한미연합해상훈련에 대한 중국의 대응은 북한으로 하여금 중국의 군사력을 재인식하게 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북한은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갈등 상황을 이용하여 북·중 군사유대관계를 강화하면서 중국으로부터 무상으로 군사적 원조를 받고자 할 것이다. 천안함 피격 사건은 북·중 간의 군사적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렇다고 해도 중국이 북한에게 무기를 공급할 정도의 수준으로 쉽게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중국은 북한을 완전히 신뢰하고 있지 않으며, 북한이 신형무기로 무장할 경우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하기 때문이다. 중국이 북한을 전폭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증거는 지난 5월 북·중 회담에서 후진타오와 원자바오의 충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중국이 북한을 지원한다하더라도 미국과 군사충돌을 야기하는 상황까지는 나아가지 않을 것이다. 중국의 최우선 정책 목표가 경제발전이고, 이는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면 결코 경제성장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을 중국이 잘 알고 있다. 중국으로서는 미국이라는 큰 시장을 잃으면서 북한 편을 들지 않을 것이다. 김정일과 마찬가지로 후계

자 김정은도 오랜 혈맹이며 맹방인 중국과의 군사적 유대관계를 최우선적으로 강화하고자 할 것이다. 정기적인 군사협력 교류는 물론, 중국으로부터의 신형 무기 지원에 군사외교의 초점을 맞출 수도 있다. 얼마간 북한이 경제사정이 호전된다면 중국으로부터 무기 구입도 고려할 가능성도 있다. 한반도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러시아와의 군사협력도 강화될 것으로 보이나 러시아가 한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북한 군사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수도 있다.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은 상징적인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북핵 문제에 있어서는, 미국의 대북 제재가 계속된다면 핵 기술이전과 미사일 판매와 같은 미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안을 협상 의제로 하여 한·미 분리 대응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궁극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추구하지만 미국의 우선적 관심은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 기술을 중동 국가나 테러집단에 이전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저지하는 것이다. 미국은 북한이 미국에 적대적인 국가나 집단에 핵과 미사일의 기술이전이나 판매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협상을 제의하면 이에 호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기본적으로 중국,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은 군사외교 차원, 그리고 무기획득 차원으로 대별될 것이다. 군사외교 차원에서는 인적 교류, 상호 방문 등이 주류를 이룰 것이며 합동군사훈련 등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무기획득 차원에서는 전자전, 사이버전을 위한 첨단기술 및 무기, 그리고 재래식 병기의 노후화를 대체할 수 있는 무기의 구입 등에 주력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상당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의 대외 무기 수출은 여러 제약요인 속에서도 지속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분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I
II
III
IV
V
VI

나. 대외·대남부문

(1) 김정일 정권의 대외정책 추진현황

1994년 7월 김일성 사후 북한은 유혼통치라는 명분으로 기존 대외 정책의 틀을 유지하였다. 1998년 9월 ‘강성대국 건설’을 내걸고 김정일 정권이 공식출범한 이후 북한은 적극적인 외교활동을 전개하여 미국·일본 및 아시아 국가들과 접촉 강화, 중국·러시아와의 관계 긴밀화, 대서방 접근 적극화, 남북정상회담, 중국·러시아·일본과의 정상회담, 유럽연합(EU) 국가들과의 수교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2002년 9월 일본인 납치 인정과 10월 핵무기 개발 시인 등 ‘고백 외교’는 이러한 성과를 결정적으로 침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김정일 정권은 핵문제로 미국과 갈등을 야기하고, 이를 협상수단으로 활용하여 미국으로부터 체제보장 확보와 경제·외교적 지원 도출을 도모하는 ‘갈등적 편승전략’을 전개하는 동시에, 특히 중국과의 관계긴밀화를 통한 ‘균형전략’이라는 생존외교를 지속적으로 전개하였다.

(가) 핵외교

핵개발 시인 이후 북한은 강경한 입장을 보였으며, 2003년 1월 10일 정부성명을 발표,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하고, 100만 명 평양시민을 동원하여 반미 군중집회를 개최하였다. 이에 대해 부시 미 행정부는 북한이 핵개발계획을 시인한 이상 핵개발을 포기하고 기존에 개발된 모든 시설과 장비를 폐기하는 이외의 다른 대안은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의 중재로 2003년 4월 23~25일 북경에서 3자회담이 개최되었으나,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선언함으로써 결렬되었다.²¹⁵ 이후 미국은 국제공조를 통한 대북 압박을 가속화하면서 다자회담을 주장하였다.²¹⁶

2003년 7월 31일 북한이 다자회담을 수용함으로써 6자회담이라는 새로운 논의의 장이 마련되었다.²¹⁷ 8월 27~29일 간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1차 6자회담에서 북한은 미국의 체제보장과 핵개발 포기 조치의 일괄타결, 동시행동원칙에 따라 단계별 이행을 요구한 반면, 미국은 선행개발 계획의 폐기를 주장하였다. 제1차 6자회담 이후 북한은 핵억제력 유지·강화 및 공개 등을 언급하며 미국을 압박하면서도 2004년 2월 제2차 회담, 6월 제3차 회담에 호응하였다. 북한은 제3차 회담에서 핵동결에는 반드시 보상이 수반되어야 하며 동결기간은 이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²¹⁸ 북한은 8월 16일 6자회담 실무그룹회의 참가를 거부하고, 지속적으로 핵무기 보유 가능성을 암시하면서 벼랑끝 전술을 구사하였다. 2005년 2월 10일 북한은 외무성 성명을 통해 6자회담 참가의 무기한 중단과 핵무기고를 늘이기 위한

²¹⁵ Kyung-Ae Park, "North Korea in 2003: Pendulum Swing between Crisis and Diplomacy," *Asian Survey*, Vol. XLIV, No. 1 (January/February 2004), pp. 140~142.

²¹⁶ 미국은 한국·일본과의 정상회담(2003.5.14, 5.23)을 통해 '추가적 조치'와 '강경한 조치'에 합의하였고, 미국은 6월 12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11개국 회의에서 북한을 주목표로 한 대량살상무기확산 방지 방안 마련하였다. 또한 6월 13일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회의에서 북한의 마약거래 및 위조지폐 공동 대처, 다자회담 개최에 합의하였다.

²¹⁷ 6자회담의 전개와 북한과 미국의 전략 분석은 서훈, 『북한의 선군외교: 약소국 북한의 강대국 미국 상대하기』 (서울: 명인문화사, 2008); Gilbert Rozman,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and U.S. Strategy in Northeast Asia," *Asian Survey*, vol. XLVII, no. 4(July/August 2007), pp. 601~621 참조.

²¹⁸ 보다 자세한 내용은 통일연구원, 『통일환경 및 남북관계 전망: 2004~2005』 (서울: 통일연구원, 2004), pp. 55~56; 조선중앙통신사 편, 『조선중앙통신사 2005』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2005), pp. 252~253; Kyung-Ae Park, "North Korea in 2004: From Brisk Diplomacy to Impasse," *Asian Survey*, Vol. XLV, No. 1 (January·February 2005), pp. 15~18 참조.

I
II
III
IV
V
VI

대책을 취할 것임과 함께 “자위를 위해 핵무기를 만들었다”고 밝혔다.²¹⁹ 북한은 3월 2일 6자회담 연기와 관련하여 미국의 책임을 강조하고, 대북 적대시정책 포기 및 평화공존 의지 표명과 실천행동을 요구하는 외무성 비망록을 발표하였다.²²⁰ 이어서 3월 31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과 남조선에 배치된 핵무기 때문이며, 북한이 핵무기 보유국이 된 지금 6자회담은 군축회담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²²¹

2005년 7월 제4차 6자회담이 재개되어 9월 19일 제4차 6자회담 제2단계회의에서 북한의 모든 핵무기·현존 핵계획 포기 및 NPT·IAEA 복귀와 경수로 제공 문제 논의,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성명’이 채택되었다. 이로써 북한 핵문제의 해결에 실마리가 풀리는 듯하였으나,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로 인해 11월 9일 개최된 제5차 6자회담은 아무런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였다.²²² 미국이 위조지폐 제조와 돈 세탁을 이유로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은행(BDA)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함으로써 6자회담이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2006년 7월 5일 미사일 발사, 10월 9일 핵실험을 강행하였다. 이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각각 ‘결의 1695호’와 ‘1718호’를 채택하였다.²²³ 12월 재개된 제5차

219. 『로동신문』, 2005년 2월 11일.

22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비망록, “미국은 조·미사이의 핵문제해결을 파탄시킨데 대하여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로동신문』, 2005년 3월 3일.

221. 『조선중앙통신』, 2005년 3월 31일.

222. 6자회담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조선중앙통신사 편, 『조선중앙년감 2006』(평양: 조선중앙통신사, 2006), pp. 285~287 참조.

223. 유엔안보리 결의 1695호는 미사일을 비롯한 각종 대량살상무기 제작에 사용될 수 있는 부품, 기술, 자금 유입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제1718호는 유엔회원국들의 대량살상무기 및 재래식 무기, 사치품 수출 금지, 북한

6자회담 제2단계회의에서 북한이 BDA문제 해결전 비핵화논의 불가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성과는 없었다.

2007년 2월 개최된 제5차 6자회담 제3단계회의에서 BDA문제 해결을 전제로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5개국의 대북 상응조치 이행계획인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2·13합의)가 도출되었다. ‘2·13합의’가 비교적 순조로이 이행되면서 2007년 10월 개최된 제6차 6자회담 제2단계회의에서 북한은 모든 핵시설의 불능화와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를, 미국은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 및 적성국교역법 중단을 약속하였다(10·3합의).²²⁴ 그러나 북핵 신고와 검증 문제의 미합의와 이에 따른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 연기에 반발하여 북한은 2008년 8월 26일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불능화 중단 선언에 이어 9월 19일 핵시설 재가동 입장을 밝혔다.²²⁵ 미국이 6월 26일 대북 적성국 교역법 적용의 종식과 10월 11일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를 취한 이후인 12월 8~11일 개최된 제6차 6자회담 3차 수석대표회담을 통해서도 북핵 검증의정서 채택이 무산되었다.²²⁶

북한은 2009년에 들어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유화적인 대북정책으로의 전환을 기대했으나, 이러한 기대가 무산되자 강경한 입장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북한은 4월 5일 다단계 로켓을 발사하였다. 4월 14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유엔 안보리 의장 성명이 발표되자, 동일 북한은 외무성 성명을 통해 6자회담 불참 선언과 ‘자위적 핵억제력 강화’를 천명하였다.²²⁷ 이어서 북한은 5월 25일 제

의 대량살상무기 관련 자금과 금융자산 동결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224. 조선중앙통신사 편, 『조선중앙년감 2008』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2008), pp. 236~237.

225. 『조선중앙통신』, 2008년 8월 26일; 『조선중앙통신』, 2008년 9월 19일.

226. 통일연구원,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6호(2008년 11·12호), p. 108; 조선중앙통신사 편, 『조선중앙년감 2009』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2009), p. 268.

I
II
III
IV
V
VI

2차 핵실험을 실시하였다. 6월 12일 유엔 안보리에서 무기금수조치와 화물검색, 금융제재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결의 1874호’를 채택하자 북한은 6월 13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핵포기란 절대로, 철두철미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대응조치로 ① 새로 추출되는 플루토늄 전량 무기화, ② 우라늄 농축 작업 착수, ③ 대북 봉쇄 시 군사적 대응 등을 천명하였다.²²⁸ 이후 북한은 7월 25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현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대화방식은 따로 있다”고 밝힌 바 있고, 11월 2일 미국과의 회담을 해보고 6자회담을 응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선 회하였다.²²⁹ 12월 8일 보즈워스 미 대북정책특별대표의 방북은 오바마 행정부 출범이후 최초의 고위급 직접대화였다. 12월 11일 태국정부는 유엔안보리결의 1874호에 의거 북한의 무기를 수송하던 그루지야 국적의 수송기를 압류하였다.

북한은 2010년 신년공동사설에서 한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 근본문제는 ‘조미사이의 적대관계 종식’이며,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체제를 마련하고 비핵화를 실현하려는 우리의 립장은 일관하다”라고 밝혔다. 북한은 1월 11일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정전협정 당사국의 평화협정 체결 회담 제의하기도 하였으나, 4월 9일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핵무기를 늘리고 현대화할 것” 주장함으로써 여전히 대미 직접협상에 주력하면서 핵카드를 사용하고 있다. 북한은 4월 9일 미국의 『핵태세 검토보고서』에

²²⁷ 이 성명에서 “6자회담이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고 우리의 무장해제와 제도 전복만을 노리는 마당으로 화한 이상 이런 회담에 다시는 절대로 참가하지 않을 것이며 6자회담의 그 어떤 합의에도 더 이상 구속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언급하였다. 『로동신문』, 2009년 4월 15일.

²²⁸ 『조선중앙통신』, 2009년 6월 13일.

²²⁹ 『조선중앙통신』, 2009년 7월 25일; 2009년 11월 2일.

서 북한과 이란은 핵 불사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힌 점을 강력히 비난하였고, 4월 21일 핵보유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다른 핵보유국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국제적 핵비확산과 핵 군축에 동참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외무성 비망록을 발표하였다.²³⁰ 북한은 5월 12일 자체의 힘으로 핵융합반응에 성공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5월 14일 NPT 탈퇴 및 핵보유의 정당성을 재차 주장하였다.

(나) 생존외교

김정일 정권의 생존외교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인 것이다. 2002년 10월 북한으로부터 신의주 특구 초대 행정장관으로 임명된 양빈(楊斌)을 중국이 구속함으로써 양국관계가 불협화음이 있음이 드러났으나, 이후 2004년 4월 김정일의 중국 방문은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양국 간 최고지도자의 상호방문은 2005년 10월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의 방북, 2006년 1월 김정일의 방중, 2008년 6월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의 방북, 2009년 10월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의 방북, 2010년 5월과 8월 김정일의 방중 등으로 이어졌다. 이는 북한과 중국의 ‘특수관계’를 나타내는 증거이다.

북한은 경제난 해소 및 핵문제로 인한 국제사회의 압력에 대처하기 위해 중국의 후원이 필수불가결 하였다. 중국은 자국의 경제발전과 안보를 위해 한반도의 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원유·식량 등 대북 지원과 합작회사 건설, 광물자원 수입 등을 통해 북한 체제의 유지와 대중 경제의존도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²³¹

²³⁰. 『조선중앙통신』, 2010년 4월 21일.

I
II
III
IV
V
VI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도 북한의 입장에 동조하고 있다. 북한과 중국은 수교 60주년을 계기로 2009년을 ‘친선의 해’로 설정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6자회담에서 중재역할을 하면서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유엔의 대북 제재에도 동참하고 있지만,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해서는 북한을 두둔하는 입장을 보였다.

둘째, 북한의 핵개발 시인이후 북한·러시아 간에는 정상회담은 개최되지 않았으나, 특사 파견, 고위인사 교류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2003년 1월 대통령 특사 로슈코프 외무차관의 방북, 9월 폴리코프스키 극동지구 대통령 전권대표의 방북, 2004년 7월 라브로프 외무장관의 방북, 2005년 10월 폴리코프스키의 방북, 2008년 10월 박의춘 외상의 방러, 2009년 4월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11월 미로노프 러시아 연방 상원의장의 방북 등이 이루어졌다. 북한과 러시아 간에는 한반도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연결사업, 나진-하산 철도 현대화, 시베리아 가스관의 북한 통과 및 대북 가스제공문제, 대북 전력공급, 북한 노동자 송출 문제 등이 논의되었으며, 2006년 8월에는 평양에 러시아 정교회(정백사원)가 개원되기도 하였다.²³² 2007년 3월에는 7년만에 제4차 북·러 경제공동위원회가 개최되어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의정서를 채택하였고,²³³ 2008년 4월 나진-두만강 철도와 나진항 현대화를 위한 북·러 협조협정, 8월 나진-두만강

²³¹ 북한의 대중 경제종속에 대한 분석은 Jaewoo Choo, “Mirroring North Korea’s Growing Economic Dependence on China,” *Asian Survey*, vol. XLVIII, no. 2 (March/April 2008), pp. 343~372 참조.

²³² 통일부, 『월간 북한동향: 2006.7.28~2006.8.31』, p. 13; 조선중앙통신사편, 『조선중앙년감 2007』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2007), p. 249.

²³³ 통일연구원, 『통일환경 및 남북한관계 전망: 2007~2008』 (서울: 통일연구원, 2008.2), p. 78.

철도 임대 계약 체결, 10월 나진-하산 철도 및 나진항 개건 착공식 등이 이루어졌다.²³⁴

한편 러시아는 6자회담에 참여하여 2007년 6월 BDA 북한 자금문제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였으나,²³⁵ 북한의 미사일 발사, 핵실험 등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셋째, ‘고백외교’ 이후 북한의 대일 접근은 핵·미사일문제 뿐만 아니라 일본인 납치문제로 인해 진전을 이루지 못하였다. 핵개발 시인 직후인 2002년 10월 29일 개최된 제12차 수교회담은 성과가 없었고, 2004년 5월 22일 고이즈미 총리의 방북에 따른 제2차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은 일본으로부터 경제지원 도출 및 미국의 대북 강경입장 완화를 시도하였다.²³⁶ 그러나 납치생존자 8명 중 5명만 귀국하고, 납치되었던 요코다 메구미의 유골이 가짜로 확인된 이후 일본의 대북여론이 강경해지자, 12월 31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남북 일본인 조사 자료와 유골의 진위에 대한 일본의 재조사 요구를 반박하면서 “조일 정부 간 접촉은 더는 의의를 부여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밝혔다.²³⁷ 북한은 2005년에 들어 과거사 청산, 대북 제재, 일본의 군비확장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 의도, 독도문제 등의 사안에 걸쳐 대일 비난의 강도를 높였다.²³⁸ 2006년 2월 재개된 제13차

234. 통일연구원, 『2009 북한개요』 (서울: 통일연구원, 2009.10), p. 155.

235. 6자회담에서 러시아의 역할에 대해서는 L. Zabrovskaya, “The Role of Russia in Six-power Negotiations on the Removal of the Nuclear Threat from the Korean Peninsula,” *Far Eastern Affairs*, vol. 35, no. 4(2007), pp. 10~18 참조.

236. 이 회담을 통해 북한은 쌀 25만 톤과 1천만 달러 상당의 의약품을 지원받았다. 조선중앙통신사 편, 『조선중앙년감 2005』, p. 246.

237. 제2차 정상회담이후 북한의 대일 입장은 위의 책, pp. 255~256 참조.

238. 2005년 일본과의 관계를 북한은 “더욱 광란적으로 벌어진 일본의 반공화국 책동”으로 기술하였다. 조선중앙통신사 편, 『조선중앙년감 2006』, pp. 287~289.

수교회담도 결렬되었다. 더욱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은 일본의 대북 강경입장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다만 2007년 ‘2.13 합의’에 따라 제1차 ‘북·일 관계정상화 실무회의’가 2007년 3월 개최된 이후 2007년 9월, 2008년 6월, 8월 등 3차례 개최됨으로써 일정한 진전을 보이는 듯하였다. 2008년 8월 실무회의에서 북한은 납치피해자 재조사를 위한 위원회 설치에 합의하고, 일본은 동 위원회 발족과 더불어 인적 왕래 및 전세기 왕래 규제 해제 등을 합의하였다.²³⁹ 그러나 북한이 조사위원회 설치 연기를 통보함으로써 일본은 납치문제 미해결을 이유로 대북 경제·에너지 지원 불참 및 대북 제재 연장 등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은 일본의 에너지 지원 불참에 반발하면서 일본은 6자회담 참여자격이 없다고 주장하였다.²⁴⁰ 2009년 북한이 재차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강행하자 일본의 대북 강경입장은 강화되었다. 북한은 8월 30일 일본 총선 결과 하토야마 민주당 정부가 출범한 이후 유화적인 태도를 보였다.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9월 10일 교토통신과의 회견에서 “일본 당국의 부당한 적대시 정책을 반대하는 것이지 일본 국민은 적이 아니다”라는 유화적인 입장을 보였다.²⁴¹

그러나 2010년에 들어 북한은 일본의 과거죄행에 대한 인정과 배상 요구와 함께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대북 적대시 정책을 비난함으로써 대일 관계개선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넷째, 북한의 대유럽외교는 1998년 12월 북한 외무성대표단과 EU대표단 간 최초의 정치대화 개최를 계기로 적극화 되었다. 북한

²³⁹ 통일연구원, 『통일환경 및 남북한관계 전망: 2008~2009』, p. 74.

²⁴⁰ 통일연구원, 『2009 북한개요』, p. 143.

²⁴¹ 통일연구원, 『통일환경 및 남북한관계 전망: 2009~2010』, p. 86.

은 2000년 1월 이탈리아, 2000년 10월 영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한데 이어 2001년에 들어 네덜란드(1.15), 벨기에(1.23), 스페인(2.7), 독일(3.1), 룩셈부르크(3.5), 그리스(3.8) 등과 연이어 외교관계를 수립함으로써 EU 국가들에 대한 외교적 접근을 가속화하였다. 2001년 5월 EU 의장인 스웨덴의 페르손 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하여 서방의 국가원수로는 처음으로 김정일과 회담을 가졌으며, 5월 14일 EU와 북한은 외교관계를 체결하였다. EU와의 관계 발전에 대해 북한은 “새 세기의 국제관계 발전과 세계의 다극화 추세를 추동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평가하였다.

북한의 핵개발 시인 이전 북한과 EU는 정례적인 정치대화, 경제관계 확대, 인적 교류, 대북지원 등 활성화되는 양상을 보였으나, 핵문제로 인해 북한의 급속한 대EU 접근은 제동이 걸렸다.²⁴² 그러나 EU의 대북 지원과 EU 및 개별 국가 정부·의회 대표단의 방북은 지속되었으며, 2003년 12월 10일 아일랜드와 외교관계를 체결하였다. 이와 함께 북한과 EU는 2004년 8월, 2005년 10월, 2007년 10월 3차례의 경제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한편, 핵문제와 함께 인권문제는 북한·EU 관계개선의 또 다른 걸림돌이었다. 북한은 1998년 이래 2004년까지 EU와 7차의 정치대화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EU는 대북 인권압력을 강화하고 북한 당국이 유엔인권위원회의 결의내용을 준수하는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유엔 총회에 북한 인권개선 촉구결의안을 상정하였으며, 2005년 12월 유엔 총회가 사상 처음으로 북한 인권개선촉구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이에

²⁴² EU는 북한 핵문제와 관련하여 EU 의회 차원에서 2003년 1월 NPT 탈퇴 결정 철회 촉구 대북결의안 채택 및 2003년 3월 EU 특별정상회의에서 한반도 위기상황 악화 행동 자제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I
II
III
IV
V
VI

반발하여 북한은 EU와의 정치대화를 거부하였다. 2006년에는 7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10월 핵실험을 강행함으로써 EU가 북한과의 정치대화 개최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북한·EU관계는 냉각되었다. 2007년 2월 제5차 6자회담 3단계회담에서 북한 핵문제에 대한 일정한 진전이 합의된 이후 북한·EU 간 공식 대화는 재개되었다. 2007년 이후 북한·EU 간 교류는 EU본부·개별 회원국·개별기업 등의 차원에서 인적·물적 교류와 인도적 지원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2009년 4월 북한의 다단계 로켓발사와 5월 제2차 핵실험은 양자관계를 냉각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7월 EU 27개 외무장관회의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874호와 별개로 자체의 대북한 제재에 나선다는 공동입장을 채택하였다.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사건과 관련하여 유럽의회는 6월 17일 ‘한반도 상황과 관련한 결의안’을 채택하였다.²⁴³

북한은 EU와의 관계증진으로 경제지원을 획득할 수 있고, 이로부터 파생하는 체제개방 효과는 미국·일본과의 관계개선에서 초래되는 것보다 적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핵·미사일 문제 및 인권문제 등으로 인하여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다섯째, 김정일 정권의 대제3세계외교는 주로 대비동맹운동 외교, 아세안지역안보포럼(AFR) 외교, 초청·방문 외교의 양태를 띠면서 북한 의 입장에 대한 국제적 지지 확보 및 식량·자원 확보에 초점을 두었다.

²⁴³ 이 결의안은 “북한 어뢰가 천안함 침몰을 야기했다는 합동조사단 조사결과를 인정하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반하는 이러한 도발적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명시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논의과정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을 촉구하였다. 이와 함께 이 결의안은 북한 핵프로그램 폐기를 위한 6자회담 재개를 촉구하는 동시에 EU집행위원회에 대해서는 기존의 대북 인도주의 구호프로그램 지속과 북한과의 대화채널 유지를 주문하였다.

북한은 2003년 2월 제13차 비동맹정상회의, 2005년 4월 반동회의 개최 50돌을 기념하기 위해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된 아시아·아프리카 정상회의, 2006년 9월 쿠바에서 개최된 제14차 비동맹정상회의, 2009년 7월 이집트에서 개최된 제15차 비동맹정상회의에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파견하여 북한의 입장에 대한 지지 확보에 주력하였다.

이와 함께 북한은 동남아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를 위해 2000년 7월 아세안지역안보포럼에 가입한 이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왔다. 2008년 7월 박의춘 외무상은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15차 ARF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여 ‘동남아시아 우호협력조약’(TAC)에 가입하였다. 북한은 “이번에 공화국이 아세안에 대한 지지의 표시로,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이바지하려는 의지의 표시로 동남아시아친선 및 협조 조약에 가입하였다”고 밝혔다. 2009년 7월 태국에서 개최된 제16차 ARF 외교장관회의에 북한은 이례적으로 국장급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을 파견하여 2주 전 제15차 비동맹정상회의에서 김영남이 표명한 6자회담이 종료되었다는 주장을 반복하였다. 이 회의에서 채택한 의장성명은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면서도 북한의 주장과 논리를 대부분 반영하였다. 2010년 7월 북한의 박의춘 외무상은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인도네시아 등 4개국을 순방하고, 베트남에서 개최된 제17차 ARF 및 인도네시아에 개최된 유엔 새천년개발목표 고위급회의에 참석하였다. 박 외무상은 ARF에서 천안함 사건은 한·미의 조작이라고 주장하며, 6자회담, 평화협정 체결, 비핵화 노력 등을 강조하였다.²⁴⁴

북한이 제3세계국가들에 대한 방문·초청외교를 지속적으로 전개

²⁴⁴ 통일부, 『주간 북한동향』, 제1007호(2010.8.2~8.8), pp. 16~17.

I
II
III
IV
V
VI

하고 있으며, 2007년에 들어 북한은 4월 26일 랭군폭파사건(1983년 10월)으로 외교관계를 단절한 미얀마와 24년 만에 외교관계를 복원하였으며, 몬테네그로(7월 16일), 아랍 에미리트연합(9월 17일), 스와질란드(9월 20일), 도미니카(9월 24일), 과테말라(9월 26일) 등 5개국과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2008년 9월 26일 북한은 케냐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체결하였다.

(2) 김정일 정권의 대남정책 추진현황

북한은 김일성 사후 김영삼 정부와의 당국 간 대화를 거부한 채 민간차원의 대북지원과 남한 기업인·종교·언론인의 방북 허용 등 민간차원의 교류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1997년 12월 김대중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북한은 남한의 정책 전환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김정일 정권 공식 출범이후에도 북한은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에 호응하지 않았다.

그러나 2000년 6월 최초의 남북정상회담 결과 ‘6·15 남북공동선언’이 산출된 이후 김정일 정권은 ‘민족공조전략’이라는 대남전략을 적극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민족공조전략은 6·15 선언 1항에 명시된 ‘우리민족끼리’라는 논리를 통일의 공동이념으로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존의 ‘민족대단결론’을 발전시킨 전략이다. 구체적으로 북한은 ‘우리민족끼리’는 6·15 선언의 기본정신, 통일의 대명제이며, ‘민족공조’는 공동선언의 성과적 이행과 자주통일의 담보인 민족대단결을 이룩하기 위한 방도로 설명하였다.²⁴⁵ 2007년 10월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산출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변영을 위한 선언

²⁴⁵ 최기환, 『6·15시대와 민족공조』, (평양: 평양출판사, 2004), p. 45.

문'의 제1항이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 나가겠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 선언문이 6·15 선언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나타낸다.

북한의 민족공조전략의 실체는 6·15 선언의 공동실천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미국 배제 및 한·미동맹 와해, 남한으로부터의 경제지원 획득 및 대공체제 와해를 도모하는 것이다. 6·15 선언 이후 이명박 정부 출범 이전까지 북한은 한·미동맹 및 대공체제 와해를 위해 지속적으로 남한에서의 연북의식 확산 및 반미자주화투쟁을 선동하였다. 이와 함께 북한은 남한에서 반미친북세력이 정세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과 남한의 반미연북체제화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고무되었지만,²⁴⁶ 보수세력의 집권에 대해서는 매우 우려하는 입장에 있었다.²⁴⁷

한편 김정일 정권은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등 공식적인 남북경협 및 인도적 대북지원을 통해 경제지원을 획득하는 한편 아리랑축전, 민족통일대축전 등 각종 행사 참가, 다양한 민간차원의 방북을 활용하여 김정일의 통치자금 확보에 주력하였다.²⁴⁸

246. 한 예로 북한은 2005년 10월 “《우리민족끼리》의 리념이 전민족적인 리념으로 되고 반통일세력에 비해 통일애국력량이 압도적 우세를 차지하고 있는 지금의 정세는 좋다”라는 언급을 들 수 있다. “자주통일운동에 활력을 부여하는 《우리민족끼리》 기치,” 『로동신문』, 2005년 10월 12일.

247. 북한은 2006년 이후부터 한나라당의 집권을 저지하기 위해 ‘반보수대연합’을 촉구하였다. 대표적인 예로는 “반인권, 반민족, 반통일범죄로 얼룩진 <한나라당>의 추악한 과거죄악사를 고발한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고발장), 『로동신문』, 2006년 1월 17일; “남조선경제와 민생을 파탄시킨 역적 무리들을 고발한다” (조국통일연구원 고발장), 『로동신문』, 2007년 6월 7일.

248.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대북교류·지원 민간단체는 북한에 7억 3148만 달러 상당의 현금과 물품을 제공하였다. 김영삼 정부에서 사용한 남북협력기금은 2119억 원이었으나,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시절에는 각각 8.7배와 14.6배가 늘어난 1조 8,563억 원과 3조 1,082억 원이 집행되었다. 『월간조선』, 2009년 11월호, pp. 70~71.

I
II
III
IV
V
VI

2007년 12월 한국의 대통령선거 결과 정권교체가 이루어지자 북한은 기존 합의 이행을 촉구하면서 관망하는 자세를 보였으나, 2008년 3월부터 한국의 새 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과 강경한 입장의 강도를 높였다. 북한의 강경한 대남태도는 2008년 4월 1일 논평원 명의의 “남조선당국이 반북대결로 얻을 것은 파멸뿐이다”라는 제하의 로동신문 논평을 통해 종합적으로 표출되었다.²⁴⁹ 이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총체적으로 거부한 것이며, 북한의 일관된 입장은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에 따라 남북관계 발전,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이룩한다는 것이다.²⁵⁰ 7월 11일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한국 정부는 금강산 관광사업을 중단하였다. 북한은 10월부터 남북관계 전면 차단 등 대남 강경입장을 강화하였다.²⁵¹

결국 북한은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의 내용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대선이후 일관되게 두 선언의 이행을 이명박 정부에게 요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북한은 남한의 대선 결과 ‘반보수대연합’이 실패함으로써

²⁴⁹ 이 글에서는 “<비핵, 개방, 3000>은 우리의 <핵완전포기>와 <개방>을 전제조건으로 내건 극히 황당무계하고 주제넘은 넉두리로서 민족의 리익을 외세에 팔아먹고 대결과 전쟁을 추구하고 북남관계를 파국으로 몰아넣는 반통일선언이다”라고 규정하였다.

²⁵⁰ 이와 관련하여 김정일은 2008년 9월 5일 담화를 통해 “6·15 북남공동선언과 10·4선언은 민족자주의 선언, 민족대단결의 선언이며 조국통일의 대강”이라고 규정하였다. 김정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불패의 위력을 지닌 주체의 사회주의 국가이다” (당보 《로동신문》과 정부기관지 《민주조선》에 준 담화), 『로동신문』, 2008년 10월 12일.

²⁵¹ 북한은 2008년 10월 2일 남북군사실무회담에서 대북 비난 전단 살포를 지속할 경우에는 ① 개성공단사업과 개성관광에 엄중한 후과 초래, ② 군사분계선 통행 제한, ③ 개성·금강산지구 남한 체류인원 제한을 경고하였다. 11월 12일 북한은 장성급회담 북측단장 명의의 통지문을 통해 12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을 통한 육로통행 제한, 개성관광 중단, 남북열차운행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할 것임을 통보·실시하였다.

남한과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할 과제에 직면하였다. 따라서 북한은 일차적으로 대남 강경태도를 고수함으로써 남한 새 정부로부터 선양보 도출 및 남남갈등을 유도하고자 하였다고 분석된다.

2009년에 들어 북한은 1월 17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강력한 군사적 대응조치’를 경고하고, 1월 30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을 통해 남북한의 모든 합의사항 및 NLL 무효화를 선언하는 등 매우 적대적인 대남태도를 보였다. 북한은 군통신선 차단 및 육로통행 차단 조치를 취했고, 3월 30일 개성공단의 우리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억류시켰다.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4월 5일)와 핵실험(5월 25일)을 단행하여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켰다. 북한은 5월 27일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 성명을 통해 한국의 확산방지구상(PSI) 참여를 비난하며, “남측 5개섬(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의 법적 지위와 그 주변 수역에서 행동하는 미제 침략군과 괴뢰 해군 함선 및 일반 선박의 안전항해를 담보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7월 30일에는 연안호 나포사건도 발생했다.

2009년 8월 들어 북한의 대남 태도는 극적으로 반전되었다. 8월 13일 억류된 근로자의 석방 조치가 있었고, 8월 17일 현대그룹과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간에 금강산 관광 및 개성관광 재개, 이산가족 상봉 등의 공동보도문이 채택되었다. 8월 21~23일 북한은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특사조의방문단을 파견하였고, 김기남·김양건은 이명박 대통령을 예방하였다. 이후 북한은 대남 비난을 감소시키는 유화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11월 10일 북한 경비정이 대청도 인근 NLL을 침범하여 우리 해군 고속정에 조준사격을 했다가 2분여 만에 4,900여 발의 집중포화를 맞고 침몰직전 퇴각한 ‘대청해전’ 이후 북한은 다시 대남 강경입장으로 선회하였다. 11월 13일 군사회담 북

I
II
III
IV
V
VI

측단장은 대남통지문을 보내 “무자비한 군사적 조치가 취해질 것”임을 천명하였고, 12월 21 북한 해군사령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한군의 ‘평시해상사격구역’을 NLL남쪽으로 내리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북한은 2010년 신년사설을 통해서 “6. 15 공동선언의 실천강령인 10.4 선언이 채택되고 우리 민족이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길로 전진하여온 지난 10년 간은 북남공동선언이 가장 정당한 통일대강이며 《우리민족끼리》야말로 6. 15 통일시대의 민족정신이고 유일무이한 리념이라는 것을 뚜렷이 확증하였다”라고 언급함으로써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밝혔다. 2010년 1월 15일 국방위원회는 ‘대남보복성전’을 공언했고, 1월 27일에는 서해상에서 남측을 향해 해안포를 발사하기도 하였다. 3월 4일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대변인은 “남조선 당국이 생트집을 부리며 관광길을 계속 가로막는 경우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며, 이에 관광사업과 관련한 합의와 계약파기, 남측 부동산 동결 등을 거론했다. 이와 같이 북한은 대남 강경 입장을 표명하는 가운데 3월 26일 천안함을 공격하였다.

이후에도 북한은 4월 8일 금강산 관광지구 내 남한 당국 자산 동결 등 4개항의 행동조치를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4월 10일에는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북측 단장 명의의 대남 통지문을 통해 남한의 단체들의 뼈라살포를 비난하면서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통행과 관련하여 위협하였다. 4월 16일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한 민군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결과가 발표되자 북한은 4월 17일 조선중앙통신사 군사논평원의 글을 통해 천안함 침몰사건을 북과 연계시키는 것은 통치위기를 벗어나려는 남한 정부의 음흉한 음모라고 비난하였다.²⁵² 5월 21일 국제합동조사단의 천안함 침몰사건 조사결과가 발표되자, 국방위원

회 및 조평통 대변인 성명을 통해 전면전쟁을 포함한 강경한 조치 등을 위협하고, 국방위원회 검열단의 남측 파견을 요구하였다.²⁵³ 이후 북한은 천안함 사태는 한·미의 자작극이라고 강변하고, 안보리 회부에 반발하였다. 5월 24일 남한 정부가 독자적인 제재조치를 공표하자 북한은 5월 30일 이를 규탄하는 평양시 군중대회를 개최하고 “서울의 불바다까지 내다본 무자비한 군사적 타격” 등을 위협하였다.

한편 북한은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10주년에 즈음하여 중앙보고대회 및 정당·단체 연합성명 등을 통해 한국 정부의 대결정책을 비난하는 동시에 6·15 선언의 철저한 이행을 촉구하였다.²⁵⁴

북한은 7월 8일 안보리 의장성명 발표 이후 10일 천안함 사태에 관련하여 “결론이 없는 안보리 의장 성명이 채택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평등한 6자회담을 통해 평화협정 체결과 비핵화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으며,²⁵⁵ 중국·미국과의 협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함께 김정일 정권은 2010년 9월에 들어 수해물자 지원 요청, 8월 8일 나포한 대승호 송환, 이산가족 상봉 제의 등을 통해 유화적인 대남태도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3) 대외·대남정책 전망

(가) 정책목표와 기조

김정일 정권은 1998년 공식 출범하면서 “주체사상을 전면적으로 구현하여 우리나라의 국력을 정치와 군사, 경제와 문화 등 모든 분야

252. 통일부, 『주간 북한동향』, 제991호(2010.4.12~4.18), pp. 13~14.

253. 『조선중앙통신』, 2010년 5월 20일, 21일.

254. 통일부, 『주간 북한동향』, 제1000호(2010.6.14~6.20), pp. 8~10.

255. 『조선중앙통신』, 2010년 7월 10일.

I
II
III
IV
V
VI

에 걸쳐 최강의 경지에 올려 세우기 위한 거창한 애국애족의 위업”인 강성대국 건설을 국가목표로 내세우고,²⁵⁶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선군정치를 표방하였다. 선군정치란 “군사선행의 원칙에서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내세워 사회주의위업 전반을 밀고 나가는 령도방식”이라는 것이다.²⁵⁷ 2010년에 들어 김정일 정권은 정치사상적인 측면과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강국의 지위에 올랐으나, 인민생활에는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²⁵⁸

그러나 김정일 정권이 처한 대내외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김정일 정권이 제시해 온 강성대국 건설이라는 국가목표는 정치적 슬로건에 지나지 않으며, 실질적인 정책목표는 체제유지, 즉 ‘생존’에 있었다고 평가된다. 선군정치는 체제유지의 관건인 물리적 강제력을 공고히 하려는데 핵심 목적을 가지고 있다.²⁵⁹ 이는 집권자가 더 큰 강제력을 사용해야만 사회통합이 유지되는 상태인 ‘권력의 수축’(power deflation)

256. 『로동신문』 1998년 9월 9일 사설,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건설해 나가자” 참조.

257. 『로동신문』, 『근로자』 1999년 6월 6일자 공동논설, “우리 당의 선군정치는 필승불패이다.”

258. “새로운 승리로 부르는 전투적 기치,” 『로동신문』, 2010년 1월 9일.

259. 이와 관련하여 북한은 선군정치의 논리를 체계적으로 전개한 『로동신문』, 『근로자』 1999년 6월 16일자 공동논설에서 “군대가 사상적으로 무장해제되면 사회주의의 지탱점이 허물어지게 된다. 설사 인민들이 정치사상적으로 준비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군대가 견결하면 사회주의가 무너지지 않는다.”, “경제는 주저앉았다가도 다시 추설 수 있지만 군사가 주저앉으면 나라의 백년대계의 기틀이 허물어지게 된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북한이 체제유지를 위해서는 군사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고, 결국 선군정치의 목적은 체제유지에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총대만 든든하면 ... 설사 당과 정권이 무너지고 경제가 일시 주저앉는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다시 솟구쳐 오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군대는 곧 당이고 국가이며 인민이라고 하는 것이다.” “선군사상의 기치따라 나아가는 주체혁명위업은 필승불패이다,” 『로동신문』, 2005년 9월 16일.

을 의미한다. 더욱이 2009년 11월 화폐개혁 실패, 2010년 4월 인민보안성을 인민보안부로 격상 등의 예는 집권자가 평형을 회복할 능력을 갖지 못하고 민중의 신뢰를 상실하는 ‘권위의 상실’(loss of authority)로 이행되는 지표라고 볼 수 있다.²⁶⁰ 2010년 현재 김정일 정권은 “권력의 수축에서 권위의 상실로 이행되는 단계”에 있다고 평가된다.

포스트 김정일체제는 김정일 유일체제보다 훨씬 취약한 김정은 유일체제의 성격을 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권위의 상실’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포스트 김정일체제의 최우선적인 정책목표는 후계권력의 공고화를 통한 체제의 안정성 확보이다. 이를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경제난 해소를 통해 김정은에 대한 인민들의 지지를 확보해야 하고, 내부결속을 이루어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포스트 김정일체제가 김정은 유일체제로 진행된다면, 이 체제는 폐쇄체제일 수밖에 없으며, 김일성-김정일로 이어온 통치이데올로기와 정책방향에서 급선회할 수 없다는 점이다. 포스트 김정일체제는 김일성-김정일이라는 존재를 정통성과 체제의 존립기반으로 삼을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기존 제도와 사상, 정책을 비판적으로 극복할 수 없는 것이다. 세습체제는 전임자를 부정할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따라서 포스트 김정일체제의 대외·대남정책 목표는 체제 안정성 확보라는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있을 것이며, 그 기조는 김일성 사후 김정일이 ‘유훈통치’라는 형태로 기존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형태를 답습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때 포스트 김정일체제 초반의 대외·대남정책의 초점은 특히 핵문제 및 평화협정에 대한 기존 입장을 고수한 채 우선적으로

²⁶⁰ 이러한 개념은 혁명의 원인으로 사회체제의 균형상실을 제시한 Charlmers Johnson, *Revolutionary Change* (Boston: Little, Brown, 1966), pp. 91~107 참조.

I
II
III
IV
V
VI

경제난 해소에 필요한 지원획득에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① 포스트 김정일체제가 내부적으로 안정성을 어느 정도 확보했는가 하는 문제, ② 유일체제의 성격 변화 여부, ③ 국제적 비핵화 압력의 강도 등에 따라 새로운 정책방향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나) 포스트 김정일체제 초기의 정책 전망

포스트 김정일체제 초기의 정책방향은 기존 정책의 지속이라는 틀을 유지하면서 경제난 해소를 위해 경제외교의 활성화와 통제된 개방의 확대, 유화적이지만 친북 입장의 확산을 도모하는 대남정책 추진 등의 양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포스트 김정일체제가 내부적으로 불안정이 고조되는 상황과 핵문제에 대한 국제적 압력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봉착한다면, 내부결속과 핵카드의 극대화를 위한 강경 입장으로의 선회 가능성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

1) 대외정책

2010년 8월 김정일의 중국 동북지역 방문 시 장춘에서 후진타오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이 회담을 통해 김정은이 후계자라는 점에 대해 중국 측으로부터 일정한 양해를 얻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경제협력을 약속받았을 것이다. 북한은 제3차 당대표자회의 결과를 중국에 설명하기 위해 최태복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을 파견하였으며, 2010년 10월 2일 북한 대표단 접견 시 후진타오 주석은 “중국 공산당은 북한의 새 지도부와 국제적·지역적 문제에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함으로써 김정은 후계체제를 인정하였다.²⁶¹

북한은 과거 중·소분쟁이라는 사회주의권의 분열상황을 활용하여

대외정책에서 자주를 표방하면서 양국으로부터 경쟁적으로 압력을 받았지만, 이익도 얻은 경험이 있다. 포스트 김정일체제 대외정책의 기본 방향은 첫째, 미국에 대응할 수 있는 세력으로서 중국의 부상을 잘 인식하고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중국을 최대 후원국으로 하여 외교적·경제적 지원확보를 통해 국가생존에 대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고자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북한은 러시아와의 관계긴밀화를 보다 제고함으로써 미국의 압력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판을 확보하는 동시에 경제협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에너지 분야 협력과 철도(TSR-TKR) 연결, 노동력 수출 등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일 것이다.

둘째, 북한 대외정책의 핵심 과제인 핵문제와 관련하여 김정일 정권은 2009년 4월 14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유엔안보리 의장 성명이 발표되자, 6자회담 불참 선언과 자위적 핵억제력 강화를 천명함으로써 6자회담을 공전시킨 바 있다. 이후 북한은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로 미국과의 적대관계 해소 및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선 대미 평화협정 체결, 후 대미 관계개선'이라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포스트 김정일체제 역시 핵문제에 관해서는 기존 입장을 연장선상에 있을 것이다.

포스트 김정일체제는 우선적으로 미국과의 직접대화에 주력하면서 6자회담 복귀에 대한 반대급부로 대북 경제제재 조치 완화, 경제지원 확보 등에 매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적절한 명분과 실리를 얻음으로써 6자회담에 복귀하면, 일차적으로 기존 실무그룹회의 재개를 통한 평화협정 체결 및 관계정상화에 주력하는 동시에 별도 포럼을 구성하여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261. 『동아일보』, 2010년 10월 4일.

I
II
III
IV
V
VI

한편, 6자회담이 재개되더라도 북한 핵문제는 2007년 10월 3일 제6차 6자회담 제2단계회의 합의된 북한 핵시설의 불능화와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에서부터 다시 논의되어야 한다. 이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북한 간 합의가 쉽사리 도출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포스트 김정일체제가 선군사상과 선군정치를 통치이데올로기로 고수하는 한 군사력의 최고 상징인 핵무기 보유를 포기하지 않을 것 이라는데 있다. 포스트 김정일체제의 완전한 핵폐기와 미국의 대북 수교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포스트 김정일체제는 핵무기를 유지한 채 미국과의 관계정상화 도출에 주력할 것이나, 미국이 비확산을 전제로 북한과의 관계정상화를 수용할 것인지의 여부는 미지수이다. 결국 6자회담은 지지부진한 상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며, 미국 으로서는 북한 인권문제, 미사일문제, 생화학무기 등이 해결되어야 북한과의 수교를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²⁶² 6자회담이 별다른 성과가 없이 진행되고, 앞에서 논의한 이란 핵문제로 인해 북한 핵문제 해결에 대한 국제적 압력이 고조될 경우, 북한은 제3차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등 강경한 대응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대EU 및 대일 정책과 관련하여 포스트 김정일체제는 보다 유화적인 정책전환을 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인권문제에 일정한 개선노력을 보이면서 EU로부터 경제지원 획득, 경제협력 증진 등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미국의 압력을 감소시키기 위한 외교적 지지 확보도 도모할 것이다. 특히 북한은 경제난 해소를 위해 EU국가들에 대하여 경제특구 내 투자 유치 및 교역확대에 초점을 둘 것이다. 대일 정

²⁶² 이와 관련하여 오바마 미 대통령은 2010년 9월 23일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국민들을 노예화하는 북한 정권”이라고 언급함으로써 김정일 정권을 비판하였다.

책과 관련하여 북한은 이미 합의하였던 납치문제 재조사위원회 설치 등에 호응하면서 일본과의 수교회담 재개 등을 통해 경제지원 획득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넷째, 포스트 김정일체제는 대제3세계에 대한 외교를 보다 활성화 함으로써 국제적 지지 확보와 경제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대제3세계외교는 김일성시대부터 정권의 정통성 확보 및 정치적 상징조작을 위해서 비중 있게 추진되어 온 것으로 보아 포스트 김정일체제는 대제3세계 외교에 보다 역점을 둘 것이다. 동남아 국가들에 대해서는 식량난 해소를 위한 쌀 지원 확대 및 자원공동 개발 등을 중심으로 한 인력수출 등을 추진할 것이다.

다섯째, 포스트 김정일체제는 체제유지가 손상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통제된 대외경제개방을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 김정일 정권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구역 같은 제한된 지역만 개방하고, 관계 근로자를 감독하는 지역적·인적으로 ‘통제된 개방’의 실질적인 이익을 인식하고 있다. 더욱이 북한의 최대 후원국인 중국으로부터의 대외경제 개방 압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²⁶³ 따라서 포스트 김정일체제는 경제난 해소라는 내적 필요와 함께 중국의 입장을 고려하는 차원에서도 대외개방을 확대할 수밖에 없다. 북한은 2002년 지정한 바 있던 신의주, 10·4선언에서 명시한 해주 등을 새로운 경제특구로 지정하여 외자유치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²⁶³ 이와 관련하여 2010년 8월 김정일과의 정상회담에서 후진타오는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자력갱생도 필요하지만 대외적 개방은 반드시 해야 함을 역설하였다. 통일부, 『주간 북한동향』, 제1011호(2010.8.30~9.5), p. 11.

I
II
III
IV
V
VI

2) 대남정책

포스트 김정일체제가 유일체제와 폐쇄체제의 성격을 띠는다면 기존의 대남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하여 진정한 의미의 남북화해협력을 추구하기는 불가능하다. 더욱이 체제 안정성 확보에 부신했 수밖에 없는 포스트 김정일체제가 통일의 상대방인 남한과 체제개방을 초래할 전면적인 교류와 협력의 활성화를 수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통일이라는 명제는 북한 체제의 결속과 존립의 기반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포스트 김정일체제는 남한으로부터 경제지원과 경제교류협력의 필요성을 절감할 것이므로 우선적으로 이를 보다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것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10·4선언에 명시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개성공단 확대, 백두산 관광 개시 등을 적극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함께 남한의 정권과 여론이 북한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는 대남민족공조전략을 계속 구사할 것이다. 특히 2012년 남한의 대선에 적극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여 북한에 우호적인 남한 정권의 수립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이와 동시에 증거가 남지 않은 각종 테러행위를 도발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불안감을 조장할 수도 있다. 김정일이 후계자로 공식 등장한 이후 북한은 1983년 10월 아웅산 묘소 암살폭파사건, 1987년 11월 KAL 858기 공중 폭파사건 등의 테러를 자행하였다. 김정은이 일천한 군사적 업적을 해소하고자 다양한 대남 테러를 주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는 선군정치·선군사상에도 부합되는 성격의 사안이다.

한편 포스트 김정일체제의 안정성이 내부적으로 위협받고, 핵문제로 인한 외적 압력이 극한 상황에 도달할 경우, 북한은 한국이라는 인질을 담보로 생존을 추구하는 강경한 입장으로서의 선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VI 결론: 포스트 김정일체제의 안정성과 변화전망

먼저 포스트 김정일체제에서 파벌 간 권력투쟁이 가능할지 여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해 볼 수 있다. 파벌 간 정치적 투쟁이 가능하게 되려면 유일당인 노동당내에서 분파주의가 조성되어 있어야만 한다. 김정일 정권 초기 당내 소규모의 그룹들이 조직되고 서로를 감싸주면서 직권을 이용한 다양한 비리를 자행한 것이 드러나기도 했지만 군부가 동원되어 정리된 적이 있다. 김정일 유일지배 정권 하에서는 기본적으로 당내의 본격적인 분파주의가 존재하기 어렵도록 되었다. 이제까지 북한의 노동당은 중국을 비롯한 여타 사회주의국가들과는 달리 집체적 협의결정기능을 상실해 왔다. 6차 당대회 이후 더 이상 열리지 않고 있으며 평소의 당 중앙위원회의 기능을 하는 정치국 또한 유명 무실한 상태를 유지해 왔다. 오직 집행기구인 비서국만이 존재하여 김정일의 유일적 지배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오고 있을 뿐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9월 28일 3차 당대표자대회가 열리면서 정치국을 비롯한 중앙당 조직이 전면 재정비되기는 했으나 이것 역시 중앙당의 독자적인 집체적 정책협의결정기구로서 정상화되는 것을 의미하기보다 명목상의 기능과 역할에 머물 것이라는 판단을 앞서게 한다. 따라서 포스트 김정일체제 하에서도 적극적인 의미의 당내 분파주의는 당분간 자리 잡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김정은 세습정권의 경우 기존의 김정일 정권의 정통성에 힘입어 세습정권 유일지배체제를 유지·강화하고자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당의 집체적 협의 기능이 다시 살아나서 정치적 분파주의가 형성되기도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군사인물들이 직접 당 정치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당의 획일성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정치적 파벌이 존재하지 않는 한 군부의 파벌도 존재할 수 없다. 군부는 획일적 정치지도체제를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전위대의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 군부의 이

I
II
III
IV
V
VI

러한 속성은 선군정치가 자리 잡고 난 이후에 더욱 강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김정일 이후 새로 들어선 정권이 개혁개방 정책을 전개해 나갈 경우 이 과정에서 노동당의 집체적 협의결정 기능이 활성화되어 정치적 분파주의가 생겨날 수는 있다. 예를 들면 광범위한 정치 및 경제적 자유주의화를 지지하는 분파, 국가의 경제체제 관련 주요한 변화를 지지하는 분파, 그리고 기존의 폐쇄적 정책을 고수, 체제의 안정화를 주장하는 분파들이 등장할 수는 있다. 각 분파의 정치적 지도자들은 군 지휘관들을 자기편으로 흡수하기 위해서 군부를 분열시키게 될 것이며 결국 북한 노동당내의 분파주의가 군부로 확산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포스트 김정일체제의 붕괴 가능성은 있는가? 포스트 김정일체제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동구사회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아래로부터 체제변화 또는 개혁의 요구가 확대되어 체제붕괴가 초래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기존체제에 대한 불만으로 군부가 앞장서서 체제를 붕괴시키는 것, 즉 군부 쿠데타에 의한 체제붕괴가 그것이다. 전자의 경우 북한에는 상당한 기간 동안 밑으로부터의 불만 표출이 집단적으로 광범위하게 표출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주민이동이 자유롭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통신 또한 절대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외부사조가 침투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물론 산발적으로 반체제적인 소요사태가 일어날 수는 있지만 북한 당국은 이를 진압할 수 있는 억압·통제장치가 상당히 발전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소요사태를 잠재우는데 군부가 동원되는 데에도 큰 어려움이 없다. 김정일의 선군정치의 나쁜 유산이기도 하다.

이를 고려해 볼 때, 김정일 이후에도 반체제적인 소요사태가 즉각

초래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어난다고 해도 경찰 또는 군대가 동원되어 쉽게 차단될 가능성이 크다. 후자의 경우 북한군대는 기본적으로 체제 수호자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하도록 되어있다. 김정일 이후 정치적 분파주의가 조성되어 기존의 질서가 흔들리게 되는 상황이 도래하면 북한 군부는 오히려 기존체제를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게 될 것이다. 만약 북한에 개혁개방을 요구하는 정치·사회적 분파가 형성되어 기존체제를 위협하거나 위협에 빠뜨릴 수 있다는 판단이 서게 되면 기존체제를 보호하기 위한 ‘보수 군부쿠데타’를 감행할 수는 있다. 이와는 반대로 북한군부가 기존체제를 부정하는 형태의 쿠데타를 감행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김정일 이후에도 북한에는 기존체제를 크게 변화시킬 체제붕괴상황이 즉각적으로 도래하기에는 그만큼 어려울 것이다. 기존의 획일 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가능성이 가장 클 것이다. 군대에 의존한 선군정치 패턴을 고수하면서 체제의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게 될 것이다.

향후 포스트 김정일체제 하 북한의 대내외적인 환경과 체제 불안정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보면 김정일 사망과 동시에 곧바로 쿠데타나 주민봉기와 같은 급변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²⁶⁴ 북한체제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김정일이 현 시점에서 사망한다고 하더라도 낮은 수준의 불안정 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하더라도 이를 극복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동구의 체제유형 중에서 동독과 체코, 그리고 루마니아와 유사한 스탈린식 전체주의체제와 스탈

²⁶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의 주관심 영역은 김정일 사망에 따른 급변사태에 함몰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급변사태를 우선순위에 둔 예측은 북한체제의 내구성 및 위기관리 능력을 과소평가한 것이다. 『김정일 사망=급변사태발생=북한 붕괴』라는 자기 충족적(self-fulfilling) 인식의 오류의 사례는 1994년 김일성 사망 시에도 북한 급변사태 발생 및 붕괴론 만연에서 잘 나타나 있다.

I
II
III
IV
V
VI

체제의 조합으로 볼 수 있다.²⁶⁵ 북한의 체제 특성상 이러한 체제를 경험한 국가의 사례에서 보듯이 북한에서 공동생명체적 결합으로 뭉쳐진 현 지배집단의 변화에 의한 위로부터의 체제전환은 기대하기 힘들다.²⁶⁶

김정일 사후 김정일의 공백이 상상 이상으로 클 수도 있고 북한 내부적으로 불안정성이 고조될 가능성을 예상해 볼 수 있으나 여타 일반 국가 지도자의 사망 시 발생할 수 있는 통상적인 사회적 어수선향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일정 기간 동안은 공동생명체적 결합으로 뭉쳐진 기존 권력층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후계자 김정을 중심으로 결집되어 정치적으로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더 크다. 그러나 김정일 사망 이후 일정 시간이 흐른 후에는 북한 지배계층의 분열로 인한 불안정상태 발생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다.

또 다른 방향에서 나타나는 붕괴는 응축된 주민의 불만이 비조직적 폭발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 속도와 폭은 체제의 폐쇄와 경직성 정도에 비례한다고 본다. 그러나 북한의 현 상황을 고려 시 시민운동이나 소요, 폭동, 대량 체제 이탈에 의하여 붕괴가 시작되기는 여전히

²⁶⁵ 린츠와 스테판의 연구에서 제시된 체제분류 도식에 따르면 동독과 체코는 동결된 탈 전체주의체제이고 루마니아는 전체주의와 술탄체제의 혼합체제이며 쿠바체제는 동결된 탈 전체주의와 술탄체제의 혼합체제로 분류할 수 있다. Juan J. Linz & Alfred Stepan, *Problems Democratic Transition and Consolidation*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6); Juan J. Lopez, *Democracy Delayed: The Case of Castro's Cuba*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2002), p. x vi.

²⁶⁶ 최완규, “북한 국가성격의 이론과 쟁점: 비교사회주의적 관점,” 최완규 엮음, 『북한의 국가성격 변용에 관한 연구』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1), pp. 11~42; 최완규, “북한체제의 지탱요인 분석: 쿠바 사례와의 비교론적 접근,” 『현대북한 연구』, 제9권 2호 (서울: 북한대학원대학교, 2006), pp. 11~17.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으로 전체주의 사회에서 시민사회라는 논리가 성립되기는 어려우며 또한 북한의 변화나 봉기측면에서 볼 때 현 단계 북한에 시민사회론을 적용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²⁶⁷ 북한은 정치적 효능감(political efficacy)의 유무(有無)가 아닌 근본적으로 시민사회 자체가 부재된 상태다.²⁶⁸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볼 때 북한에서 시민사회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 만은 없다.²⁶⁹

포스트 김정일체제 하에서 북한사회 변화는 과거와 비교하여 내용과 속도 면에서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금까지 북한 내 사회변화는 철저한 통제 속에 스스로 확산되어 갈 수 있는 동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였다. 후계정권 하에서는 억압과 통제만으로는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완전하게 차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후계자가 어떠한 사회적 정책을 펼치느냐에 따르기보다는 스스로 사회적인 변화가 전개되어 나갈 것이다. 이러한 사회 변화는 후계자에게 더 강력한 통제체제를 작동시킬 것이냐 아니면 사회적 변화에 편승한 정책으로 변화할 것인가 하는 선택을 강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역사적으로 사회적 변화 요구에 대한 실용적 수용(pragmatic

²⁶⁷- Steven Saxonberg, *The Fall* (Abingdon: Routledge, 2003), pp. 207~225.

²⁶⁸ 정치적 효능감(political efficacy)이란, 정치적 행위자로서의 개인이 정치과정이나, 지도자의 행동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느끼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정치적 효능감이 높으면 정치 참여에 적극적이고, 정치적 효능감이 낮으면 권위에 복종 또는 비정상적인 방법에 의해 정치에 참여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Juan J. Linz & Alfred Stepan, *Problems Democratic Transition and Consolidation*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6); Juan J. Lopez, *Democracy Delayed: The Case of Castro's Cuba*, pp. 55~84.

²⁶⁹ 이우영, “북한에서의 국가와 사회: 시민사회론은 적용 가능한가?” 최완규 역음, 『북한의 국가성격 변용에 관한 연구』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1), pp. 188~218.

I
II
III
IV
V
VI

acceptance)을 거부했던 동독이나, 체코, 루마니아가 폭력적 전환을 맞았다고 할 수 있다.²⁷⁰ 북한 역시 실용적 수용(pragmatic acceptance) 측면에서 보면 선군정치 역시 비타협적 개혁에 머무를 수밖에 없을 것이며, 시발점이 김정은이든 누구든 간에 그 결과는 폭력적인 전환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이러한 다양한 가능성은 포스트 김정일체제가 여러 가지 미래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결국 김정은이 후계자로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생존을 위한 정책적 선택에 다양한 경우의 수를 만들어 낼 수 있다. 그러나 실제 김정은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많아 보이지 않는다. 포스트 김정일 정권은 일단 후계자로 공식화된 김정은을 중심으로 지속과 변화를 모색하는 기간을 필요로 할 것이다. 내부적으로 정치적 안정과 사회적 안정이라는 2가지 목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2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정책에는 많은 제약조건을 안고 있다. 우선 정치적 안정은 김정일 사망 이후에도 기존 권력층들의 결집력을 유지하면서 이들의 기득권을 어떻게 유지해 주느냐에 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사회적 안정은 경제난 등에서 야기된 인민들의 불만을 어떻게 잠재우고 사회를 안정적으로 통제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북한의 경우 권력층과 주민들의 이익이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상황에서 정치적 안정과 사회적 안정이 상호 보완적인 비 영합(Non Zero-sum)이라기 보다는 여전히 영합(Zero-sum)에 가깝다. 따라서 포스트 김정일체제를 이끌어 갈 김정은이 정치적 안정과 사회적 안정

²⁷⁰- Steven Saxonberg, *The Fall*, pp. 167~205; 권만학, “탈국가사회주의의 여러 길과 북한,” 『한국정치학회보』, 제35권 4호 (서울: 한국정치학회, 2002), pp. 250~251.

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달리 말해 포스트 김정일 정권이 기존 집권층의 기득권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인민들의 불만을 해소시키고 이익을 확보하기는 극히 어려운 상황이다.

즉, 대부분 노쇠한 북한의 권력층의 특성상 새로운 권력의 추구나 자기희생을 감수한 모험을 감행하기 보다는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자신들이 가진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는 정책을 선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권력층은 김정일 사후 김정은이 선택할 정책이 자신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지켜보게 될 것이다.

아직은 절대 다수의 주민들이 스스로 일어날 힘이나 토대가 없는 상황에서 결국 김정은도 소수의 권력층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정치적 안정을 위한 정책을 우선 추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포스트 김정일 정권이 오로지 정치적 안정만을 선택하고 사회적 안정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과거와 달리 현재 북한은 내재된 모순과 체제의 괴리현상이 심화되어 있으며, 이 같은 모순과 부작용으로 인해 사회 내에 변화의 동인이 성장하고 있다. 특히 '90년대 초반 이후 지속되고 있는 북한의 경제난은 포스트 김정일체제의 정책 선택지를 매우 협소하게 제한할 것이다. 장기화된 경제난으로 인해 주민들의 불만이 팽배하고 사회통제가 약화된 상황에서 더 이상 정치적 안정이나 사회적 안정이냐는 양자택일의 정책선택 상황은 오히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포스트 김정일체제에 치명적인 결함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포스트 김정일체제는 지금까지 김정일 정권이 시행했던 각종 정책이라는 일정한 구조적 제약 하에서 정책적 변화를 모색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포스트 김정일 정권의 정책은 기본적으로 김일성시대와 김정일 정

I

II

III

IV

V

VI

권의 생존전략의 연장선상에 있다. 북한은 상황 변화와 위기에 직면 하여서도 주체사상이나 선군정치라는 근본적인 담론은 그대로 유지 하면서 이를 합리화하고 보완하는 새로운 하위 담론을 재생산하는 과정을 통해 연속성과 미세한 변화를 결합하는 생존전략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포스트 김정일 정권에서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변화가능성은 위기상황의 역동성, 근대화론적 결론, 수동적 적응의 역동성에 의한 것이든 일단 시작된 변화와 개혁이라면 사회전체로 확산될 수밖에 없고 결국 체제 전체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된다.²⁷¹ 따라서 북한체제는 결국 자의든 타의든 변화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지금 당장 가시적인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간은 강제적인 변화로 북한을 이끌게 될 것이고, 체제생존을 위한 변화를 모색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러한 변화는 북한의 체제전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것이 곧 포스트 김정일 정권의 딜레마이다.

일단 후계체제 정착에 있어 밀접한 연관을 갖는 과제 해결을 위해 정책의 지속성과 변화를 놓고 고민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게 볼 때 후계체제의 정책과제는 정치체제 변화문제, 경제회복 및 발전문제, 개혁·개방 문제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포스트 김정일 후계체제는 체제의 불안정성을 극복하고 안정성을 회복하기 위해 대내·외적으로 지금까지의 정책을 변화시키기 보다는 지속하는 차원에서 대응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단기적으로는 북한 내에서 정치·경제적으로 급격한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은 지극히 낮을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하다. 다만, 경제난 해소 및 국제고립 탈피 등을 위해 지금까지

²⁷¹ 김근식, “북한체제 변화론: 가능성과 제약성 논의를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제2권 1호, pp. 316~321.

그랬던 것처럼 매우 제한적인 수준의 부분적 개혁·개방정책은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정책의 지속성과 변화는 일정한 구조적 제약 하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990년대 초반 이후 지속되고 있는 북한의 경제난은 포스트 김정일체제의 정책 선택지를 매우 협소하게 제한할 것이다. 경제난으로 인한 정권 및 체제의 불안정성과 주민들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북한의 권력집단은 억압을 통한 사회 통제를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이 포스트 김정일체제는 지금까지 김정일 정권이 시행했던 각종 정책이라는 일정한 구조적 제약 하에서 정책적 변화를 모색하면서 체제 생존을 추구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I

II

III

IV

V

VI

참고문헌

1. 단행본

〈국내문헌〉

- 김연철 외. 『북한, 어디로 가는가』. 서울: 플래닛미디어, 2009.
- 김용학. 『사회 연결망 분석』. 서울: 박영사, 2007.
- 니콜로 마키아벨리 저. 강정인 옮김. 『군주론』. 서울: 까치, 1994.
- 박형중 외. 『김정일 시대 북한의 정치체제: 통치이데올로기, 권력엘리트, 권력구조의 지속성과 변화』. 서울: 통일연구원, 2004.
- 박형중·조한범·장용석. 『북한 ‘변화’의 재평가와 대북정책 방향』. 서울: 통일연구원, 2009.
- 백승주. 『포스트 김정일체제 프로세스와 한반도 비전』.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09.
- 서재진. 『북한사회의 계급갈등 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6.
- 서 훈. 『북한의 선군외교: 약소국 북한의 강대국 미국 상대하기』. 서울: 명인문화사, 2008.
- 성채기·박주현·백재옥·권오봉. 『북한 경제위기 10년과 군비증강 능력』.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03.
- 스즈키 마사유키 지음. 유영구 옮김. 『김정일과 수령제 사회주의』. 서울: 중앙일보사, 1994.
- 오일환 외 공저. 『현대북한체제론』. 서울: 을유문화사, 2000.
- 이교덕 외. 『새터민의 증언으로 본 북한의 변화』. 서울: 통일연구원, 2007.

- 이승열. 『김정일의 선택』. 서울: 시대정신, 2009.
- 이영중. 『후계자 김정은』. 서울: 늘품플러스, 2010.
- 이종석. 『새로 쓴 현대북한의 이해』. 서울: 역사비평사, 2000.
- 정성장 외. 『현대북한연구의 쟁점 1』.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5.
- 정창현. 『곁에서 본 김정일』. 서울: 토지, 1999.
- 채경석 외. 『북한학개론』[증보판]. 서울: 법문사, 1996.
- 최완규 엮음. 『북한의 국가성격 변용에 관한 연구』.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1.
- 통일연구원. 『2009 북한개요』. 서울: 통일연구원, 2009. 10.
- _____. 『통일환경 및 남북한관계 전망: 2004~2005』. 서울: 통일연구원, 2004.
- _____. 『통일환경 및 남북한관계 전망: 2007~2008』. 서울: 통일연구원, 2008.
- _____. 『통일환경 및 남북한관계 전망: 2008~2009』. 서울: 통일연구원, 2009.
- _____. 『통일환경 및 남북한관계 전망: 2009~2010』. 서울: 통일연구원, 2010.
- 현성일. 『북한의 국가전략과 파워엘리트』. 서울: 선인, 2007.
- 황장엽. 『어둠의 편이 된 햇별은 어둠을 밝힐 수 없다』. 서울: 월간조선사, 2001.

〈북한문헌〉

- 과학백과사전출판사 편. 『철학연구』. 1999년 제1호.
- 김일성종합대학 편집위원회 편. 『김일성종합대학 학보』. 2004 겨울호
(김일성종합대학), 2004.
- 김 민·한봉서. 『위대한 주체사상 총서 9: 령도체계』. 평양: 사회과학
출판사, 1985.
- 김봉호. 『위대한 선군시대』. 평양: 평양출판사, 2004.
- 김정일. 『김정일선집 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 리 철·심승건. 『위대한령도자김정일동지께서밝히신선군혁명령도에
관한 독창적 사상』.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02.
- 사회과학출판사 편. 『사회과학』.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6. 2
_____. 『철학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 사회과학출판사.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사상』.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00.
- 조선중앙통신사 편. 『조선중앙년감 1983』.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83.
_____. 『조선중앙년감 1987』.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87.
_____. 『조선중앙년감 2006』.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2006.
_____. 『조선중앙년감 2007』.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2007.
_____. 『조선중앙년감 2008』.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2008.

_____. 『조선중앙년감 2009』.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2009.

최기환. 『6·15시대와 민족공조』. 평양: 평양출판사, 2004.

『김정일 동지 전기 2』.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2003.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 20: 혁명위업계승문제
의 빛나는 해결』.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학습제강 1 (병사, 사관용)』. 평양: 조선인민군출판사, 2004.

<외국문헌>

Johnson, Charlmers ed., *Change in Communist Systems*.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70.

Johnson, Charlmers. *Revolutionary Change*. Boston: Little,
Brown, 1966.

Kornai, Janos. *The Socialist System: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sm*.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2.

Linz, Juan J. & Alfred Stepan. *Problems Democratic Transition
and Consolidation*.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6.

Lopez, Juan J. *Democracy Delayed: The Case of Castro's Cuba*.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2002.

Macridis, Roy and Mark Hulliung, *Contemporary Political
Ideologies*. New York: Harper Collins, sixth ed., 1996.

Saxonberg, Steven. *The Fall*. Abingdon: Routledge, 2003.

Shurmann, Frantz. *Ideology and Organization in Communist China*. Berkeley, L.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8.

Wallace, Anthony. *Culture and Personality*. New York: Random House, 1961.

2. 논문

〈국내문헌〉

고유환. “김정일 건강변수와 후계구축 시나리오.” 『(KDI) 북한경제 리뷰』. 2008년 9월호, 2008.

고재홍. “북한 국방위원회의 지위와 역할 분석,” 『북한연구학회보』. 제12권 2호, 2008.

_____. “Post-김정일체제와 북한 정세 전망.” 『군사논단』. 2009년 겨울호 기고문.

곽승지. “김정일시대의 북한이데올로기: 현상과 인식.” 『통일정책연구』. 제9권 2호(통일연구원), 2000.

김갑식. “북한 조선로동당대표자회 개최 결과와 향후 전망.” 『이슈와 논점』. 제126호(국회입법조사처), 2010.

_____. “북한의 후계구도 및 권력구조 전망: ‘안정적 승계’를 중심으로.” 『정책연구』. 겨울호, 2008.

김근식. “1990년대 북한의 체제정당화 담론: ‘우리식 사회주의’와 ‘붉은기철학’을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제8권 2호(통일연구원), 2000.

_____. “북한체제 변화론: 가능성과 제약성 논의를 중심으로.” 『현대

- 북한연구』. 제2권 1호(북한대학원대학교), 1999.
- _____. ‘토론포럼.’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주최 제42차 통일 전략포럼, 2009. 3. 24.
- 김일기. “체제변화론에 입각한 북한의 개혁·개방 연구.” 『북한연구 학회보』. 제10권 1호, 2006.
- _____. “북한헌법의 개정 내용과 의미.” 『평화학연구』. 제10권 4호, 2009.
- 김하영. “북한체제의 초기 집단정체성 형성에 관한 연구.” 『북한연구 학회보』. 제9권 1호(북한연구학회), 2005.
- 박선원. “김정일시대 북한의 변화.” 『한국정치학회보』. 제36집 3호, 2001.
- 박영자. “북한의 집권엘리트와 포스트 김정일시대.” 『통일정책연구』. 제18권 2호(통일연구원), 2009.
- 신지호. “북한 정세를 읽는 새로운 눈, 북한해체론.” 『계간 시대정신』. 2006년 겨울호(시대정신), 2006.
- 오경섭. “북한 권력승계의 특징과 3대세습체제의 지속가능성.” 『세종 정책연구』. 제6권 1호, 2010.
- 이기동. “선군시대로의 이행과 후계구도.” 『북한학연구』. 창간호, 2005.
- _____. “북한의 후계구도 전망: 구조적 제약 하의 전략적 선택.” 북한 민주화네트워크·시대정신 공동포럼 발표문, 2009. 3. 12.
- _____. “북한의 후계구도 전망과 권력구조 변화.” 경남대 극동문제 연구소 주최, 제42차 통일전략포럼 발표문, 2009. 3. 24.
- _____. “포스트 김정일 후계체제 구축과 변수.” 『KDI 북한경제리뷰』. 2010년 9월호, 2010.

- 이대근. “조선인민군의 정치적 역할과 한계: 김정일 시대의 당·군 관계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 이태섭. “1990년대 북한의 경제 위기와 군사체제로의 전환에 관한 연구.” 통일부. 『신진 연구자 논문집: 북한실태(정치)』. 서울: 통일부, 2001.
- 장성욱. “북한의 ‘공격우위’ 신화와 선군정치: 탈냉전기 군비태세와 군사전략에 관한 이론적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6.
- 정성장. “포스트 김정일 시대 북한 권력체계의 변화전망.” 2008년 북한연구학회·통일연구원·고려대 북한학연구소 공동학술회의. 《한반도, 전환기의 사색》. 2008. 12. 4.
- 정영태. “선군정치: 북한의 권력구조와 군.” 한국전략문제연구소 비공개정책토론회 발표논문. 2006년 7월 20일. 육군회관.
- 조성렬. “북한의 위기관리체제와 우리의 대응방안.” 국회정보위원회 정책연구 용역보고서. 2006.
- 조한범.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성격연구: 비교사회주의론적 접근.” 『통일정책연구』. 제11권 2호(통일연구원), 2002.
- 최봉대. “북한 사회 주민들의 멘탈리티와 사회적 통합 기제.” 『현대북한연구』. 제2권 1호(북한대학원대학교), 1999.
- 최성학. “선군의 원리는 주체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원리.” 『철학연구』. 2002년 1호(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2.
- 최완규. “북한의 후계자론: 3대 권력세습을 정당화할 수 있을 것인가?” 『한반도 포커스』. 제9호, 2010년 9·10월호.
- _____. “북한체제의 지탱요인 분석: 쿠바 사례와의 비교론적 접근.” 『현대북한연구』. 제9권 2호(북한대학원대학교), 2006.

- 한기범. “북한 정책결정과정의 조직행태와 관료정치: 경제개혁 확대 및 후퇴를 중심으로(2000~2009).” 경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 한병진. “북한정권의 내구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 『국가전략』. 제15권 1호, 2009.
- 한호석. “최근 북(조선)의 정세관과 정세 대응에 관한 담론 분석-1997년 상반기 『로동신문』 분석을 중심으로-.” <<http://www.onekorea.org/research/t18.html>>.

〈외국문헌〉

- Foreign Policy & The Fund For Peace. “The Failed States Index.” *Foreign Policy*. April 2006.
- Choo, Jaewoo. “Mirroring North Korea’s Growing Economic Dependence on China.” *Asian Survey*. vol. XLVIII, no. 2, March/April 2008.
- Park, Kyung-Ae. “North Korea in 2003: Pendulum Swing between Crisis and Diplomacy.” *Asian Survey*. vol. XLIV, no. 1, January/February 2004.
- _____. “North Korea in 2004: From Brisk Diplomacy to Impasse.” *Asian Survey*. vol. XLV, no. 1, January/February 2005.
- Rozman, Ilbert.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and U.S. Strategy in Northeast Asia.” *Asian Survey*. vol. XLVII, no. 4, July/August 2007.
- Zabrovskaya, L. “The Role of Russia in Six-power Negotiations

on the Removal of the Nuclear Threat from the Korean Peninsula,” *Far Eastern Affairs*. vol. 35, no. 4, 2007.

3. 기타자료

김정일. 성진제강 현지도도 시 발언. 2009년 11월 18일.

“개정 조선노동당 규약 서문.”

“개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전문.” 『2009년 북한헌법 개정과 북한체제 변화』(국가안보전략연구소 주최 학술회의 자료집, 2009.10.20) <http://www.uriminzokkiri.com/newspaper/uri_gisa/2007/2007-04-10-D2.htm>.

“북한신년공동사설.” 2010. 1. 1

한국은행. “2009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 2010. 6. 25.

통일부. 『월간 북한동향: 2006.7.28~2006.8.31』.

통일부. 『주간 북한동향』. 제1000호(2010.6.14~6.20).

통일부. 『주간 북한동향』. 제991호(2010.4.12~4.18).

통일부. 『주간 북한동향』. 제1007호(2010.8.2~8.8).

통일부. 『주간 북한동향』. 제1011호(2010.8.30~9.5).

통일연구원.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6호(2008년 11·12호).

『내외통신』.

『동아일보』.

『동아일보』.

『로동신문』.

『신동아』. 2009년 7월호.

『연합뉴스』.

『월간조선』. 1997년 4월호.

『자유아시아방송(Radio Free Asia)』.

『조선일보』.

『조선중앙통신』.

『중앙일보』.

『평양방송』.

<<http://mainichi.jp/select/world/news/20091004mog00m030018000c.html>> (검색일: 2010년 9월 18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9/27/2010092700039.html> (검색일: 2010년 9월 30일).

귀순자 김남준씨의 증언.

귀순자 김정민씨의 증언.

권영경 교수와의 면담.

연구총서

2008-01	북한체제의 안정성 평가 시나리오 워크숍	최진욱 외	9,000원
2008-02	한반도 선진화를 위한 남북 경제관계 발전방안 모색	임강택 외	10,000원
2008-03	남북한 출입제도 [통행·통신·통관] 개선 및 정착 방안 연구	김영운	8,000원
2008-04	전환기 동북아 국가들의 국내정치 변화와 대북전략	배정호 외	10,000원
2008-05	중국의 한-중 FTA 추진의도와 남북관계에 주는 합의	전병근, 구기보	7,500원
2008-06	한반도 통일 외교 인프라 구축 연구	박형호 외	9,000원
2008-07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	조정아 외	10,000원
2008-08	김정일 정권 등장 이후 북한의 체제유지 정책 고찰과 변화 전망	전현준 외	10,000원
2008-09	이명박정부 대북정책의 추진환경과 정책과제	박형중 외	6,500원
2008-10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전략 이론과 실제	이금순, 김수암	9,000원
2008-11	North Korea's External Economic Relations	김규륜 편	9,000원
2009-01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 전략적 협력에 관한 연구	전성훈	7,500원
2009-02	세계경제위기와 미-중관계 변화 연구 : 북한 핵문제에 미치는 영향	황병덕, 신상진	9,000원
2009-03	북한의 국력 평가 연구	전현준 외	10,000원
2009-04	북한경제의 시장화 실태에 관한 연구	임강택	9,000원
2009-05	21세기 한국의 동아시아국가들과 전략적 협력 강화방안	여인근 외	10,000원
2009-06	북한체제 전환을 위한 전략적 과제와 한국의 동북아 4국 협력전략	배정호 외	10,000원
2009-07	북한 '변화'의 재평가와 대북정책 방향	박형중 외	10,000원
2009-08	북한 개방 유도 전략 목표, 기본방향 및 단계별 과제	최진욱 외	10,000원
2009-09	북한주민 인권의식 고취를 위한 전략적 인권외교의 방향	홍우택 외	6,500원
2009-10	통일대비 북한토지제도 개편방향 연구	허문영 외	9,000원
2009-11	북한인권 침해구조 및 개선전략	이금순, 김수암	7,500원
2009-12	통일대계 탐색연구	조 민 외	8,000원
2009-13	Modernization and Opening-Up of North Korean Economy: Roles and Efforts of Neighboring Countries	김규륜 외	7,500원
2009-15	Peace-Keeping on the Korean Peninsula : The Role of Commissions	Gabriel Jonsson	20,000원
2010-01	북한 핵 보유 고수 전략의 도전과 대응	박형중 외	9,500원

2010-02	탈사회주의 경제이행 국가의 권력구조 유형과 개혁 경로 : 포스트-김정일체제에 대한 시사점	최진욱, 김진하	8,000원
2010-03	북한 개방화와 인권개선 방안연구	김국신, 김연수, 서보혁	7,000원
2010-04	북한의 체제위기와 사회갈등	조한범, 양문수, 조대엽	7,500원
2010-05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동북아전략 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동북아 4국 통일외교전략	배정호 외	12,500원
2010-06	북한주민 인권의식 실태연구	이금순, 전현준	8,500원
2010-07	라진·선봉지역 물류분야 남북 협력방안 연구	김영운, 추원서, 임을출	8,000원
2010-08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새로운 접근과 추진방안 : 3대 공동체 통일구상 중심	박종철 외	11,500원
2010-09	통일한국의 정치체제	허문영	6,000원
2010-10	북한 핵에 대한 억지방향 연구	홍우택	5,000원
2010-11	북한의 포스트 김정일체제 전망	정영태 외	11,000원
2010-12	북한 주민의 의식과 정체성 : 자아의 독립, 국가의 그늘, 욕망의 부상	조정아 외	17,000원
2010-13	북·중 경제관계와 남북경협의 대북 파급효과 비교분석	최수영	7,500원
2010-14	East Asian Community Building: Issue Areas and Perspectives of Regional Countries	김규륜 외	10,000원
2010-15(I)	신아시아 외교 구상과 새로운 평화의 모색(I)	김규륜 외	13,000원
2010-15(II)	신아시아 외교 구상과 새로운 평화의 모색(II)	김규륜 외	13,000원

학술회의총서

2008-01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 비전 및 추진방향		10,000원
2008-02	The Vision for East Asia in the 21st Century and the Korean Peninsula		9,500원
2009-01	북핵 문제 해결 방향과 북한 체제의 변화 전망		6,500원
2009-02	북핵 일괄타결(Grand Bargain)방안 추진방향		5,500원
2010-01	이명박 정부 2년 대북정책 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		8,000원
2010-02	독일 통일 20년과 한반도 통일비전		6,000원
2010-03	분단관리에서 통일대비로		5,500원
2010-04	독일 통일 20년과 한국의 통일대비		7,000원

협동연구총서

2008-07-01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모형개발 및 발전방안 (총괄보고서)	김국신 외	6,500원
2008-07-02	남북 교류협력 효율화를 위한 거버넌스 모형구축	양현모, 이준호	6,000원
2008-07-03	북한의 국가사회관계와 통일정책 거버넌스	최진욱 외	7,000원
2008-07-04	남북연합 형성·운영의 거버넌스	박종철 외	8,000원
2008-08-01	국제사회의 개발지원 이론과 실제: 북한개발 지원을 위한모색 (총괄보고서)	박형중 외	10,000원

2008-08-02	국제 개발이론 현황	이금순 외	8,000원
2008-08-03	국제사회의 원조 현황 및 추진전략	임강택 외	10,000원
2008-08-04	UN기구의 지원체계와 대북 활동	최춘흠 외	6,500원
2008-08-05	양자간 개발기구의 체계와 활동	권 올 외	10,000원
2008-08-06	다자간 개발기구의 체계 및 활동	장형수 외	10,000원
2008-08-07	국제 NGO의 원조정책과 활동 연구	이종무 외	8,000원
2009-15-01	북한개발지원의 포괄적 추진방안(총괄보고서)	임강택 외	8,500원
2009-15-02	북한개발지원의 이론과 포괄적 전략	박형중 외	10,000원
2009-15-03	북한개발지원의 쟁점과 해결방안	김정수 외	10,000원
2009-15-04	북한개발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장형수 외	10,000원
2009-15-05	북한개발지원체제의 구축방안	이종무 외	9,000원
2009-15-06	지방자치단체의 북한개발지원 전략과 접근방법	양현모 외	10,000원
2009-16-01	복잡계 이론을 통한 북한의 정상국가화 방안 연구 (총괄보고서)	김국신 외	6,000원
2009-16-02	북한체제의 행위자와 상호작용	이교덕 외	8,000원
2009-16-03	북한 계획경제의 변화와 시장화	이 석 외	9,000원
2009-16-04	탈냉전 이후 국제관계와 북한의 변화	민병원 외	8,000원
2009-17-01	비핵·개방·3000 구상: 추진전략과 실행계획(총괄보고서)	여인근 외	7,500원
2009-17-02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및 추진환경과 전략	박종철 외	8,000원
2009-17-03	비핵·개방·3000 구상: 한반도 비핵화 실천방안	조 민 외	9,000원
2009-17-04	비핵·개방·3000 구상: 북한의 개방화 추진방안	함택영 외	7,500원
2009-17-05	비핵·개방·3000 구상: 남북경제공동체 형성방안	조명철 외	7,000원
2009-17-06	비핵·개방·3000 구상: 행복공동체 형성방안	이금순 외	7,500원
2010-14-01	북한정보체계 실태조사(총괄보고서)	황병덕 외	12,000원
2010-14-02	북한정보체계 실태조사(上)	황병덕 외	14,000원
2010-14-03	북한정보체계 실태조사(下)	황병덕 외	13,000원
2010-15-01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통일정책의 세부 실천방안 (총괄보고서)	여인근 외	9,000원
2010-15-02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통일정책의 추진환경 및 전략과 실천방안	박영호 외	9,500원
2010-15-03	이명박 정부 대북통일정책의 세부 실천방안	허문영 외	7,000원
2010-15-04	이명박 정부 외교정책의 세부 실천방안(1) : 협력 네트워크 외교 분야	남궁영 외	7,500원
2010-15-05	이명박 정부 외교정책의 세부 실천방안(2) : 포괄적 실리외교 분야	전재성 외	9,500원
2010-15-06	이명박 정부 안보정책의 세부 실천방안	이수훈 외	7,500원
2010-16-01	북한의 정상국가화 지원방안 연구(총괄보고서)	이교덕 외	7,000원
2010-16-02	북한의 정치부문 정상국가화 지원방안	전현준 외	7,500원
2010-16-03	북한 시장 진화에 관한 복잡계 시뮬레이션	조정아 외	14,000원
2010-16-04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방안	민병원 외	7,500원

논문

통일정책연구, 제17권 1호 (2008)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7, No. 1 (2008)	2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7권 2호 (2008)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7, No. 2 (2008)	2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8권 1호 (2009)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8, No. 1 (2009)	2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8권 2호 (2009)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8, No. 2 (2009)	2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9권 1호 (2010)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9, No. 1 (2010)	20,000원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08	이금순 외	1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8	이금순 외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9	이금순 외	1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9	이금순 외	20,000원
북한인권백서 2010	박영호 외	2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0	박영호 외	20,000원

기 타

2008	2006 독일통일백서		8,000원
2009	Lee Myung-bak Government's North Korea Policy	Suh, Jae-Jean	5,500원
2009	김정일 현지지도 동향 1994-2008		15,000원
2009	The U.S.-RCK Alliance in the 21st Century	Bae, Jung-Ho, Abraham Denmark	10,000원
2009	북한의 주요현안과 한-미 전략적 공조	배정호	10,000원
2009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에 따른 미-중관계의 변화와 한반도	배정호	10,000원
2010	김정일 현지지도 동향 1994-2009		1,500원
2010	2010 독일통일백서		13,000원
2010	21세기 러시아의 국가전략과 한-러 전략적 동반자관계		10,500원
2010	Russian National Strategy and R.O.K.-Russian Strategic Partnership in the 21st Century		13,500원
2010	NPT 체제와 핵안보		13,000원
2010	Nuclear Security 2012: Challenges of Proliferation and Implication for the Korean Peninsula		15,000원

연례정세보고서

2008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8~2009	6,000원
2009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9~2010	7,000원
2010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0~2011	7,000원

통일정세분석

비매출

2008-01	2008년 북한 신년 공동사실 분석	
		정영태, 김영윤, 박영호, 서재진, 임순희, 허문영
2008-02	중국 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 결과분석: 지도부 개편을 중심으로	전병곤
2008-03	최근 북한 권력엘리트 변동 분석	전현준
2008-04	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8-05	이명박 대통령의 방일과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분석	배정호
2008-06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6차 회의 결과분석	최수영
2008-07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유엔인권이사회 보고서 평가	이금순, 김수암
2008-08	2단계 비핵화 이후 북한의 대남정책 전망	최진욱, 박형중
2008-09	남북 이산가족문제: 평가와 향후 정책 방안	임순희
2008-10	상반기(08년 1월~6월) 북한의 대내외 정세 분석	서재진, 정영태, 전현준, 최수영, 최진욱, 임순희, 조정아
2008-11	아소 정권의 출범과 대외전략노선 및 대북전략	배정호
2008-12	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여인곤
2009-01	2009년 북한 신년 공동사실 분석	
		최진욱, 전현준, 정영태, 조정아, 최수영, 박영호, 박형중
2009-02	하반기(08년 7월~12월) 북한의 정세 분석	최진욱, 임순희, 전현준, 정영태, 조정아, 최수영
2009-03	북한의 대남 비방 공세의 의도와 전망	최진욱, 전현준, 정영태
2009-04	북한의 제12기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 결과 분석	전현준
2009-05	2008년 북 중무역의 주요 특징	임강택, 박형중
2009-06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제12기 제1차 회의 결과 분석	최수영, 정영태
2009-07	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국신
2010-01	2010년 북한 신년 공동사실 분석	임강택 외
2010-02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제12기 제2차 회의 결과 분석	최수영
2010-03	김정일 방중과 중국의 전략외교	배정호, 박영호, 전병곤
2010-04	2010상반기 북한정세 분석 보고서	정영태, 이교덕, 최수영, 임순희, 조정아
2010-05	독일통일 20주년 조망: 독일통일이 한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점	황병덕
2010-06	야로슬라블 한 미 정상회담 결과 분석	여인곤
2010-07	북한 3대 세습 후계구도 분석 및 정책변화 전망	김진하

2008-01	남북 상생·공영을 위한 비핵·개방·3000 정책의 이론적 체계: 연구	서재진
2008-02	향후 5년 남북관계 주요 환경과 전개 시나리오	박형중, 허문영, 조 민, 전성훈
2008-03	북한의 기상관리 정책의 변화와 남북한 기상협력 방안연구	최은석, 황재준
2009-01	신평화구상 실현을 위한 전략과 과제	김규룡 외
2009-02(I)	1)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I): 접경지역 평화적 이용을 위한 이론적 검토와 사례연구	손기웅 외
2009-02(II)	2)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II): 접경지역 평화적 이용을 위한 기존제안 검토	손기웅 외
2009-03	대북정책의 대국민 확산방안	조한범 외
2009-04	통일 예측 시계 구축	박영호, 김지희
2009-05	북핵일지 1955-2009	조 민, 김진하
2009-06	미국 대북방송 연구: 운용실태 및 전략을 중심으로	이원웅
2010-01	한반도 녹색성장을 위한 남북한 산림협력 법적 개선방안 예비연구	이규창
2010-02	통일 예측 시계 구축	박영호
2010-03	북한 경제개발계획 수립방안 연구: 베트남 사례를 중심으로	임강택 외
2010-04(III)	3)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III): 정책제안	손기웅 외
2010-04(IV)	4)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IV): 2010년 「코리아 접경포럼」 자료집	손기웅 외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2008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3권 1호	이금순, 김수암, 임순희
2008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3권 2호	이금순, 김수암
2009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4권 1호	박영호, 이금순, 김수암, 홍우택
2009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4권 2호	박영호, 이금순, 김수암, 홍우택
2010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5권 1호	김국신, 김영윤, 전현준, 이금순, 이규창

월간 북한동향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1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2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3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4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5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6호	북한연구실
2009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1호	북한연구센터
2009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2호	북한연구센터
2009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3호	북한연구센터

2009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4호	북한연구센터
2009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5호	북한연구센터
2009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6호	북한연구센터
2010	월간 북한동향 제4권 제1호	북한연구센터
2010	월간 북한동향 제4권 제2호	북한연구센터
2010	월간 북한동향 제4권 제3호	북한연구센터
2010	월간 북한동향 제4권 제4호	북한연구센터
2010	월간 북한동향 제4권 제5호	북한연구센터

Studies Series

비매출

2008-01	Conceptions of Democracy and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Kim Soo-Am
2008-02	Internal and External Perceptions of the North Korean Army	Jeung Young-Tai
2008-03	PSI and the Korean Position	Cheon Seong-Whun
2008-04	Transformation of the U.S.-Japan Alliance and South Korea's Security Strategy	Kim Kook-Shin, Yeo In-Kon, Kang Han-Koo
2008-05	Changes in North Korea as revealed in the Testimonies of Saetominis	Lee Kyo-Duk, Lim Soon-Hee, Cho Jeong-Ah, Lee Gee-Dong, Lee Young-Hoon
2008-06	Economic Hardship and Regime Sustainability in North Korea	Suh Jae-Jean
2009-01	The Evaluation of Regime Stability in North Korea: Scenario Workshop	Choi Jin-Wook, Kim Kook-Shin, Park Hyeong-Jung, Cheon Hyun-Joon, Cho Jeong-Ah, Cha Moon-Seok, Hyun Sung-Il
2009-02	Developing Inter-Korean Economic Relations for the 'Advancement of the Korean Peninsula'	Lim Kang-Teag, Kim Kyu-Ryoon, Jang-Hyung-Soo, Cho Han-Bum, Choi Tae-Uk
2009-03	The Everyday Lives of North Koreans	Cho Jeong-Ah, Suh Jae-Jean, Lim Soon-Hee, Kim Bo-Gaun, Park Young-Ja
2009-04	North Korea's Regime Maintenance Policy Since the Kim Jong-il Regime and Prospects for Change	Chon Hyun-Joon, Jeung Young-Tae, Choi Soo-Young, Lee Ki-Dong
2010-01	Strategy for Encouraging North Korean Opening: Basic Direction and Sequential Tasks	Choi Jinwook, Lee Kyo-Duk, Cho Jeong-Ah, Lee Jin-Yeong, Cha Moon-Seok
2010-02	Unification Clock: Predicting Korean Unification	Park Young Ho

기 타

비매출

2010	2010 Unification Clock: When We Meet a Unified Korea	Park Young Ho
2010	In Search of New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Kim Kyu-Ryoon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1. 회원 구분

-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종사자
-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2. 가입방법

-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3. 회원 특전

-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학술회의 총서, 협동연구총서, 정세분석보고서 등 우송
-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 라) 구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4. 회원가입 문의

- 가) 주소: (142-728)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출판정보관리팀 도서회원 담당자(pcm@kinu.or.kr)
- 나) 전화: (02)901-2559, FAX: (02)901-2547
- 다)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 가입기간 중 주소 변경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의 포스트 김정일체제 전망

www.kinu.or.kr